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7
현장민주화운동 종합보고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목 차

1. 1950년대 후반기~ 1960년대 초기 노동계 동향 임송자
2. 4.19를 전후한 시기 통일운동의 흐름 김선미
3. 6.3 항쟁의 전개과정 오제연
4. 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 이승만 정보와 그 유제김서중
5. 6.8 부정선거 규탄 투쟁과 3선개헌 반대투쟁의 전개과정이기훈
6. 교련반대투쟁과 1971년 선거투쟁의 전개과정허 은

1950년대 후반기 ~ 1960년대 초기 노동계 동향

임 송 자

| 목 차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
3. 연구성과
 - 대한노총과 자유당
 - 규약개정운동
 - 전국노협 결성과정
 - 전국노협의 활동 및 대구지역 노동운동
 - 한국노련 결성과정
 - 한국노총 재편성과정
 - 전국노협 의장 김말룡
 - 제일모직 노동조합 결성운동

<참고문헌>

1. 연구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 기획한 현장민주화운동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기 노동계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물은 노동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노동운동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1950년대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운동사》(한국노총, 1979), 《한국노동운동사》(김낙중, 1982), 《韓國資本主義とその特質 1945~53年 -政治体制・労働運動・労働政策を中心として-》(김삼수, 1990), 《한국노동운동사》4(송종래, 2004),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임송자, 2007) 등이 있다. 이외에도 조돈문, 김용철, 정영태 등의 연구논문이 있어 양적·질적으로 많이 축적되었다.¹⁾ 그러나 이시기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4월혁명기까지, 그리고 1961년 5·16군부쿠데타시기의 노동계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기 노동운동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운동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사의 객관적, 실증적 재조명이 필수적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4월혁명기까지, 그리고 1961년 5·16군부쿠데타시기의 노동계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시대상황을 분명히 읽으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및 문헌에 의존하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구술사방법론을 채용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기까지 현장에서 활동했던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1950년대 대한노총의 활동상, 1950년대 후반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과정, 1960년 4월혁명기 진보적 노

1) 조돈문, 〈50년대 노동계급의 계급해체 -노총의 호응성 전략과 노동자들의 저동원〉, 《경제와 사회》 29, 1996년 봄호 ; 김용철, 〈제1공화국하의 국가와 노동관계 -수혜적 포섭에서 약탈적 후원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3, 1995년 12월. ; 정영태, 〈노동조합 정치참여의 역사와 평가〉, 《論文集》 9, 인하대사회과학연구소, 1990년 6월.

동운동의 성장과정, 그리고 1961년 5·16군부쿠데타에 의한 진보적 노동운동의 좌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료 및 문헌을 이용하여 실증적 접근방식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성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구술만을 채용하여 연구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1950년대 후반기~1960년대 초기 노동계의 동향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2.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

1950년대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인사들은 대부분 1920년대~1930년대에 출생하였다. 대부분 70~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며,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도 드물다. 이번 연구사업에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김관호, 이찬혁, 김기곤, 권오봉, 나경일선생에 대한 구술채록을 하였다.

구술채록은 2007년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구술조사 대상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 하나는 대한노총에서 활동하였던 김관호·이찬혁선생을 대상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기 대한노총의 동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였다.²⁾ 김관호·이찬혁선생에 대한 구술작업은 4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노총의 조직적 문제, 대한노총과 자유당과의 관계, 전국노협과 대한노총의 갈등·대립, 4·19시기 노동단체 통합과정, 한국노총으로의 조직 재편성과정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기 노동운동사에서 지역적으로 대구지역이 크게 부각되는 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김기곤·권오봉·나경일선생을 대상으로 전국노협의 결성과정과 활동상 및 단위사업장에서의 파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였다.³⁾ 김기곤·권오봉·나경일선생에 대한 구술작업은 약 4시간 정도

2) 김관호 인터뷰(일시 : 2007.3.16 14:00~17:00 / 장소 : 남영역 근처 레인보우호텔) ; 이찬혁 인터뷰(일시 : 2007.3.15 11:00~13:30 / 장소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

소요되었으며, 구술작업 결과 대한노총 대구지구연맹 활동, 전국노협 결성과정, 전국노협의 4·19 이전과 이후 활동, 전국노협과 교원노조·은행노조·혁신세력과의 관계, 4·19시기 노동단체 통합과정, 한국노총으로의 조직 재편성과정에서의 한국노련 및 김말룡의 활동, 4·19시기 노동운동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한노총에서 활동한 김관호선생은 1922년 8월 2일 황해도 사리원 출생으로, 5년제 농업학교를 나와 과수원을 경영하다 해방 후 월남하여 평안청년회에서 활동하였다. 이후 대한노총 조직에 가담하였고, 대한노총 감찰부장, 경기도연맹 부위원장, 광산연맹 사무국장·부위원장을 지냈다. 이찬혁선생은 1924년 10월 8일 황해도 천동면 출생으로, 숭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선생을 하다가 해방 후 서울(마포)로 올라와 국학대학(현 고려대학교에 편입됨)에 다녔다. 서북청년회에서도 활동하였고, 이후 대한노총 조직에 가담하였으며, 대한노총 철도연맹 선전부장, 대한노총 철도연맹 부위원장, 대한노총 법규부장,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대구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한 김기곤 선생은 1933년 5월 14일 경북 청도군 출생으로, 청구대학(현 영남대학교)을 졸업하였다. 대한노총 대구지구연합회 총무, 전국노협 경북협의회 총무부장, 전국연합노련 대구시청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권오봉 선생은 1926년 2월 25일 경북 영주 출생으로, 청구대학(현 영남대학교)을 졸업하였다. 대구 대한방직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였으며, 섬유노련 대구지구연합회 쟁의부장을 지냈다. 나경일 선생은 1930년 12월 7일 일본 규슈(九州) 나가사끼(長崎) 출생으로, 1945년 12월에 귀국하였다. 제일모직 노동조합 감찰위원장, 섬유노련 대구지구연합회 쟁의부장을 지냈다.

3) 김기곤 인터뷰(일시 : 2007.3.22 17:30~20:00 / 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카넬모텔) ; 권오봉 인터뷰(일시 2007.3.22 21:00~22:20 / 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카넬모텔) ; 나경일 인터뷰(일시 2007.3.23 11:00~12:30 / 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카넬모텔)

3. 연구 성과

〈대한노총과 자유당〉

1953년 노동관계법 제정·공포 이후 대한노총에서는 재조직을 위해 1954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때 정대천파와 이진수파로 분열되었다. 정대천·김주홍·이준수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대회소집위원회(이하 전대위)와 이진수·오차진·김순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준비위원회(이하 소준위)가 그것이다.⁴⁾ 이들은 제각기 자신들이 이대통령의 유시를 받들고 있다면 서로가 정통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집권 자유당은 정대천세력을 적극 지지하였다. 결국 대한노총은 1954년 재조직대회를 통해 조직을 개편하는데, 이때 정대천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재조직대회에서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 대한노총을 주도했던 인물이 교체되었다. 이후 1958년 김기옥 위원장체제가 들어서기까지 정대천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주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정대천과 자유당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54년 대회 이후 대한노총 조직은 정대천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정대천을 매개로 자유당과의 주종관계가 형성되었다. 1954년 12월 16일 이승만의 담화는 자유당과 대한노총 간의 주종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이승만은 담화를 대한노총 내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분쟁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실을 들어서 黨部에 보고” 한다면 자유당 간부들이 해결할 것이며, 또한 상부에 보고하면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상부”는 이대통령 자신을 일컫는 것이다.

4) 전대위의 정대천은 대한노총 경전노조 위원장이었으며, 김주홍은 대한노총 철도연맹 위원장이었다. 그리고 이준수는 광산노련 위원장이었다. 소준위의 이진수는 자유노동조합연맹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오차진은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개최한 1953년 6월 5일의 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총철도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주홍에 대항하여 9월 3일 따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창립대회를 열어 위원장이 되었던 인물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954년 4월경에 해산되었다. 김순태는 조방에서 강일매가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노조위원장이었으나 점차 어용화됨으로써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안종우, 〈조방쟁의〉(상), 《노동공론》 1972년 8월호, 118~119쪽; 전국광산노동조합, 《광로20년 약사》, 1969, 24~25쪽;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로 30년사》, 1977, 444쪽.

대한노총은 이승만·자유당의 권력유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56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1956년 5월의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3월 5일 자유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기봉을 지명하였다. 이승만이 “3선은 민주주의에 배치되니 다른 인물을 내세우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공표하여 대통령후보 지명을 수락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승만 자신은 사사오입개헌에 책임이 없으며, 집권연장을 위한 불법행위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제스처였다.⁵⁾

대한노총은 이승만의 제스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대한노총 최고위원이며 전업노련 위원장인 정대천은 그 다음 날인 3월 6일 전업노련 산하의 노동조합원을 동원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재출마연원 데모를 벌였다.⁶⁾ 3월 12일에는 대한노총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승만이 대통령 재출마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날인 13일 정오를 기하여 교통부문 노조에서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중대결의를 하였으며⁷⁾ 대한노총 전국대표자 60여 명은 “이대통령이 재출마를 하지 않으면 직장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겠다”는 탄원서를 이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13일 정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⁸⁾

나는 명예나 지위에 관계치 않고 욕심도 없는 것이며 동포들이 나를 추대해 주어서 성심껏 해온 것인데 이번에는 내가 물러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내 의사를 존중해 주기 바라며 나는 이미 작정한 것을 공포한 것인데 내가 또 하겠다고 하면 내 말 값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시간을 주다가 돌아가서 기다려 주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3월 13일 대한노총 경전노조의 발동으로 시내전차가 낮 12시부터 하오 2시까지 두 시간동안 총스톱 되었다.⁹⁾ 대한노총은 우마차까지 동원하여 시가행진을 하며 이

5)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청사, 1982, 231쪽.

6)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Edwin M. Cronk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56. 12.12)>(NARA,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5-1959》).

7) 김낙중, 앞의 책, 231쪽.

8) 《경향신문》 1956년 3월 15일자, <파업은 좋지 않다. 이대통령, 노총대표에 권고>.

승만의 대통령 재출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으로써, 민의(民意) 아닌 우의(牛意), 마의(馬意)의 데모라는 웃음거리가 되었다.¹⁰⁾ 이어서 대한노총은 1956년 4월 9일 정책위원회 모임을 갖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자유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¹¹⁾

대한노총과 자유당, 대한노총 최고위원 정대천과 자유당의 관계에 대해 이찬혁 선생은 “정대천이라는 사람이 자유당하고 가깝지. 자유당 국회의원 했잖아. 파주출신인데. 헌데 정대천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자체가 악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라면서 보스적인 기질이 있었으므로 최고위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¹²⁾

김관호 선생은 정대천이 자유당의 권력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즉 “정대천이가 자유당의 권력을 이용을 못했어. 그적에(그 당시에) 정대천이가 그간에 계속해서 노총에 헤게모니를 고저(그저) 최고위원이지 위원장도 아니거든. 그적엔(그 당시에는) 최고 완전히 최고위원적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대천은 개혁성도 없고 실천력도 없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으며, 최고위원의 대표급으로 있었을 뿐 실제적으로 정대천 밑에서 실권을 장악한 사람은 차국찬, 이상진, 김관호(정대천을 지지하는 외곽조직의 한사람)라고 하였다. 자유당 내 세력을 강경파, 온건파로 분류할 때 정대천은 온건파에 속했다고 하였다.¹³⁾

김관호 선생이 지적한대로 정대천이 온건파에 속했는지 의문이 든다. 자료상으로 볼 때, 정대천은 이기붕과 긴밀하였다. 이에 대해 면담자가 정대천과 이기붕의 관계를 묻자 김관호 선생은 “그거는 이기붕씨가 노총 위원장이라는 데서 한몫 놓아주었지. 이기붕씨 세력을 업고 뛴. 그랬으면 그쪽의 위원장 했지 위원장 못했잖아요. 이기붕 업고 뛴 하지를 못했어”라고 답변하였다.¹⁴⁾ 김관호선생이 한때 윗분으로 모

9) 《조선일보》 1956년 3월 14일자, 〈서울전차 두시간 총스톱. 버스도 파업 기미. 각 교통기관에 점차 파급?〉.

10) 김낙중, 앞의 책, 231쪽.

11)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Edwin M. Cronk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56. 12.12)〉 (NARA,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5-1959》).

12) 이찬혁 인터뷰

13) 김관호 인터뷰

14) 김관호 인터뷰

시고 있었던 정대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정대천과 이기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대천에 이어 1958년 10월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권을 장악한 김기옥도 자유당과 밀착하였다. 대한노총 내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현실의 반영이었다. 김기옥 또한 이전의 권력자 정대천의 전철을 되밟고 있었다. 1959년 10월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는 “명년 정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조직의 정비와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노동자 농민의 정당인 자유당에서 추대한 정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총역량을 주입하고 평소에崇敬하옵든 각하를 지지하는 열의를 다시금 가다듬는 바입니다”라고¹⁵⁾ 하여 이승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였다.

김기옥 체제하의 대한노총은 1960년의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 이승만과 이기붕의 정·부통령 지지를 결의하였으며, 독자적인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1959년 12월 5일의 제6차, 12월 21일의 제7차 회무처리위원회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조직요강 초안이 작성되었다. 1960년 2월 8일의 대한노총 경북연맹 제2차대회도 자유당의 선거대책을 위한 것이었다. 즉 결의문은 자유당 정·부통령 입후보자를 당선시켜 전국 노동자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이었다.¹⁶⁾

1959년 7월 20일에 열린 자유당 조직위원회는 자유당에 동조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비 강화책을 세우기로 합의하고 대한노총의 분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해결책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유당의 기간단체 조직강화를 위한 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대한노총의 조직강화에 대하여 적혀 있다.¹⁷⁾

1. 각급 노조 및 연합체 책임자는 전 조합원에게 자유당의 강령을 주입시켜 당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당 기관지와 선전계몽운동을 통한 이념적인 지도방

15)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16) 한국노총, 앞의 책, 448~449쪽.

17) 한국노총, 앞의 책, 449쪽.

- 식으로써 진실한 당 지지운동을 일으켜 전체적인 조직공작을 전개해야 한다.
2. 노동조직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각급 지방당 사회부장을 대한노총 지방 조직체 내에서 선임한다.
 3. 각 단위 노조 대표자는 당원 획득공작을 철저히 하고 세포조직 강화에 치중한다.
 4. 각 단위 노조의 책임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당적관계를 조사하고 당성이 을(乙), 병(丙)에 속하는 지도인물에 대해서는 당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5. 입당한 사람에 대한 직장보장과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여 당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지속적인 지도방침을 확립시켜야 한다.
 6. 대한노총에서 야기되는 조직적인 분규는 자체 내에서 수습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는 당책에 의거하여 보장 육성한다.
 7. 대한노총 조직이 침투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문제는 대한노총에서 제출하는 조직 확대·강화계획에 의거하여 당 방침으로 추진한다.

자유당에서 대한노총에 지시한 조직강화요령에 대해 이찬혁선생은 전혀 기억이 없는 듯이 보였다. 다만 “근데(그런데) 그건 아니 현장꺼정(까지) 가지는 않았어 그런건”이라는 답변만을 하였다.¹⁸⁾ 김기곤 선생 또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다.¹⁹⁾

정대천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노총 경전노동조합에서는 12월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이 당선되도록 총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⁰⁾ 그리고 정부통령 선거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²¹⁾ 1960년 1월 19일에는 당선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거행하였다.²²⁾

1960년 3·15선거를 맞이하여 대한노총은 산업별, 지역별, 직업별 노동조합을 통하여 노동조합원에게 부정선거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거둬들인 조합비를 선거자금으로 썼으며, 대한노총 간부들은 자유당으로부터 수억 원의 선거자금을 받아 횡령하였다.²³⁾

18) 이찬혁 인터뷰

19) 김기곤 인터뷰

20) 대한노총 경전노동조합, 《노동》 제8권 제1호, 1960년, 68~69쪽.

21) 대한노총 경전노동조합, 《노동》 제8권 제1호, 1960년, 80쪽.

22) 당선추진위원회 각 부서별 임무와 임원명단에 대해서는 대한노총 경전노동조합, 《노동》 제8권 제1호, 1960, 84~87쪽.

〈규약개정운동〉

1958년에 전개된 규약개정운동의 주요한 내용은 현 최고위원제를 위원장제로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규약개정운동은 자유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정대천의 세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인의 위원장제는 통일된 지도력을 제공하고 분과주의를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었다. 하지만 김기옥과 그의 지지자는 규약개정운동이 정대천의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운동에 최고위원 김기옥·이주기, 前최고위원 김주홍은 지지하였고, 이에 반해 최고위원 정대천·김용학·하광춘은 반대하였다. 1958년의 규약개정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58년 대회에서 규약개정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1954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최고위원제 대신에 위원장체제로 대한노총 조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1959년에 탄생한 전국노협은 규약개정 반대운동에서 시발되었다는 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규약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관호 선생은 그때의 상황이 김기옥을 위원장 시켜 줄 수 없었다고 얘기하였다. 김기옥은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한국운수노조 위원장을 하면서 청와대 광영주와 연줄을 맺으며 비료조작비 횡령을 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평가했다.²⁴⁾ 당시 비료조작비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김관호 선생의 직접적인 증언으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관호 선생은 인천에서 부두노조 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므로 부두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비료조작비가 정부대충자금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AID(미국국제개발처 ; 필자) 대충자금에서 나와요. 다른 조작비는 꼭 올라갔는데 비료조작비만은 안 올라간다 이기야(이거야).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횡령액이 “삼 십 몇 억”이 나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횡령의 책임자로 있던 김기옥을 위원장으로 앉힐 수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²⁵⁾

23) 《조선일보》 1961년 2월 12일자 〈노총간부에 체포령. 부정선거자금도 횡령〉.

24) 김관호 인터뷰

25) 김관호 인터뷰

부산과 인천에서의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조선운수 사장과 결탁하여 부두노임을 횡령한 것에 대해 김관호는 김인숙, 최종자와 함께 1958년 11월 1일자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예산에서는 정부도입물자의 조작비를 인상해 주었는데도 그 하역작업을 맡은 조선운수주식회사가 어용적인 노동귀족인 부산 부두노조 위원장 김기옥 및 인천부두노조 위원장 이창우와 결탁하여 노동자의 노임은 인상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을 횡령 착복했다는 것이다.²⁶⁾

그러나 이 사건은 1958년 8월 이래 <비료조작비 문제>로 국회에서 문제 삼았지만 자유당이 지배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묵과되었다. 또한 1959년 국회에서 진상조사단까지 구성하였지만²⁷⁾ 집권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²⁸⁾

반면에 이찬혁 선생은 원래 최고위원제가 좋지 않으므로, 제대로 조직이 되려면 1인의 지도체계가 되어야 하므로 규약개정을 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김기옥에 대해서도 권모술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박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였다.²⁹⁾

위와 같이 대한노총 중앙조직에서 활동하였던 김관호와 이찬혁의 입장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관호는 김기옥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규정한 반면에 이찬혁은 순박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김기옥을 중심으로 한 규약개정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김관호는 규약개정운동의 부당성을, 그리고 이찬혁은 1인의 지도체계가 조직운영에서 효율적이라는 명분으로 규약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당시 규약개정운동을 적극 반대했던 김관호와 김기옥체제 하에서 법규부장을 지냈던 이찬혁의 대조적인 견해를 엿볼 수 있다.

26) 김낙중, 앞의 책, 242쪽.

27) 비료조작비 문제는 십장제의 폐해에서 나온 것이었다. 인천, 부산, 군산 등 부두노동에는 일제시대부터 십장제 또는 반장제가 있어 그것이 부두노동자들의 작업활동을 규제하여 왔으며, 해방 이래 노동조합의 가면을 쓰고 온존되고 있었다. 김낙중, 앞의 책, 240쪽. ; 국회 본회의는 59년 6월 8일 인천, 부산, 여수, 목포, 군산, 마산에 국회조사반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십장의 임금중간착취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국회 조사단은 노조간부의 노동자 착취를 조절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거액의 노임 횡령사건은 규명될 수 없었고 십장제의 모순과 폐해의 시정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한국노총, 앞의 책, 443-444쪽.

28) 김낙중, 앞의 책, 243쪽.

29) 이찬혁 인터뷰

1958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김기옥이 규약을 고쳐가며 위원장제를 만들어 1인독재체제를 수립한 것을 계기로 규약개정 의 부당성 및 김기옥의 부도덕성 등을 들어 김관호, 김말룡, 노응벽, 최종자 등은 이의신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1월 11일 대한석탄광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인 노응벽과 대구지구연합회 위원장인 김말룡의 이름으로 제기된 ‘이의신립’, 대명광업노조의 김관호와 부산지구노조연합회 최종자의 명의로 된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 및 결격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립’이 그것이다.³⁰⁾ 그러나 이의신립은 묵살되었다. 그리하여 대회의 합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의 판결에 맡겨지게 되었고, 계속적인 분쟁을 야기하였다.³¹⁾

노응벽·김말룡은 이른바 ‘신립의 이유’를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내세웠다.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① 규약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노동법 제17조)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변경을 위하여는 노동법 제27조에 의하여 대회 2주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또한 대한노총 규약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1호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³²⁾ 노동법과 규약을 위반하고 대회 당일 규약변경안을 제의 상정하여 불법적인 표결을 강행하였다는 것. ② 1958년 8월 27일자 보건사회부장관 명의 보사(保社) 제683호에 의하면 십장 또는 반장을 위주로 구성된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3조에 저촉된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부산부두노조와 인천부두를 위시한 자유노련대의원 전원이 불법대의원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① 규약변경 자체가 불법이

30) 노응벽·김말룡의 이의신립과 최종자·김관호의 이의신립 내용은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472~475쪽 참고.

31) 한국노총, 《한국노총50년사》, 2002, 300쪽.

32) 대한노총 규약 제15조 1항 및 제2항 1호는 다음과 같다.

제15조 제1항(대의원대회 소집)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0월 중에 위원장이 차(此)를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대회개최가 불가능할 시(時)에는 연기할 수 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인정할 시(時) 또는 중앙집행위원 2/3 이상이나 대의원 과반수 우(又)는 회원 1/4 이상의 요청이 유(有)할 시(時) 위원장이 차(此)를 소집한다. 대의원대회 소집은 적어도 2주일 전 기(其)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는 본 연합회 최고결의기관으로서 하기(下記)의 기능이 있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단 규약변경은 재석대의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한국노총, 앞의 책, 470쪽.

며 무효이므로 변경규약에 의거한 임원선거 역시 무효라는 것 ② 임원개선 역시 노동조합법 제27조와 대한노총 규약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대회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대회는 노동법과 규약을 위반하고 대회 당일 임원개선을 제의 상정하여 불법개선(不法改選)을 강행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최종자·김관호의 명의로 된 ‘이의신립’의 내용을 보자면 부산부두노동조합은 위원장 김기옥을 위시하여 조합간부 전원이 조합원의 노임을 중간착취하고 있는 도반장·십장·반장이므로 중간착취배제의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산부두노동조합과 인천자유항만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조에 저촉되는 노동단체이므로 이러한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 및 새로 선출된 대한노총 간부는 무효이며, 부산부두노동조합과 인천노동조합은 불법노동조합이므로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노협 결성과정〉

1958년 대회에서의 김기옥 1인체제 성립을 계기로 대한노총 분열은 극단화되었고, 결국 반김기옥파는 대한노총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중앙조직을 결성하고자 운동을 추진하였다. 1959년 7월 반김기옥파는 대구시내 교동에 있는 천일여관에서 따로 회합을 가졌다. 집행위원 및 각 도 산업별 노조연맹 대표 등 90여명이 회합하여 대한노총을 탈퇴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대한노총과 별개의 전국연합체를 조직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1959년 8월 11일 경전노조 회의실에서 산업별 및 지역별 노조 대표들(24개 노조연합회 대표 32명)이 회동,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선언문을 통해 볼 때, 설립목적은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에 있었다. 이를 위해 “악질기업주와 그 주구 및 노동부로커”와의 투쟁, “봉건잔재적 관료적인 일체의 요소를 타파”를 결의하였다.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는 대구지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말룡, 부산지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종자, 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정원·부위원장 김관호, 석탄광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노응벽, 경전노동조합 정대천·이상진 등이 중심이 되었다.

노동조직이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으로 갈라져 대립하게 되자 자유당 조직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섰으며, 보건사회부에서도 적극적인 화합공작을 하였다. 그러나 전국노협과 대한노총과의 화합이 성사되지 못한 채 1959년 10월 7, 8일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노총이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자 전국노협은 즉각적으로 불법대회라는 것을 지적하며 대회를 부인하였다. 그리고 10월 26일 서울시내 세종로에 있는 태화관에서 대한생사노조 외 14개 단위노조 대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중앙위원회 의장 김말룡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임원구성은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 당시의 임원구성과 현격히 달랐다. 정대천·이상진 등 정대천파는 물론이고 김기옥체제에 반대하여 이의 신임을 하였던 노응벽·최종자·김관호 등도 설립준비위원회 때의 임원명단에는 올라 있었지만 결성 당시의 임원명단에는 제외되어 있었다. 더욱이 설립준비위원회 당시 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정원도 임원명단에 없다.

전국노협의 결성과정에서 짚어야 할 부분이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 때와 전국노협 결성단계에서의 임원 변동상황이다. 어떠한 구상에서 전국노협이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결성 시점에서 대거 이탈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관호 선생이 이의신립운동을 주도하였으므로, 이의신립운동으로 발단된 전국노협 결성과정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1959년 10월에 결성된 전국노협과 1960년 11월에 조직된 한국노련을 혼동하였다. 그리하여 미리 준비해 간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 전국노협 결성 때의 임원 그리고 한국노련 임원을 제시하고 설명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 때의 임원을 대략 기억하고 있었으나 전국노협 결성 때의 임원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한몽연이나 김은호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한국노련 임원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덧붙여서 전국노협과 한국노련은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고 증언하였다. 당시 대한노총은 자유당과 밀착했던 세력이 밀려난 상태였으며, 각 산업

별노조는 존재해 있었으므로 산업별 위원장들이 모여 노동조직 통합을 논의했으며, 전국노협을 지지한 세력이 통합과정에서 합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³³⁾

한편 전국노협 의장 김말룡의 측근이었던 김기곤선생은 전국노협 결성과정에 대해서 정통파들이 김기옥체제에 반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결의하여 결성된 것으로 설명하였다.³⁴⁾ 처음에는 김기옥체제에 반발한 세력이 많았지만 나중에 많은 조직이 이탈함으로써 대구를 중심으로 한 36개 단위노조³⁵⁾가 모여 조직되었다고 하였다. 즉 그는 58년 대회 이후 “대한노총이 자유당의 어떤 그늘에서 여기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올바른 어떤 노동조합을 해야 되겠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자 여기는(대한노총 : 필자) 자유당 앞잡이 뿐이고 권력의 시너로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다”고 하면서 대한노총에서 이탈하여 중앙조직을 만들려고 하였다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자유당의 탄압에 의해 거의 대다수가 대한노총 조직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³⁶⁾

전국노협에서 대거 이탈자가 생겨났던 것은 정부와 자유당의 탄압에 기인하였다. 정부와 자유당은 전국노협의 결성이 1960년의 정부통령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전국노협 결성을 부정하였다. 전국노협 결성문제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그들은 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결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성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결성하였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유령단체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³⁷⁾ 더 나아가서 전국노협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물리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전국노협 결성의 중심인물이었던 김말룡이 “대한노총으로부터 손을 떼고 별도로 또 하나의 새로운 노동단체를 만든다는 일은 이(李)독재정권하에서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다. 관권의 간섭이나 탄압 정도가 아니라 투옥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못할 일이었다”³⁸⁾고 할 정도로 전국노협에 대한 탄압은 극심

33) 김관호 인터뷰

34) 김기곤 인터뷰

35) 실제로 14개 단위노조였다. 김기곤선생은 36개 단위노조로 잘못 알고 있는 듯했다.

36) 김기곤 인터뷰

37) 《동아일보》 1959년 10월 29일자 〈노조협의회는 유령, 손보사장관 談〉.

38) 김말룡, 〈노동조합운동의 전망〉, 《새벽》 1960년 7월호, 150쪽. 또한 김말룡은 전국노협의 업

했었다.

정대천은 자유당에 의한 김기옥과의 화합공작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전국노협에서 발을 빼고 있었으며 자유당의 화합공작에 의해 대한노총에 포섭당하였다. 정대천의 경전노조는 1959년 10월 6일 “가칭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위원으로 참가하였으나 현정세에 비추어 행정당국의 중용으로 대동단결을 원칙으로 합의를 보고 전협(전국노협; 필자)에 대하여는 향후 일체 관계를 끊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³⁹⁾ 그리고 10월 7일에 개최된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다.

1959년 8월 11일 설립준비위원회 결성에 합의했을 당시에는 24개 노조연합회 대표 32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10월 26일 전국노협 결성 참여세력은 14개 단위노조 대표 21명으로 크게 줄었다. 자유당의 회유공작에 포섭된 정대천세력을 비롯하여 김기옥체제에 반대하여 ‘이의신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광산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정원, 부위원장 김관호), 대한노총석탄광노동조합연맹(위원장 노응벽), 부산지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종자)이 전국노협에서 이탈한 결과였다. 1959년 말 현재 조합 수가 558개였음에⁴⁰⁾ 비추어 14개의 단위노조를 거느린 전국노협의 세력은 상당히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결성된지 4개월이 경과된 1960년 3월의 시점에서 전국의 70여 단위노조를 거느리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⁴¹⁾ 자료의 제약상 사실과약은 곤란한 형편이다. 다만 그 짧은 기간에 더욱이 자유당의 탄압이 강한 상황에서 50여 개가 넘는 단위노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전국노협의 세력에 대해 이찬혁선생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얘기할건 전국노협은 산하조직이 하나도 없었어. 그때 우옛것만(위에 만) 있지 대가리만 있었던 말이야. 없었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신문기사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세력을 포섭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면담자가 상기시켰으나 “아니 뭐 겉으로만 그렇다니까. 위에만. 위만 있었지 아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말야”라고 답변하였다.⁴²⁾

동옥(嚴東鉦)은 전국노협 결성 이후 연 1주일간 경찰에서 문초를 받았다고 하였다.

39) 대한노총경전노동조합, 《노동》 제7권 제11호, 1959년 11월, 26~27쪽. 이 성명서는 대한노총 경전노동조합 위원장 정대천(丁大天), 부위원장 김성환(金成煥), 감찰위원장 이상진(李相鎭), 감찰부위원장 박상익(朴商翊)·김규성(金奎星) 명의로 나온 것이다.

40)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1, 412~413쪽.

41) 《동아일보》 1960년 3월 10일자, 〈노조협의회 측서 노동절 맞아 성명〉.

김관호 선생도 이찬혁 선생과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는 “협의회(전국노협 : 필자)가 별도로 나왔는데 협의회세력은 미미했어요”라고 하였다.⁴³⁾

〈전국노협의 활동 및 대구지역 노동운동〉

1959년 10월 “민주적인 노동운동”, “노자평등의 균등사회 건설”을 내걸고 결성된 전국노협은 자유당 정부하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조직적인 약세와 더불어 자유당의 탄압책으로 인해 1960년 4월혁명 전까지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4월혁명이라는 열려진 공간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4·19 이전 전국노협의 활동에 대해서 김기곤 선생은 “조직자체가 뭐 권력에 탄압받고 뭐 뭐 또 노동조합 조직이 뭐 명칭만 그렇지 물론 안의 그 자체 단위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대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가 없었지요”라고 하였다.⁴⁴⁾

4월혁명에 의한 자유당 붕괴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회단체의 전면개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노동단체도 지도체제를 재편성하기에 이르렀다.⁴⁵⁾ 전국의 노동단체가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아 지도층의 일대개편을 단행한 것은 4월혁명에 의한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1950년대 자유당의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적 동원체로 전락되었으며, 1960년 3·15부정선거에 깊이 개입하였던 대한노총은 4월혁명에 의한 자유당정권 붕괴에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⁴⁶⁾ 자유당정권이 붕괴되자 대한노총 내 기존 집권

42) 이찬혁 인터뷰

43) 김관호 인터뷰

44) 김기곤 인터뷰

45)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로30년사》, 1977, 128~129쪽.

46) 대한노총은 자유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당과 노동조합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주로 상부 수준의 노동조합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지방적이고 하부 수준의 조직에서는 당과의 연결이 직접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시위나 정치적 선거에서 당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사협상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당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한미대사관 경제문제 상담역 (Counselor of Embassy for Economic Affairs) Edwin M. Cronk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 (1959.12.30)>(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세력은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발표하였다.⁴⁷⁾ 이는 대한노총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4월혁명 이후 대한노총 조직은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노총을 재조직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진한·김두한 등이 중심이 된 제3세력이 대두하여 노동계에서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말룡 중심의 전국노협은 4월혁명의 여세를 몰아 대한노총의 어용성·비민주성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조직화 작업을 활발히 하였다.

대한노총과 대립하여 별도로 노동조직을 구성한 전국노협은 (1) 노동조합의 본질에 입각하여 노동운동 전개 (2)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정치적인 중립주의 (3) 노동조합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운동방향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⁴⁸⁾

4월혁명 후 통치권력이 이완되고, 대한노총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전국노협은 즉각 활동에 나섰다. 전국노협은 4월혁명의 여세를 몰아 대한노총의 어용성·비민주화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조직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전국노협은 신정부 수립 때까지 일체의 노동운동을 중지하고 노조정비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전국노협은 4·19 이후 6월 초순까지 상당한 정도의 조직을 규합한 것으로 보인다.⁴⁹⁾

전국노협 위원장 김말룡은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순수한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근로자의 복지와 경제적 사회적 향상에 헌신하여야 한다”, “정치도 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⁵⁰⁾ 또한 전국노협은 전국 각급 노조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통일적인 노동조합 중앙조직을 결성할 계획을 세웠다.⁵¹⁾

affairs of Korea, 1955~1959》)

47) <주한미대사관 이등참사관 Elizabeth Gallagher이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60. 8.17)>(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48) 《동아일보》 1960년 1월 29일자, 김말룡 (논단) <한국노동운동의 비판 -앞으로의 방향을 중심으로-

49) 4·19 이후 6월 초순까지 170개 단위노조를 개편·포섭하여 16만 명의 노조원을 흡수하였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급속도로 조직을 확장하였다. 《동아일보》 1960년 6월 9일자, <자유 찾은 노동운동. 노총은 해산상태. 월말까지 전국노조 개편>.

50) 《동아일보》 1960년 6월 9일자, <자유 찾은 노동운동. 노총은 해산상태. 월말까지 전국노조 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관호 선생은 4·19 이후 노동운동은 전국노협이 중심이 돼서 전개되었지만 별로 활동할 시간이 없었으며, 조직확장이 되었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증언하였다.⁵²⁾

이찬혁 선생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전국노협이 결성되었지만 실체가 없었으며, 실제로 현장을 장악한 게 없다고 하였다. 4·19 이후 신규조직이 전국노협에 편입이 돼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전국노협 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⁵³⁾

김기곤 선생은 전국노협이 실질적으로 조직되었지만 권력의 탄압 등으로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1960년 3월 10일 노동절 때 전국노협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정도였다고 하였다. 4·19 이후 노동조건 열악함,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그때부터 전국노협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신규조직도 전국노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권오봉 선생은 4·19 이후 대구지역에서 해고자 복직 등 수습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많은 해고자들이 복직되었으며, 내외방직 삼호방직 등 어용노조들이 전국노협으로 들어왔다고 하였다.⁵⁴⁾

전국노협과 교원노조·은행노조와의 관계, 전국노협과 혁신세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주목할만한 특징은 정신노동자인 교원, 은행원, 신문기자의 노동조합결성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노동조합운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을 단순한 경제투쟁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 차원에 이르게 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⁵⁵⁾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1959년 서울 시내 일부 사립대학교수들에 의해 교원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시도가 다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정부당국은 “순수한 노무종사자 이외에 어떤 일반공무

51) 《동아일보》 1960년 7월 10일자, 〈노협 중앙단체 8월 중에 구성〉.

52) 김관호 인터뷰

53) 이찬혁 인터뷰

54) 권오봉 인터뷰

55)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2, 풀빛, 1991, 215쪽.

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며, 만일 노조가 조직되더라도 이를 불법시 하겠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⁵⁶⁾

교원노동조합운동은 1950년대 후반 교원노동조합 결성이 시도되었던 대구에서 1960년 4월 29일 대구시교원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 구성을 시발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교원노동조합 결성이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5월 9일 이항녕 문교부차관은 “교원노조 구성을 막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으나 5월 18일 이병도 문교부장관은 기존 정부의 견해와는 달리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불허방침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노협을 선두로 대한노총, 공무원노동조합 등 각 노동단체들에서 교원노조에 대한 지원투쟁을 전개하였다. 전국노협에서는 6월 26일 “교원노조의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고 적극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6월 29일 전국노협 노동쟁의위원회에서 문교부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하였다.⁵⁷⁾

이후 교원노동조합은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7월 말까지 전교원의 25%에 해당하는 2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⁵⁸⁾ 이에 따라 조직 정비 및 확대강화를 위한 전국대표자대회가 7월 3일 대구에서 개최되었으며, 7월 17일 서울에서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한국교원노동조합 총연합회(한국교조)’로 개칭하고 임원개편을 단행하여 전국적 조직체계를 정립시켰다.⁵⁹⁾

1960년 4월혁명에 의하여 자유당 정권이 쓰러지자 은행종업원들은 금융민주화를 추구하고 즉시 은행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였다.⁶⁰⁾ 1960년 6월 1일 조흥은행 노동조합 결성을 선두로 한국상업은행(6월 8일), 제일은행(6월 11일), 한일은행(6월 11일), 서울은행(6월 18일)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7월 23일에는 전국은행노동조합 연합회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⁶¹⁾

56) 이철국, <4·19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184쪽.

57) 송종래 외, 《한국노동운동사》 4, 지식마당, 2004, 562~564쪽.

58) 각 지방 주요 교원노조 결성상황에 대하여는 이철국, <4·19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185쪽 <표2> 참조.

59)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2, 풀빛, 1991, 226쪽.

60) 김낙중, 앞의 책, 279쪽.

교원노동조합과 금융노동조합 이외에 신문기자들에 의한 노동조합 결성운동도 전개되었다. 1960년 5월 15일 대구일보 기자들이 회사의 기술공 등 여타 직원들과 함께 대구일보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비롯하여 6월 17일에는 연합신문이, 6월 22일에는 평화신문이 각각 직장노조를 결성하고 기자들이 이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신문노동조합은 전국적인 노동조합 결성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⁶²⁾

이에 대구지역에서 활동한 김기곤·권오봉·나경일선생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김기곤·권오봉 선생은 4·19 이후 교원노조를 조직할 때 전국노협 관계자들이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절차 등 조직결성에 대한 안내를 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⁶³⁾ 나경일 선생은 제일모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교원노조 집회가 있을 때 동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혁신세력하고도 인적인 교분을 쌓았다고 하였다.⁶⁴⁾

4월혁명기 대구지역에서 노동조합결성투쟁의 대표적 사례로서 제일모직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나경일 선생의 증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당시 대구에는 대한방직, 삼호방직, 내외방직 등 대한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대구에서 제일모직이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이었으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4·19 이후 제일모직 안에서는 노동조건 열악함,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감 등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고, 4·19라는 열려진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였다. 노동조합 결성에서 주목되는 점은 노동조합 안에 대한노총 조직에도 있던 감찰위원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기능은 차이가 있었다. 대한노총 감찰위원회 기능은 김관호 선생이 증언한 바대로 노총원의 사상을 감찰하는 기능 즉 좌익사상 침투를 막거나 좌익사상을 가진 노총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일모직 노동조합에서의 감찰부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조직에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감찰

61) 김낙중, 앞의 책, 279~280쪽; 한국노총, 앞의 책, 890쪽에는 조흥은행노조가 6월 2일에 결성된 것으로, 527쪽에서는 6월 1일에 결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62) 김낙중, 앞의 책, 292쪽; 한국노총, 앞의 책, 889~890쪽.

63) 김기곤 인터뷰; 권오봉 인터뷰

64) 나경일 인터뷰

하기 위한 것이었다.⁶⁵⁾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제일모직 노동조합이 전국노협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1960년 5, 6월 결성 당시 계엄령 상태였기 때문에 시국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사회질서가 유지되었을 때 상부조직에 가입하겠다는 의도였다. 제일모직과 전국노협과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60년 12월 제일모직 파업 당시에 한국노련(1960년 11월에 한국노련이 결성되므로 이때는 전국노협 조직이 아니었음에도 나경일 선생은 전국노협으로 얘기함)과 연계가 이루어진다. 제일모직 파업 당시 노동조합은 한국노련에 가입하였고, 한국노련은 파업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나경일 선생은 증언하고 있다.⁶⁶⁾ 특기할 사항은 사실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김말룡(한국노련 임시의장)의 파업지원 방기로 인해 파업이 와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노련 결성과정〉

1960년 7·29총선까지 노동계는 김말룡을 중심으로 한 전국노협세력, 성주갑·김주홍 등의 대한노총 잔존세력이 있었다. 7·29총선 이후 이러한 노동계 판도에 새로운 세력 즉 제3세력이 등장하였다.

제3세력은 전진한(錢鎭漢)·김두한(金斗漢)이 중심이 되었다. 1946년 9월 총파업 이후 대한노총 위원장이었던 전진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1952년 11월대회에서 제거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한때 대한노총 내 반자유당파를 결집하여 대한노총에서의 세력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노농당 당수였던 전진한은 1957년 대한노총 대회를 앞두고 철도노련 위원장 김주홍과 연결하여⁶⁷⁾ 자유당의 비호에 의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대천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행동으로

65) 나경일 인터뷰

66) 나경일 인터뷰

67)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Edwin M. Cronk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57. 8.28)〉(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5~1959》).

옮겨지지 못했다. 김주홍이 노동운동의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면서 정대천의 강력한 라이벌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유당과의 단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전진한과 김두한은 미군정기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한민주청년동맹(대한민청)⁶⁸⁾의 감찰부장 김두한의 반공활동은 대한노총의 조직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미군정기 대한노총과 우익청년단과의 공조체제 속에서 대한민청 감찰부장 김두한의 반공활동이 대한노총의 조직확장에 기여함으로써 두 조직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대한민청·청년조선총동맹⁶⁹⁾의 회장 유진산과 대한노총 위원장 전진한은 개인적으로 돈독한 사이였으므로 두 조직 간의 공조체제 또한 확고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전진한이 결성한 노농당에 김두한이 참여하기도 하였다.⁷⁰⁾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은 노동계 통합에 합의하였다. 통합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대한노총과 대립되는 조직으로 출발했던 전국노협이 대한노총과 통합하고자 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노동계 통합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몫을 하게 되어 통합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 또한 이 당시 아래로부터 진행된 노조민주화운동에 힘입어 노동조직이 신설·개편되어 나가고 있음에 고무되어 노동조직 통합을 통하여 전국노협 세력이 노동계를 주도해 나가고자 의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68) 대한민주청년동맹은 1946년 4월 9일 결성되었으며, 결성 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유진산(柳珍山), 부회장 김창형(金昌炯)·김근찬(金根燦), 총무부장 유우석(柳愚錫), 사업부장 김후옥(金厚玉), 재정부장 박정래(朴禎來), 감찰부장 김두한(金斗漢), 지방부장 김후옥(金厚玉), 정보부장 장우극(張愚極), 선전부장 박용직(朴容直), 조직부장 조권(趙權), 교도부장 유약한(劉約翰)이었다.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1973, 666-667쪽.

69) 청년조선총동맹은 1947년 4월 7일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대한민주청년동맹이 1947년 4월 20일 시공관에서 열렸던 전국문화예술인 경연대회를 유회시키고 정진룡(丁鎭龍) 등 3명을 타살한 사건으로 인해 자진 해산한 후 다시 결성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단체는 대한민청이 간판만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선우기성, 위의 책, 669쪽.

70) 노농당은 1955년 2월 15일 결성되었다. 노농당의 선언, 강령, 당면정책은 《대한민국건국10년지》, 1956년, 205쪽 참조. 노농당은 1960년의 대선을 앞둔 1959년 12월 20일 당명을 민족주의민주사회당으로 개칭하였다. 《동아일보》 1959년 12월 21일자, 〈민족주의민주사회당으로, 노농당대회 개칭 결정. 대통령후보와 당수도 분리〉. 김두한은 1958년 12월 3일 탈당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농당에서 탈당하였다. 《동아일보》 1958년 12월 3일자, 〈노농당서 탈퇴. 김두한씨〉.

대한노총 대표 성주갑과 전국노협 대표 김말룡은 1960년 9월 14일 “4·19 이후 전체 근로대중들의 절대적인 요망과 구태의연한 정치적 경제적 공격 및 점고(漸高)해가는 새로운 사회불안에 대비코 오직 <단결만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노동전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0월 통합대회를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⁷¹⁾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4·19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노동운동의 새출발”을 기하며, “노동조합운동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기하며, “당면한 교원노조의 합법성 전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고 결의하였다.

1960년 10월 1, 2일에 개최된 전국노동단체통합대의원대회는 각 파간 의견대립으로 휴회되고, 다시 11월 25~26일에 통합대회가 개최되었다. 1960년 11월 통합대회를 통하여 김말룡 중심체제의 한국노련이 성립되었다. 한국노련 중앙운영회는 11월 30일 임시 정·부의장 및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⁷²⁾

〈한국노련 임원〉

- 의장 : 김말룡(경북노련)
- 부의장 : 이규철(李奎喆, 칠로노련) · 성주갑(成周甲, 조양사) · 김정원(金正元, 광산노련)
- 사무총장 : 최유식(崔有植, 전남노련)
- 총무부장 : 한진희(韓眞熙)
- 기획부장 : 이상배(李相培)
- 조직부장 : 김관호(金觀浩)
- 선전부장 : 김종홍(金鍾洪)
- 조사·통계부장 : 최종자(崔鍾子)
- 쟁의·지도부장 : 정국권(鄭國權)
- 국제부장 : 박영기(朴榮基)
- 법규부장 : 배병우(裴炳宇)
- 교육부장 : 박종규(朴鍾圭)
- 부녀부장 : 미정

71) 한국노총, 앞의 책, 530쪽 부록 7-4-4.

72) 《동아일보》 1960년 12월 2일자, 〈正副의장 선출. 勞聯운영위〉.

위 임원구성을 볼 때, 전국노협 중앙위원회 의장이었던 김말룡이 한국노련 의장에 선출됨으로써 전국노협세력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직부장 김관호, 조사·통계부장 최종지는 1958년 대한노총 위원장 김기옥체제에 반기를 들었으며,⁷³⁾ 1958년 8월에 성립한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 임원이었다. 또한 부의장 김정원은 전국노협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사무총장 최유식은 지도위원의 한사람이었다.⁷⁴⁾ 이들이 비록 10월에 결성된 전국노협에는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김기옥체제 하의 대한노총에 대한 주요한 비판세력이었음은 자명하다. 이규철은 4월혁명 이후 철도연맹 개편대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되어 막강한 세력을 발판으로 한국노련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런데 김말룡이 한국노련의 의장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였다. 왜냐하면 당시 대한노총 조직에 비하여 전국노협 세력이 약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장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김관호 선생은 전국노협과 대한노총이 “통합했다고 그러기보다 그쪽에(그 당시에) 전국노협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왔으니까 마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별개”라고 하였다. 또한 대한노총이 4·19 이후 자유당 잔재세력이 물러나고 수습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었는데 수습위원회가 한국노련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면담자는 한국노련을 주도한 세력이 대한노총 수습위원회라고 하는게 맞는 설명인지를 반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김관호선생은 “뭘 수습위원회를 고저 수습위원회를 주도했다기 보다도 그쪽에(그 당시에) 이심전심으로 고저 산별위원장끼리 모여서” 합의하여 결성한 것이라고 하였다.⁷⁵⁾

김관호 선생의 설명대로 대한노총 산업별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한국노련이 결성되었다면, 전국노협을 주도했던 김말룡이 한국노련 의장에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찬혁 선생은 한국노련의 정식 의장이 아닌 임시의장이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 그는 “그래 임시의장으로 있어서 그래. 임시

73) 한국노총, 앞의 책, 472~475쪽.

74) 김진선, 〈자유당시대의 노동조합운동〉, 《노동공론》 1975년 3월호, 36쪽 ; 한국노총, 앞의 책 490쪽.

75) 김관호 인터뷰

의장으로 있어서 그랬는데. 임시위 간부들도 이쪽 이쪽 다 같이 했는데 김말룡이 제가 데려온 사람은 별로 없고. 옛날 조합 안했던 사람들 대거 했어”라고 하였다.⁷⁶⁾

반면에 김기곤 선생은 그 당시의 분위기로 설명하였다. 당시 김말룡이나 전진한 외에는 부각되는 인물이 없었으며, 전국노협의 세력이 약했지만 김말룡을 임시의장에 앉혀야 한다는 당시의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것이다.⁷⁷⁾

김관호 선생에 증언에 의하면 한국노련 중앙 임원들 중에서 총무부장 한진희는 부두노조 출신으로 노총의 총무부 차장으로 있는 사람이며, 나중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기획부장 이상배는 화공노조, 선전부장 김종홍은 철도연맹, 쟁의·지도부장 정국권은 부두노조 출신이라고 하였다. 법규부장 배병우는 김치선교수의 지도를 받고, 서울법대 사회문제연구소 학생소장을 지냈으며, 이후 경전노조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였다.⁷⁸⁾

한편 김관호선생은 한국노련 중앙운영위원(13인)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김말룡이 자신의 표가 모자라자 (불리한)표를 포켓에다 넣었다는 일화를 소개하였다.⁷⁹⁾ 이찬혁 선생은 1960년 11월의 통합대회도 전국노협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회에서의 대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대한노총 세력이었다고 결론지었다.⁸⁰⁾

〈한국노총 재편성과정〉

4월혁명에 의해 노동운동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노동대중의 밑으로부터 요구인 임금인상 등 경제투쟁, 노동조합결성과 노조민주화운동 등 자연발생적인 요구가 집약되어 민주·민족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화되지 못했다.⁸¹⁾

76) 이찬혁 인터뷰

77) 김기곤 인터뷰

78) 김관호 인터뷰

79) 김관호 인터뷰

80) 이찬혁 인터뷰

81) 장명국, 〈해방후 한국노동운동의 발자취〉,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1985, 125쪽.

노동자 대중의 사회변혁운동은 5·16군부쿠데타로 인해 일시 후퇴하게 되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육사 5기생들이 주축이 된 군부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동시에 입법·사법·행정권 등 일체의 장면 정권을 인수한다고 선언하였다.⁸²⁾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라 개칭하고, 계엄사령부 공고 제5호로서 〈경제질서회복에 관한 특별성명서〉를 발표하여 모든 노동쟁의를 일체 금지시켰다.⁸³⁾ 이어서 5월 22일에는 포고 제6호를 공포하여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5월 23일을 기해 해산시켰다.⁸⁴⁾ 이에 따라 한국노련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단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5월 23일 장덕승(張德昇) 보사부장관은 5·16 전에 계류 중이던 각종 노동쟁의는 백지화되었다고 밝혔다.⁸⁵⁾ 한편 문희석(文熙奭) 문교부장관도 교원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학원의 정치활동 및 노동조합운동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⁸⁶⁾

포고 제6호는 5월 30~31일로 예정되었던 한국노동단체 통합대회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 11월 25~27일에 개최된 통합대회가 임원개선문제로 김말룡계와 전진한계의 대립으로 무산되었고, 그간 노동단체 통합대회를 추진하여 오던 중이었다.⁸⁷⁾

포고 제6호가 노동조직에도 적용되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한국노련 의장 김말룡(경북노련), 부의장 이규철(李奎喆, 철도노련), 김정원(金正元, 광산노련)은 보건사회부장관을 방문하였다.⁸⁸⁾ 이때 참석한 인사들은 3명의 한국노련 지도자, 보건사회부

82)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 제1집(상), 1963, 329쪽.

83) 한국노총, 앞의 책, 569쪽.

84) 《동아일보》 1961년 5월 23일자, 〈정당·사회단체에 해산령. 학술·종교단체는 제외. 31일까지 재등록 실시〉. 포고문 제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단기 4294년 5월 23일을 기하여 이를 해체한다. 단 정치성이 없는 구호단체, 학술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별도 허가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단기 4294년 5월 31일까지 재등록을 실시하라.

85) 《동아일보》 1961년 5월 25일자, 〈5·16 전에 계류중인 노동쟁의 백지화. 이유 없는 노동자 해고도 불허. 張보건사회부장관 談〉.

86) 조창화, 앞의 논문, 145쪽.

87) 《동아일보》 1961년 5월 14일자, 〈30일에 통합대회. 대립되어 온 노동단체〉.

88) 〈대화 비망록 : 한국노동지도자의 군사쿠데타에 관한 견해와 노동운동의 미래(1961. 5.24)〉 (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장관, 차관, 노동국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련 지도자들은 한국노련이 반공투쟁에서 필수적인 세력임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노동조직의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⁸⁹⁾ 이날의 모임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노동국장에게 노동단체 지도자들의 청원이 최고회의에서 받아들여질지 문의해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끝났다.

포고령 제6호로 기존 정당·사회단체를 해체시킨 군사정부 당국은 동시에 정치성 없는 구호단체, 노동단체 및 종교단체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별도로 허가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1961년 5월 31일까지 재등록을 실시하라고 공고하였다.⁹⁰⁾

포고 제6호에 의한 재등록 결과 155개의 단위노조와 22개의 연맹체가 기일 전에 등록을 미필하였거나 유명무실한 조합이라는 이유로 해체되었다. 한국교원노조연합회도 5·16 이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등록할 자격이 없다 하여 해체되었다.⁹¹⁾

한국노련 의장 김말룡은 7월 5일 한국노련을 중심으로 중앙조직을 재건하고자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김말룡은 서한을 통해 1960년 11월 25~27일 통합대회에서 조직된 전국적 중앙조직인 한국노련은 정치적이고 부패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축출하였으며, 한국노련 조직을 통해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기초를 세웠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재조직 계획안을 제출하였다.⁹²⁾ 계획안에는 목적과 임무, 잠정적 계획, 과제, 대행위원회 임원 선출 계획, 재조직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노련 의장 김말룡의 재조직 계획안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련 의장 김말룡의 재조직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철도노련 위원장이며, 한국노련 부의장인 이규철을 중심으로 노동조직 중앙을

89) <대화 비망록 : 한국노동지도자의 군사쿠테타에 관한 견해와 노동운동의 미래(1961. 5.24)> (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90) 한국노총, 앞의 책, 569쪽.

91) 한국노총, 앞의 책, 569쪽.

92) <주한미대사관 경제문제 상담역 Albert E. Pappano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61. 9. 6)> (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재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8월 3일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 이후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1961년 8월 3일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근로자의 단체활동을 부활시켜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장되었던 근로자의 단체활동권을 다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⁹³⁾ 이어 같은 날자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2조 1항에는 근로단체도 등록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희섭 보건사회부장관이 8월 4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전국단일산별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김말룡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련계 간부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군사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함과 동시에 8월 5일 산업별 노동조합조직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규철을 의장으로 하는 한국노동단체 재건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켰다.⁹⁴⁾ 재건조직위원회는 9개의 산업별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되어 ‘9인위원회’라고도

93) 《동아일보》 1961년 8월 4일자, 〈근로자의 단체활동 인정. 노조신고 당국서 심사. 신고증 교부로 과거협약도 유효〉; 한국노총, 앞의 책, 586쪽 부록 2-1. 전문 3조 부칙으로 된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포고 제6호에 불구하고 근로자의 단체활동을 보장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국가재건 과업완수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자의 단체활동은 본법의 규정하는 외에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전항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았을 때에 성립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4년 5월 21일 이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본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존속하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갱신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94) 한국노총, 앞의 책, 570-571쪽.;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William J. Ford가 미국무부에 보낸 노동보고서(1961.10.23)〉에서는 포고가 8월 3일(보고서에서는 8월 4일로 되어 있으나 8월 3일의 착오이다)에 나왔다는 사실과 이규철이 8월 5일 아침에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 형성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이규철과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William J. Ford가 미국무부에 보낸 노동보고서(1961.10.23)〉(NARA, 《Records of the

불리웠다. 재건조직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⁹⁵⁾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 임원〉

- 의장 : 이규철(李奎喆, 철도)
- 총무책임위원 겸 대변인 : 한기수(韓基洙, 광산)
- 조직책임위원 : 이광조(李光朝, 외국기관)
- 재정책임위원 : 조창화(趙昌華, 전력)
- 위원 : 김광수(金光洙, 섬유) · 조규동(曹圭東, 체신) ·
안강수(安康洙, 운수) · 최재준(崔載峻, 해상) ·
김준호(金濬浩, 금융)

한국노동단체 재건조직위원회는 “혁명정신을 받들어 참신하고 건전한 노동조합을 조직 재건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의 향상과 산업부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이다”, “성스러운 국가개혁기를 맞이하여 모든 적폐와 타성을 일소하고 건전한 노동단체를 재건하여 민주적 노동운동 발전을 기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생산증강에 적극 헌신함으로써 역사적인 국가재건운동에 참여케 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운동의 기본방침과 재건조직요강을 제시하였다.⁹⁶⁾

〈노동운동 기본방침〉

1. 우리들은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자주경제확립으로 민주적 국토통일을 기한다.
2. 우리들은 공고한 단결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수호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한다.
3. 우리들은 정치적 중립과 조합재정의 자립으로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한다.
4. 우리들은 노동자의 교육과 문화향상의 강력한 실천을 기한다.
5. 우리들은 건전한 근로정신으로 국가산업의 발전을 기한다.
6. 우리들은 기간산업의 공유화와 산업의 민주화를 기한다.
7. 우리들은 민주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95) 한국노총, 앞의 책, 571쪽.

96) 한국노총, 앞의 책, 588~589쪽 부록 2-3.

〈노동단체 재건조직 요강〉

1. 각 산업별의 건설한 지도자의 동지적 결합체인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의 지도하에 각급 노동단체를 조직한다.
2. 모든 용공 및 반혁명분자를 발본배제(拔本排除)하여 반공체제를 강화한다.
3. 산업별노동조합의 단일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조직의 난맥을 지양하고 무질서한 노동쟁의를 방지한다.
4. 노동단체의 재정자립으로 노동조합의 부패와 의타성을 지양한다.
5. 노동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을 기한다.
6. 어용노동단체·사이비노동단체 및 사이비 노동지도자를 철저히 제거하여 건전한 노동단체의 발전을 기한다.
7. 노동단체의 조직체계의 합리적 편제로 경비를 절감한다.
8. 국제노동단체와 유대를 강화한다.

한편 전 한국노련계 간부들은 전국노동단체 재조직연락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말룡을 책임위원으로, 김정원(광산)·이기철(섬유)·전병민(자유)·박민균(해상)·김대연(화학)·조재규(한전)·조규동(체신)·김중길(은행) 등 약 40명의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들을 위원으로 선정하였다.⁹⁷⁾ 책임위원 김말룡을 비롯한 광산·섬유·자유·해상·철도·화학 등 28개 단위의 위원과 9명의 연락실무위원의 연명으로 〈전국노동자 동지에게 고함〉이라는 유인물을 신문사 등에 배부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과거의 모순된 운동을 지양하고 노동운동 본래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구악과 부패를 제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규철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비난하였다.⁹⁸⁾

이에 대하여 정부당국에서는 전국노동단체 재조직연락위원회를 배제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보사부 당국은 8월 8일 노동조합 재조직을 위해 이규철이 이끄는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가 무난하다고 보고, 노동조합 재건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문제로서는 적당한 지도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또한 한신(韓信) 내무부장관도 8월 9일 담화를 통해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노동단체 조직을 빙자하여 범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있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합법적인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를 악용한 중상모략행위, 불법집회 등 사회의

97) 한국노총, 앞의 책, 578쪽.

98) 《동아일보》 1961년 8월 6일자, 〈노조 재조직에 벌써 혼선. 두 단체가 서로 반목, 연일 한국씩 출현·비난성명도〉.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동은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경고하였다.⁹⁹⁾

김말룡 중심의 전국노동단체 재조직연락위원회를 배제하고 이규철 중심의 재건조직위원회(위원장 이규철)를 통하여 노동조직 중앙을 결성하고자 했던 정부당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는 8월 6일과 8월 9일 두 차례에 걸친 회합에서 15개 산업별 조직위원을 위촉하는 등 중앙조직 결성대회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해나가고 있었다.

각 산별노조재건조직위원회는 1961년 8월 30~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결성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기본방침과 조직요강에 따라 산업별노조를 재건 조직하였다.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는 15개의 산업별노조를 토대로 중앙조직을 결성하려고 하였다.¹⁰⁰⁾ 결성대회 전까지 조직을 완료한 조직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섬유노동조합, 전국광산노동조합, 전국외국기관종업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전국해상노동조합, 전국금융노동조합, 전국전매노동조합, 전국화학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11개 산업별노조였다.

이러한 산업별조직을 토대로 1961년 8월 30~31일 서울 용산에 소재한 교통부우회관에서 한국노총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¹⁰¹⁾ 결성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위원장 이규철(李奎喆), 부위원장 김광수(金光洙)·남준현(南俊鉉), 사무총장 한기수(韓基洙), 사무차장 이광조(李光朝), 총무부장 정구섭(丁龜燮), 조직부장 김용성(金容聲), 조사통계부장 김흥배(金興培), 교육선전부장 박영성(朴泳成), 법규부장 김종흔(金鍾昕), 국제부장 박영기(朴榮基), 부녀부장 단길수(段吉秀), 회계감사 최재준(崔載俊)·안강

99) 《한국일보》 1961년 8월 9일자(한국노총, 앞의 책, 578쪽에서 재인용).

100) 15개의 산별노조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섬유노동조합, 전국광산노동조합, 전국전력노동조합, 전국외국기관종업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전국해상노동조합, 전국금융노동조합, 전국전매노동조합, 전국화학노동조합, 전국부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출판노동조합, 전국연합노동조합 등이었다.

101) 《동아일보》 1961년 8월 30일자, 〈노조총연맹 결성대회개막 산별대표 78명 참가〉; 한국노총 결성대회에 배당된 대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국철도노동조합 12명, 전국섬유노동조합 14명, 전국광산노동조합 8명, 전국외국기관종업원노동조합 7명, 전국체신노동조합 4명, 전국운수노동조합 10명, 전국해상노동조합 7명, 전국금융노동조합 3명, 전국전매노동조합 5명, 전국화학노동조합 5명, 전국금속노동조합 3명으로 총 78명이었다.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William J. Ford가 미국무부에 보낸 노동보고서(1962. 2. 2)〉(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수(安康洙)·지연일(池淵日)·조규동(曹圭東)·조희원(趙義元) 등이었다.¹⁰²⁾

김관호 선생은 대한노총 재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김규라고 하였다. 김규가 舊 노총의 차장급으로 9명을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광산노조에 적을 두고 대한노총 본부의 쟁의부 차장을 지냈던 한기수라고 하였다. 한기수를 중심으로 대한노총 본부의 차장급, 각 산별노조 위원장급하고 9인의 재건위원을 조직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9인의 재건위원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이 결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성방식에 대해서도 “새로 조직하는데 뭐 조직체는 있으니까 산별위원장만 바꾸면 된다 말이야. 그건 간단하니까. 그래서 자기네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전부 위원장이 된 거지 하향식으로. 그래가지구 한국노총으로 이름을 곤치고(고치고) 연맹기를 그 단체의 숭상인 연맹기를 바까(바뀌) 버리고 또 연맹가를 바까뿌렸습시다(바뀌버렸습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16개 산별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고 한국노총 중앙조직도 산별노동조합 위원장의 인준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⁰³⁾

한편 이찬혁 선생은 이규철이 한국노총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규철이 철도노조 위원장이었으며, 당시 한국노동조합운동에서 철도가 중요한 조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형태 이런 걸 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규철이가 철도위원장 했잖아. 철도 빼놓고 없거든. 요즘 좀 달라졌지..... 옛날에는 한국노동조합운동에 철도 빼면 아무것도 안되게 돼 있을 정도로 철도노조가 중요했어”라고 하였다. 또한 이규철과 함께 석공노조의 한기수, 외기노조의 이광조가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¹⁰⁴⁾

노동조합 재조직의 중심인물을 선정한 것과 관련하여 1959년 대한노총 말기부터 1964년 한국노총 시절까지 간부를 지낸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¹⁰⁵⁾

102) 《동아일보》 1961년 8월 31일자, 〈위원장에 이규철씨 노조총연맹 임원선정〉; 한국노총, 앞의 책, 574~575쪽.

103) 김관호 인터뷰

104) 이찬혁 인터뷰

105)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108쪽.

1961년 8월 초순경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인 홍종철이 나를 찾아왔다. 이 자리에는 치안국 경사출신으로 대한노총 출입을 담당했던 김성운이 배석하였다. 홍종철은 황해도 출신으로 강직한 인상을 풍겼고 노조제조직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홍종철은 나에게 많은 노조간부명단을 보이고 이들에 대해 아는 바를 물으면서 이 중에 누가 재건조직의 중심인물로 적합한가를 물었다. 나는 아는대로 누구누구는 안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때 재건위원회 이규철씨는 명단에 없었다. 이규철씨는 4·19혁명 후 철도파업을 주도한 사람으로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규철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 결성에 대한 한국노련 의장 김말룡의 대응이 궁금하여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관호 선생은 9인위원회에서 철도노조 위원장 이규철을 한국노총 위원장에 앉힌 것으로, 고용 위원장에 불과하였다고 하였다. 즉 “이규철이는 말하자면 고용 고용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9인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위원장하면 조직적으로 먹여주지를 않았어요. 엇그제만 해도 노총 차장하던 놈들이 위원장 한다고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그러니까) 이규철이가 말을 제일 잘 들으니까 갖다 썬거예요(썬거예요)”라고 하였다. 또한 이규철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안기부의 장난에 의해 밀려났다고 덧붙였다.¹⁰⁶⁾

김말룡은 한국노총 결성에 반발했지만 조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는 “뭐 반발이야 뭐 굉장히 했지요. 반발을 해도 그쪽에(그 당시에) 조직이 9인위원회한테 한풀 죽어가지고 그냥 있을 때니깐 김말룡이 반발이 얘기가 안되고 김말룡이가 그거를 반발을 하면서 김수환 추기경한테 접근”을 하였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였다.¹⁰⁷⁾ 김기곤 선생은 한국노총이 결성되는 날 김말룡은 연행되었고, 결성되고 난 후 정보부에서 풀려났다고 하였다. 그때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당시를 회고하였다.¹⁰⁸⁾

한편 김정원은 1962년 말부터 7개 산별위원장들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진 끝에 노동자 정당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으고 가칭 ‘민주노동당 발기위원회’를 구성하였다.¹⁰⁹⁾ 그러나 이는 미수에 그쳤는데 김정원의 노동당 결성 기도사건에 대해 김관호

106) 김관호 인터뷰

107) 김관호 인터뷰

108) 김기곤 인터뷰

109)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선생은 “노동당을 만들어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직”하려고 했으나 중앙정보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수하여 반격함으로써 실패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조창화 뭐 뭐 등등해서 노동당을 받기인을 맨들었어요(만들었어요). 받기인을 맨들었는데 그걸 중앙정보부에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압력을 가했거야(가한거야). 너희 노동당할거 같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는 바람에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총에서 김정원씨 제명처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국노협 의장 김말룡〉

전국노협은 대구 대한방직쟁의 과정에서 어용적 태도를 취한 대한노총 경북지구 연맹에 반발하여 결성된 대한노총 대구지구연맹이 주축이 되었다. 전국노협 의장 김말룡은 대한방직 쟁의과정에서 대구지구연맹 위원장으로서 쟁의지도에 헌신하였던 인물이다.¹¹⁰⁾ 노동자들의 투쟁과정 속에서 세력을 결집하여 대한노총의 어용화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대구 대한방직 쟁의는 조방쟁의와 더불어 1950년대 노동운동의 중요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당에 예속된 대한노총을 비판하고 이에 대항하여 대한노총과 별도로 조직된 전국노협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전국노협이 결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말룡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말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4월혁명기 전국노협을 이끌고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60년 11월 노동단체 통합과정을 통해 조직된 한국노련의 (임시)의장이었던 점에서 김말룡에 대한 연구는 노동운동사의 영역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김기곤 선생은 “그분이 하는 어떤 운동 자체가 정말로 옳은 운동이었었고”, “그분이 나아가는 길은 오직 노동조합을 위한 길 마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중립하다는거 정신 이런거 해서 그래가 많은 감명을 받았지요”라고 하였다.¹¹¹⁾

110) 김사육, 앞의 책, 106쪽.

111) 김기곤 인터뷰

대구지역에서 활동했던 김기곤 선생은 부산 조방쟁의 전까지 대구에서는 어용세력이 없었으나 부산 조방을 계기로, 그리고 내외방직 쟁의, 대한방직 쟁의를 계기로 어용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1950년대 중반부터 김말룡이 노동조합의 어용화에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인물로 자리잡기 시작되었던 듯하다. 김기곤 선생은 “55년도 대한방직 쟁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거의 다 대구에서는 약간 분파가 있었고, 자유당 그 도당 간부들이 인자 김말룡씨를 위주로 하는 어떤 조직을 자꾸 저쪽 편으로 몰아부쳤고, 자유당 도당에서도 김말룡씨를 어떻게든 조질라 카는(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김말룡씨를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어요”라고 하면서 김말룡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상황을 술회하였다.¹¹²⁾

권오봉 선생은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 그 어느 정도 위협의 적이 되어 있었어. 두려움의 적”이었다면서 기업가들이 노동운동가 김말룡을 위협적인 인물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또한 1955년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의 재정부장직을 맡고 있던 설경동이 대한방직을 인수받아 대구로 내려올 때 김성곤을 찾아갔는데 그때 김성곤이 설경동에게 “딴 거 걱정할게 없고 단 조심할거는 김말룡이다. 김말룡이 하나만 잘 다루면 당신 살 수 있소”라고 하였다는 일화를 소개하였다.¹¹³⁾

한편 권오봉 선생은 김말룡에 대해서 좋은 평가만을 내리지 않는 않았다. 그는 1961년 겨울 제일모직에서 파업을 결정하고 대한방직에서 응원대를 보내기로 되었는데 인원동원에 실패하고 파업이 무산된 것이 김말룡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그가 김말룡을 찾아갔을 때 “권동지 말이지 그렇게 말이야 파업을 무모하게 하는 사람이 어딴어요”라고 하여 파업이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말룡이 오해를 받았고, 대구지역 노동운동가들과 결별하게 되었음을 술회하였다.¹¹⁴⁾

〈제일모직 노동조합 결성운동〉

1950년대 한국 민간산업의 대부분은 섬유산업이었으며, 섬유산업 기업주들은 특

112) 김기곤 인터뷰

113) 권오봉 인터뷰

114) 권오봉 인터뷰

별히 자유당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은 가혹하게 탄압받았으며, 철저히 어용화되는 경향이 짙었다.¹¹⁵⁾

이승만정권하에서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은 4월혁명을 계기로 노동운동을 본격화하였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용노조를 반대하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곳에서는 노동조합결성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지역이 전국노협의 발원지였던 만큼 4월혁명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대구 대한방직은 1956년 이래 쟁의 과정에서 쫓겨났던 배형이 다시 복직되어 노동조합을 개편하였으며, 내외방직에서도 1954년 12월 쟁의 당시 해고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약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복직하여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하였다. 삼성재벌의 기업으로 자유당 치하에서 노동조합 결성이 곤란했던 제일모직은 4월혁명 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지 등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제일모직 노동조합 감찰위원장을 지낸 나경일 선생은 “대구에서는 이제 대한방직이나 삼호방직 내외방직 노동조합이 대한노총 계열의 조합이 있었고, 제일모직만이 유독 큰 회사치고 노동조합이 없었거든”이라고 하면서 제일모직에서 1960년 5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고 하였다.¹¹⁶⁾ 제일모직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높은 불만에서 촉발되었다고 한다. 즉 그는 “자유당의 이승만이 장기집권 할라고(하려고) 3·15부정선거를 하는데 심지어 제일모직 같은 데서는 종업원 상호간에 3인조 5인조 카는 거를(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투표장에까지도 서로가 한조가 같이 투표소에 가가(가서) 서로가 감시하도록 이런 공작을 꾸며가지고 종업원들한테 강요”했다고 한다.¹¹⁷⁾ 그리하여 회사의 강압적 통제방식과 자유당권력의 압박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싹텄다고 하였다.

제일모직에서의 노동조합결성은 4·19 이후 대구지역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결성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제일모직 노동조합이 결성될 때까지 회사측은 온갖 회유 공갈 협박을 자행하였다. 노동조합이

115) 김낙중, 앞의 책, 266쪽.

116) 나경일 인터뷰

117) 나경일 인터뷰

결성된 후 경상북도 사회과 노동계에 설립신고를 하고 난 후에는 공장폐쇄를 단행하여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파괴에 나섰다. 회사 측의 공장폐쇄에 대응하여 노동조합 측에서는 경상북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제2노동조합 즉 어용노동조합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 파괴에 나섰다,¹¹⁸⁾ 공장을 폐업하고 일부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휴직 조치하였다.¹¹⁹⁾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960년 6월 14일 제일모직 대구공장에서 여공 400여명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요구조건은 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② 152명에 대한 불법 휴직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 ③ 불법 폐업을 중단하고 정상 작업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이어 노동자들은 6월 17일 어용노조 타도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¹²⁰⁾ 경상북도 당국에서 회사의 공장폐쇄가 위법임을 들어 그 시정을 촉구하게 되어 6월 20일부터 조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어떤 대책과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일모직 노동조합에서는 6월 22일 경상북도 당국에 쟁의보고서를 제출하였다.¹²¹⁾

그러나 회사 측에서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노동자들은 7월 4일 공장 사무실을 점거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회사 측의 고발로 200여 명의 경찰들이 출동하여 농성한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하려고 했고, 1시간 이상의 충돌로 인하여 여공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내 다른 공장들에서 1,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오를 이루어 농성을 지원하였다. 이날 강권으로 사태를 진압하려던 경찰도 4·19 후의 분위기 속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에 대신하여 계엄군 헌병들이 회사 내의 경비를 맡았으며 농성은 평온리에 진행되었다. 회사측도 하는 수 없이 보사부 당국의 조정을 받아들여 8월 10일 이 투쟁은 종결을 보았다.¹²²⁾ 보사부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118) 나경일 인터뷰

119) 김낙중, 앞의 책, 302쪽.

120) 김낙중, 앞의 책, 302쪽.

121) 한국노총, 앞의 책, 516쪽. 이때 요구조건은 ① 노조결성 및 노동운동의 불법방해 즉시 중지 ② 152명의 공원에 대한 부당 휴직 조치 즉시 철회 ③ 공장조업 즉시 재개였다.

122) 한국노총, 앞의 책, 516-517쪽 ; 김낙중, 앞의 책, 302-303쪽.

- ① 회사 내의 신·구 양과 노조는 통합 단일화를 위해 모두 해산한다.
- ② 회사는 두 개 노조의 해산을 확인하고 3일 내에 직장 폐쇄를 해제 조업한다.
- ③ 통합 단일노조는 조업 개시 후 40일 이내에 결성하기로 하고 외부의 개입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보사부 조정에 따라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이어서 노동조합이 다시 결성되었다. 나경일 선생은 이러한 투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장미상조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푸는 반면, 조합원들에게는 압박을 가하고 해고를 단행했다고 한다. 즉 그는 “회사에서 인자(이제) 선수를 치는게 모냐하면(뭐냐 하면) 장미상조회 하는거 만들었다고” “우리가 노동조합 다시 단일노조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벌써 이 쪽에는 장미 노동조합을 이제 간판을 떼버리고 장미상조회 하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회원들한테는 온갖 특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감시원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출입자체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생리적인 불일도 제대로 못보고 구박을 받고 지내는데....무슨 문제거리가 있으면 그걸 핑계 해서 막 잘라(잘라) 내는 거예요”라고 당시의 상황을 술회하였다.¹²³⁾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제일모직 노동조합에서는 1960년 12월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는 자리에는 전국노협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위원장들이 다 모였었고, 이들은 연대투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파업 당일 인력동원에 실패하여 결국 파업은 와해되었다. 이에 대해 나경일 선생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¹²⁴⁾

김말룡씨가 그때 인재이제 노협에 의장 아닙니까. 의장이자 쟁의부장이고 또 뭐 등등 이래(이렇게) 있었는데. 파업일자까지 결정 노동조합 현 노협에서 회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인재이제 실행하는 날, 밖에 인재이제 경찰 인재이제 그 병력하고 그걸 막기 위한 그걸 막기로 하고 밖에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 종업원끼리 현장에 인재이제 위탁해가지고 소위 발전소 발전공장 그걸 포위하고. 그 안에서 인재이제 스위치 내려버리면 전 공장이 스톱될 거 아닙니까? 그

123) 나경일 인터뷰

124) 나경일 인터뷰

래 바깥의 방해꾼만 인재이제 막아 놓으면은 안에서는 계속 파업을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 날짜까지 정해놓고 나서 실행하는 날 김말룡씨 어디가 있었나하면 서울 서울 올라가가지고 반도호텔이요. 그때 이병철이 사장의 본거지가 바로 반도호텔이야.

당시 한국노련 의장으로 있던 김말룡이 제일모직 파업 와해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말룡이 왜 그러한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 1960년 7·29총선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7·29총선 선거자금을 기업주와 연결하여 충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4·19 이후의 열려진 공간 속에서 전개된 제일모직 노동조합운동은 대자본 삼성 재벌의 힘에 눌리어 결국 1960년 12월에 와해되고 말았다. 이후 현재까지 제일모직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고문헌〉

- 〈대화 비망록 : 한국노동지도자의 군사쿠데타에 관한 견해와 노동운동의 미래(1961. 5.24)〉(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 〈주한미대사관 경제문제 상담역 Albert E. Pappano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61. 9. 6)〉(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 〈주한미대사관 경제문제 상담역(Counselor of Embassy for Economic Affairs) Edwin M. Cronk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59.12.30)〉(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5~1959》)
- 〈주한미대사관 이등서기관 Elizabeth Gallagher이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60. 8.17)〉(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Edwin M. Cronk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56. 12.12)〉(NARA,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5~1959》)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Edwin M. Cronk가 미국무부에 보낸 보고서(1957. 8.28)〉(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55~1959》).

〈주한미대사관 일등서기관 William J. Ford가 미국무부에 보낸 노동보고서 (1961.10.23)〉(NARA, 《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60~1963》)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청사, 1982

김말룡, 〈노동조합운동의 전망〉, 《새벽》 1960년 7월호.

김사육, 《한국노동운동사》(상)·(하), 산경문화, 1979

김삼수, 《韓國資本主義とその特質 1945~53年 -政治体制・労働運動・労働政策を中心として》, 동경대 경제학연구과 박사학위논문, 1990

김영태, 〈도큐멘타리 노동운동 20년 소사〉, 《노동공론》(1)~(6), 1971년 12월호~1972년 5월호.

김용철, 〈제1공화국하의 국가와 노동관계—수혜적 포섭에서 약탈적 후원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3, 1995년 12월.

김준, 〈5·16 이후 노동조합의 재편과 '한국노총 체제'의 성립〉, 《사회와역사》 제55권, 1999.5.

노동운동회고 鼎談, 《대한노총결성전후》, (1)~(10), 《노동공론》 1971년 12월호~ 1972년 10·11월호.

대한노총 경전노동조합, 《노동》 제8권 제1호, 1960년

대한노총경전노동조합, 《노동》 제7권 제11호, 1959년 11월

변명희, 〈한국 교원노동조합의 비판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1

- 송종래 외, 《한국노동운동사》 4, 지식마당, 2004
- 안종우, 〈조방쟁의〉(상)·(하), 《노동공론》 1972년 8월호·9월호.
-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 이철국, 〈4·19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 2007
- 장명국, 〈해방후 한국노동운동의 발자취〉,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1985
- 전국광산노동조합, 《광로20년 약사》, 1969,
- 전국부두노동조합, 《전국부두노동운동백년사》, 1979.
-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외기노조20년사》, 1979.
-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로 30년사》, 1977
- 전국해원노동조합, 《전국해원노동조합사》, 1973.
- 정영태, 〈노동조합 정치참여의 역사와 평가〉, 《論文集》 9, 인하대사회과학연구소, 1990년 6월.
- 조돈문, 〈1950년대 대한노총 노동조합과 계급지배 재생산〉, 《산업노동연구》 제6권 제2호, 2000.
- 조돈문, 〈50년대 노동계급의 계급해체 -노총의 호응성 전략과 노동자들의 저동원〉, 《경제와 사회》 29, 1996년 봄호
- 조선전업노동조합, 《전업노조10년사》, 1959.
- 조창화, 〈한국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사적 고찰〉,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 제1집(상), 1963
-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 한국노총, 《한국노총50년사》, 2002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2, 풀빛, 1991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노동공론》 등

4·19를 전후한 시기 통일운동의 흐름

김 선 미

| 목 차 |

1. 머리말
 2. 통일논의의 대두와 전개
 - 1) 통일논의의 등장과 배경
 - 2) 혁신정당의 통일논의와 북한의 통일 제안
 3. 통일운동의 전개와 통일론의 구조
 - 1) 통일운동의 전개
 - (1) 민족자주통일협회의 결성과 통일운동의 확산
 - (2) 민족통일연맹과 남북학생회담
 - (3) 기타 통일운동 단체의 통일운동
 - 2) 통일론의 논리 구조
 - (1) 장면정권의 통일방안
 - (2) 중립화통일론
 - (3) 남북협상론
 4. 맺음말 - 과제와 전망
- 〈참고 문헌〉

1. 머리말

분단은 한국 현대사가 지닌 모순과 질곡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지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움직임이 표출될 때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통일문제에 가 닿곤 했다. 이 가운데 4·19 직후는 한국현대사를 통 털어 단연 통일문제가 가장 격렬하게, 가장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던 시기이다. 이는 4·19가 단순히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으로 상징되는 반민족적이고 비자주적인 현실에 대한 총체적 거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

이 시기의 통일운동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놓고 논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진행되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여기에는 제도권 정당과 지식인 사회가 총동원되었으며, 특히 진보적 사회단체와 연계된 학생 청년계가 국면을 주도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분단으로 상징되는 비자주적 현실, 민중생존권을 포함한 한국 사회 변혁의 문제 등 통일문제가 함의하고 있는 다양한 성격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일반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간 4·19에 대한 연구는 3, 4월의 학생 시위와 이승만의 퇴진에 초점을 둔 초기의 연구에서 점차 정권 교체 이후 전개된 일련의 진보적 정치활동으로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자주적 민주적 지향을 포괄하면서 이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키며 전개된 통일운동은 ‘4·19 시기’²⁾ 진보적 실천의 총결산이자 정점으

1) 이러한 인식은 이미 4·19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민자통의 대표적인 논객이었던 이종률은 3·15선거의 부당함은 투표상의 불법성이 아니라 통일문제를 외면한 단정 유지 선거라는 데 있으므로, 적법선거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투표 부정이 아니라 그것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성격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이종률, 〈3·4월의 인식과 그 올바른 기념〉, 민족일보 1961년 4월 19일).

2) 이승만의 퇴진 이후 5·16쿠데타 이전 시기는 흔히 ‘2공화국 시기’로 불린다. 하지만 이 시기의 특징적인 정치·사회적 국면이 4·19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4·19 시기’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홍석률, 2001,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5쪽 참고).

로 인식되었다. 더불어 4·19가 가진 역사적 위치도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4·19 시기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이 시기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축적된 우리 사회의 민주 역량이 마침내 통일을 향한 열기로 이어진 시기였다. 말하자면 이 무렵 4·19 시기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사회적 요구를 학문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 4·19 시기 통일운동의 전개 과정과 여타 사회운동 부문과의 관련, 통일운동을 주도한 집단과 통일논의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상당 부분 해명되기에 이르렀다.³⁾

이 과정에서 통일운동 관련 자료의 영역도 확장되었다. 현대사 연구의 기본 자료인 신문자료와 각종 회고록 및 전기 등 문헌자료에 더하여 최근에는 당시 통일운동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구술 자료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구술 자료는 비록 구술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한정성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기록일 뿐 아니라 그간의 억압적인 정치 환경으로 인해 활자화되지 못했던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어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으로 미국 측 문서 자료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연구를 위한 자료 요소가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비중을 생각하면 미국 관련 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4·19 시기 통일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연구 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통일논의의 대두와 전개

1) 통일논의의 등장과 배경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를 통하여 이승만 정권은 통일논의를 독점하고 북진통일

3) 4·19 시기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정창현, 1991, 〈4월민중항쟁 직후 혁신정당운동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한국현대사》 2, 풀빛 : 홍석률, 1996, 〈혁신정당과 민족민주운동〉,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사연구입문》 ③, 풀빛 : 홍석률·정창현, 2001, 〈4월민중항쟁 연구의 쟁점과 과제〉, 《4·19와 남북문제》, 민연.

론 이외에 일체의 다른 통일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일운동은 사실상 관제단체가 주도하는 관제 통일운동으로서만 존재했다.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은 한국전쟁으로 그 허구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호도하여 권력을 재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더욱 강도 높게 주창되었던 것이다.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진보당과 조봉암이 평화통일론을 내걸고 선전하기도 했지만 조봉암이 처형되고 진보당이 불법화되면서 북진통일론과 다른 통일론은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 공간을 가지기 어려웠다.

4·19로 인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은 이러한 정국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북진통일론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을⁴⁾ 뿐 아니라 대중적 저항으로 초래된 정치 지형의 변동은 그 자체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확대하여 통일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 이 열린 공간을 통해 통일론이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한편으로 당시 국제 정세는 냉전체제가 변동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非蘇非美의 중립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즉 핵 개발에 이른 미·소 간의 군비경쟁은 역설적으로 타협을 통한 평화공존의 기운을 높였고, 이에 1950년대 후반 미·소 간의 경쟁은 군사적 대치에서 정치·경제적 경쟁을 중심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였다. 또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는 탈냉전 중립주의가 주창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가입한 1960년대 초에 유엔의 판도는 크게 달라졌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그간의 냉전적 사고방식에 일정한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단히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통일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7·29 총선 과정이었다. 7·29 총선에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도 정치권 바깥에 있던 재야 정치인과 진보적 지식인 그리고 진보당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하여 선거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변경하려는 정치 경향을 지녔으므로 일반적으로

4) 북진통일론의 폐기는 6월 20일 허정 과도정부 수반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서 선언되고, 8월 24일 정일형 외무부장관의 외교정책 성명에서 재확인되었다.

혁신계로 불리었지만 이들 가운데는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기존 사회체제의 궁극적 변화를 추구하며, 극단적인 반공 이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남북의 실제 인정과 교류·협상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8·15 직후의 중간과 세력을 연원으로 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들 새로이 대두한 정치세력은 통일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보수 정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총선 국면을 주도하고자 하였다. 혁신계 최대의 정치 조직이었던 사회대중당은 7월 22일 ‘통일방안에 관한 사대당 성명’을 발표하여, ‘적당한 유엔 감시 하 총선거’를 주장하였다. 이는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하던 민주당의 통일방안에 ‘적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인데, 이는 1954년 제네바회담 당시 미국이 작성한 서방측 참전 16개국의 공동선언 초안의 문구로,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항의로 삭제된 것이었다. ‘적당한’의 의미에 대해 사대당 대표 총무 서상일은 ‘유엔 감시’와 ‘중립국 감시’를 절충한 것으로, 조직부장 김기철은 참전 16개국을 제외한 유엔 가입국으로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미루어 그간 지나치게 미국에 경도된 분위기에 약간의 변경을 가하여, 미국에 대해 다소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서상일은 통일의 선결 조건으로 남북 간의 문화·경제·인사 교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남북 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이후의 통일운동에서 중요한 실천과업으로 부각되었다. 장건상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지총연맹은 좀 더 과감하게 민주적 제 정당 및 사회단체가 ‘남북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엔의 협조 하에 민주주의 승리에 의한 정치적 남북통일을 이룩할 것”⁵⁾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혁신정당의 통일론은 4·19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평화통일과 유엔 감시 하의 남북 총선거라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북교류론과 같은 것은 혁신정당 내에서도 공론으

5) 외교연구원, 《통일문제연구》, 318쪽(김학준, 1975,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국제정치논총》 15쪽에서 재인용).

로 확인되지 못하였고, 그나마 민주당과 차별성을 보인 중립국 감시나 남북교류 등은 용공적이라는 민주당의 이념 공세 앞에 위축되어 해명성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보수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하지만 통일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1950년대와는 달라진 점이었고, 또한 이 가운데 남북교류론은 이후 민주당과 신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혁신정당과 진보 진영의 통일론의 기본 방법으로 수용되었다.

통일논의를 고양시킨 또 하나의 계기는 김용중, 김삼규 등 해외에 망명한 진보적 지식인으로부터 왔다. 미국의 김용중은 재미국민회 계열의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8·15 직후에는 여운형, 김규식 등과 연계된 활동을 하였다. 김용중은 1943년 한국사정사(THE KOREA AFFAIRS INSTITUTE)를 창립하고, 영자신문 《한국의 소리》(*THE VOICE OF KOREA*)를 발행하였는데, 8·15 직후부터 분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김용중은 미·소 양군의 철퇴,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한국 중립화협정 체결, 유엔을 통한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이라는 통일론을 주장하였다.⁶⁾ 김삼규는 일제시기에 카프계열 문인들이 만든 무산자사의 동인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8·15 후 동아일보 주필을 역임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일본으로 망명한 뒤 김삼규 휴전 무렵부터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4·19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자 김용중과 김삼규는 더욱 의욕적으로 통일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용중은 《한국의 소리》와 국내 신문에 통일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 일정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김삼규는 6월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는 논설을 국내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여 중립화통일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중립화통일론은 주변 강대국 간의 합의로 한반도를 영세중립화 함으로써 냉전에서 벗어나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통일논의가 고조되던 초기에 중립화통일론은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1960년 가을에 개최된 각종 통일문제 토론회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9월 23일 서울일일신문과 ‘전국학생 조국통일추진회’는 ‘남북 통일론과

6) 정병준, 1995, 〈김용중의 중립화 통일운동과 관련문서 현황〉, 《역사비평》 봄, 375쪽.

우리의 태도'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10명의 대학생과 9명의 교수 및 정당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통일의 유일한 길은 민중운동에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민중의 접촉을 통한 동질화를 추구해야 하고, 이는 유엔이나 정부를 믿고는 불가능한 것이며 법리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통일방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견해를 주장하였다. 9월 24일과 25일에 걸쳐 고려대학교 학생회가 주최한 '전국 학생 통일문제 토론회'에서는 중립화통일론과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 교류, 선건설 후통일론까지 다양한 관점의 통일론이 발표되었다. 11월 2일 서울대학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기성세대와 학생 간의 통일문제 심포지엄'에서도 학생들은 대부분 남북교류론, 남북협상론, 탈냉전 중립화론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였다.⁷⁾ 즉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각종 통일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등 통일문제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19의 주도자인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통일문제 토론회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통일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통일논의가 고양된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는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통일 전략은 민주기치론에 입각한 남한혁명론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북한 지역을 남한혁명의 달성과 통일을 이룩하는 전략적 보루로 삼는 한편, 이를 위해 민주기치인 북한의 역량과 남한의 동조세력 및 국외의 지지 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4·19는 북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남한의 혁명 역량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남한 군중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명론으로 통일전략은 수정되었다.

한편으로 3월 18일 평양과 개성 등지를 시작으로 북한에서는 남한의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를 각지에서 진행하였는데, 특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이승만 정권의 붕괴가 마침내 실현되자 매우 고무되었다. 이에 북한은 4·19 이후 남한의 통일운동이나 논쟁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였고 이것은 활발한 대남 통일공세로 나타났다.

7) 노중선, 1985, 《민족과 통일 I》, 사계절, 373~378, 381~383쪽.

4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에서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 연합회의 소집을 제의했다. 이승만이 퇴진을 표명한 이튿날인 27일에는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명의로 더욱 적극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미군 철수,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대표로 구성된 임시행정기구의 수립,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연석회의 소집, 남북연합경제위원회 구성, 남북 간 왕래, 외국의 간섭 없는 총선거 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북한의 통일공세가 갖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남북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강조였고, 이를 통해 남한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4월 21일 조선노동당 발표한 조선노동당의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남조선에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심각한 정치위기와 경제파국을 수습할 수 없다. 북반부의 풍부한 자원과 강력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지 않고는 여지없이 파산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할 수 없으며, 극도에 달한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⁸⁾

북한은 전후 경제복구 3개년계획(1954~1956년)을 완수하고, 1957년부터 사회주의 개조를 위한 제1차 5개년계획을 2년 앞당긴 1959년에 달성하였다. 그 결과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공업총생산은 1956년에 비해 3.5배 늘어났고 연평균 성장률은 36.6%에 달했다. 1960년 당시 남북의 경제 성장은 현격한 격차를 보였는데,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력, 석탄, 비료, 어획고 등 대부분의 산업생산 분야에서 남한의 생산량은 북한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였고, 1960년대 전반기까지 1인당 GNP는 북한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⁹⁾ 이러한 경제부분의 우위와 자신감에서 북한은 남북교류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를 제안하였던 것이다.

8) 《노동신문》 1960년 4월 22일.

9) 한국은행, 1970, 《경제통계연보》, 198쪽 : 조선중앙통신사, 1961, 《조선중앙년감》, 333쪽 : 민족통일연구원, 1992,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236쪽.

2) 혁신정당의 통일논의와 북한의 통일 제안

총선 과정에서 시작된 통일논의는 보수 세력의 용공성 시비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고, 기대를 걸었던 7·29 총선에서 혁신정당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총선에서 혁신정당은 사회대중당이 136명(민의원 129명, 참의원 7명), 혁신동지총연맹이 14명(민의원 13명, 참의원 1명) 총 150명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그 가운데 민의원 5명, 참의원 3명이 당선되었고 총 유효투표의 6%를 조금 넘어 획득했을 뿐이었다.¹⁰⁾ 하지만 통일운동은 총선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총선이 끝난 뒤 혁신정당은 사회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사회대중당으로 재편되었다. 혁신계 정치인들은 보수 세력의 이념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통일논의를 주도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선거 패인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혁신세력은 8·15 공간의 근로인민당, 민족자주연맹, 남로당 등 단정 수립을 반대한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 1950년대의 진보당, 민주혁신당에서 활동한 그룹과 1950년대 말부터 발아한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과 청년 집단이 합류하여 형성되었다. 따라서 혁신세력은 그 내부의 다양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즉 혁신세력의 최대 특징이자 공통점은 통일문제를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는 것이었고, 이 점에서 보수 세력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진 존재였다. 혁신계 정당이 총선 패배를 딛고 4개 정당으로 재편되던 11월 무렵은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시점으로, 혁신계 정당은 통일논의의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사회당은 근로인민당, 남로당 출신을 중심으로 11월 28일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회주의 이념의 점진적인 실현을 내세우고 대기업 국유화를 주장하는 등 혁신 정당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었다. 사회당은 “4월혁명의 역사적 과업을 계승하여 일체의 반민족적 요소를 배격하고 광범한 민주혁명세력을 총집결함으로써 대미일변

10) 당선자는 민의원은 서상일(대구울, 사대당) 윤길중(원성, 사대당) 박권희(밀양울, 사대당) 박환생(남원갑, 사대당) 金星淑(남제주, 한국사회당), 참의원은 이훈구(충남, 사대당) 정상구(경남, 혁신동지총연맹), 최달희(경북, 한사당) 등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4, 《대한민국선거사》 431·435·444·448쪽).

도적인 국제적 고립주의와 배타주의를 배격하고 세계 민주 제국과의 자주적 협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조속히 실현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강력한 대미 대소 정책 수립을 전제로 필요하다면 소련과도 교섭을 맺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미국과의 군사동맹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수인 최근우는 “남북 통일의 실현은 민족자주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미소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탈유엔화, 탈강대국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대중당은 김달호의 측근을 중심으로 11월 24일 결당을 선포하였다. 총선 뒤 주요 인물들이 빠져나간 탓에 당세는 4개 혁신정당 가운데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하였다. 사대당은 대미 일변도의 외교를 지양하고 광범위한 자립 외교를 수립할 것, 통일문제를 다루는 초당파적인 통일협의체를 구성할 것, 재야 범혁신진영이 주도하는 남북 협상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사대당은 남북 정권의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하여 보수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혁신당은 혁신동지총연맹을 개편하여 11월 27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장건상과 조기하 등이 중심이었다. 혁신당은 정강에서 “민족자결 원칙에 의한 주체성을 확립하여 유엔 협조 하에 국토를 통일하고 영세중립국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하여 당 강령에 중립화통일론을 명시한 경우이다.

혁신정당 가운데 원내 기반이 가장 컸던 통사당은 가장 보수적이었다. 통사당은 구진보당계, 구민주혁신당계, 한국사회당계 등 제도정치권에서 활동을 하던 인물을 중심으로, 서상일 김성숙 윤길중 등 혁신계 의원과 명망가들을 거의 전부 포괄하고 있었다. 따라서 혁신정당 가운데 가장 늦은 1961년 1월 21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급속히 당세를 확장하였다. 통사당은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였는데, 김일성 정권의 퇴진을 전제로 한 선중립 후남북협상을 주장하는 등 혁신계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편에 속했다.¹¹⁾

혁신정당의 통일론은 경제·문화 부분에서 광범위한 남북교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당, 신민당 및 보수 세력의 통일론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이 가운데 사회당을 제외한 혁신당, 사대당, 통사당은 모

11) 노중선, 1989, 《4·19와 통일논의》, 사계절, 55~62쪽.

두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국제협정을 통한 중립화통일을 통일방안으로 내세운 반면, 사회당은 민족자주노선과 외세배격 남북협상론을 주장하였다.

사대당, 혁신당, 통사당 역시 국제협정과 함께 남북협상을 병행할 것을 인정하지만 사대당, 혁신당과 통사당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즉 사대당과 혁신당의 경우 현재의 남북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을 벌여나가는 것이므로, 이때 남북 협상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협상이 주가 된다. 하지만 통사당은 북한 정권의 퇴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남북협상은 정치협상의 의의가 축소되고 행정실무 기능이 위주가 되므로 위상이 현저히 격하된다. 따라서 통사당의 통일론에서는 북한 정권의 교체와 국제 간의 타협이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민족 내부의 합의보다 국제적 합의가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 이는 중립화통일론 내에서도 차별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혁신당과 사대당이 중립화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혁신당, 사대당과 통사당이 가진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뒤에 혁신당과 사대당이 민족자주노선을 내세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에 가입하고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에 참여하지만, 통사당은 민자통에서 탈퇴하고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에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아가 이듬해에 본격화되는 혁신정당 통합 운동이 사회당 혁신당 사대당 3당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관련되어 있다.¹²⁾

이 무렵 북한의 통일방안은 과도적 연방제와 남북 교류로 정립되어 제안되었다. 1960년 8월 14일 김일성 수상은 8·15 15주년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과도적 연방제론’을 제안하였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간섭 없는 민주주의적 기반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달성한다. 둘째 당장 총선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과도적인 대책으로 연방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연방제란 남북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 간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셋째 이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면 남

12) 2007년 4월 20일 이성재 구술, 면접자 김선미. 이성재는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으로 3당 통합을 주도한 인물이다.

북 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경제 건설에서 서로 원조하고 후원한다는 것이다.¹³⁾

이는 1950년대를 통해 주장해 온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안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동안 남북 간의 이질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두 체제를 일정한 과도적 조치 없이 총선거로 곧바로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하지만 이를 '과도적 연방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것은 총선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며, 두 체도를 가진 연합정부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과도적 연방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총선거안을 폐기하고 등장한 고려민주연방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과도적 연방제안'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북한이 처음으로 남한 정부를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1960년 6월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이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한 데에도 나타난 것처럼 이 무렵 미국과 소련 간의 평화공존의 정착이라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이 시기 북한의 통일 공세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경제부분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것이었는데, 이는 과도적 연방제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다. 최고민족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남북 간의 경제 발전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불가할 경우 내세운 것 역시 경제위원회였던 것이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변화는 평화공존의 세계적인 흐름이 군사적 대치에서 정치 경제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을 주도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통일 공세는 비록 그것이 일방적인 대남 성명으로서 그쳤다 할지라도 직간접적으로 남한의 장면 정부 및 정당 사회단체의 통일운동이나 논의에 변수로 작용한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통일논의는 총선거가 끝난 뒤 오히려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에는 혁신정당이 있었다. 총선에서 혁신정당은 의미 있는 원내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지만 원내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통일 정국에 불을

13)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 《노동신문》 1960년 8월 15일.

지켰던 것이다. 이즈음 정당 정치의 바깥에 있던 진보적 지식인과 사회단체가 통일운동의 새로운 구심을 형성하며 사분오열된 혁신세력을 포괄하면서 통일운동을 한 단계 상승시켰고, 여기에 통일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학생운동이 합류하면서 정치국면은 급속히 통일국면으로 고조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면 정부와 보수 세력은 고식적이고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통일운동은 혁신 정치세력과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서 통일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이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이하 민자통)과 학생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이었다.

3. 통일운동의 전개와 통일론의 구조

1) 통일운동의 전개

(1)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결성과 통일운동의 확산

민자통은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결성된 4·19 시기 최대의 통일운동 단체이다. 처음 민자통을 발의한 것은 박진 이종률 문한영 등 민족건양회¹⁴⁾ 계열 인사들로서, 이들은 1960년 9월 초에 박래원 주홍모 등 천도교 계열과 함께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조직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안경근 장상호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 시국대책협의회(뒤에 민족통일연맹으로 개칭)를¹⁵⁾ 비롯하여 각지의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세력이 속속 합류하였다. 이에 민자통은 개인 또는 단체

14) 민족건양노선을 지지하는 이들의 결사로 1946년 초에 결성했다. ‘民族建揚’이란 민족을 혁명적으로 건설하여 그것을 보다 높은 역사 단계로 지양 발전시킨다는 의미로서,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이 가진 변혁론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민인사연구회 엮음, 1989, 《민족혁명론》, 217·233쪽).

15) 4·19 직후 경북지역의 항일 지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구국동지회를 모태로, 혁신정당과 진보적 단체를 포괄하였다. 11월 중순에 민족통일연맹으로 개칭하였다(〈흑백〉④ 민족통일연, 《영남일보》 1961년 1월 27일: 〈흑백〉⑥ 구국동지회, 《영남일보》 1961년 1월 29일).

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정당 사회단체 및 개인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단체를 조직하였다.¹⁶⁾ 1961년 2월 25일 결성대회 당시 민자통에 참여한 정당과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일부, 동학당 일부, 삼민당, 광복동지회 일부, 구국동지회, 민족건양회,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준비위, 천도교 일부, 천도교 부녀회, 유도회 일부, 사월학생혁신연맹, 피학살자유족회, 출판노조 일부, 교원노조 일부, 교수협회 일부, 사회문제연구회, 학사회, 사회과학연구회¹⁷⁾

결성대회를 개최할 무렵 민자통은 21개 정당 및 사회단체와 4만 명이 넘는 회원을 지닌, 순수 민간단체로서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대중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민자통은 중앙협의회에 이어 서울시협의회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등 5개 도 협의회와 17개 군 협의회 등 지방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그 밖에 읍·면·동 협의회와 직장협의회, 재외동포 지부 결성을 준비하는 등 통일운동을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민자통의 조직 및 확대는 그 자체로서 자주적 통일역량을 결집하는 과정이자 통일운동의 전개 과정이기도 했다.

결성대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민자통의 조직 구성은 의장단(수석의장 김창숙, 수석부의장 안경근), 사무국, 집행위원회(총무위, 조직위, 선전위, 재정위, 외무위, 부녀위), 상무위원회, 통일방안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다.¹⁸⁾ 여기에는 민자통에 소속된 정당 사회단체 및 각 방면의 대표성을 가지는 개인이 광범위하게 포괄되었다. 특히 4·19 이후 해외에서 통일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삼규 김용중 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고, 통일방안을 연구 토론하는 전문 기구로 통일방안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민자통이 통일운동 단체로서 가지는 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해 민자통은 1961년 1월 15일 발표한 강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

16) 이러한 조직을 처음 구상한 사람은 이종률이었다(2007년 4월 19일 김금수 구술, 면접자 김선미).

17) 《민국일보》 1961년 2월 26일 석간.

18) 《민족일보》 1961년 2월 28일, 3월 1일. 상임위 간부와 통일방안심의위 위원의 경력과 소속 단체에 대해서는 김지형, 1996, 〈4·19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과정〉, 《역사와 현실》 21, 147쪽, 홍석률 앞의 책 175~176쪽 참고.

장을 밝혔다.

1. 우리는 민족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국토 통일을 기한다.
2. 우리는 민족 자주 역량의 총집결을 기한다.
3. 우리는 민족 자주의 처지에서 국제 우호의 돈독을 기한다.¹⁹⁾

이에 앞서 민자통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 아래 1. 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을 요구하고 2. 남북 민족대표들에 의한 민족통일건국 최고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고 3. 외세를 배격하여야 하며 4. 남북한 대표회담에서 통일을 협의하고 5. 통일 후에 오스트리아식 중립 또는 영세중립을 택할 것이냐 또는 다른 형태를 택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²⁰⁾

결의가 담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북 협상을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민족 자주적 입장에서의 평화로운 통일이란 바로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 국가의 중립화 여부는 협상의 결과로 결정할 일이지, 미리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강대국 간의 협정에 의해 확정된 중립화는 그 자체로 외세에 의해 주체성이 훼손된 것이며 그 결과 남북 간 협상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 통일 후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면 그에 반대하는 세력의 이탈을 초래하여 통일운동 진영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자통은 통일의 기본 원칙 이외의 나머지 과정은 남북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민자통은 민족 자주와 국제적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남북이 주체가 되는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하였고, 이는 뒤에 민족자주노선과 남북협상론으로 정립되었다.

민자통의 운영은 사무국과 집행기구인 5개의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를 주도하고 민자통 주류의 견해를 형성하였던 것은 사회당, 민족건강회, 민주민족청년동맹(이하 민민청), 통일민주청년동맹(이하 통민청)이었다. 민민청과 통민청은

19) 《민국일보》 1960년 1월 18일.

20) 문한영, 1990, 〈60년대의 민족자주통일〉, 4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②, 한길사, 150쪽.

4·19 시기의 진보적 청년 집단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1950년대 후반 청년·학생층의 진보적 흐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민민청은 이종률의 영향력 아래 제자인 하상연, 김상찬, 배다지 등을 중심으로 4·19 직후인 6월 12일 부산에서 결성되어, 서울의 사회과학 서클인 암장그룹과 서도원 도예종 등 경북 청년계가 결합하면서 중앙맹부를 서울로 옮겼다. 통민청은 통일청년회, 진보당에 참여했던 청년들로 구성된 성민학회, 서울대 신진회 출신들이 합류하여 형성된 것으로 김배영 우홍선 김영광 양춘우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민자통에서 이들 단체는 사무국과 집행 기구인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급에 자리 잡고 실무와 대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민자통의 방향을 주도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총장 박진(민족건양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도예종(민민청), 선전위원회 부위원장 하상연(민민청),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달수(민민청), 준비위원회 조직위 간사 우동읍(통민청) 등이었다.

이와 같은 민자통 주류의 사회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4·19 1주년을 맞아 민민청 중앙맹부에서 발표한 성명서이다.

“2) 특권보수는 물론 사이비혁신 운운의 기만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봉건잔존세력과 외압세력 및 민족매판자본세력이 야합하여 전체 민족의 이익을 덧밟고 소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민족적 세력이 오늘날 이 땅의 보수 세력이었다. 반봉건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독립과 그 면에서의 통일조국 건설과 나아가서 세계사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운운의 관념론을 표방하는 일체의 세력은 민족 진로를 오도하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진정한 민족자주를 표방하여 양심적인 범민족세력은 민족혁명노선으로 민족진영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²¹⁾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보수 세력의 실체를 봉건잔존 세력과 외세 및 매판자본이 결합한 반민족 세력으로 보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향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혁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족혁명이란 반봉건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독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진보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것은

21) 《민족일보》 1961년 4월 20일 광고란.

곧 통일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때 세계사 방향이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자본제의 폐해를 넘어선 대안 사회를 상정한 것이었다. 통일과 민족혁명의 관계는 다음의 기고문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올바른 혁신운동의 당면 투쟁 과업은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 후진성지역 사회에 있어서 전진적인 정치투쟁은 계급을 원리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인 것이 아니고 민족론인 민주주의민족혁명인 것이다. 이 민주주의민족혁명을 다른 말로써 표현하면 민족해방투쟁이라는 말로 된다. 이 혁명은 반봉건, 반민족매관자본세력 그리고 반외세투쟁이 주 과업인 것이다. 이와 같은 투쟁을 단행하는 데 총집결할 수 있는 구성은 범민족세력이며 이 혁명은 민족통일과 더불어 달성되는 것이다.”²²⁾

이에 따르면 당면한 사회변혁의 성격은 계급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계급혁명이 아니라 반외세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혁명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통일은 곧 사회 변혁의 과정이며, 사회변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다. 즉 분단은 단순한 지리적 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봉건적 매관적 반민족적 성격을 고착화시켜 사회변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의 해소란 이처럼 분단에 기대어 있는 봉건적 매관적 반민족적 응축물을 해체 척결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사회변혁을 수행하는 과정인 것이다.

여기서 반외세투쟁의 주체가 되는 범민족세력은 바로 통일운동의 주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자통은 계급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민족 자주적 입장을 함께 하는 모든 집단과 개인을 한 데 모으는 데 힘을 기울였던 것이며 지방 조직을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 타파하고 민주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통일문제는 민주화운동과 자주화운동 및 민중생존권 문제가 한 데 엮여 있는 지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자통은 통일운동 다른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61년 2월 8일 장면 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통제권을 담

22) 김상찬 <사이비 통일론을 박함 -신상초 의원의 글을 읽고 (끝)> 민족일보 1961년 3월 19일. 김상찬은 민자통준비위원회의 조직부장과 민민청 간사장을 지낸 바 있다.

보하는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민자통은 혁신정당 사회단체와 함께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을 주도하였다. 한미경제협정에 대한 민자통의 인식은 “매관자본의 연명을 기도함”과 “아울러 민족자주경제 건설의 기본적 방향이 되는 민족자주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국제계획”으로 규정한 데서 잘 나타난다.²³⁾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은 비록 협정의 국회 비준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미 간의 경제협력을 민족경제의 형성과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통찰력을 보여준 것이며,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반미적 성격을 띤 운동이었다는 데 의의가 깊다.

3월에 장면 정권이 진보적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의 입법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대중 시위가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벌어졌는데, 민자통은 혁신정당, 진보적 사회단체와 함께 2대악법반대투쟁을 주도하여 결국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의 입법을 좌절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특히 2대악법반대투쟁을 통해 그간 분열되어 있던 혁신정당에 통합의 기운이 고조되고 대중과의 결합이 확대되었다.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과 2대악법반대투쟁을 통해 확대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민자통은 학생 민통련이 진행한 남북학생회담과 일련의 통일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은 남북 교류의 일환으로 남북학생회담을 제기하자, 민자통은 민통련의 결의를 열렬하게 지지하였다. 민자통은 5월 13일 남북학생회담 축구 썰기대회를 열어 이를 뒷받침했는데, 썰기대회에는 무려 3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여 통일운동에 대한 대중적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통일운동은 일본에도 파급되어 1961년 4월 18일 동경에서는 조총련과 거류민단의 합동 주최로 ‘평화통일·남북문화교류촉진문화제’가 개최되었다. 2천여 명의 재일동포가 참여한 이 문화제에서는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남북 교류를 지지하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²⁴⁾

(2) 민족통일연맹과 남북학생회담

통일논의가 고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생운동 내에서도 통일운동의 흐름이

23) <민자통 사무총장 박진 씨談>, 민족일보 1961년 2월 13일.

24) 《민족일보》 1961년 4월 20일.

등장하였다. 이승만이 퇴진한 후 국민계몽대 활동과 신생활운동을 벌여 나갔던 학생운동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통일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집단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학생운동이 확대 발전하면서 이전과 달리 대학 내 진보적 이념을 내세운 서클이나 집단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학생운동의 성격이 달라졌던 것이었다. 이들은 4·19 당시의 학생운동이 무조직적이고 무이념적인 탓에 실패했다고 보고, 민족문제 해결이라는 이념과 학생 통일운동 단체의 조직이라는 새로운 학생운동의 기치를 내세웠던 것이다.²⁵⁾

11월 18일 서울대 민통련을 시작으로 성균관대, 외국어대, 항공대, 건국대, 경희대, 국학대, 단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전남대, 조선대, 경북대, 대구대, 청구대, 부산대, 수산대, 경북고등학교 등 전국 18개 대학과 1개 고교에서 민족통일연맹 또는 민족통일연구회 등의 명칭으로 통일운동의 깃발을 올렸다. 이듬해인 1961년 5월 5일에는 민족통일연맹전국학생연맹(이하 민통전학련) 준비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생 민통련의 출범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발흥하고 있던 통일운동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민통련은 비록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념적 동질성이 높았기 때문에 4·19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던 어떤 학생 조직보다도 강한 결집력과 활동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민통련은 결성 과정부터 민민청, 통민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조직되었다. 민통련은 학생운동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자통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자통과 연계하여 각종 활동을 벌여 나갔던 것이다.²⁶⁾

이를 기반으로 민통련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월 8일 한미경제협정이 체결되자 민통련은 국회 비준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서울지역 대학의 민통련을 중심으로 국민계몽대 등 학생운동단체들과 제휴하여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에 동참하였

25) <통일예의 고동 -서울대 민통련>, 《민족일보》 1961년 3월 7일.

26) 앞의 김금수 구술. 당시 김금수는 민민청 중앙맹부의 간사장이었다.

다. 3월 들어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의 입법이 추진되자 민통련은 2대악법반대전국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와 부산, 대구 등지의 학생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여 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서울대 민통련은 양민학살유족회 중앙학생위원회 등 17개 단체로 악법반대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발족하여 2대악법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통련의 사회 인식에 대해서 서울대 민통련과 민통전학련의 선언문을 통해 당시 민통련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통련은 당시의 한국 사회를 “식민지적·半식민지적 半봉건” 사회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대립 구조는 “매판관료 세력과 대중 간의 모순”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反통일세력 대 통일세력 간의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²⁷⁾ 이러한 분단의 책임은 “국제공산주의와 독점자본주의 및 그들의 추종자인 반민족적 사대주의자들의 냉전청부행위에 존재”하는 것이며,²⁸⁾ 이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역사적 사실을 점진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反봉건, 反외압세력, 反매판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며, “이 민주, 민족혁명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다”고 인식하였다.²⁹⁾

즉 민통련은 한국 사회의 과제를 반봉건 반외압 반매판의 민족혁명으로 보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공산주의와 독점자본주의 모두에 대해 非蘇非美의 중립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변혁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 같은 민통련의 인식은 민자통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런 현실 인식 위에서 민통련은 통일운동의 제일선에 나섰다. 민통련이 주도한 서울대의 4·19 1주년 행사에서는 ‘4·19 제2선언문’을 낭독한 후 침묵 가두시위를 전개했는데, 가두시위에는 구호를 써 넣은 각종 피켓이 등장했다. 피켓에 쓰인 “외

27) 1961년 5월 5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공동선언문〉, 4월혁명연구소 편, 앞의 책, 326~328쪽.

28) 서울대학교 민통련, 〈4·19 시국선언〉, 4월혁명연구소 편, 위의 책, 339~340쪽.

29) 서울대학교, 〈4월혁명 제2선언문〉, 《민족일보》 4월 20일. 서울대 민통련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정강에 따르면 이 선언문은 이종률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이외에도 이종률과 도예중은 민통련 활동에 깊이 간여하고 있었다고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43~46쪽).

세는 물러가라”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 하느냐”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남북 서신 교환” “북한 쌀, 남한 전기” “한국 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등의 구호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드디어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은 남북 교류의 일환으로 남북학생회담을 제기하고, 5월 5일 민통전학련 결성준비대회에서는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적극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민통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의는 장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세력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민자통과 진보 세력의 열렬한 지지와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 속에서 4·19 시기 통일운동의 정점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5월 13일 민자통이 주최한 남북학생회담 촉구 궐기대회에는 3만 명의 군중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비록 사흘 뒤에 발발한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남북학생회담은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한국 사회에서 통일문제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보여주는 데 모자람이 없었던 것이다.

(3) 기타 통일운동 단체의 통일운동

이외에 통일운동 단체로는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이하 중통련),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 조국통일민족전선 등이 있다.

중통련은 민자통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에 반발하여 탈퇴한 통사당, 삼민당 일부, 광복동지회 일부, 천도교·대종교 일부가 구성한 단체이다. 이들은 민자통이 통일의 기본 방안도 없이 결성대회를 가진다는 것은 모순이며, 협의체가 하부 세포조직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민자통을 탈퇴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1961년 2월 21일 중통련 발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세중립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 ‘민자통의 무원칙한 통일운동을 비판하고 범국민운동체로서의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가칭) 준비에 즈음하여’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자통의 통일방안을 비판하였다.

첫째 민족자주세력의 형성은 곧 통일 조국의 ‘영세중립화’를 그 전제로 함으로써만 가능하며, 둘째 남북 간의 통일 촉진과 그 예비 조건의 조성을 위하여 서신왕래·물자교역을 요구하며 신문기자·체육인 등 문화인 교류를 실시해야 하고, 셋째 민자통

이 내세운 자주·민주·평화란 정치적 일반 원칙은 될 수 있어도 통일의 기본 방침은 될 수 없다.³⁰⁾

하지만 중통련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정식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지 못하였으며, 성명서를 내고 통사당 주최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다. 이 때문에 중통련은 독자적인 조직 기반과 활동력을 갖는 통일운동 단체라기보다 통사당의 외곽 단체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통련의 통일방안 역시 통사당의 것과 동일하였다. 통사당의 통일론은 한반도를 미·소 양국의 정치적 군사적 완충지대로 만드는 영세중립국론이다. 통사당의 통일론이 가진 특징은 북한에 대한 태도인데, 다른 혁신정당이 전반적으로 북한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에 반해 통사당은 김일성 정권과 북한의 통일방안 모두에 대해 부정적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과 북한 정권의 퇴진이다. 이를 전제로 남북 간의 구체적인 실무 협상을 통해 유엔이 지정하는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으로 통일을 실행한다는 것이 통사당의 통일방안이다. 이 경우 남북협상은 국제 협정을 통해 통일 국가의 기본 성격이 모두 결정된 뒤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치협상이 아닌 행정실무 차원에 불과한 것이며, 그 의미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永世中立化統一推進委員會는 11월 6일 당시 사회대중당 마산시당 위원장이었던 김문갑이 조직한 단체이다. 김문갑은 건국동맹 출신으로 조선인민당과 근로인민당 중앙위원을 지낸 인물로서, 마산 지역 2대악법 반대 운동을 이 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아 마산 인근에서는 일정하게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의 통일론은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통일을 주장하면서도 그 방법으로 외국군의 철수와 남북 간의 자주적인 교섭을 강조하는 등 민족 자주적 역할을 통한 통일을 주장한 데에 특징이 있다.³¹⁾ 그러나 이 단체는 사대당 중앙당 차원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그 영향력이 마산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규모도

30) 《민국일보》 1961년 2월 21일 석간.

31)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편, 1962, 《한국혁명재판사》 3, 한국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사건.

미약했다.

조국통일민족전선은 1961년 1월 8일 서울에서 조직되었다. 위원장인 정순학을 비롯하여 간부 가운데 상당수가 8·15 직후 좌익단체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며 뒤에 진보당에서 활동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국통일민족전선은 통일을 미·소의 세력권에서 해방되는 민족 자결의 독립으로 규정하고, 남북 협상을 통한 조국통일추진전국위원회 구성과 통일 선거 실시를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 교류와 선거 이전 유엔 철수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국통일민족전선은 성명서나 결의문을 발표한 것 외에 이렇다 할 활동이 없고, 오히려 민자통이나 사회당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선전부장인 하태환은 사회당의 선전부장을 겸하고 있고, 상당수 회원이 민자통에 합류하였으며, 정형모, 이종신은 통일방안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민자통이 주관하는 2대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구궐기대회를 지지하였던 것이다.³²⁾

2) 통일론의 구조

4·19 시기에 제안된 주요 통일론은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장면 정권의 통일론, 북한의 과도적 연방제론 등이었다. 이 가운데 장면 정권의 통일론은 통일문제에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기 때문에 4·19 시기의 통일론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이었고, 여기에 북한의 연방제통일론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초기 통일논의가 대두되어 확산될 무렵 논쟁은 중립화통일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보수적 통일론 일색이던 정국에 중립화통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제시되어 일약 쟁점을 형성함으로써 통일논의가 확산되었던 것이다. 11월 이후 남북협상론이 가세하면서 통일논의는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32)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조국통일민족전선사건.

(1) 장면 정권의 통일방안

7·29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통일방안은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였다. 하지만 이것은 1954년 제네바회담의 결의를 따른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통일방안이었다. 이미 지난 1950년대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이를 통해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민주당 인사조차 가지고 있었으며, 총선 이후 새로운 차원으로 확산되는 통일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더구나 제15차 유엔총회는 제3세계 국가의 진출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 제3세계 국가의 일반적인 태도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전적으로 유엔에 의존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족주의적 관점에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으로 하여금 유엔의 결의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반공통일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를 지지하는 한편, 반공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선건설 후통일론’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이 주장한 반공 통일은 ‘괴뢰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체제를 북한으로 확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공산지배로부터 민중을 해방”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민주당 주요한의 말이나, “용공통일이라면 차라리 분단 상태를 그대로 두는 편이 낫다”, “유엔 결의라 하더라도 민주자유선거가 아니면 수락할 수 없다”는 장면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반공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남한의 체제로 끌어당길만한 역량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반공통일을 달성할 실질적인 방법으로 강조한 것은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론이 아니라 선건설 후통일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장면 정권은 북한에서 제기한 연방제통일안은 물론 당시 통일운동을 주도하였던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조차 거부하였으며, 남북 교류 등 모든 형태의 관계 개선을 경제 건설 이후로 미루는 논리로 사실상 거부하였다. 하지만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건설과 통일을 사실상 분절된 선후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건설 후통일론은 통일론이라기보다 수세적인 체제수호 논리로 평가되었고 통일유보론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2) 중립화통일론

중립화통일론은 분단 및 한국전쟁이 미·소 간 냉전의 결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때 냉전의 의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아니라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은 단적으로 미·소의 세력권 투쟁에서 탈피하여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 미·소의 세력권 투쟁이란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논리는 특히 김삼규에게서 두드러졌다. 김삼규는 한반도의 관계 각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 통일이 주변국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기 때문으로, 통일 독립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간의 타협과 세력균형을 통해 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립화통일론은 통일 한국이 어느 일방의 군사적 예속 하에 놓이지 않도록 주변 열강이 보증하는 영세중립화 협정을 맺는 것으로 통일의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통일독립국을 ‘중립국’이라 부르고, 중립국을 만들자는 운동을 ‘중립화운동’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중립화통일론이라 해도 구체적인 통일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중은 소·중·영·미 등이 한국의 중립화협정을 체결하고 유엔을 통한 중립국 감시 하의 총선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군사정전위원단을 인도, 미얀마, 실론,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어느 세력권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 위원회로 대체하여 그 감시 아래 남북의 군대를 점차 해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김삼규는 미·소·중·일의 중립화협정을 전제로, 남북 양 정권을 배제하고 유엔 또는 중립국 감시 하 총선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통사당은 주변 강대국의 협정과 김일성의 퇴진을 전제로 남북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전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법을 개정한 후 유엔에서 결정되는 중립국 감시 하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대당과 혁신당의 통일방안은 국제 회담과 남북 협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타결과 함께 민족 내부의 협상도 중시하였으며, 남북 협상의 주체가 될 전한국위원회에 정부 국회 이외에 정당 사회단체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즉 사대당과 혁신당은 평화통일과 민주·자주통일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의 논리적 귀결로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한 유엔 결의에 비판적이었고 북한을 ‘당국’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선거 시 공산당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등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중립화통일론은 냉전을 대체할 사회 이념으로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와 계획경제론을 논리적 토대로 하였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자유로운 형태로 서로 이념이 다른 집단도 민주적 질서 하에서 공존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정치질서를 추구하는 이념을 여겼고, 때문에 남북의 이념적 양극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이념으로 추구하였던 것이다. 계획경제론은 중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국가 통제 하에 운영하고 중소기업자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자립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중립화통일론은 건설과 통일의 병행론을 내세웠다. 즉 경제를 건설하고 민주주의를 향상하여 참다운 민주적 복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사회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중립화통일론자는 미소의 세력균형이 탈이데올로기적 평화공존을 가져올 것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낙관하였다. 실제로 주변 강대국 가운데 중립화에 관심을 표출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였지만 그것조차 한국전쟁의 휴전 무렵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뿐이었고, 4·19 시기 미국 정부의 일관된 공식 입장은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론’이었다.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던 혁신정당 가운데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 말부터 시작된 사회당, 사대당, 혁신당의 통합운동은 1961년 초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과 2대약법반대투쟁을 거치면서 급속한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동시에 3당 간의 통일론에서도 접근을 보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5월 초에 사대당과 혁신당은 그간 주장해 오던 민주사회주의와 영세중립을 지양하고 “조국 통일은 민족자주 원칙하에 남북협화와 국제적 협조로써 미소 양대 세력에 예속되지 않는 평화통일로 한다”는 통일방안의 원칙에 합의하였다.³³⁾ 이처럼 혁신계 일부 인사와 청년·학생들은 미소의 세력 균형에 기반을 둔 중립화통일론에서 점차 제3세계의

33) 《민족일보》 1961년 5월 3일.

민족해방에 주목하는 자주통일론에 접근해 갔던 것이다.

(3) 남북협상론

남북협상론은 남과 북이 한반도 통일의 주체로서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룩한다는 논리로서 사회당, 민족건양회, 민민청, 통민청 등 민자통 주류가 가진 입장이었다. 일찍이 민자통 준비위원회는 9월 30일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3대원칙으로 내건 바 있고, 1961년 1월 15일 발표한 강령에서는 민족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민족 자주적 입장이란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평화통일이란 협상을 통한 통일이므로, 이는 다름 아닌 남북협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존재론적 인정이 전제가 되고 있다. 1961년 3월 13일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라” 유엔 감시 하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의를 했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만의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자통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민의원 본회의 결의안은-인용자) 결론적으로 맺으면 이것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통일지연방안 또는 통일방해방안으로 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평양 공산정권의 무조건 항복 또는 자연소멸이라는 조건 위에서 북한만의 선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북한 정권은 가치에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통일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아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³⁴⁾

이와 같은 논리는 남북협상론을 주장하는 다른 글에도 피력되고 있어서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남북협상론 주장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⁵⁾

한편으로 민족 자주적 입장이란 강대국의 부당한 외압 또는 간섭을 배제하는 것

34) 《민족일보》 1961년 3월 15일.

35) 김상찬, 앞의 글 : 이재춘, 〈민족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 방향〉(상), 《민족일보》 1961년 5월 8일. 민자통 선전위원장 이재춘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글의 실제 작성자는 선전위 부위원장인 하상연으로 알려져 있다.

이다. 특히 분단은 한국 사회가 지닌 비자주적 현실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며, 따라서 분단 해소의 과정은 자주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남북협상론자들은 제3세계 중립주의가 지닌 민족자주주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민족건강회가 제안한 통일방안 대강에서는 민자통의 통일운동이 이 방향에서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우리의 통일운동은 내용에 있어서든 방법에 있어서든 민족 자주적이며 민주적이며 화평적이라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 국제 친교 방향은 미국을 선두로 한 '나토체제'도 아니며 소련을 선두로 한 '와르샤와(바르샤바-인용자)체제'도 아닌, 亞阿(아시아·아프리카-인용자) 및 중남미의 생리로서의 '반동체제'의 방향이다. 그러므로써 '네루' '넛셸' 등의 주장인 '국제중립노선'을 우리들도 견게 된다. 즉 동방측도 아니요, 서방측도 아닌 일명 '제3세력'으로서의 그 중립적인 방향을 우리들도 취하게 된다.³⁶⁾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중립 노선에 대한 인식은 이미 민민청의 결성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1960년 6월 12일 결성된 민민청은 전략 강령으로 “반동체제 지역들의 청년운동과 제휴한 세계 민주방향 청년운동에의 일익성 견지”를 채택하고 있다.³⁷⁾

또한 민자통 결성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는 유엔총회에 민자통의 대표를 사절단으로 보내 민족의 의사를 반영케 할 것을 주장하고, 유엔 및 미소 양국이 유엔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에 협조하기를 요구하는 등 유엔을 통한 국제 사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남북협상론은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남북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모든 것을 일관하려는 고립적 입장을 취했다기보다는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야 하며 국제적 요소는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36) 민족건강회, 〈민족통일방안 대강〉, 《민족일보》 1961년 4월 14일 광고. 이 글의 작성자는 이종률이다.

37) 이일구 편저, 《현순간정치문제소사전》, 국제신보사, 1960년 6월, 149쪽 참고. 이일구는 이종률의 이명이다.

하지만 중립화통일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국제 강대 세력들의 자기 필요에 의한 모의와 그 강대 세력들의 각축 현상으로서의 ‘균형된 세력의 보장’ 밑에서의 영세중립론적 중립화의 방향은 이것이 우리 민족적 자주성과 창발성과 아울러 우리 겨레의 역사적 민주 인류체제 건설에의 참가와 소임된 바 그 임무의 수행을 자기 부정하는 하나의 국제퇴영주의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정해야 한다.³⁸⁾

무엇 때문에 민족자주적인 위치를 떠나 중립화라야 하고 중립화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중립화를 시켜 주시오” 하고 누구에게 호소할 작정이며 우리의 통일은 중립화로 하겠다고 누구에게 주장해야 하는지? 우리 민족문제를 소련에게 가져가서 중립화로 해주시오 할 작정인지?³⁹⁾

이는 중립화통일론이 국제적 타협에 의해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물론 중립화통일론에도 남북 협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중요성은 국제 협정에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립화통일론은 남북의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열강 간의 국제협상에 의존한 중립화라는 것은 또 다른 외세 의존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남북협상통일론에서 주장하는 외세 배격의 의미는 부당한 외압이나 과도한 개입으로 주체성을 위협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협상론의 주장은 사실상 민자통의 강령과 기본 입장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남북협상론은 통일을 사회변혁과 연결시켜 인식하였는데, 이 때 사회변혁의 성격은 ‘반제, 반봉건, 반매관 민족혁명’이었다. 따라서 통일과 민족혁명의 실천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였다. 즉 각종 대중단체 활동을 통해 반제 반봉건 반매관 민족혁명의 동력이 되는 모든 인자들을 광범위한 통일전선에 집결하고 이를 지도할 영도적 핵심을 만들어 민족혁명 수행하는 것을 통일운동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였다.

38) 민족건양회, 위의 <민족통일방안 대강>

39) 이재춘, <민족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 방향>(상)

남북협상론에서는 통일의 단계를 가장 쉬운 데서부터 점차 어려운 단계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낮은 단계의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최하의 초보적 단계, 남북 양 정부가 참여하여 주도하는 전 민족적인 상설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남북의 경제와 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 중간 단계, 남북의 대표가 협상을 통하여 선거법을 제정하고 자유로운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최고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중간 단계는 북한에서 주장한 연방제의 ‘최고민족위원회’의 기능과 같은 것이었다.⁴⁰⁾

그런데 남북협상론에서 주장하는 남북 교류에서 특히 강조하였던 것은 경제교류였다. “남한 쌀, 북한 전기”라든지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는 등의 구호는 통일문제를 민중생존권과 연결시킨 것으로, 당시에 대단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다.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종속되어 파행적 경제구조를 가진 채 8·15를 맞았는데, 분단은 여기에 남북 간의 보완적 경제 관계마저 단절시켰으므로 경제의 혼란과 정치는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50년대의 경제 혼란과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갖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 교류와 통일은 절실한 문제였다. 이에 남북협상론은 통일 없는 경제 건설은 불가하다고 보았으며, 미국 원조에 의존하여 남한 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것이다. 남북협상론에서 경제교류를 중시하였던 것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4·19 시기에 표출된 통일론은 단순한 통일방안이나 구체적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라 분단과 냉전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 사회 변혁을 둘러싼 인식에서 근본적 차이를 함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단 상황처럼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문제 인식을 이어가고 있다.

40) 김영춘, 〈조국통일의 기본방향〉, 《영남일보》 1961년 2월 19일~3월 16일.

4. 맺음말 - 과제와 전망

4·19 시기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그 간 많은 성과를 축적하여 왔다. 연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민자통의 위상과 역할, 통일운동이 함의하고 있는 변혁론, 통일론의 논리 구조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 시기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구조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보였던 사실 관계의 오류를 바로잡고 더욱 세밀한 의미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심이 미진한 부분도 있다. 이를 검토하면서 4·19 시기 통일운동의 남은 과제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전망해 보겠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민족건양회와 민민청, 그리고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에 대한 인식이다. 민민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민자통에서 발표된 문건과 선언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을 논리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는 민자통의 성격이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은 반제반봉건민족해방혁명론과 유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4·19 시기에서 5·16에 이르는 시기의 미국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규명이다. 이 시기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내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국무부, 스티븐슨 유엔대사, 김용중과 연결된 국무부 내 일부, 맨스필드 상원의원, 주한 미 대사관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대한정책 위에 놓여있을 것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와 '중립화통일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적인 차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인지, 이들 입장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4·19를 전후한 시기 미국의 압도적인 위상을 생각할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운동 국면을 종결시킨 것이 군사쿠데타였다는 점에서 5·16쿠데타에 대

한 분석은 이 시기 통일운동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즉 통일운동이 급속히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무렵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과연 박정희의 쿠데타가 당시 정국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쿠데타 주도 세력의 현실 인식, 쿠데타를 실행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료 부분에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미간행 유고들을 발굴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술 자료는 더욱 많은 확보와 동시에 교차 확인을 통해 구술 상호 간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복원함으로써 구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을 통해 효용성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1. 신문

《민족일보》 《영남일보》 《민국일보》 《국제신보》 《로동신문》

2. 자료집

한국혁명재관사편찬위원회 편, 1962, 《한국혁명재관사》 3권, 4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 《대한민국선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대한민국정당사》1 집

이일구(이종률), 1960, 《현순간정치문제소사건》, 국제신보사

노중선, 1985, 《민족과 통일 1》, 사계절

노중선, 1989, 《4·19와 통일논의》, 사계절

노중선 엮음, 1996, 《연표 :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사계절

3. 회고록, 전기, 유고 모음

- 민인사연구회 엮음, 1989, 《민족혁명론》, 들샘
언론인김삼규간행위원회, 1989, 《언론인 김삼규》, 동경
김세원, 1993, 《어느 통일운동가의 육필 수기-비트》 상·하, 일과놀이
원희복, 1995,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2005, 《이수병평전》, 민족문제연구소
김철, 1987, 〈한국혁신정당운동의 회고와 전망〉, 《민족지성》 2월호
이동화, 1987, 〈한국혁신정당운동의 인맥과 활동평가〉, 《민족지성》 2월호

4. 구술 자료

- 문한영, 1990, 〈60년대의 민족자주통일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2, 한길사
문한영, 1995년 구술. 면접자 김지형
하상연, 2000년 구술. 면접자 김선미
김상찬, 20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 수집사업
배다지, 2002·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 수집사업
황건, 20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 수집사업
이종린, 20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 수집사업
김달수, 20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 수집사업
김영옥, 20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 수집사업
이규영, 20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 수집사업
김금수,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 수집사업
이성재,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료 수집사업

5. 연구 성과

- 고성국, 1990, 〈4월혁명의 이념〉《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①, 한길사

- 김경권, 1985, 〈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민족자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 김광식, 1988, 〈4·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 《역사비평》 봄
- 김광식, 1990, 〈4월혁명과 혁신세력의 등장과 행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①, 한길사
- 김남식, 1988, 〈북한의 통일전략과 통일방안〉, 《사회와사상》 창간호, 한길사
- 김보영, 2000, 〈4월민중항쟁 시기의 남북협상론〉, 《4·19와 남북관계》, 민연
- 김지형, 1996, 〈4·19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 과정〉, 《역사와 현실》 21
- 김지형, 2000, 〈4월민중항쟁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회의의 노선과 활동〉, 《4·19와 남북관계》, 민연
- 김학준, 1975,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국제정치논총》 15, (뒤에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에 재수록)
- 박진희, 1991, 〈민주당정권의 기반과 성격〉, 《한국현대사》 2, 풀빛
- 박찬호, 1991,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한국현대사》 2, 풀빛
- 서중석, 1991,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가을
- 서중석, 1994, 〈민주당·민주당정부의 정치이념〉,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손병선, 1990, 〈2대악법반대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②, 한길사
- 유재일, 1988, 〈4·19시기 혁신정당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 이재봉, 1996, 〈4월혁명, 제2공화국, 그리고 한미관계〉,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 이중석, 1990, 〈4월혁명의 주도세력의 변천과정-학생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①, 한길사
- 전철환, 1983, 〈4월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 《4월혁명론》, 한길사
- 정기영, 1990, 〈4월혁명의 주도세력〉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①, 한길사
- 정창현, 2000, 〈4월민중항쟁 전후 북한의 통일노선과 통일정책〉, 《4·19와 남북관계》, 민연

- 정창현, 1991, 〈4월민중항쟁 직후 혁신정당운동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한국현대사》 2, 풀빛
- 정창현, 1992, 〈5·16군사쿠데타의 배경과 성격〉, 《한국현대사》 3, 풀빛
- 한모니까, 2000, 〈4월민중항쟁 시기 북한의 남한정세 분석과 통일정책의 변화〉, 《4·19와 남북관계》, 민연
- 한승주, 1883,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 홍석률, 1993, 〈4월민중항쟁기 중립화통일론〉, 《역사와 현실》 10
- 홍석률, 2005, 〈민간통일운동의 전개와 쟁점〉, 《내일을 여는 역사》 21, 서해문집
- 홍석률, 2001,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석률·정창현, 2000, 〈4월민중항쟁 연구의 쟁점과 과제〉, 《4·19와 남북관계》, 민연
- 황건, 1990, 〈민통련과 민족통일운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②, 한길사

6·3항쟁의 전개과정

오 제 연

| 목 차 |

1. 머리말 - 연구목적과 방법
2. 6·3항쟁의 배경
 - 1)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
 - 2) 한일회담의 진행
 - 3) 학생운동의 성장과 민족주의 고양
3. 6·3항쟁 주도세력의 성장
 - 1) 고등학생의 정치적 각성
 - 2) 대학의 지적 분위기
 - 3)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
 - 4) 1962년 한미행정협정촉구시위
 - 5) 학생조직의 흐름
4.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전개
 - 1) 3·24시위
 - 2) 4월 괴소포 사건과 학원 사찰 폭로
 - 3)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 4) 6·3항쟁
5. 1965년 한일회담반대운동과 그 이후
6. 맺음말 - 연구의 결론, 성과, 한계
<참고문헌>

1. 머리말 - 연구목적과 방법

6·3항쟁은 1960년 4·19혁명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을 선도한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추진을 반대하며 전개한 대규모 운동이다. 1964-1965년을 뜨겁게 달군 6·3항쟁은 4·19혁명 경험으로 고양된 민주·민족의식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1960·70년대 민주화운동의 기본구도를 형성한 분기점이었다. 따라서 1960·70년대 민주화운동·학생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인 4·19혁명 못지않게 6·3항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6·3항쟁 연구가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으나 운동세력 내부의 역학이나 동학을 규명하기보다 대부분 현상적으로 전개된 운동과정과 운동논리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에 본 연구는 6·3항쟁을 주도한 당시 학생지도자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6·3항쟁의 전개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들(사건, 단체, 그룹, 인물)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구술을 해준 당시 학생운동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 * 김도현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61학번. 새세대(문리대 학보) 편집주간. 민비연 회원.
- * 박정훈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61학번. 정경대학 학생회장.
- * 안성혁 :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60학번.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 * 현승일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61학번.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회장.

즉 이 연구는 6·3항쟁 당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항쟁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핵심 지도자들의 구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술 내용을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확보한 6·3항쟁 관련 구술 자료들, 《6·3 학생운동사》,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와 같이 6·3항쟁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한 기록들, 그리고 관련 연구성과들과 비교 검토하여 구술의 자의성과 협소성을 감소시키고 사실의 정확성을 기해 이후 6·3항쟁은 물론 1960년대 전체 민주화운동의 실증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6·3항쟁의 배경

1)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

1964년 6·3항쟁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추진이었다. 이는 6·3항쟁이 국내적인 정치적 이슈를 넘어 미국과 일본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6·3항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일회담은 물론 이를 뒤에서 후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에 대한 중요한 연구성과로는 허버트 P. 빅스, 브루스 커밍스, 이종원 등의 연구가 있다.¹⁾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1973년 발표된 빅스의 논문 “Regional Integration : Japan and South Korea in American’s Asian Policy”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다룬 가장 고전적인 연구성과이다. 한국에서도 1984년 〈지역통합전략—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의 한국과 일본〉(《1960년대》에 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커밍스의 지역통합전략에 대한 견해는 1984년에 발표된 논문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 and Political Consequences”(1987년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에 재수록)과, 1988년에 발표된 논문 “Power and plenty in North-East Asia : The Sources of US policy and contemporary conflict”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에 수록), 그리고 1990년에 간행한 저서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등에 나와 있다. 그밖에 1992년 발표된 전상인의 논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사회·한국사의 인식〉(《한국과 국제정치》 8에 수록)과 1997년 발표된 정용욱의 논문 〈미·소의 대한정책과 군정연구〉(국편 《한국사론》 27에 수록), 2003년 발표된 박진희의 논문 〈한·일협정 체결과 ‘지역통합전략’의 현실화〉(《역사와 현실》 50에 수록) 등에도 커밍스의 주장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종원의 견해는 1993년에 발표한 논문 〈戰後米國의極東政策と韓國の脫植民地化〉(《近代日本と植民地》 8에 수록)와, 1995년에 발표한 논문

첫째, 미국의 일본 중심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은 2차대전 이전 이미 前史를 가지고 있었다. 빅스와 이종원은 20세기 초 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부터 그 연원을 찾고 있으며, 커밍스와 이종원은 전후 일본 재건을 위한 배후지(背後地)로 2차대전 당시 대동아공영권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대동아공영권과 지역통합전략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일본을 한국과 대만이 쫓아간다는 Flying Goose Effect (雁行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일본 중심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은 한일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는 1960년대에 본격화하지만,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대두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의 ‘역코스(Reverse Course)’와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애치슨라인’에 대한 분석은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일본 중심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지역통합전략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당시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한국을 배제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한국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지역통합전략 하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분업’이었는데, 한국전쟁 직후 한국에 있어서는 주로 아시아의 반공보루·전초기지라는 군사적인 역할이 주어졌다. 물론 산업연관도 점차 중요해졌다.

넷째, 지역통합전략은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한일관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1965년 한일협정에 체결됨으로써 한일간의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한일간의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었으며, 경제적 연관과 분업도 긴밀해졌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종속을 심화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견해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존재한다. 첫째, 빅스는 철저하게 ‘군사’ 중심으로 지역통합전략을 이해한다. 그 역시 미국과 일본 자본의 종속관계, 미국의 재정문제, 일본의 경제적 팽창욕구, 한국의 경제발전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1965년 한일협정까지도 1960년 미일상호 방위조약과 1953년 한미군사동맹의 효과적 융합을 통한 한일군사제휴로 파악하고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한일협정을 다시 본다》에 수록), 그리고 1996년 간행한 저서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등에 잘 나와 있다.

있다. 특히 5.16과 미국·일본의 관련 가능성을 지적하고, 지역통합전략을 출발을 일본에서의 ‘역코스’에서 찾고 있다.

둘째, 커밍스는 ‘세계체제론’에 ‘지역’ 범주를 도입하여 세계체제의 메카니즘 속에서 지역통합전략을 이해한다. 일본재건을 위한 ‘헤게모니’와 ‘배후지’ 문제가 고민되었고,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발달과 군사화가 추구되었으며, 결국 ‘힘(power)’에 의한 지역통합과 ‘富(plenty)’에 의한 산업연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셋째, 이종원은 ‘정치’와 ‘경제’ 문제를 모두 고민하고 있지만 강조점은 ‘경제’에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는 봉쇄전략의 적용이라고 하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었지만, 정책의 기본은 미국의 직접 개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뉴룩(New Look) 전략이 동아시아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했던 ‘지역적 뒤틀림’과 ‘시간적 어긋남’은, ‘군사우선’과 ‘경제중시’라고 하는 2개 요청 사이의 trade-off 구조를 잘 보여준다.

빅스, 커밍스, 이종원의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각각의 서로 다른 시각은 지역통합전략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전 지역통합전략의 대두 문제나 한국에서의 지역통합전략 적용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첫째, 미국에게 한국은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 1950년대 후반 이전과 이후의 위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경제적 분업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종원은 지역통합전략이 2차대전 이전의 대동아공영권 발상과 통하는 것으로, 아시아에서의 식민주의적 질서의 부활을 상정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전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좌우를 막론하고 이같은 질서 구상과 격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은 소련을 대상으로 한 봉쇄정책의 일환이자 제3세계 국가들에서 민족주의 혁명을 방지하고 이들 국가들을 미국의 헤게모니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

석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좌우를 막론하고 이 같은 전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3세계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지역통합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6·3항쟁 당시 대학생들에게 제3세계 민족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관점이 6·3항쟁의 배경으로서 지역통합전략을 분석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다.

2) 한일회담의 진행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의 주권은 회복되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전승국의 자격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영국과 일본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²⁾ 대일강화조약에서 배제된 한국정부는 1952년 4월의 강화조약 발효 한일간의 각종 현안들을 타결하기 위해 미국의 주선에 따라 일본과 직접 협상을 시도했다. 일본 역시 정치적으로 좌익 성향이 강하고, 많은 수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경제에 부담이 되었으며, 범죄와 실업 등 사회적 골칫거리였던 재일한인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1951년 10월 20일 제1차 한일회담의 예비회담이 도쿄에서 시작되었다.

한일회담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 제1차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청구권을 주장하는 한국과 역청구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된 1910년 8월 20일 이전 한일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무효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에 소극적이었다. 어업협상과 관련해서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문제가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1953년 4월 제2차 회담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1953년 10월 제3차 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가 “36년간 일본의 한국 지배가 한민족에 유익했다”는 망언을 하여 회담이 장기간

2) 이종원, 1995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28-31쪽

중단되었다.

1957년 장기간 중단된 한일회담이 재개되었다. 먼저 그동안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일본의 소위 '역청구권' 주장이 포기되고 구보다 망언도 취소되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은 억류자 상호 송환과 한일회담 재개를 규정한 협정문서에 서명하였다. 4월 15일 제4차 한일회담의 본회담이 시작되었고, 송환 대상자들에 대한 송환은 5월 22일 일본 총선 이전에 일단 마무리 되었다.³⁾ 하지만 제4차 회담은 일본정부의 재일한인에 대한 복송 결정으로 곧 파국을 맞이했다.

1960년 4월 항쟁으로 이승만정권이 붕괴한 이후 들어선 장면정권과 박정희정권은, 이승만정권과는 달리 한일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장면정권은 1960년 10월 제5차 한일회담을 재개하였다. 더디게 협상이 진행된 협상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정권의 운명을 경제개발에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박정희는 미국의 원조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승만처럼 미국의 원조에만 매달리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려 하였다.

1961년 10월 제6차 한일회담이 시작되었다. 조기타결을 서두른 군사정권은 실무적 교섭보다 고위급 정치회담을 선호했다. 그 결과 1962년 11월 12일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작성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청구권 문제가 사실상 타결되었다. 이 메모에 기록되어 있는 청구권 액수는 무상원조 3억달러, 유상원조 2억달러, 민간신용공여 1억달러 등 총 6억달러로서, 비록 양국의 수뇌에게 건의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양국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금액이었다.⁴⁾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평화선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했다. 일본정부는 이전부터 청구권과 평화선의 상쇄를 주장하고 있었고, 박정희정권도 청구권협상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 평화선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양보를 할 용의가 있었지만, 평화선을 주권선·생명선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정서는 이를 쉽게 용납하지 않았다.⁵⁾

한국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한국정부는 평화선 고수를 공언하였다. 하지

3) 오제연, 2005 〈평화선과 한일협정〉 《역사문제연구》 14, 역사비평사, 28쪽

4) 이도성, 1995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한송, 124쪽

5) 오제연, 2005 앞의 논문, 35-38쪽

만 일본정부는 계속 한일협상이 평화선 철폐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양보하지 않는 한 한일회담은 결렬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본정부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고민하던 박정희정권은 민정이양 이후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1964년 3월 김종필을 일본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야당은 박정희정권의 한일협상을 '대일 저자세외교'로 규정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학생들도 1964년 3월 24일부터 한일회담 굴욕타결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3) 학생운동의 성장과 민족주의 고양

1960년 4월항쟁은 한국현대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독재 정권을 국민들의 힘으로 타도함으로써 이후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 극우반공주의 하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민족주의를 급격하게 고양시켰다.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각 대학 이념서클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민족주의의 고양을 선도했다.⁶⁾

1950년대 후반 학생 이념서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단체는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와 법대의 '신조회', 고려대의 '협진회' 등이었다. 그 중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된 신진회는 1960년 4월항쟁을 주도하고 이후 민통련의 모체가 된 이념서클이었다. 1950년대 후반 신진회 학생들은 '민주사회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독일의 사회민주당, 영국의 노동당·페이비언협회를 중심으로 서유럽의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함께 공부하였다.⁷⁾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서구 자본주의와 공산진영이 표방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를 모두 비판하는 민주사회주의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특히 서울대 정치학과 민병태 교수의 라스키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⁸⁾

신진회 학생들의 민주사회주의적 지향은 제3세계 국가들의 비동맹 운동과 맞물려

6) 오제연, 2007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89-293쪽

7) 권영기, <신진회에서 민통련까지> 《월간조선》 1984년 4월호, 256쪽

8) 김정강의 증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32-33쪽)

민족주의와 결합하였다. 1955년 반동회의 이후 본격화한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은 미소 양대 진영에 대한 비판과 반식민주의, 중립주의, 평화공존 등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 소련도 평화공존론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신진회 학생들은 한국 사회를 제3세계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 후진성의 근본 원인을 분단모순과 외세의존에서 찾았다. ‘스푸트니크’ 위성으로 대표되는 소련의 발전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급속하게 경제 재건을 이룬 북한의 성장에 주목한 학생들은 남북의 평화공존, 교류, 통일 그리고 자립경제의 수립을 후진성 극복의 해결책으로 생각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최문환 교수의 민족주의 강의도 학생들의 민족적 감성과 엘리트 의식을 자극하였다.⁹⁾ 신조회나 협진회 학생들의 인식도 신진회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러한 인식은 점차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1960년 4월항쟁 이후 학생들의 민족주의는 본격적으로 고양되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트린 학생들은 우선 ‘학원민주화운동’과 ‘국민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학원민주화운동은 본질적으로 어용교수 퇴진과 학원 내 행정체계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연세대 같이 외국인 이사장과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⁰⁾ 국민계몽운동도 혁명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민족주체성을 뚜렷이 하고 사치와 허영과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담배’, ‘커피’와 같은 사치성 수입품 배격에 앞장섰다. 또한 사치성 수입품이 범람하는 근원인 미군부대 P·X를 한국 정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한미 양국에 요구하였다.¹¹⁾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의식을 결여한 이들 운동이 많은 한계를 노정하자 이념서클 소속 학생들은 ‘통일’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1960년 9월 이후 통일과 민족 문제는 토론회나 강연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제기된 ‘중립화통일론’은 토론회나 강연회에서 가장 열띤 논의의 대상이었다.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학생회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 결성으로 이어졌다. 먼저 1960년 11월 서울대에서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되었다. 서울대 민통련은 과거 신진회, 신조회 등 학생 이념서클 출신 학생

9) 이영일의 증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면담, 면담자 오제연, 한중문화협회, 2003. 8. 29)

10) 《연세춘추》 1960년 9월 26일자

11) 《대학신문》 1960년 9월 26일자

들을 주축으로 4월항쟁 이후 학생회와 국민계몽운동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결집했다. 서울대 민통련 결성 이후 각 대학에서 민통련의 이름을 건 통일운동 조직들이 속속 결성되었다.

각 학교 민통련은 1961년 2월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1961년 2월 8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2월 12일 서울대 등 7개 대학교 민통련은 ‘한미경제협정반대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14일 성토대회를 열었다. 단지 내정 간섭 문제만을 비판하는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민통련 학생들은 한미경제협정을 미국의 한국 예속화 조치이자 자립경제의 좌절로 판단하였다. 민통련 학생들은 제3세계 민족해방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분단과 빈곤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질타하였다. 이와 함께 민통련은 ‘2대악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실상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1961년 4월 19일, 4·19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 학생회는 ‘4·19 제2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학생들은 “지금 이 땅의 역사를 전진(前進)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세, 반매관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 뿐이다. 이 민족혁명 수행의 앞길에는 깨어진 조국의 민족통일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4·19에서 흘린 피를 더럽히고 반민족적 방향으로 역류시키는 어떠한 반민족적인 세력도 타도”할 것과 “조국의 자주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와 이에 결탁하는 사대주의 세력을 일체 배격”할 것을 결의했다. 그런데 서울대 학생회의 ‘4·19 제2선언문’ 작성은 사실상 민통련 학생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민통련의 민족주의 노선이 ‘반봉건, 반외세, 반매관’에 기반하는 민족혁명론, 자주통일론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선이 학생회를 포함한 일반 학생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²⁾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은 이러한 노선에 입각하여 북한 학생들에게 남북 학생회담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5월 5일 17개 대학교 민통련이 연합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하 민통전학련)이 결성준비대회를 갖고 서울대 민통련의

12) 《민족일보》 1961년 4월 20일자

남북학생회담 제안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¹³⁾ 그러나 남북학생회담 제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남북학생회담의 추진을 둘러싸고 민통전학련 내부에서 신중론과 적극론이 대립하였다. 민통전학련 지도부의 다수는 남북학생회담을 둘러싼 파문이 정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남북학생회담이 정치협상이 아니라 학생교류에 한정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래서 5월 13일 혁신계의 전국적 통일운동조직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이 주최하는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에 민통전학련 대표를 파견하는 것에 반대했고, 대신 장면 정권과 접촉하여 남북학생회담 제안을 철회할 의사를 전달했다. 반면 남북학생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민자통 주최 행사에 독자적으로 대표를 파견했다.¹⁴⁾ 이러한 신중론과 적극론의 대립은 학생들의 민족주의가 반봉건 반외세 반매관의 3반(反)에 기반한 민족해방·민족자주통일 노선으로 점차 수렴되고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잡다한 관념적인 주장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남북학생회담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좌절되고 학생운동은 일시적인 침체기에 들어선다. 하지만 4월항쟁의 승리와 고양된 민족주의를 경험한 학생들은 다시 세력을 결집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한다. 한일회담은 그 계기였고, 이 당시 대학에 막 들어온 60, 61학번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3. 6·3항쟁 주도세력의 성장

1) 고등학생의 정치적 각성

고려대 61학번 박정훈의 회고에 따르면 6·3항쟁에 참여했던 대학생 세대들은 이

13) 《대학신문》 1961년 5월 8일자

14) 황건의 증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면담, 면담자 한찬욱, 4월혁명회 사무실, 2003. 8. 20)

미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박정훈 : 아, 그때는요. 지금하고 사회가 많이 달랐어요. 지금은 이... 스타들이, 대중 스타들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계 스타들이 많습니다. 그죠? 야구선수다, 축구선수다, 박지성이다, 박찬호다, 박세리다, 막 이런 스타들. 그 다음에 에 이 탈렌트들. 에, 그런데 그때는 이 저 체육계 스타나 탈렌트 스타들은 영화배우 스타들 하고, 가요계 스타들 정도가 대중 스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기업총수다 뭐다 해가지고 경제 지도집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정치인하고 정치스타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집중될 때예요. 지금 사회가 엄청 다양해져서 교육계 지도자, 뭐 무슨 문화계 지도자, 체육계 지도자, 뭐 종교계 지도자 이렇게 많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우리 시절에도, 정치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관심도. 그 다음에 자기 사는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그 대화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다른 다른 상황이에요.

산업화가 부진하고 사회·문화가 미분화한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대상이 정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은 앞으로 보다 실증적·이론적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쨌든 당시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관심은 이들이 1960년 4월항쟁이나 1964년 6·3항쟁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한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1960년 4월항쟁에 참여한 이홍길은 다른 구술 작업에서, 광주고등학교 재학 당시 '향농회'라는 서클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농촌 문제는 농촌운동만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¹⁵⁾ 이는 또한 1960년대 후반 이후 학생운동에서 고등학생들이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현승일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성숙은 지역적인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었다. 특히 해방직후 좌익의 세력이 강했고 이후에도 야당의 세력이 강했던 대구의 분위기는 주목할 만 하다.

15) 이홍길의 증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면담, 면담자 김정길, 광주 그랜드호텔, 2003. 9. 13)

현승일 : 네, 네. 대구는 그 당시에 야당세가 셧습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좌우간 야당세가 세서, 예, 조금 그 자유당의 부패라든지 이런 데에 저항감이 많았죠. 근데 대구 경북고는 그게 역사가 깊은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독립운동도 많이 그 독립 운동도 많이 관여를 했고 또 학생들이 프라이드가 세 가지고 무슨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토의하고 하는 그런 선후배 간에 유대도 깊고 말이죠. 그런 똑똑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고등학생으로서는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위기였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때는 뭐 6.25 이후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놀러 갈 때도 없고 또 놀러갈 그런 여유도 없고, 대개 책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현승일 역시 박정훈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이후 고등학생들이 특별히 여가를 보낼 계기가 없어 책을 많이 읽었고, 그 결과 정치의식이 높아졌다고 자기 세대를 분석했다. 또한 그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대구 지역의 저항 전통이 이 지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자신이 나온 경북고등학교에 정치적인 색깔을 띤 서클이 있었으며, 이런 서클을 나온 선배들을 후배들이 동경했다고 이야기 했다. 4월항쟁과 민통련에 적극 가담했던 이영일의 회고에도 나오지만, 당시 학생운동에서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으며 이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의식화가 되어 있었다.¹⁶⁾ 당시 대구 지역의 진보성을 설명하는 몇몇 방식이 있지만 이러한 진보적 의식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 고등학교는 대학 입학 이후에도 학생들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안성혁은 자신의 활동에서 모교인 서울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성혁 :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그, 서울고등학교 출신으로는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총학생회장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고등학교가 그냥 보통 단합이 돼서 절 밀은 게 아니에요...(중략)... 뭐, 그, 글썄 서울고등학교가 뭐 특별히 앞에 나서서 뭐 한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제가 학생회장이니까, 저를 지원하

16) 이영일, 앞의 증언

고, 이제 저를 소위 말하면, 서포트 하느라고,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장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뭐 동원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지, 특별히 뭐 서울고등학교가 뭐, 특별히 독자적으로 뭐, 어, 나서서 한 건 없습니다.

학생운동, 특히 대학의 선거에서 고등학교 동문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 서울대 민비연의 경우에도 경북고등학교 출신이 핵심 멤버였다. 또한 각 학교 간의 연계에서도 동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등학교라는 끈이 절대적은 아니었다. 대학 학생운동은 고등학교의 자산에 기대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2) 대학의 지적 분위기

1960년대 초 대학은 4월항쟁의 승리의 경험이 압도하고 있었다. 1961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현승일은 당시 대학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현승일 : 61년도에 들어가니까, 4.19 이후의 이제 그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 우리 과나 문리대 전체가 무슨 나라를 이끌어 가는 무슨 그, 저, 원로원 비슷한, 그런 분위기더라구요. 모이기만 하면 전부 무슨 정치이야기, 나라이야기, 뭐 온갖 그, 저, 고급 담론들이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린 상당히 거기에 그런 분위기에 심취했죠, 아, 이 과연 서울대학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5.16이 났어요.

독재정권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다는 자신감은 학원에 정치 담론이 유행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특히 서울대·연세대·고려대와 같은 소위 일류 대학 학생들은 스스로를 새나라를 이끌어갈 새세대로 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신입생활영회를 통해 재생산되었다. 대학문화의 폭이 넓지 않았던 그 시절 신입생활영회의 비중은 오늘날보다 컸다.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은 신입생활영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박정훈 : 아,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자면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선배들이, 그 우

리 선배 중에서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꼭 몰려와가지고, 음 우리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데, 거기에 아, 고대가 뭐고 말이지,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했고 뭐 하고 이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신입생활영회 때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게 다른 대학하고 뭐 조금, 다를 건 별로 없습니다마는, ‘민족 고대’, 또 ‘4.19 혁명의 전초기지’ 예를 들자면. 어, 그리고 그 역사적 임무를 해낸 자랑스러운 고대다. 그런 의식을 강하게 심어준 거죠. 우리들한테.

신입생활영회를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은 일상적인 독서와 토론, 강연회 등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각인되었다. 김도현의 다음 증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김도현 : 4.19 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혁명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막 학교 들어가니까 그냥 뭐 이쪽, 저쪽에서 그냥 강연회가 열리고, 그때 아마 유명한 그런 게, 민통련, 그 다음에 후진사회연구원 뭐, 이런데서 강연회를 하고,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유근일씨가, 아, 그때 형무소에 있다가, 그 양반은 자유당 때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아, 그 ‘새세대’라는 문리대 신문에다가 뭐, ‘우리의 구상’인가를 썼다 들어갔다 그때 나왔어요. 나와서 그 유근일씨가 그 아프리카 민족주의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강연한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 그런 강연회, 뭐 이런 게 아주 열기가 뭐 고조되어 있었던 때지죠. 그리고, 그래서 뭐 학생들이 그 무슨 최문환 선생의 뭐,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또 뭐 ‘리슨 양키’, 뭐 그런 거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애. 그리고 어, 정치학과 학생들은 이제 뭐 ‘라스키’ 같은 거, ‘라스키’, 그 민병태 교수라고 있었는데, 민병태 교수가 ‘라스키’를 좋아하고, 이렇게 다원주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는 자유당 때에 그거 한 가지 주의에서 뭐까지, 아주 그 진보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원주의까지는 이게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었는데, 하여튼 ‘라스키’ 같은 거를 많이 봤고, 일부 학생들은 이제 또 그 해방직후에 나온 그 좌익서적들 있어요. 뭐 좀 낡은 종이로 만든 거, 뭐 ‘대중철학’이니, 뭐 세, 저, ‘세계사 교정’이니 전석담의 ‘조선사 교정’이니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랬을 거예요. 예.

김도현의 구술에서 당시 대학의 지적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당시의 대표적인 사조가 바로 민족주의라는 점이다. 4월항쟁 이후 고조된 민족주의는 대학에 계속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생들은 제3세계 민

족주의에 큰 관심을 가졌다. 최고의 필독서는 쿠바 혁명을 다룬 《리슨 양키》였다. 덕분에 쿠바 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 체게바라 뿐만 아니라 모택동, 닷세르 등 제3세계 지도자들의 인기가 높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 지역 대학들 뿐만 아니라 전남대와 같은 지방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¹⁷⁾

또 하나의 특징은 민족주의와 함께 민주사회주의가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서울대에서 그러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는 민병태 교수의 영향으로 라스키와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전통은 신진회를 거쳐 민통련으로 내려왔다. 학생들은 민주사회주의적 발전을 위해서는 분단된 나라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사회주의는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의 고양으로 이어졌다. 또한 소련·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을 목격한 학생들은 사회주의의 효율성에 주목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원전들도 함께 읽었다. 현승일의 구술에 따르면 서울대에는 좌익 서적들만 따로 모아놓은 마대 자루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대학이 극우반공 시대에 진보의 섬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세대·고려대 등 다른 학교 출신 구술자들의 증언에서는 민주사회주의와 좌익 서적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없다.

3)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

4월항쟁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학원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바로 1961년 5·16군사쿠데타였다. 쿠데타 직후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박정훈 : 근데 그 때는요. 판단이 잘 안 서더라구요. 왜 안 서냐. 육군 사관학교 애들이, 내가 현장에서 봤어. 남대문 또 가면서 이 혁명 지지 뭐 이거하고. 또 실제로 민주당 정부가 어 중심을 못 잡았다 그럴까, 지배력이 부재했다 그럴까, 국민을 통합시키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가는데 난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정부가. 그리고 어쨌든 그 민주당 정부가, 아 저 민주당이 신구파로 분리가 되가지고 정당이 나뉘지고 권력 쟁취, 그러니까 내각제를 우리나라에 처음 실시하니, 우

17) 김시현, 정순택, 홍갑기, 이홍길, 박석무, 전홍준, 정동년의 증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면담, 면담자 김정길, 광주 그랜드호텔, 2003. 9. 13)

리가 대통령제만 이렇게 보다가 내각제에 대해서 엄청 혼란스러운 양상을 눈으로 보니까, 어 과연 이대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5.16이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국가 장래를 책임지고 가야 될 그런 세력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도 있었고, 그런 의식도 있었고, 과연 이게 지금 5.16 혁명이 혁명이 낄 시점이냐 하는... 그래서 저는 판단이 처음에 안 서더라구요.

김도현 : 지금 기억나는 것은, 거 현승일이하고 나하고 어디를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기억이 있는데, 현승일이는 뭔가 그런 쪽에 그 수준이 좀 높았는지 이, 저, 이, 이게 뭐 아무리 잘 돼 봐야 국가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나는 정말 윤보선씨가 올게 왔다고 그랬지만은 나도 올게 온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 내가 뭐 혁명을 지지해서 올게 온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이, 저, 이, 사회 여러 가지 양상이 마, 지금은 내 판단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미국 음모설 같은 거, 그런 거에 연상도 들고, 어, 이거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어, 미국이 힘이 있다면 가만있지 않을 거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의 혼란 속에는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생 자신에 대한 자기반성이 투영되어 있었다. 스스로를 4월항쟁의 주역이라고 자부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4월항쟁의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고 반성하였다.¹⁸⁾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학생 스스로의 자기반성은 5·16쿠데타를 학생들이 즉각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게 했던 요인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권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었고 또 쿠데타 직후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대량 검거가 단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은 쿠데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후 군사정권의 실상을 지켜본 학생들은 박정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었다. 이는 민정이양을 위한 1963년 선거 당시 학생들의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현승일 : 그래서 민족적 민주주의에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어, 그 박 장군을 그 대표로 하는 그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학생 서클도 생겨났어요. 그때.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이렇게 지지연설도 하고 말이야, 학생들이

18) 《대학신문》 1961년 5월 22일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연히 학원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는 저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것이 진짜냐 말이야, 하나의 선거 이슈로, 선거용으로 써먹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결국 믿을 수 없다, 저거는. 결국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정권을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편에 서게 됐죠.

김도현 역시 당시 선거에서 박정희를 찍은 학생들이 꽤 많을 거라고 지적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자 모두가 자신은 처음부터 박정희에게 기대를 갖거나 지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 역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박정희나 군사정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4) 1962년 한미행정협정촉구시위

1962년 6월 한미행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며 6일 고려대생 2천여명, 8일 서울대생 1천여 명이 쿠데타 이후 최초의 시위를 벌였다.¹⁹⁾ 이 시위는, 1962년 봄 미군에 의해 임진강 부근에서 나무꾼이 살해되고, 또 다른 한국인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에서 비롯했다. 3월부터 서울대 학생들은 이 문제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지위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이 체결했던 ‘대전협정’의 불평등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대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박정희와 케네디에게 진정(陳情)하려 했다.²⁰⁾ 이러한 시도는 군사정권과 학교 측의 강력한 ‘정치관여 불용(不容)’ 의지 표현으로 일단 잠잠해졌다. 하지만 5월 말에 파주에서 미군 장교 등 6명이 한국 소년을 절도로 몰아 사형(私刑)을 가해 결국 그 소년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즉각 한미행정협정의 조속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요한 것은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당시 2학년이었고 뒤에 6·3항쟁을 주도하는 61학번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고려대 시위를 주도한 박정훈의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 오제연, 2007 앞의 논문, 308-309쪽

20) 《대학신문》 1962년 3월 12일자

박정훈 :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때는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이 안 돼가지고 미군이 범죄를 해도 우리 법정에 서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유럽, 유럽에도 미군이 많이 파견 나가있었잖아요. 근데 한국만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군이, 저 일군하고도 또 다르고 달라. 아주 달라. 그런데 그 때 동두천에서 거 미군이 우리 여자를 성폭행하고 총살하는 것 까지, 에 그런, 미군 범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신문에 자주 비쳤어요. 몇 번. 비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입을 열 것이냐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누가, 누가 할거냐 이거야. 우리 밖에 없잖아. 학생들 밖에. 그렇잖아요. 누가, 누가. 우리 정부가 할 겁니까? 야당은 성명서 하나 내면 끝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즈음에 고대 우리, 그 당시 정외과가 숫자가 많았죠. 우리가 백 한 칠팔십명이 되가지고 그 한 번에 모이면 150명 이상이 모이니까, 참 뜻 있는 애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때 내가 대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수석 대의원을 해요. 정외과에. 그런데 지금 고대 교수하는 서진영이 와서 저보고 야, 나한테 시간을 좀 달래요. 대의원인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때 마침 그 시간이 휴강시간이 됐어요. 휴강인 줄을 몰랐는데, 휴강하기 전에, 서진영을 내가, 마침 나와서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좀 경청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의원이니까. 서진영이가 앞에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움직여야 한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말이지, 그리고 한미 행정협정 제대로 체결 안 되고, 이게 자주 독립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열변을 토한 거예요. 서진영이가, 거기서.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숙연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시간이 한참 지나가고 나니까 일부 애들이 일어나더라구요. 일부 애들은. 자, 여기에 관심이 있고 무언가를 같이 할 사람은 이 자리에 남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돌아가시오. 커. 제가 사회를 보니까 그랬을 꺼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야 한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박정훈의 회고는 1962년 6월 6일 고려대 시위의 준비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의 이후 박정훈은 선배들과도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을 이용하여 시위를 감행했다. 반면 이틀 후 시위를 벌인 서울대의 현승일, 김도현은 당시의 준비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단, 현승일은 6월 6일 고려대 시위와 6월 8일 서울대 시위가 사전에 조율되었던 것 같지만 자신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²¹⁾ 서울대가 어떻게 시위를 계획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이때의

21) 증언과 달리 현승일은 한미행정협정 촉구시위 당시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위 현장에서 최초로 연행되는 등 시위를 주도했다.

상호 연계는 훗날 6·3항쟁 때에 그대로 이어졌다.

현승일과 김도현은 시위의 성격, 특히 당시 학생들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승일 : 그때는 어, 우리가 사실 미국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잘 몰랐죠. 그런 역사적인 과정도 잘 몰랐죠. 잘 모르고, 아마 저희들 생각이 상당히 유치했을 겁니다. 유치했는데, 예, 미국 때문에 분단된 것이 아닌가. 응?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저항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게 뭐,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중략)... 반미까지는 아니었어, 아니었고. 그때 젊은, 철없는 학생들의 그 민족적 자존심이라 할까. 이런 정도였어요.

김도현 : 그 파주에서 미군이 우리 여자를,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항의, 행정협정이 체결이 안 돼서 미군을 그 처벌도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한 항의로 나왔던 그런 집회고, 시위인데. 미국, 또는 미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거는 사실 이죠, 사실이었는데, 예, 그 중에 뭐, 일부는 미국이 제국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학생은 마, 제국주의다, 꼭 반드시 이렇게 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여자를 머리 깎았다, 라는 그런 데 대한 공분, 또 그런데도 처벌을 못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분.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주 극도로 적대적인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구요. 또, 혁, 5.16 뒤에 분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대적인 표현이나 감정을 표출하지는 못했을 거구요.

즉 미군의 범죄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해서 일어난 시위가 1962년 6월 한미행정협정추구시위라는 말이다. 이를 반미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미국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반감은 6·3항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다 증폭된다.

5) 학생조직의 흐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 6·3항쟁을 주도한 학생조직이 존재했다. 먼저 서울

대는 1963년 만들어진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가 있었다. 민비연은 사회학과 황성모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는 문리대 서클로서 정치학과와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다수 참여했다.

민비연은 민통련과 같은 공개운동조직 대신 ‘연구회’를 표방하여 합법적으로 학생운동 기반을 확대하고 학생운동의 새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연구 발표와 세미나를 통해 민족주의와 관련한 학술적·이념적 지표를 세우고자 했다. 민비연 학생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의 후진성과 분단의 책임을 강대국 정치와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에서 찾으려는 구조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이전 민통련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비연은 또한 1963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민족적 민주주의에 큰 관심을 갖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종필을 학교로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도 견지했다. 민비연 창립 후 열린 몇 차례 세미나에서 민비연 학생들은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주의가 군부통치 아래 파시즘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비판했고, 박정희 정권의 ‘선건설 후통일’ 논리에 맞서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²⁾

민비연 조직에 대해서는 현승일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현승일 : 어, 민비연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이에요, 1년 선배들. 특히 이종률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 이종률씨는 아주 똑똑한 분이거든요. 전주고등 수석으로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사람이 똑똑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는 3학년이고 그분은 4학년인데,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이 좋다고 따라갔죠. 따라가서 그때 황성모 교수님을 모시는데, 그 모시고 한 것을 전부 4학년들이 다 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래 만들어 놓은 그분들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작스럽게 그 조직을 인수를 하게 됐죠. 네.

현승일에 따르면 민비연은 회장 밑에 총무부장, 학술부장, 예술부장, 대변인 등 간부를 두고 알음알음으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회원은 약 100여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현승일은 민비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언급을 하였다.

22) 이종률, 〈6·3사태는 ‘젊은 민족정신’의 발화였다〉 《신동아》 1994년 6월호, 561-563쪽

현승일 : 그 가끔 우리 선배들 중에서, 과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선배들 중에서, 마치 민비연이나 6.3 데모가 자기들이 예,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예, 왜곡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일이 잘되고 나니까, 영향력이 커지니까, 아 저거 우리가 다 시켜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 왜곡이 사실 많이 있고, 또 그런 오해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다만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면은 간접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뭐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어떤 지시나, 그분들의 조언에 의한 건 전혀 아니에요.

현승일은 구술 마지막에서도 일부 선배들이 자신들을 마치 배후조종한 것처럼 증언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는 특별히 4·19세대인 김정강이 각종 회고를 통해, 자신의 계획에 의해 민비연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계획대로 6·3항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²³⁾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김도현의 구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도현 : 근데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김정강씨, 이런 분들이, 뭐 3.24 이후부터 데모에 많이 뭐, 배후조종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뭐, 정보부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뭐 이래 했는데, 뭐 내가, 내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그분들을 만나기는 만났고, 뭐 좀 특별히 만난 거는 아니고 뭐 교정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만나고 하는데, 만나면 그 분들이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하고,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별로 무슨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지, 뭐 그 사람, 그 말에 딱 손뼉을 치면서, ‘야, 정말 깨달았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별로 없고, 어, 근데 그분들은 뭔가 영향을 원래 주려고 했던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실제로 뭐 영향 나 받았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4·19세대들은 자신들이 6·3항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구술에서 이영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다.²⁴⁾ 반면 6·3세대들은 4·19세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번에 구술한 4명은 모두 학내 분위기의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선배들과의 인적인 관계나 조직적 연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위의 김도현의 언급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즉 선배들

23) 김정강, 앞의 증언, 65쪽

24) 이영일, 앞의 증언

과의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고려대에서 중요한 조직은 민족사상연구회(민사회)와 민주정치사상연구회(민정회)이다. 구술자 박정훈은 민정회 출신이기 때문에 민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1962년 6월 한미행정협정시위 당시 민사회 선배들과 접촉했음을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민사회는 과거 민통련의 맥을 잇는 정경대학 내 좌파적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민정회는 정치외교학과 내 모임으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고려대에서 더 중요한 조직은 역시 정치외교학과 자체이며, 특히 구술자는 정경대 학생회장으로서 최장집과 서진영 같은 자신의 동료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다른 책에서는 이를 ‘박정훈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²⁵⁾

박정훈 사단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의활단’의 존재이다. 박정훈은 구술 도중 자신이 만든 의활단의 실체와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박정훈 : 그런데 이제, 이.. 밝혀지지 않은 거지만, 밝혀지지 않은 거지만, 의활단이라는 게 있어요...(중략)... 옳을 의자, 활동한다, 의활단이라는 게. 그게 나중에 이게 국무회의에서까지 논의가 되요. 이것을 서울대의 불꽃회처럼 잡을까냐? 말까냐?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돼...(중략)... 그런데 이 의활단이 서울 법대도 있고, 문리대에도 있었어. 우리가. 그리고 각 대학에 꼭 의활단이라는 게 있었어. 예? 그런데 거기에 내 후배 애들이 이제 박철현이, 서안정이, 그 후에 박영길이라고 해서, 이제 고대 의활단이 내려가는데, 어, 이게 이제 비밀결사야, 딱 이름도 그랬어. 이, 외부에 일체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제일 신경을 쓰고 했던 게 이제 고대 의활단이었는데, 그걸 이제 잘 얘기를 안 해...(중략)... 의식인자들, 완전히 의식인자들, 의식분자들을 모아가지고, 의활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각 대학에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 이게 나중에 6.3 데모하고 할 때는 다 움직였다고...(중략)... 아니, 그건 그냥 비밀이야. 다 숨겨져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메달을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차고 다녔는데, 서울대, 서울대도 있어, 여러 명. 각 대학에 다 있어. 의활단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네들을 전부 데모에 동원시킨거야. 내가...(중략)... 그것은 무슨 한일회담 반대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이, 뭐야. 이, 저, 뭐야. 이걸 또 뭐라 할까? 환상적이라고 할까? 뭐, 거 저 옛날 민족운동 하던 사람들이 비밀결사를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목숨 내걸고 싸우고 이러더라

25) 신동호, 1996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95-105쪽

구요. 예? 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몸 바쳐 싸운다, 뭐 이런 의식으로 만든 거야. 처음부터. 대학교 때. 응? 참 빨랐어. 그런 게.

박정훈의 주장에 따르면 의활단은 1962년에 자신이 만든 일종의 비밀결사로서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울대에도 조직원이 있었고 이들이 6·3항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 한다. 그런데 박정훈은 의활단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의활단이 아직까지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그 실체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려대 박물관에서 공개한 의활단 결의문을 보면 의활단에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도 의활단을 비밀결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로운 행동을 비타협적으로 하겠다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²⁶⁾ 박정훈은 의활단이 서울대 불꽃회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불꽃회의 성격에도 많은 논란이 있고 그 실제 자체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는 부적절해 보인다.²⁷⁾ 의활단에 대한 연구는 현재 고려대 박물관에 자료가 기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세대에서는 한국문제연구회(한문연)가 주요 조직으로 손꼽힌다. 한문연에 대한 안성혁의 구술은 다음과 같다.

안성혁 : 예, 예. 그래,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연세대학교는 또 그런 게(학생조직)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나도 그럼 이 사조직 비슷하게라도 하나를, 이 저 나를 동조하는 이념적인 그런 학생들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게 이제 그 한국문제연구회로 해서, 그, 그, 그...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학내에서, 호응을 굉장히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문제연구회, 그, 거기에 굉장히 그 우수

26) 〈의활 결의〉 1962. 12. 1.

27)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불꽃회는 서울대 문리대 내의 마르크스주의 서클로 그 인원은 5~6명에 불과했다. 서울대의 다른 단과대학이나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지방의 몇몇 대학에도 비슷한 성향의 학생들이 있었고 이들 사이에 일정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불꽃회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불꽃회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선배그룹으로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주도한 후배그룹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 우수한 후배들이 많이 모였어...(중략)...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정법대학, 정법대학 그 출신들이 이제 중심이 됐고, 또 하나는 서울고등학교 출신들이 그 제 영향으로다가 이제 많이 됐고, 또 그러다보니까 서울고등학교에서 또 학생회장 나갈라고 한 애가 이제 그 단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 이제 확장을 해갔죠. 에.

안성혁은 한문연을 서울대 민비연, 고려대 민사회, 민정회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려 했고, 실제로 한문연은 오랫동안 연세대 학생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런데 한문연의 중심은 서울고등학교 출신들이었고 학생회 선거에도 깊이 개입한 듯 보인다. 문제는 안성혁이 한문연을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이야기 한 반면, 다른 책에서는 다른 주도 학생들이 총학생회장인 안성혁을 앞세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점이다.²⁸⁾ 어쨌든 연세대 6·3항쟁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안성혁을 중심으로 총학생회와 학생운동 조직이 하나로 묶였다는 점이다. 반면 서울대는 민비연이 중심이었고 총학생회와 여러 단과대 학생회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으며, 고려대는 박정훈 사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적극적이었지만 총학생회는 소극적이었다.

4.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전개

1) 3·24시위

1964년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을 3월에 타결하기 위해 김종필을 일본에 파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항하여 야당 역시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들에게 한일회담을 반대할 것을 설득했다. 이에 1964년 3월 24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최초의 시위를 벌였다. 먼저 오후 1시30분 서울대 문리대 학생 5백여 명이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 화형식'을 갖고 가두로 진출했다. 오후 3시에는 고려대생 2천여 명이 집회를

28) 신동호, 1996 앞의 책, 126-134쪽

갖고 가두로 진출했다. 장준하·함석헌의 강연을 듣던 연세대 학생 3천여 명도 오후 4시 경 거리로 뛰어나왔다. 학생 시위에 경찰은 강경진압으로 맞섰다. 많은 학생들이 부상당하고 연행·구속당했다.

학생들의 시위는 일견 한일회담 타결이 임박한 1964년 3월 정세의 산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다. 서울대 민비연은 이미 1963년 10월경부터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준비하였다.

현승일 : 한 (1963년) 10월쯤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 내가 좀 많이 주도를 했어요.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까운 그 민비 멤버들, 뭐 김중태라든지, 김도현이라든지, 김지하라든지 이런 친구들과하고 상의를 했죠. 상의를 했는데. 이게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은 직후의 학원이 이제 겨우 좀 자유화 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민비의 의식을 대중화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서면 이 학생들이 과연 따라 나와주겠느냐, 분위기부터 먼저 조성을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 당시 장준하 선생, 서민호 선생,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을 학교에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 강연을 했어요. 그 우리는 뭐, 목표가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강연회였죠. 그렇게 해서 문리대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았죠. 했는데, 예, 겨울 방학 때.

그리고 서울대 민비연은 1963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고려대, 연세대와 연결을 시도하여 연합시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고려대의 경우 이미 1962년 한미행정협정축구시위 당시부터 연결되었던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되었고, 연세대도 김중태가 접촉을 하였다. 겨울방학을 서울서 보내며 시위를 준비한 학생들은 결국 3월 24일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현승일은 당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시위 시간이 사전 계획에 따라 조율되었다고 주장한다.

현승일 : 문리대는 12시, 고대는 1시 반, 연대는 3시. 타이밍을 우리가 그렇게 잡은 거야...(중략)... 그래서 요거를 계획대로 다 한 거예요. 음,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분산해가지고, 고대는 동쪽에 있고, 연대는 서쪽에 있고, 서울대는 중앙에 있잖아요. 이 세 군데서 터지면은 효과가 크다. 그리고 경찰들도 말이지, 분산 돼서 정신을 못 차릴 거다. 이제 그런 계획 하에서 그렇게 한 거

예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된 거예요. 문리대가 터지니까, 문리대 터졌다고, 막 병력이 이리 다 왔잖아요. 고대가 터졌다 하니까 또 그리 가고 말이지. 연대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것이 말이지, 대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언론들도 학생들이 뭐하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세 학교가 동시에 터지니까, 세 학교가 동시에 터지니 쉽잖아요. 서울대, 고대, 연대. 그리, 그 이튿날부터 막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다 튀어나왔잖아요.

고려대 박정훈과 연세대 안성혁의 주장은 이러한 현승일의 주장과 많이 다르다. 박정훈은 고려대의 경우 원래 3월 18일에 독자적으로 시위를 준비했다가 학교 측의 방해로 일단 시위를 연기했고, 그 이후 최장집이 서울대 김중태와 연결하여 3월 26일 시위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3월 24일에 먼저 나오려 해서 그날 갑작스럽게 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은 이미 1963년 겨울방학 당시 박정훈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아마도 둘 중 한 사람이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시위 양상이 현승일의 설명과 일치하고, 고려대에서 다른 학교와 연결을 박정훈보다 최장집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승일의 설명이 사실과 가깝다고 여겨진다.²⁹⁾ 또한 연세대 안성혁은 3.24 시위가 연세대가 선도적으로 준비한 독자 시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 고려대와 연세대가 직접 접촉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3학교의 연계에는 서울대 민비연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2) 4월 괴소포 사건과 학원 사찰 폭로

3월 24일 3개 대학이 물꼬를 튼 시위는 25, 26일 다른 대학으로 급속히 확산되었

29) 3·24시위 직후 현승일은 신문 인터뷰를 통해 시위 날짜를 24일로 잡은 시점이 3월 19일 저녁이라고 이야기했다.(<대학신문> 1964년 4월 2일자) 이는 당시 기록인 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9일 저녁의 결정이 서울대만의 단독 결정인지, 고려대와 연세대와도 협의한 결정인지는 불확실하다.

다.³⁰⁾ 당황한 정부는 25일 36개 대학 96명의 학생대표들을 중앙청으로 초청하여 수습회의를 가졌으나 학생들은 정부측의 수습책을 거부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나와 버렸다. 이후 시위가 계속되자 박정희 정권은 협상 타결을 위해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김종필을 3월 27일 귀국시켰다. 그리고 3월 30일 박정희는 11개 종합대학 학생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면담을 가졌다. 박정훈은 25일 정부와 학생대표의 모임에서 정부가 김종필-오히라 메모의 원본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증언했지만, 시기는 착오가 있다. 사실은 30일 면담에서 박정희가 학생대표들에게 메모 공개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다음날 38개 대학 57명의 학생대표들에게 김·오히라 메모를 비공식적으로 공개했던 것이다.³¹⁾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안성혁은 30일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안성혁 : 주로 뭐, 그... 정부 쪽의 얘기를 듣는 게 많았던 거 같아...(중략)... 지금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그 예, 박대통령이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그걸 했는지, 예. 저도 이제 그, 그 학생들 대표들의 얘기를 그저 처음에 듣는 형식으로 하고, 주로 이제 정부의 예? 지금, 이, 뭐 한일회담 해야 된다. 어떻게, 이걸 꼭 해야 된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거를, 그 정부의 이제 그 방침을, 어떤, 그 좀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중략)... 박대통령이 그날 그러더라고, “나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 내 자식이 후세에, 응? 매국노의 자식이었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나도 똑같다.” 이거야. 뭐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단호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지, 야, 내 그때 보고, 박대통령이, 새까매가지고 요만한 사람이 말이에요. 예? 어, 그 진짜 박정희는 대단한 사람이요. 예.

김종필 소환과 청와대 면담을 계기로 학생 시위는 일단 중단되었다. 그런데 고려대는 3월 24일 이후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의 사정을 박정훈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30) 6·3동지회, 2001 《6·3 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95-97쪽

31) 이광일, 1995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05쪽

박정훈 : 고대는 그 때 어떻게 됐나하면. 주먹세계가. 문영배라는 사람이 있어... (중략)... 완전히 총가다야...(중략)... 그래가지고 체육부장이 된 거야. 그런데 3월 24일 날 고대 데모를 끝나고 나니까, 나도 문영배를 잘 알지. 이제, 예? 그런 놈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25일 날 총장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랑 구자신이랑 갔어. 저, 이 유진오 총장한테. 오늘도 할꺼냐. 오늘 하겠습니다. 알았어. 희생 없도록 해. 총장한테까지 승낙을 받고 나와서 데모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영배가 학생회실에 가다들 20명을 데리고 들어왔어. 예? 가다들을. 야, 박정훈이 이 새끼 나와. 이렇게 된 거야. 아이, 새끼 소리를 차마 못하고, 나와. 거 나왔지. 카스트로 너 이 새끼 나와. 이렇게 된 거야. 개하고 나하고 둘이 앞에 세워놓고. 체육부 20명이 나를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너네들 마음대로 학생들 끌고 나가서 데모하냐. 그냥, 그래가지고 고대가 3월 25일 날 데모를 못했어요.

고려대의 경우 학생시위를 학교 운동부가 나서서 막았는데 이 때 체육부장 문영배로 대표되는 운동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각 학교의 다양한 집단들을 이용하여 학생시위를 억압하고 학원을 사찰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 YTP이다. YTP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60년 7·29총선에서 사회대중당 후보로 출마한 유병묵의 선거운동을 했던 40여 명의 학생들이 선거가 끝난 후 KKP(구국당)라는 비밀결사를 결성했는데 5·16쿠데타 직전까지 2천여명의 단원을 확보했다. 이 조직은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정보당국자와 접촉을 갖고 그 산하에 들어갔으며 MTP(문맹퇴치회)로 개명했다가 다시 YTP로 개명하여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학원을 사찰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에 지지를 보낸 가장 극단적인 학생 세력이었다.³²⁾ 이번 구술에서는 YTP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 현승일은 이전부터 학내 프락치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당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도현은 송철원이 이 문제를 폭로할 때 정보를 제공한 YTP 관련 인물의 실명을 거론했다. 아마도 정확한 진상은 당시 이 문제를 폭로한 송철원의 증언이 있어야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

박정희정권은 YTP나 운동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원을 사찰했다. 형사들이 공식적으로 학교를 드나들면서 학생과(처)와 함께 학생들의 동향을 체크했고,

32) 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겨울호, 312-313쪽

돈으로 학생들을 매수하여 학생운동 세력들을 탄압했다. 박정훈의 다음 진술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박정훈 : 예, 그렇죠.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 25시라는 술집도 있고, 이런 데를 우리가 자주 갔는데. 학사주점에 가 가지고, 친구들과하고. 데모 주도자들이예요 이게. 이제 술 한 잔 먹다가 한 친구가, 개가 프락치라고 결국 들통이 나는데, 다른 자리에 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괜히. 괜히. 그러니까 패싸움이 난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후닥닥 하고 금방 끝났어요.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밖으로 딱 나오니까 백차가 두 대가 문 앞에 딱 댔다가 우리를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차에다가. 백차가 딱 막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다 실려서 중부 경찰서로 다 끌려간 거예요.

3월 24일 시위 후 3월 말 박정훈은 시위 주도자들과 함께 술집에 들렀는데, 일행 중 한 친구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패싸움이 일어났다. 패싸움이 일어나자 즉시 경찰이 들이 닦쳤고 이 문제로 박정훈은 구속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시비를 건 사람은 중앙정보부와 선이 닿아 있었고 후에 중정에 특채되어 학원 사찰을 담당했다고 한다. 여론이 안 좋자 정부는 박정훈을 풀어주었지만 중앙정보부의 공작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월 8-11일 현승일, 박정훈, 안성혁에게 북한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괴소포가 배달된 것이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다. 박정훈의 증언에 따르면 동봉된 미화 100달러는 당시 3명의 대학등록금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으며, 이 일에 고려대 학생과장이 개입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이러한 괴소포 공작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고 현승일의 지적대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운신의 폭을 넓혀 주었다.

3)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학원 사찰과 괴소포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반감을 증폭시켰다. 처음에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를 외쳤던 학생들은 4월을 거치면서 반정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황소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열렸다. 여기에는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등 각 대학 학생과 시민 4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전까지 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 집회와 시위가 학교별로 진행된 것과 달리, 민비연 주도의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의 집회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연합집회였다. 민비연 학생들은 4월 말 이후 각 대학 투쟁위원회 학생들과 접촉하여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했다. 처음에는 5·16 군사쿠데타 3주년인 5월 16일 집회도 고려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5월 20일로 집회 날짜를 변경했다. 그리고 18일 집회 방식을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으로 결정하였다.³³⁾ 즉 학생들은 1964년 5월 박정희 정권을 상징하고 있던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 보냄으로써 극적으로 박정희 정권 반대를 표방하였던 것이다.

현승일 : 그러니까 한일회담 반대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정부로 이 운동을 이제 우리가 노출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군사정권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군사정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지지 기반이 취약하잖아요. 정통성이 결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세에 의해서, 일본이나 미국에 기대가지고 커버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면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우리를 안 따라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분위기가 익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셈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반정부로 이것을 선회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반정부 하려니까 할 수 없이 황소식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동기예요.

그런데 박정훈과 안성혁과는 달리 현승일과 김도현은 이미 3·24시위 때부터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단지 3·24 단계에서는 그것을 전면화시킬 수 없었는데, 5·20 단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분위기가 되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승일과 김도현은 모두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의 이름 앞에 ‘황소식’이라는 말을 썼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황소는 집권 공화당의 상징이었다. 현승일은 이것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33) 《대학신문》 1964년 5월 21일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도현은 더 구체적으로 ‘황소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했다.

김도현 : 어, 그거(민족적 민주주의)는 아마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다라는 생각은 그, 음, 안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나는 뭐, 허구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들이 말만 저렇게 한다라고 봤죠. 상징조작이라고 봤죠. 우리는 마 대개, 우리... 상징조작이라고 보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 자체가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 개념이 뭐다, 뭐다 이런 게 뭐, 분명하게 나와 있었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아주 쓰면 나쁘다라고 본 거는 윤보선씨 이쪽에 야당에서는 그렇게 봤고, 어, 우리는 그 말 자체는 뭐 괜찮은 말, 말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조작으로 내놓은 거다, 라고 그렇게 봤죠.

김도현은 당시 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이 표방한 민족적 민주주의를 실천의지가 없는 상징조작으로 보았지만, 완전한 허구이거나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때문에 민족적 민주주의 앞에 ‘황소식’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민족적 민주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는 1963년 사상논쟁을 통해 민족적 민주주의가 그 내용이나 실체와 상관없이 일종의 민족주의 담론으로 학생들 사이에 받아들여졌음을 반증하는 설명이다.³⁴⁾

또한 현승일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당시의 선언문에 나온 ‘반외세’, ‘반매관’, ‘반봉건’이라는 말이 자신들이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좌익으로 몰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후에 조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분명히 당시 선언문에는 ‘반외세’, ‘반매관’, ‘반봉건’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 말은 바로 김도현이 썼기 때문이다. 김도현은 선언문에 나온 ‘반외세’, ‘반매관’, ‘반봉건’에 대해 다음과 같

34)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60학번이었던 김승옥은 보수적인 야당보다 “촌티나는 박정희의 민족주의가 낫겠다”고 여겨 박정희에게 투표했고, 61학번이었던 임현영도 “휘황찬란한 단어 ‘민족적 민주주의’ 때문에 아주 황홀해서” 박정희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박정희를 찍으라고 운동했다고 한다.(김병익 외, 2002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46-48쪽) 물론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민족적 민주주의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과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 설명한다.

김도현 : 어, 그게(‘반봉건’, ‘반매관’, ‘반외세’) 이제, 그때까지는 그 우리나라에 그 봉건적 잔재가 많이 있다고 봤어요. 말하자면은 이박사, 4.19가 있기는 했지만은, 이박사, 이승만 정권이 그 봉건적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많이 그냥 유지시키고 있다, 그렇게 봤고, 어, 지금 반매관은 어, 한국의 지배적인 자본들이, 자본들이 그런 이제 관료주의, 관료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또 미국이나, 이런 미국의 이익 같은 것에 굉장히 예측이 돼 있다...(중략)... 반외세는 한국의 정치 경제에 압도적으로 미국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봤죠.

김도현은 당시 ‘반봉건’, ‘반매관’, ‘반외세’ 주장이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일단 ‘반매관’, ‘반외세’의 주 타킷은 일본이었고 미국은 그 다음이었다. 안성혁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안성혁 :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반정부적인 요소가 제일 많았죠. 그건 뭐 그건 부인 못하는 거고, 다만 그 말씀하시니까 그 반외세라고 한 거는 이제, 그 뭐, 이제 뭐 미국도 집어넣었다 그렇게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그 일본에 대한 그게 가장 그, 그 주 핵심이었고, 고 다음에 그 매관 얘기는 그 (일본의) 신식민주의 주의에 대한 반대는 확실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의미의 침략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예측화에서 가져오는 거다, 하는 걸, 전 다른 학교에서 운동, 그, 그 그 반매관을 그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 저희 연세대학교 경우에서만은 그건 분명히 그 소위 신식민주의에 대한 그 반대운동이었다,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중략)... 학생들이 고 다음에 미국도 끌어들이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뭐 미국을 끌어들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많은 학생들은 한일회담의 양보와 굴욕을 통해 일본의 식민주의가 한국 땅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경제적인 침략과 종속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와 같은 신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입장에서 ‘반매관’, ‘반외세’를 주장했던 것이다. 반면 미국에 대한 비판은 반미 감정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회담이 진행될수록 미국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었다.

박정훈 : 미국이 한국을 해방시키고 또 무슨 6.25 때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소수고, 태반은 미국이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자기네들 이익이 여기에 연계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와서 그러지 미국이 뭐 우리만 좋아해서 여기서 뭐 우리를 위해서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이 다수였어요. 실제로 그게 다수였어요. 어 너 너희들 세계 전략이고, 너희들 그 이 이 저 이 이 저 동북아 전략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리고 한일회담 문제만 해도 그래요. 한일회담마저. 미국이 뒤에서 막후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어, 가령 일본하고 한국하고 회담을 성사시켜가지고 저쪽에는 소련·중공·북한으로 연결되는 그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쪽에서 미국·한국·일본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선을 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상당히 그때 젊은 사람들이 별로 기분 좋게 생각 안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한일회담이 급진전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그런데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김도현 : 미국이 6.25때 한국을 도와주고, 어,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도와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마,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은 도와준 것도 도와준 거지만, 그것도 뭐, 한국이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줬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미국의 이익,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도 도와주고, 한국을 보호, 한국이 좋아서 도와줬다기 보다, 도와주고, 또 미국이 이익을 위해서 일본하고도 영, 그 불평등한, 그런 불평등뿐 아니라 영 과거 청산이 되지 않는 그런 협정 체결을 강요를 하고, 그렇게 봤을 거예요.

학생들은 주로 일본을 비난했지만 미국에 대한 비판 역시 강도를 더해갔다. 당시 시위 구호만 살펴봐도 시간이 지날수록(특히 1965년) 미국에 대한 비판적 구호(예: Yankee Keep Silent)가 훨씬 많아짐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식 반미 감정까지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일회담에 개입하여 일본만 편드는 미국에 대한 비판에는 민족적 분노가 담겨 있었다.³⁵⁾ ‘반봉건’, ‘반매관’, ‘반외세’의 구체적인 의미는 보다 자세한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분위기가 대학사회에 폭넓게 퍼져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한편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는 서울대와 함께, 동국대, 성균관대, 건국

35) 변영태, 〈반성할 자는 누구냐〉 《신동아》 1965년 4월호, 66-67쪽; 강원룡, 〈이대로 비준될 수 없다〉 《신동아》 1965년 8월호, 51쪽

대, 경희대 등 5개 학교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정훈은 비록 자신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장집 등 고려대 핵심 멤버들은 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박정훈 : 내가 그래도 명색이 고대에서는 주동자인데. 나하고 처음부터 의논을 같이 했으면 참여를 해. 100프로지, 참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민족적 민주주의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와서 너 참여해라, 이거는 고대 자존심 같은 게 또 그렇잖아, 응? 그래서 나는 안 가고, 내 부하들이 갔어. 갔어요, 내 직계 부하들이. 그게, 그게, 박철현이, 서안정이, 우리 정외과 1년 후배 애들이 4.19 정신은 살아있다. 크게 플래카드 들고 갔어. 가는 건 내가 다 환영이야. 다 너네들, 다야. 그러나 나는 최소한도...(중략)... 고대는 내가 대표인데, 그래도. 나는 나하고 처음부터 협의했다면 내가 가는데, 다 준비해놓고, 너 참여해라, 이거는 내가 곤란하다. 그래서 거기는 내가 안 갔고, 그, 그 서울대가 중심이 되고 동국대학이 행동대로 꼭 참여를 했는데, 고대가 갔어요. 안 간 게 아니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박정훈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지지했으며, 고려대 역시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 참여했다. 이처럼 당시 서울대와 고려대의 연계 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했지만 내용적인 동의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4) 6·3항쟁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주도한 민비연 그룹들을 사회주의 찬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검거하려 했다.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등 핵심인물은 이 때부터 도피에 들어갔다. 그러나 급격하게 고양된 운동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그동안 한일회담반대운동에 소극적이었던 각 학교 학생회들도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난국타개전국학생대책위원회에서 5월 25일 시도한 난국타개궐기대회이다. 난국타개전국학생대책위원회는 한국학생회총연합회(약칭 한학련)를 만들려 했던 각 학교 학생회장들이 만든 조직이었다. 여기에는

고려대 정경대학 학생회장 박정훈과 연세대 총학생회장 안성혁이 참여했다.

박정훈 : 정부나 중앙정보부 회유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이 총학생회장들이요, 그 완전히 의식이 있는 사람들로 다 구성 됐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이 뚜렷하다, 이걸 아니라고, 총학생회장들이 다 다 그렇냐? 그건 아니라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 주위에서 와서 얘기도 하고, 야 온건하는... 꼭 데모가 능사냐? 그것도 맞는 얘가지, 데모가 능사냐. 그래가지고, 총학생단들이, 회장단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중심을 못 잡고 많이.

안성혁 : 아,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그, 이, 학생, 그 각 학교마다 이제 학생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국적인 규모에, 그 학생회를, 연합회를 하나, 뭉뚱 그리려고, 뭉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아주 숙원, 그 어느 학교나 그게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중략)... 어,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이 소위 사쿠라들 때문에 그게 안된 거예요. 왜, 이제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저놈은 저건 이제, 저건 이제, 앤티니까, 박정희 저건 아주, 반, 반대 저거니까, 재가 주장하는 거는 들으면 안 된다, 이제 그 각 대학에. 이 그러면 이걸 뭐, 좀 안된 얘이지만 이제, 그 2,3류 대학에 그 학생회 선배들하고, 그 개네들 하고 유대가 잘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회 개네들, 회장들이 그 선배들, 그 말, 말을 거역을 못한다고. 어, 그러니까 이제 벌써 개네들한테는 벌써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와 같이 당시 각 학교 학생회는 대체로 한일회담반대운동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정부측과 모종의 관련을 맺고 한일회담반대운동을 방해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성, 반민족성이 분명해지고 학생과 정부의 충돌이 격화되자 학생회도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5월 25·26일 과거 한학련을 조직하려 했던 학생회들이 힘을 모아 난국타개학생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난국타개궐기대회를 가졌던 것이다. 비록 난국타개궐기대회는 몇몇 학교에서 학내 집회 정도로 끝나고 말았지만, 중요한 것은 5월 25일 단계에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학생회마저 운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당시 운동의 열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운동의 고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5월 30일부터 시작된 서울대 단식농성이었다.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 등 지도부가 모두 도피한 상태에서 그동안 소

극적이었던 문리대 학생회가 민비연과 손을 잡았다. 이는 박정희 반대를 분명히 한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성격이 많은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김지하의 아이디어라고 전해지는 집단 단식농성은 새로운 투쟁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³⁶⁾

그런데 박정훈은 5월 25일 당시 난국타개궐기대회가 학내집회로 진행된 이유가, 1주일의 유예기간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즉,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1주일의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1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감에도 학생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에 고려대에서는 6월 2일 박정희 하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의 상황을 박정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박정훈 : 어떻게 됐나하면, 진행되는 게, 정부가 좀 솔직하질 못했고, 어 학생 세력 내부를 전부 이간질 시키고, 예? 지도부, 총학생회장들을 전부 매수하고 들고, 이런 이 이 정부의 행위가 괴씸한 건 사실이었고, 아주 그렇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5월 25일 날 난국타개 대학생 총궐기 할 때, 일주일간에 유예를 뒀는데, 그게 6월 2일 이에요. 5월 25일 이니까, 일주일동안 딱 끝나고 나면 6월 2일 날 해야 되는데, 총학생회장들이 미동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고대에서 6월 1일 날, 1일 날 저녁에 소집을 한 거예요...(중략)... 6월 2일 날은 갑자기 된 거야. 우리가. 왜, 일주일간 유예기간은 끝났다 이거지. 5월 25일 날 우리 행동 강령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게 나와. 그게 나와요.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둔다. 정부에서 여기에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으면은. 우리 기대에 저, 이, 안 되면은, 충족이 안 되고 뭐 하면, 결정적인 데모를 한다. 이게 나온다니까, 5월 25일...(중략)... 그러면 6월 2일 날 해야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5월 말일 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중략)... 6월 1일 날 분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영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기대 이하로 안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6월 1일 날 갑자기 소집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자. 그리고 따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6월 1일 날 갑자기 고대에서 딱 소집을 해가지고 구국투쟁 만들고, 구호 만들고 해서 6월 2일 날 치고 나가고, 6월 3일 날 확 따라 나온 거죠. 이제.

박정훈의 증언은 6월 3일에 어떻게 대규모 시위가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36) 신동호, 1996 앞의 책, 67-70쪽

될 수 있다. 즉, 많은 학교 학생회가 주축이 된 난국타개궐기대회에서 정한 1주일의 유예가 6·3항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6.3항쟁 당시 각 학교 별로 조직적인 연결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구술자 모두 당시 조직적인 연계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고조된 운동의 열기가 6월 2일 고려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서 재개된 시위를 계기로 1주일 유예라는 벽을 넘어서 한꺼번에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왔다는 얘기다. 이는 6·3항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6월 2일 시위에 자극받은 학생들은 다음날인 3일 박정희 정권 타도를 목표로 전면적인 항쟁에 돌입했다. 이미 계엄 선포설이 나돌고 있었으나 3·24 학생 시위 이래 운동의 기세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학생들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6월 3일 비가 쏟아지고 있었음에도 서울시내에서만 약 1만2천여 명의 학생들이 제각기 교내에서 ‘박정희·김종필 민생고 화형식’, ‘5·16 피고 모의재판’ 등 행사와 성토회를 연 다음 스크럼을 짜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자 각 대학 앞 경찰 저지선은 쉽게 뚫렸다. 그동안 다양했던 시위 구호는 “박정희 하야”로 수렴되었다.³⁷⁾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을 격려했고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 항의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학생 시위에 합세하기도 했다.

청와대를 압박하며 하루 종일 격렬한 가두시위가 계속되자 6월 3일 밤 9시 50분, 박정희 정권은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투입된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청와대를 포위한 시위대를 세종로 방면으로 압박하면서 해산 작전에 들어갔고, 자정 무렵 시위대는 완전히 해산하였다.³⁸⁾ 6·3 항쟁으로 체포된 학생과 시민이 1천2백 명이 넘었고 그 중 91명이 구속되었다. 학생 부상자도 2백여 명이 되었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에도 경희대 학생 2백여 명이 시위를 시도하다 해산되었으며, 계엄령 선포되지 않은 지방 대학에서도 소규모 시위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3.24 학생 시위 이후 약 2달 반을 지속하던 1964년 한일협

37)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민비연 김중태는 6월 3일 서울대 문리대 단식 학생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후 “우리의 투쟁은 이제 한일회담 반대, 5·16 부정, 현정부 반대 등 3단계를 거쳐 민족혁명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대학신문> 1964년 6월 4일자)

38) 이광일, 1995 앞의 논문, 116-1117쪽

정 반대운동은 계엄령 선포 이후 물리적 탄압과 처벌로 인해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울대 민비연의 현승일과 김도현은 이러한 6·3항쟁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현승일 : 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결국 계엄이 났지, 사실 계엄을 선포 안 할 수도 있지,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엄을 찬스를 보고 있었던 거지. 언제 계엄을 할 건가 했다가 한 거죠.

김도현 : 그때, 형, 저 유치장 안에서 얘기를 죽 듣고 그랬는데, 나는 사실 그거는 조금 뭐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은 좀 당국에서 계엄을 앞당기기 위해가지고 좀 데모를 시키기까지는 뭇 했겠지만은, 좀 데모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중략)... 나도 다른 대학 학생들하고 몇 번의 접촉도 있고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어, 당국하고 선이 닿아 있다라는 그런 느낌에 그 그걸 가진 사람도 몇이 있어요.

현승일은 5·20 직후 운동의 열기가 고조된 것에는 정부의 공작도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운동의 열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도피 중이던 자신과 김도현, 김중태가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운동의 열기는 그들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김도현은 당시 학생운동에 가담한 일부 학생들이 정부의 프락치라고 보았고, 이들로 인해 시위가 격화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는 6·3항쟁이 5·25난국타개궐기대회에서 결의한 '1주일 유예'와 관련이 있고, 난국타개궐기대회를 기획한 각 대학 학생회들 중 일부가 정부와 선이 닿아 있다는 사실과 연결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또한 이날 시위 당시 경찰 저지선이 너무 쉽게 뚫리고 최루탄마저 바닥이 났다는 사실은, 정부가 이날 시위를 유도하여 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심을 갖도록 만든다. 이와 관련해서 박정훈은 자신이 선배 박상훈으로부터 '친위쿠데타'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당시 박정희 정권이 시위 진압을 위해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5. 1965년 한일회담반대운동과 그 이후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은 6·3항쟁 직후 선포된 계엄령에 의해 강제로 종료되었다. 항쟁을 주도했던 구술자 4명 가운데 도피한 박정훈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내란죄로 기소된 후 1964년 말 석방되었다. 그 후 박정훈, 안성혁은 1964년까지만 학교에 다니다 졸업하고, 김도현은 학교에서 재적되었으며, 현승일은 재적 후 복적하여 1966년까지 학교에 다녔다. 이들 중 다음해에 재개된 1965년 한일회담반대운동에 계속 참여한 사람은 박정훈과 김도현이다. 그러나 박정훈은 1965년 4·13 시위까지는 관여하였지만 곧 체포되어 군에 강제로 입대했다. 김도현은 조금 더 오래 1965년 운동에 관여하였다.

김도현 : 65년도에는 이제 그 우리가 하, 하는 대신에, 그 한 학년 위에, 우린 우리는 벌써 그때 졸업학년이 돼, 졸업이, 그 65년이 되면 졸업이 됐거든, 정상적으로 하면, 나는 졸업을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 학생들한테 이제 데모를, 뭐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한일협정, 그 때는 이제 비준반대가 되지요. 비준반대 투쟁을 하는 거를, 어, 많이 관계를 했죠. 많이 관계를 했는데. 주로 이제 무슨 거, 성명서 같은 거 이런 거 내면은, 그거를 이제 언론하고 연결시켜주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김원기씨, 동아일보에 있던 김원기씨,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는 권중... 뭐라고 시경 캡이 있었는데, 그런 뭐, 언론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언론에 잘 보도되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서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에, 제일 이제 저거 했던 거는, (웃음) 나중에 그게 다시 이제 또 우리가 붙잡혀 들어갔는데, 김중태, 최혜성이, 뭐 저거 송철원이, 박재일이, 이렇게 붙잡혀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안 잡혔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각자 하나씩 맡았어요. 아주, 그래서 나는, 내가 이화대학에, 나중에 총장이 된 신춘자, 그게 나중에 이름이 신인령으로 바뀌었더구만, 신춘자하고 내가 자주 만나서 이것저것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아마, 김중태는 누구, 진민자를 만났던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또 저 법과대학에 이영희라고 나중에 여기 여의도 연구소장한 저 노동법 공부한 인하대학교 교수인 친구, 그 친구가 65년도에 많이 했는데, 그런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김도현의 증언에 따르면 1964년 6·3항쟁을 주도했던 선배 그룹들은 1965년 한일

회담반대운동을 주도하던 후배들과 자주 접촉하고 그들과 운동 전반에 대해 상의했다고 한다. 후배들을 언론과 연결시켜 주는 것도 선배들의 역할이었다. 이 때는 개별 대학의 울타리를 뛰어 넘는 연결이 있었다. 하지만 선배 그룹이 어떤 조직의 끈으로 묶이지는 않았고 후배들에게 운동의 방향이나 전략·전술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지문과 조력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 김도현은 후에 폭탄을 제조했다는 혐의로 제2차 민비연 사건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

이번 구술에는 1965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년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2년에 걸친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조인되었고, 8월 26일 위수령 이후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학생시위도 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패배한 투쟁이었다. 한일회담반대운동이 좌절된 후 대학의 분위기를 1966년 대학에 복학했던 현승일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현승일 : 패배감이 짙었죠, 굉장했죠. 뭐 ‘눈을 감고 걸어라’는 노래 아세요?... (중략)... 눈을~ 감고 걸어도(노래), 뭐, 보이는 것은, 뭐 허무한 얼굴, 하는 것 있잖아...(중략)... 그것이 6.3 이후의 그 대학가의 노래였어요. 아주 그 허탈한, 패배감이 지배적이죠. 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대학생들은 허탈한 패배감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대표적인 것이 민족문화, 즉 민속에 대한 관심이었다.

김도현 : 어, 뭐, 내가 잘은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 데모의 영향이 학생들의 문화를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어, 뭐, 예를 들어서 그 데모에, 그냥 데모만 한 게 아니라 뭐 탈춤이니 이런 게 도입이 되고, 그거는 난 좀 우리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 심우성씨를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심우성씨... 백기완씨를 통해서 심우성씨를 알아가지고 심우성씨가 이제 아마 그 학생들 사회에 그 탈춤을 좀 전파를 했고, 그게 데모에도 저, 이 활용이 됐고, 그게 아마 그 뒤에 이, 저 남사당, 또 탈춤, 뭐 국악을 대중화 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또 그런 문화가, 그런, 그때만 해도 뭐, 학생들은 미국놈 욕은 했지만은 노래라는 거는 맨 뭐, 뼈빠빠틀라니, 뭐, 크, 무슨 뭐, 뭐지, 뭐, 크레이지 보이니 뭐, 이런 거 밖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많은 민족적인 저, 그런 게 저 들어갔죠. 예.

비록 한일회담반대운동은 실패하였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한번 고양된 민족주의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민족주의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민속과 같은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입장은 보다 분명한 분화를 보인다.

김도현 :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이 사실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방향이 처음부터 그렇게 잡혀있었던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오히려 그 굉장히 자립적인 그런 것을 박희범씨나 뭐니, 꾸렸다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개방적인 걸로 바뀌고 무역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은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학생들은 아마 거의 비판적이었을 거예요. 비판적, 내지 냉소적이었죠...(중략)... 경제 성장은 훨씬 그 뒤의 일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이 본 궤도에 들어간 거는 박정희 정권의 두 번째 임기부터였다고 봐야 됩니다.

한일회담반대운동이 한창인 시점까지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때문에 자립경제를 지향했던 학생들은 박정희의 대외의존적, 종속적 자본축적에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6. 맺음말 - 연구의 결론, 성과, 한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4·19나 6·3항쟁 당시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관심은 높았던 이유는 산업화의 부진, 사회·문화의 미분화와 관련이 있다.
- ② 6·3항쟁 당시 대학생들은 제3세계 민족주의에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쿠바

혁명을 다룬 《리슨 양키》는 당시 대학생들의 필독서였다.

- ③ 1962년 6월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각각 일어났던 한미행정협정촉구시위는 사전에 상호 조율이 되어 있었다. 당시 시위 주도 학생들은 6·3항쟁 때도 운동을 주도하면서 상호 연계를 모색했다.
- ④ 몇몇 4·19세대들은 자신들이 6·3항쟁 주도자들을 배후에서 지휘했다고 주장하지만, 6·3항쟁 주도자들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 ⑤ 1962년 고려대를 중심으로 ‘의활단’이라는 비밀결사가 만들어졌는데, ‘의활단’ 멤버들이 훗날 고려대 6·3항쟁을 주도하였다.
- ⑥ 1964년 6·3항쟁의 시작을 알린 3·24시위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시위를 벌인 것은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었다.
- ⑦ 당시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이용하여 학원을 사찰했는데, 서울대에서는 YTP와 같은 학생단체를, 고려대에서는 운동부를 주로 이용했다.
- ⑧ 서울대에서 열린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때 고려대도 적극 가담하였으며, 당시 선언문에 나온 ‘반봉건’, ‘반외세’, ‘반매관’의 이념이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 ⑨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당시 민족적 민주주의 앞에 공화당을 상징하는 ‘황소식’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넣은 것은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었다.
- ⑩ 각 대학 학생회는 5·25난국타개궐기대회를 벌이면서 대규모 시위를 1주일 유예했고, 실제 1주일 후 고려대의 선도적 시위를 계기로 6·3항쟁이라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 ⑪ 그러나 6·3항쟁의 여러 정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6·3항쟁은 박정희 정권이 계엄선포를 위해 유도한 측면이 있고, 당시 일부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 ⑫ 1964년 6·3항쟁을 주도한 학생들은 처벌과 졸업으로 인해 1965년 한일회담반대운동에는 대부분 관여하지 않았다. 단 일부 학생들은 1965년 당시 주도 학

생들과 관계를 맺었다.

- ⑬ 1960년대 초부터 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못했고 1964-65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을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 ⑭ 1964-65년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실패는 학생들에게 허탈한 패배감을 안겨줬지만, 고양된 민족주의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민속과 같은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6·3항쟁의 전개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새롭게 밝혀 낸 것이다. 학생들이 제3세계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서 《리슨 양키》가 필독서였다는 점, 4·19세대 선배들이 6·3항쟁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 1962년 고려대를 중심으로 ‘의활단’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이들이 뒤에 6·3항쟁을 주도했다는 점, 3·24 당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시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계획 하에 시차를 두고 시위를 벌였다는 점, 5·2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당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고려대가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반봉건’, ‘반외세’, ‘반매관’의 이념이 일본 신식민주의 비판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점, 5·25 난국타개궐기대회에서 결의한 ‘1주일 유예’가 6·3항쟁으로 이어졌다는 점, 6·3항쟁이 박정희 정권의 계엄 선포를 위해 유도된 의혹이 있다는 점, 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 6·3항쟁 이후 1960년대 후반 학생들의 민족주의는 민속과 같은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는 점 등이다. 구술자들이 6·3항쟁을 선도했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 만큼, 이들 구술의 자료적 가치는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술 대상이 4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이다. 6·3항쟁에 참여한 대학은 매우 많으며 대학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 했으나 여전히 빈 부분이 많다. 구술자들의 기억을 100%로 믿을 수 없다는 점도 큰 한계이다. 이미 40년 이상 지난 일들을, 그리고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던 일들을 정확히 기

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구술자들이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기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각색하여 기억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무엇보다 항쟁을 주도한 구술자들의 생각을 대다수 학생들의 생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6·3항쟁의 전개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일조했지만, 이것만으로 6·3항쟁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술 채록과 자료 발굴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박정훈의 증언(오제연, 코리아나호텔 3층 아리랑, 2007. 5. 23)

현승일의 증언(오제연, 현승일 자택, 2007. 5. 26)

안성혁의 증언(오제연, 안성혁 자택, 2007. 5. 28)

김도현의 증언(오제연, 강서구청 구청장실, 2007. 6. 19)

김정강의 증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황건의 증언(한찬욱, 4월혁명회 사무실, 2003. 8. 20)

이영일의 증언(오제연, 한중문화협회, 2003. 8. 29)

김시현, 정순택, 홍갑기, 이홍길, 박석무, 전홍준, 정동년의 증언(김정길, 광주 그랜드 호텔, 2003. 9. 13)

《고대신문》, 《대학신문》, 《연세춘추》

강원룡, 〈이대로 비준될 수 없다〉 《신동아》 1965년 8월호

권영기, 〈신진회에서 민통련까지〉 《월간조선》 1984년 4월호

김원기, 〈YTP(靑思會)〉 《신동아》 1964년 10월호

변영태, 〈반성할 자는 누구냐〉 《신동아》 1965년 4월호

이종률, 〈6·3사태는 ‘젊은 민족정신’의 발화였다〉 《신동아》 1994년 6월호

-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기선, 2005 《한일회담반대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동춘·박태순, 1991 《1960년대 사회운동》, 까치
- 류영렬, 1995 〈육·삼학생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 88, 한국사연구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진희, 2003 〈한·일협정 체결과 ‘지역통합전략’의 현실화〉 《역사와 현실》 50, 한국역사연구회
-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2006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 서중석, 〈6·3사태-64년 봄의 한일회담반대시위〉 《신동아》 1985년 6월호
- 서중석, 1997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 역사비평사
- 신동호, 1996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 예문
- 오오타 오사무, 2001 〈한국에서의 한일조약 반대운동의 논리〉 《역사연구》 9, 역사학연구소
- 오제연, 2005 〈평화선과 한일협정〉 《역사문제연구》 14, 역사비평사
- 오제연, 2007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기억과 전망》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6·3동지회, 2001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 이광일, 1995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 이도성, 1995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한송
- 이재오, 1984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 이종오, 1988 〈반제반일민족주의와 6·3운동〉 《역사비평》 1, 역사문제연구소
- 이종원, 1995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 李鍾元, 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 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겨울호
- 전상인, 1992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사회·한국사의 인식〉 《한국과 국제정치》 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정용욱, 1997 〈미·소의 대한정책과 군정연구〉 《한국사론》 27, 국사편찬위원회
- 허버트 P. 빅스, 1984 〈지역통합전략-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의 한국과 일본〉 《1960년대》, 거름
- 홍석률, 1995 〈굴욕외교 반대투쟁과 6·3운동〉 《근현대사강좌》 6, 한국현대사연구회
- 홍석률, 2004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 Bruce Cumings, 1987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 and Political Consequenc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 Bruce Cumings, 1988 “Power and plenty in North-East Asia : The Sources of US policy and contemporary conflict” *Security and Arms Control in the North Pacific*

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 이승만 정부와 그 유제

김 서 중

| 목 차 |

머리말

1. 보수 우익 언론으로의 재편과정
 - 1) 미군정의 법적인 통제의 변화
 - 2) 미군정의 언론시설의 귀속재산 처리
2. 1950년대 전반의 언론
 - 1) 전시 상황 속의 언론의 현실
 - 2) 법적 통제장치 마련 시도와 반발
 - 3) 각종 필화와 언론인 탄압
3. 1950년대 후반의 언론
 - 1) 정치적 통제의 강화와 정론지적 언론의 저항
 - 2) 언론통제법 개정과 언론계의 반발
 - 3) 경향신문 폐간과 언론인 탄압 사건들
4. 민족일보 사건
 - 1) 민주당 정부의 한계
 - 2) 민족일보의 창간과 폐간

<참고문헌>

머리말

1950년대 언론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찍을 만하다. 하지만 분명 언론에 대한 정권의 통제는 존재했으며, 사안별로, 단발적으로 언론계의 반발은 존재했고, 희생(자)도 발생했다. 이것들은 결국 언론민주화 발전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1950년대 언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950년대 언론에 대한 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언론의 소유관계, 언론의 성향 그리고 이 전체 아래에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 등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 요인들은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세력 재편의 결과물들인 것이다. 따라서 미군정 시기와 정부수립 초기에 언론이 어떻게 재편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1. 보수 우익 언론으로의 재편과정

1) 미군정의 법적인 통제의 변화

제1공화국 당시 언론 현실은 좌익 언론은 배제되면서 보수 우익언론으로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미군정에 의해 좌익이 배제되면서 보수 우익이 성장하게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미군정기의 언론 상황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좌우익 언론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좌우익들은 선전의 도구로서 많은 신문들을 창간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좌우익의 대립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군정이 진주 초기에 보인 언

론 자유의 보장 언급에서 비롯되었다¹⁾. 그러나 미소 분할 점령이라는 당시의 정세로 보면 명분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²⁾이다.

미군정 초기 정책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발행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미군정은 1945년 10월 8일 미군정 법령 11호로 일제시대의 악법들을 폐지하면서도 언론탄압의 대표적 악법인 광무신문지법을 포함시키지 않아 이후 언론통제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어지는 미군정법령 19호 제 5조는 ‘신문 및 기타 출판물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등기제’로 바꾸어 일제시대의 허가제를 폐지하는 것³⁾이지만 동시에 등기를 위해 등기 납본과 재정명세서까지를 제출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시 언론계 실정에 어두웠던 미군정이 언론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즉 미군정의 언론통제정책의 ‘준비작업’이었다⁴⁾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록 언론계의 반발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군정의 언론 통제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군정 법령 72호를 언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은 주둔군에 의하여 해산, 불법 선언을 받거나 주둔군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의 운동을 원조하는 인쇄물, 서적의 발행, 유포 또는 이러한 내용을 선전, 유포하는 물건의 소지행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인쇄물, 등사물 서적의 발행, 전입, 유포행위와 비방물의 발행, 유포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⁵⁾. 이 법령에 대해 당시 언론계뿐만 아니라 각계의 반발이 있자 시행은 보류되었지만 미군정의 언론 통제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미군정의 통제 의도는 미군정 법령 88호(1946년 5월 29일 제정)로 명확히 드러났다. 미군정 법령 88호는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를

1) 정진석, 1992, <한국의 인쇄매체>, 《한국의 언론 II》, 한국언론연구원, 45쪽

2) 박용규, 1988,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5쪽

3) 정진석, 1992, <한국의 인쇄매체>, 《한국의 언론 II》, 한국언론연구원, 45-6쪽

4) 송건호, 1984, <미군정시대의 언론과 그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연구》 제2집, 한길사, 528-9쪽

5) 박용규, 1988,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42쪽

규정한 법으로서 영업활동의 허가뿐만 아니라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이 법령의 제정 이유로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용지 부족을 명분으로 제시하였으나 이후 좌익언론이 일체 허가되지 않았던 반면, 미군정의 홍보지였던 주간신보(1945년 10월 16일 창간)나 농민주보(1945년 12월 17일 창간)가 80만부 정도까지 발행했다는 점에서 용지난은 적절한 명분에 불과하였고 좌익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더욱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미군정의 대 언론정책은 정기간행물의 허가정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보부령 1호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공보부령 1호는 1947년 3월 26일 이후로 신규허가를 중지하고 기존의 허가된 간행물도 1947년 4월 20일 이내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자동으로 취소하겠으며, 발행이 이루어진 경우도 일간을 10일 주간은 3주일, 월간은 3개월 이상 발행을 안하는 경우 허가를 자동으로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이후 더욱 강한 언론통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⁶⁾하기는 하였으나 미군정 법령 88호는 정부수립 이후에도 언론통제를 위해 적극 사용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군정의 언론 정책은 법적인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의 보장에서 통제로 나아갔다. 법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배제되어 가는 언론들이 대체로 좌익 성향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들은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좌익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미군정의 언론시설의 귀속재산 처리

미군정은 남한 진주 후 사유재산도 귀속재산으로 접수하였는데⁷⁾ 언론사 시설의

6) 예를 들면 1947년 9월 19일 미군정의 요구로 입법의원에서는 144차 회의에서 미군정 법령 88호를 대체할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법'을 통과시킨다. 이 법률은 미군정 법령 88호와 비교하여 무엇보다도 허가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6조 4항: 범죄 또는 국가의 법률질서의 파괴를 선동하거나 기타 허위의 사실을 유도하여 민심을 현혹케 할 때), 벌칙을 구체화하였다(8조). 그러나 이는 통과가 되었으나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경우도 중요산업으로 분류하여 모든 시설을 접수하였다. 미군정은 미군정의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서 언론의 좌경화 내지는 진보주의적 색채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즉 신문사, 방송국, 통신사와 인쇄소 시설 등 언론사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한민당, 독촉, 한독당 등의 보수우익세력에게만 위임관리 및 불하를 해주었는데, 특히 다른 귀속재산들과 달리 대부분의 언론관계 시설들은 접수 직후에 관리인을 선정하였다⁸⁾.

구체적인 예를 보면 매일신보의 경우 해방이 되자 사원들이 자치위원회를 결성하여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제호를 바꾸어 신문을 발행하려 하였으나 일본군의 제지로 실패하고 매일신보로 발행을 하였다. 그러다가 1946년 10월 2일 미군정에 의해 접수되어 한국인 주주들의 주도하에 경영진을 구성하였으나 친일파가 끼어 있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여 인사가 좌절되자 미군정은 재산 조사라는 명목으로 정간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간하였으며, 서울신문의 인쇄시설은 우익 성향의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경성일보의 경우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일본군에 의해 해산되고, 미군정이 접수하였다. 그 후 이상철이 관리인이 되어 일인들의 손으로 운영되다가 강영수, 강둔윤의 손을 거쳐 1945년 12월 12일 종간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동아일보의 발행에 이용되기도 하고 1946년 3월 6일 부터는 관리인이 된 방응모에 의해 조선일보를 발행하기도 하다가 안재홍의 한성일보를 발행하는데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극우지인 대동일보의 경우도 미군정의 귀속재산인 인쇄소를 이용하여 발행하였다. 즉 우익 계열의 신문들은 미군정의 양해 하에 미군정의 귀속재산을 이용하여 신문을 발행하였다.

반면, 좌익계열의 언론들은 발행 정지 또는 발행취소 되면서 인쇄시설이 미군정에 접수되고 이어 이 인쇄시설은 우익계열에 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⁹⁾ 그럼

7) 그 대상은 중요산업으로 인정되는 것, 일본인 소유자가 사라져 버린 것, 세금지불 능력이 없는 것 등이었다고 한다(中尾美知子, 1984, 〈해방과 전평 노동운동〉, 《한국 자본주의와 임금노동》, 화다, 207쪽)

8) 송건호, 1984, 〈미군정시대의 언론과 그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연구》 제2집, 한길사, 524쪽

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미군정이 관리하던 인쇄시설은 그 관리인에게 그대로 넘겨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언론사 시설 접수 및 처리는 당시 출판노조가 좌익의 성향을 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익지들의 영향력이 증대하게 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더욱 전술한대로 법적인 통제를 통해서 좌익언론의 활동은 위축되고 취약했던 우익언론이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인쇄시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이후 보수적 한국언론의 물적 기반을 마련해 준 정책이었다¹⁰⁾.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언론정책 7개항¹¹⁾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취약한 정권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취해진 첫 번째 언론통제 정책이었다. 그러나 조항들이 의미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형식상의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내용상으로는 용공, 반미적 성격의 기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 진보를 내세우고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역시 같은 해 9월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제일신문, 조선중앙일보, 세계일보가 무더기로 정간되고 1949년에는 국제신문과 수도신문이 폐간되었으며, 서울신문¹²⁾은 정간된 후 이승만진용으로 개편되었다는 사실들¹³⁾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그런데 법제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중앙일보와 세계일보의 정간처분은

9) 진보적 성향을 띠었던 중앙신문, 현대일보는 발행정지 처분을 당하고 난후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우익진영인사로 하여금 재발간하도록 하고, 조선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와 당선 전물을 찍어내던 조선정판사는 위폐사건으로 미군정에 접수되고 난후 천주교 계열의 경향신문 제작에 사용되도록 전용되고 만다.

10) 박용규, 1988,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36쪽

11) 정진석, 1991, <한국언론연표>, 《한국의언론 I》, 449쪽, 언론정책 7개항은 ①대한민국의 국시와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②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③공산당과 이북 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옹호하는 기사 ④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⑤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시를 손상하는 기사 ⑥자극적 논조와 보도로써 민심을 교한 험란케 하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⑦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을 신문기사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2) 서울신문은, 매일신보가 미군정이 접수한 일본인 소유주식(48.8%)을 돌려달라는 자치위원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에 넘김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진용으로 재편(이때부터 사실상의 정부기관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 유재천, 1991, <한국언론의 생성과 발전과정>, 《한국의 언론 I》, 한국언론연구원, 49쪽

‘광무신문지법’ 저축을 이유로 들었으며, 서울신문에 대한 정간처분은 미군정 법령 88호 제5조 다항을 원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일제의 잔재인 광무신문지법을 미군정이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미군정이 좌익 소멸 정책을 위해 언론통제법인 미군정 법령 88호를 제정함으로써 정부수립 후 이러한 법률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¹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초기의 정책 시행의 결과는 좌익 언론의 배제와 우익언론의 재편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독단적 정치 운영으로 한민당을 배제하면서 보수 우익으로 재편된 정치세력 관계가 다시 보수 우익 정당 사이의 대립으로 변모함과 동시에, 언론도 소수의 친정부적 성향의 언론과 다수의 야당 성향의 언론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이러한 대립구도로 인해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 1950년대 전반의 언론

6·25 전쟁으로 사회전체가 평시와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언론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있어 왔던 일이지만 정부는 언론규제 입법 시도와 더불어 언론을 정·폐간 등으로 압박했다. 심지어는 언론사 테러 사건도 일어나고, 언론인 구속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 전시 상황 속의 언론의 현실

6·25 전쟁으로 인해 신문사의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언론들은 피란을 가고, 서울 수복 시까지 서울에서는 공산당이 찍어내는 해방일보와 조선인민보만이 발행되었다.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큰 신문들까지도 제대로 신문 발행을 하기가

14)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80-83쪽

어려웠다. 서울 수복 이후 간신히 활자를 찾아내거나 인쇄시설을 빌려 타블로이드판 2면 신문을 찍어내었다.

이런 순간에도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보처장 김활란은 10월 9일 일간신문을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내용은 중앙지를 네 개로, 지방지는 각 도 단위로 하나 또는 두 개로 정리하겠다는 것이었다¹⁵⁾. 그 와중에도 국군을 따라 평양까지 간 언론인들은 국방부 정훈국 기관지인 평양일보와 민간지에 해당하는 서북경향신문, 합동신문, 유엔군 산하의 평양신문, 그리고 육군 정훈감실에서 직접 발행하는 승리일보 등을 발행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1951년 1·4 후퇴이후에는 부산에서 속간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미 부산에는 국제신보, 자유민보, 부산일보, 민주신보 등 4개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는데 부산일보는 성조지를 인쇄하고 있었고, 자유민보는 공장 시설이 빈약했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민주신보의 도움을 받아 속간했고, 서울신문은 국제신보의 시설을 이용했다. 이때 정부는 동아일보를 탄압하기 위해 민주신보에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의 인쇄를 맡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따라 1951년 9월부터는 부산일보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¹⁶⁾. 연합신문은 일반 인쇄공장을 이용했고, 경향신문은 기톨릭교회 인쇄공장을 이용해서 속간했다. 이 당시는 전시 상황이라서 인력, 시설, 용지 부족 상황으로 인해 타블로이드판 2면에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당시 신문이 내놓는 기사라는 것들이 전황보도 정도였으며 특별한 비판, 의견 기사가 있기 어려웠다. 일종의 발표 저널리즘이었다¹⁷⁾.

문제는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는 사장 방응모가 납북되는 바람에 경영자를 잃고, 최초 피란 시 이것을 빌미로 정부가 속간을 허용하지 않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발행인은 방응모로 유지하되 편집인을 최용진으로 하기로 타협을 보고나서야 서울 수복 후 10월 23일 속간을 낼 수 있었다¹⁸⁾. 방응모의 실종을

15) 송건호, 2000, <이승만 정권하의 언론>, 《한국언론바로보기》, 다섯수레, 208-209쪽

16) 김민환, 2002, 《한국언론사》 나남 사회비평신서 61 개정판, 411쪽

17) 박권상,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7. 21

18)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나남 사회비평신서61, 394쪽

빌미로 속간을 불허했지만 당시 세인들은 한독당과 관계가 있었던 조선일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이었다고 평가하였다.

6·25 전쟁 당시 언론이 발표 저널리즘에 불과했던 것은 물적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군의 통제 때문이기도 했다. 수백 명의 외국 종군기자가 취재활동을 벌였던 한국전쟁에 대해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뉴스릴 회사와 TV 네트워크들에게 필름을 무료로 공급할 것을 지시하고, 전선을 시찰할 때도 육군통신대의 촬영기사를 대동할 정도로 언론을 활용하였지만, 종군기자들의 독자적인 취재는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영어도 약한 한국 기자들은 UN 사령부가 내주는 기사의 번역 게재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¹⁹⁾ UN사령부는 한국기자들에게는 언어 소통을 이유로 취재허가증을 여간해서 내주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 기자들은 전선에 접근할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의 성인기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이 수원에서 1951년 3월 중순부터 라디오 한 대를 유일한 정보원으로 진중 신문을 발행했지만²⁰⁾, 이것은 UN 사령부의 정책에 따른 통제와 다른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언론들은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면서 정부와 조응 또는 대립관계를 보였다. 서울신문과 연합신문은 여당지 구실을 했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야당적 색채가 뚜렷했다. 동아일보는 부산 천도 전부터 반 이승만 색채가 뚜렷했는데, 이승만 정부 조각에서 한민당 세력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민당 대변지 역할을 했던 이때부터 친 이승만 논조에서 반 이승만 논조로 변했고, 가톨릭 신자인 장면이 야당으로 선회하면서 경향신문도 이승만 정권의 비판지로 기울었다²¹⁾. 이러한 정부와 언론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좌익 진보지에 대한 탄압에서 우익 보수지(야당지)에 대한 탄압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9) 김진배,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6. 19

20) 송건호, 2000, <이승만 정권하의 언론>, 《한국언론바로보기》, 다섯수레, 211쪽

21)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91쪽

2) 법적 통제장치 마련 시도와 반발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이미 언론탄압을 위한 입법을 시도했었다. 정부 수립 후 1948년 12월 6일 국무회의는 신문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보처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기초한 것으로 법제처가 최종안을 만든 것이었다. 전문 32조로 되어 있었던 이 법안은 언론계의 반대 여론이 심해 내용을 수정하여 12월 말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역시 이에 대해서도 언론계의 반발이 커서 국회로 넘기지 않고 폐기하였다²²⁾.

전쟁기간에도 이승만 정부는 1952년 3월 ‘신문 등 정기간행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언론계의 반대와 국회의 부결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는 3월 19일 ‘광무신문지법’을 정식으로 폐기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였다.

우선 정부는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1952년 3월 정부는 광무신문지법을 폐기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출판물 법안’을 문교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하고 말았다²³⁾. 이 법안은 광무신문지법과 마찬가지로 신문에 대한 정간 또는 폐간을 주무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삭제, 정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언론은 전국편집기자회가 국회의장 등 관계요인에 ‘출판물 법안’의 철회를 요청하고 7개 일간지의 주필과 편집국장들로 구성된 상설 간사회도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의 언론탄압의 가능성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노력은 성공으로 마무리 된다. 상설 간사회는 부산에서 발행되던 국제신문, 민주신문, 부산일보, 연합신문, 경향신문, 합동통신, 동아일보 등의 주필과 편집국장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이들은 전국 신문의 편집국장들을 규합하여 선언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 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이 법안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였다.

22) 동아일보, 국제신문, 대동신문, 1948년 12월 8일, 조선일보, 12월 10일 참조, 정진석, 1985, 《한국현대언론사》, 전예원, 257쪽에서 재인

23) 정진석, 1991, 〈한국언론 연표〉, 《한국의 언론 I》, 469쪽

1. 출판심의위원회의 규정은 정부당로자(當路者)와 그 권한하의 개인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사상적 동향을 광범히 통제 지배케 할 것을 목적하는 것이고(제6조 이하)
2. 출판물 일체의 제재규정은 삭제, 발매금지, 정간, 폐간 등의 강제수단으로써 하여 출판물의 검열제도를 설정하고 언론의 억압 통제를 감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2조 이하)
3. 언론탄압의 규정으로는 “국가보안을 문란케 하는 선동기사” 또는 “허위보도” 운운의 막연한 어구를 나열하여 구체적 사실을 증명 판정하는 규정이 없이 독단적으로 집권자 일방의 주관적 해석이 얼마든지 삭제, 취소, 정정, 정간, 폐간 등의 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제11조, 16조).
4. 또 우리 헌법 제22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의 출판심의회는 신문 등 일체 출판물의 생명의 활살(活殺)을 재판 없이 행정적 명령으로써 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자연히 광무신문지법의 그것과 흡사한 바 있다.
 이상으로서도 동 법안이 범헌(犯憲)의 악법임은 더 설명의 여지없거니와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 즉일로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제 100조)고 하여 기왕의 어떤 법령이든 우리 헌법의 정신과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²⁴⁾.

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가 언론계의 전체의 반발로 쉽지 않은 것을 느낀 공보처는 다시 1952년 5월 기자신분제 즉 <공인기자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제도는 공인기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심사하여 기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 승인 기자자격제도는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사이비 기자들의 폐해가 큰 것을 빌미로 공인기자제를 도입할 명분을 얻고 실질적으로는 정부 허가 기자들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반발도 있었지만, 5월 12일 당시 국무총리 장택상이 폐기를 지시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그 외에도 1954년 12월 초에도 ‘출판물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려다가 역시 언론계의 반발로 실패했다²⁵⁾. 환도 이듬해인 1954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은 이른바 ‘신문정비론’을 들고 나왔으나 언론계의 반대로 좌절이 되자²⁶⁾ 다시 법제정을 시도

24) 동아일보사, 1978, 《동아일보사사》, 161-162쪽

25) 정진석, 1992, 《한국의 인쇄매체》, 《한국의 언론 II》, 한국언론연구원, 49쪽

26) 이상우, 1975 가을, <신문 30년>, 《신문연구》 16권 2호, 14쪽

했던 것이다.

이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은 1955년 1월 11일 자에 ‘정부비판의 한계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야당지의 정부 비판이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대다수의 신문은 이에 반발하였다. 경향신문은 13일 ‘언론 제한의 역행 망상을 완봉(完封)하자’라는 사설을 통해 독재주의식 사고라고 반박하였고, 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동아일보는 1월 24일 ‘언론·출판의 자유는 유린되는가’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유린 말라’란 제목 아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한 사설을 싣고 적극 투쟁하였다. 조선, 한국, 평화신문도 동조한 것은 물론이다.

언론계가 일치해서 이승만 정권의 언론법을 반대한 이유는 동 법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²⁷⁾

간행물에 국가 안보를 문란케 하는 선동적인 사항이 있거나 민심을 혹하게 하기 위한 허위 또는 왜곡된 사항을 기재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보도하였을 때 또는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공보처장은 그것이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15조)

출판물 일반의 경우에는 그 출판의 발매나 반포의 금지 또는 그 부분의 삭제나 말살을 명할 수 있다(5조).

당시 국가안보 문란 또는 허위보도의 경우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법을 제정하려 한 것은 발행인·편집인을 처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기간행물인 신문·잡지·통신 등을 허가·취소·발행정지·발매금지·삭제·압수 등 언론기관을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광무신문지법에 버금가는 악법안은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폐기되고 말았다.

당시 정부는 입법 또는 미군정 법령 88호를 이용한 법적인 통제를 시도하는 것 못지않게 직접적인 방해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신문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운송과정에서 신문을 강제 회수하거나 무단 폐기하기도 하였다. 충남 사천의 판교 경찰관 지서는 1954년 9월 동아일보 지국장에게 독자명부

27)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95쪽

의 제출을 강요했다.²⁸⁾

3) 각종 필화와 언론인 탄압

(1) 1951년 동아일보 국민방위군 사건 필화

이 사건은 야당 성향의 언론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1951년 9월 25일 자 신문에 실린 '김대운 조서 발표사건 중대한 문제제기, 심대한 명예훼손 「무」대사 아(我) 정부에 항의서한' 기사가 발단이었다²⁹⁾.

내용은 국민방위군 사건에 사형이 확정된 부사령관 윤익헌의 구명운동을 위해 김대운(방위군 정훈공작원)이라는 사람이 윤익헌의 처로부터 거금을 받아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미국 고위층 5명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김대운 자신의 경찰조서를 내무부가 국회에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미대사 무초가 우리 정부에 항의각서를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공보처가 이 기사가 사실무근이므로 취소기사를 게재하라고 요구하고, 동아일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편집인 고재욱과 취재기자 최홍조를 소환하였다. 그런데 미국대사관의 참사관 라이트너가 내무부 장관을 항의방문한 사실이 명백해지자 검찰은 방향을 바꾸어 누설 공무원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하였다. 동아는 이 역시 거부하였다.

검찰은 몇 차례의 신문 끝에 11월 9일 두 사람을 광무신문지법과 형법 105조를 적용하여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국회의원과 공보처장 이철원 사이에 논박이 오갔는데 이때 공보처장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언론자유는 민주정치的基本조건인 만큼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둘째가는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외인들이 칭찬하고 있다.

28) 동아일보 1953년 8월 15일 자, 9월 26일 자, 김민환, 2002, 《한국언론사》 나남 사회비평신서 61 개정판, 469쪽

29) 정진석, 1985, 《한국현대언론사》, 전예원 258-260쪽

그러나 허위보도로 민심을 현혹하는 데 적용할 법률이 없어 곤란하다. 광무신문지법은 헌법에 저촉되어 적용할 수 없으니 적당한 법을 제정하여 주기 바란다³⁰⁾.

당시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끊임없이 언론(탄압)관계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이례적으로 3회에 걸쳐 사설을 싣고 광무신문지법은 헌법 공포와 동시에 그 실효가 없어진 것이며, 형법 적용도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동아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탄압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 당시 정계는 이승만 계열과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를 앞세운 세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던 시기이다. 이승만 계열은 자유당을 새로 창당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동아일보가 정부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반발 그 자체도 전시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단한 것이었지만, 11월 17일 일간신문과 통신사 기자들로 구성된 중앙청, 국회, 그리고 법조 출입기자단 등 3개 기자단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문제된 두 법은 헌법위원회에서 즉시 무효로 판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1952년 직선제 개헌안이 실패한 정부로서는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공판까지 갔다.

(2) 부산 정치파동과 언론 탄압 -경향신문 테러 사건과 고재욱 구속

이승만 정부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 파동 사건을 일으켰다. 부산을 중심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였다. 동시에 언론에 대해 탄압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계엄과 동시에 모든 언론사들에 검열을 시작하여 기사를 삭제하였다. 그런데 계엄선포일 오후 9시 경 스무 명 정도 되는 괴한들이 경향신문사 부산공장에 난입하여 활자케이스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공장시설 일부를 파괴하는 테러를 감행한 것이다. 경찰이 이들 중 일부인 4명을 잡았으나 부두 노동자와 자동차 수리공들로서 공장 파괴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 이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30) 동아일보, 1951년 11월 11일, 정진석, 1985, 《한국현대언론사》, 전예원, 259에서 재인

또 6월 1일에는 동아일보 편집인 고재욱을 구속하였다. 구속사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정부 비판 기사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졌다. 고재욱은 이틀 뒤 이승만의 지시로 헌병사령관 원용덕이 석방을 결정하여 풀려났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경향신문 테러 사건 전에는 4월 20일 장면이 국무총리 직을 사임하였으며, 고재욱 구속 전인 5월 29일에는 김성수가 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따라서 이승만의 정치 보복 성격이 강한 언론탄압들이었다는 의구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고재욱을 일찍 풀어준 것은 정전회담 때문에 한국에 온 외국의 유명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당시 뉴욕 타임즈 사장 솔즈베리가 내한해 있었고, 6월 3일 솔즈베리가 이승만을 만났는데 이때 고재욱의 석방을 요청했다는 설에 대한 기록이 있다³¹⁾

(3) 조선일보 주필 홍종인 구속 사건

정부는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을 하고 이에 근거해 8월 5일 정부통령 선거를 하여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선출 되었다. 그런데 8월 7일 부산지검은 조선일보 주필 홍종인을 구속했다. 홍종인은 구속되기 2, 3일 전 이미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조사 내용은 조선일보 부산 분실에서 속보관에 4명의 장관이 사임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게시했다가 지운 사건 때문이었다. 속보관에는 게시하였지만 신문에는 보도하지 않았던 사건임에도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의 요구는 취재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 홍종인이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일이었다. 조선일보는 취재원 보호는 언론인이 지켜야 할 불문율로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동아일보 역시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4) 동아일보 오식 사건으로 무기 정간

1954년 9월 6일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소위 사사오입 개헌을 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집권당인 자유당과 이승만은 신문의 비판의 대상

31) 동아일보 편, 1975, 《비화 제일공화국》, 홍우출판사, 1975, 289-302쪽

이 되었다. 따라서 역으로 권력은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가하려고 시도하였다. 사사오입 개헌 이후 대표적인 언론탄압이 동아일보 오식 사건이다.

동아일보는 1955년 3월 17일 1면에 실은 2단짜리 기사 '고위층 재가 위해 대기중 한·미석유협정 초안'이라는 기사 제목 위에 다른 기사를 위해 준비한 괴뢰(傀儡)라는 두 활자를 잘못 식자하였다. 이 활자들은 '괴뢰 휴전 위반을 미 중대시'라는 기사에 사용하려 했던 것인데 오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쇄한 것이다.

인쇄가 시작된 지 10여분 후 동아일보 내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인쇄를 멈추었으며, 수정한 후 다시 인쇄를 시작하였다. 그 후 최초 인쇄한 신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발송과에 연락하였으나 이미 가관으로 60여부가, 군부(軍部)에 3백여 부가 나가 버렸다. 동아일보는 사원들을 동원하여 가관 신문을 회수하고, 소관 종로경찰서와 내무부, 공보실, 국방부 정훈국, 그리고 육군본부에 통보하고 제작의 실수임을 사과하였다. 하지만 회수신문은 93부에 불과했다.

동아일보가 실수한 것은 맞지만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공보실은 공보실장 갈홍기 명의로 동아일보에 무기정간명령을 내렸다. 과실에 대한 처벌치고는 정간이 가혹했으므로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지 동아일보에 대한 탄압이었다.

동아일보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오식사건 사후조치 보고'를 서울지방검찰청과 공보실에 제출하였는데, 그 조치는 사건책임자 3명을 징계 해직하는 한편 주필 겸 편집국장 고재욱은 감독상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구속자 3명 즉 정리부장 권오철, 공무국 직원 현종길과 원동찬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하였으며, 사건 한 달 뒤 이승만 개인이 관용을 베푸는 형식으로 정간이 해제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이 사건에도 정부는 미군정 법령 88호를 적용하였다.

정간 조치가 탄압이었음은 물론이나 이 조치는 오히려 동아일보에게는 결과적으로 득이 되었다. 동아일보가 정간당하기 전에는 발행부수가 11만 2천 부 정도였지만 정간이 해제된 지 4개월이 지난 후 동아일보 발행부수가 20만부를 돌파하여 사세가 확장되었다.

사실 동아일보만이 오식으로 곤욕을 치른 것이 아니다. 대구매일신문은 1950년 8월 29일 1면 머리기사의 본문에 ‘이 대통령’을 ‘이 견(犬)통령’이라 오식하여 무기정간 조치를 당하고 사장 이상조가 2개월 간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상조는 신문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주간 유해천도 사임했으며, 신문은 10월 1일 자로 천주교 대교구장 최덕홍 주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또 1953년에도 대통령을 건통령으로 오식한 사건이 일어났다. 삼남일보는 1953년 7월 11일자 기사 제목에, 국민일보는 7월 23일 자 기사에서 ‘대통령’을 ‘견통령’으로 오식했다. 이 사건으로 삼남일보와 국민일보의 편집국장 등이 구속되었다. 삼남일보 관계자들은 경찰의 치안 재판을 통해 구류처분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거친 국민일보의 경우는 사법부가 무죄로 석방하였다. 공보처는 8월 5일 자로 무기정간 처분하였다가 9월 24일 해제하였다³²⁾. 또 부산일보도 1954년 11월 1일 자에 대통령을 대령으로 오식하였다가 이를 정정보도하였다. 수사당국은 편집국과 공무국의 간부와 관계자를 불러 수사한 후 문선공의 단순한 실수임을 확인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

(5) 대구매일 테러 사건

당시 언론인들은 언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압을 받았지만 취재까지는 자유로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³³⁾. 언론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 중에서도 최석채가 주필로 있던 대구매일은 정론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만큼 곤욕도 치른 신문사였다.

1955년 9월 14일 오후 4시 25분 경, 대구시 태평로에 있는 대구매일신문사 현관 입구에 시영 420호 번호판을 단 시영버스 한 대에 괴한 20여 명이 타고 신문사 공장으로 몰려 들어왔다. 괴한들은 공무국의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문선 케이스를 비롯하여 인쇄기재와 통신시설 등을 부수었다. 직원들을 구타도 하고 그 날짜 신문도 탈취해갔다. 약 10여 분의 난동이었으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가 컸

32) 김민환, 2002, 《한국언론사》 나남 사회비평신서 61 개정판, 468-9쪽

33) 박권상,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7. 21

다. 백주 테러가 벌어진 것이다. 백주 테러에 그치지 않고 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닌 전단을 뿌리기도 하였다.

경고문

이적(利敵) 대구매일신문에 대한 애국청년의 의거에 반항하는 인쇄출판업자(신문 인쇄에 협조하는 자와 공장)가 있으면 역시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애국의 철퇴와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니 미리 경고 한다³⁴⁾.

대구매일에 대한 테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 중 1955년 8월 9일 자 ‘죽은 사람의 잘못’이라는 기사도 원인이었다. 대구와 가창을 잇는 중동교가 철거 작업 중에 붕괴되어 5 명이 죽고 10 여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권석진기자가 취재하던 중 들은 경북 도경국장 이순구의 발언 ‘죽은 사람의 잘못’을 기사 제목으로 달았다. 이를 빌미로 도경은 권기자를 8시간 동안 취조하고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9월 13일 주필 최석채가 쓴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이 실렸다. 문제의 사설은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하여 대구에 오는 고위 인사들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내용이었다. 그 즈음 이승만의 측근 임병직이 대구 방문할 때 있었던 일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설이 나간 다음 날 ‘적성감위(적성감시 위원단)축출경북연합본부’ 명의로 사설의 취소와 집필자의 처단, 애국적인 견지를 몰각한 논조의 기사에 대한 사과문을 대구 시내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통고문을 보내면서, 시내 국립극장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오후 4시 18분경에는 국민회 경북도 총무부 차장 김민, 자유당 경북도당부 감찰부장 홍영섭 등이 청년 약 20여 명을 인솔하고 대구매일로 가 테러를 감행한 것이다.

대구매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튿날 신문을 가톨릭 출판사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찍어내면서 문제 사설을 다시 싣고 테러의 주체가 자유당과 국민회 간부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정부는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혐의는 사설이 ‘적성감시위원단 축출 데모’를 모독, 멸시하였고 이러한 사설이 북한방송에 인

34) 대구매일신문사, 1982, 《대구매일신문사사》, 92쪽

용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하였다는 혐의였다³⁵⁾.

대구매일신문의 유지재단인 대구 가톨릭 교구에서도 자유당을 비난하고, 동아일보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대구매일 사건은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다. 국회 역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반향이 컸다. 구속되었던 최석채는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로 석방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대법원장 김병로를 비롯한 대법원 전원합의 아래 최석채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대구매일 역시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발행부수가 사건 전 4천 2백부 정도에서 만 부 정도로 2배 이상 신장하였다.

3. 1950년대 후반의 언론

1) 정치적 통제의 강화와 정론지적 언론의 저항

1공화국 당시 언론은 강력한 반대로 정부의 언론통제 법안들 통과를 좌절시키기도 하였지만, 국회의원 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 개정에서는 실패하였다. 이때는 이미 이승만 정부가 독재 정부로서 확실한 통제를 기도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지방도시나 농촌에서 이른바 ‘야당지’의 독자를 조사하고 신문구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합천과 부산에서 경찰이 동아일보의 독자를 공공연히 조사하는가 하면, 경남 일부에서는 면장과 지서장, 지서주임 등이 독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야당지를 구독하지 말도록 위협했다. 이런 일은 3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1956년 봄부터 자주 일어났으며, 자유당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었다. 심지어 지국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사의 게재를 보류하도록 본사에 전보를 치는 술수를 부리기도 하였다³⁶⁾.

그럼에도 당시 언론인들은 강력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실은 이승만

35) 박원순, 1992, 《국가보안법 연구 2 -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60쪽

36) 김민환, 2002, 《한국언론사》 나남 사회비평신서 61 개정판, 470쪽

정권 당시 언론이 정론지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언론의 이러한 모습은 언론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언론은 언론사의 재원을 광고보다는 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었다. 언론사 수익에서 광고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60년의 경우에도 30%를 넘지 않았다. 이는 언론이, 광고를 통한 자본의 압력과 정부의 경제적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게재되는 광고의 경우도 산업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광고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자본이 산업 자본이었다기보다는 상업 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며³⁷⁾, 미국 원조에 의존하여 형성해 온 한국 경제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당시의 한국 경제는 산업화가 저열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그나마 미국 원조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립적 산업 형성보다는 미국 원조 물자의 유통에서 발생하는 특혜 자본들인 상업 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 언론의 대부분은 여타 제조업의 평균 자본금 액수 13,500,000환에도 못 미치는 자본 규모를 지니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의 사활이 판매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의 언론이 권위지를 내세우고 있었으며 당시 정부는 실정(失政)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언론이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자임을 수용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³⁸⁾. 한편

37) 최영석, 1989,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43-46쪽 참조, 김혜식, 1994,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75쪽 참조

38) Tunstall은 신문기업이 기업운영을 위해 달성하고자하는 목적(goal)을 첫째, 판매부수 확장 둘째, 광고의 증대 셋째, 권위(prestige)의 획득 등 세 가지로 구분 제시하면서 물론 기업의 운영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결합(mixture)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Tunstall, Jeremy, 1980, 〈British Press in the Age of Television〉, 《The Sociology of Journalism and the Press Monograph 29》 33쪽). 그리고 판매부수의 확장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범죄 또는 운동에 대한 기사, 광고의 증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행이나 자동차에 관한 기사, 권위의 획득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정치에 관한 기사에 강조점이 두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을 맞출 수는 없지만 재원에서 광고의 비중이 높지 않고 권위지를 내세웠던 우리 언론들이 판매부수의 확장과 권위의 획득을 위해 정부비판적 성격을 강화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정을 통해 좌익 또는 혁신계 신문들이 거의 소멸된 후 보수적 성격으로 재편된 언론은 이승만의 독주로 발생한 보수 정치권의 분열 과정에서 당시의 유력자들이 보수 야당과 궤를 같이함으로써³⁹⁾ 정부 비판적이라는 기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언론의 영세성이나 야당지적 성격은, 당시의 언론이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는 경영진의 경제적 이해와 언론종사자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모든 언론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주들 중에는 정부의 눈치를 보아 기사를 해직시키거나 기사를 스스로 삭제토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⁰⁾. 하지만 판매수익 의존도가 높은 것과 기업의 영세성은 그래도 편집국이 저항적으로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특히 이 시기는 1950년대 전반에서 형성된 여야 당파지의 구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강화되는 만큼 야당지의 저항도 거셌던 것이다⁴¹⁾.

2) 언론통제법 개정과 언론계의 반발

(1) 언론통제법 시도들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언론통제는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법적으로

39) 당시의 대표적 야당지인 동아일보는 정부 수립 후 이승만과 갈라서 제1야당을 형성하는 한민당 계열의 김성수가 소유한 경성방직과 같은 계열 기업이며, 역시 대표적 야당지인 경향신문은 천주교 서울 교구 유지 재단의 소유로서 장면이 야당으로 돌아서는 것과 시기를 같이하여 강력한 야당성을 발휘한다.

40) 조세형,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7. 31 “대항하기 어려웠다. 미움 받으면 망한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많이 때리고 신문사를 간첩으로 몰기도 했으니까.... 주로 그런 기사는 편집국에서 주도를 하고 사장단은 말리는 입장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41) 김진배,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6. 19.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경우는 가톨릭계고, 가톨릭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특히 장면 부통령은 동아일보, 경향신문 고문으로서 오랫동안 경향신문과 관련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동아일보를 민주당 구파 기관지라고 하는 반면 경향신문을 민주당 신파 기관지라고 합니다. 신파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파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신문을 보면 신파 구파의 구별이 확연하게 나타나요.”

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였다. ‘미군정 법령 88호’를 통해 언론을 허가하고 정·폐간할 수 있는 수단은 가지고 있었으나 미군정 시절 만들어진 법률로서 정당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언론관련법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언론의 반대가 거세어 계속 실패하자, ‘국회의원 선거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통해(언론관련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활동을 규제하려 하였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은 195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선거 보도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야당계 신문이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물론 태창방직계의 『자유신문』, 『한국경제신문』, 『평화신문』 등 여당계 군소 신문들까지도 반대를 표명하였다⁴²⁾. 국회 및 정당 출입기자단도 언론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24시간에 걸친 취재 거부를 행하기도 했다. 1958년 1월 11일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도 역시 시공관에서 전국언론인대회를 열고 협상 선거법안 중 언론관계조항의 삽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지의 언론인들도 악법철폐대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언론계의 일치된 반대는 국회의원선거법이 언론의 정치적 보도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³⁾. 그러나 언론계의 반대가 거세었던 것과 달리 야당은 1958년 1월 25일 민의원 의원 선거법안 및 의원 선거법안과 동 시행령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하였다. 이는 당시의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 여론이

42)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12쪽

43)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12쪽

“언론계가 일치해서 반대한 이유는 동법 72조에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자 또는 편집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약속 또는 신입(申込)을 하고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할 수 없다.

다시 84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의 금지, 제167조에는,

누구든지 연설, 신문 잡지, 벽보, 선전문, 기타 여하한 방법을 불구하고 당선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 직업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이른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였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당시에 언론이 어느 정도 정론성을 지녔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측면은 당시의 열악한 정치·경제 상황⁴⁴⁾이 정부로 하여금 여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언론의 활동을 억제하려 하였고, 반대로 언론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는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동조한 것은 의외로 현저한 진출을 보인 혁신세력을 저지키 위해 민주당의 조병옥이 자유당의 이기붕과 밀약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는 또 하나 중요한 입법 조치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후 1차개정시도의 좌절과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 왔으나,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1958년 12월 24일의 3차 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차 개정 국가보안법은 첫째로 언론 관련 조항이 처음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둘째, 1980년 반공법과 통합된 국가보안법의 원형이라고 할 정도로 골격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주장되었던 개정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은 이미 형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언론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더욱 컸다고 하겠다⁴⁵⁾.

그렇다면 언론관련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인심혹란죄에 해당하는 조항(17조 5항)으로 소위 언론조항으로 불리는 것이다.⁴⁶⁾ 이 조항의 취지는 “반드시

44) 박원순, 1989, 《국가보안법 연구 1 -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134쪽, “경제적 빈곤과 침체 역시 그러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1956년에 대한 1957년의 성장률이 9.7인데 대하여 1958년은 6.4로서 3.3%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생산증가를 위한 건설과 소비수요의 감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미국의 원조경제에 운명을 걸고 있었던 자유당정권의 경제정책은 미국이 국제수지적자에 따른 달러 방위정책을 선언하고 대폭적인 원조 삭감을 가하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원조물자의 성격은 그 재화의 국내 생산을 위축시켰으며, 또한 미국의 농업공황 해소책의 일환으로 원조 품목의 중요 구성부분을 차지했던 잉여농산물 도입은 국내농업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되는 광범위한 실업자 군과 소작농은 곧바로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불만과 반대층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5) 박원순, 1989, 《국가보안법 연구 1 -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133쪽

46) 이 조항은 17조 5항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정당한 비판이라고 해석될 수 없는 언론의 폭력”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알면서”, “고의로”라는 주관적 요건이나, “적을 이롭게”라는 결과에 대한 판단은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⁴⁷⁾으로서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였다. 두 번째는 국가 기밀의 개념을 정치·군사적인 것에서 경제·사회·문화까지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제4조, 제11조, 제12조), 허위이거나 공표할 경우 처벌되는 것은 물론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였다.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의 기밀과 정보를 탐지·수집 또는 누설하는 자와 관공서·정당·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이었다. 이 조항들은 국가기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정상적인 언론 활동의 경우도 이 조항들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 관련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상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이 국가보안법의 취지에 합당한 규정이나’는 의문과 별개로 헌법상 기관이 의미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활동을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언론의 대 정부 비판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때와 달리 자기들에 위협이 되는 혁신정당이 이미 없어졌고, 부통령만은 민주당에서 계속 차지해야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에 국가보안법이 방해가 될 것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민주당 신파에서는 구과와 달리 타협 없는 투쟁을 벌였다. 민주당의 신·구과 관계는 4·19에 이르기까지 정계·언론계 사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점이 된다⁴⁸⁾.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국가보안법을 언론과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야당 의원의 감금 상태)에서 자유당 의원만이 모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승만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법을 언론을 탄압하는데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후 국가보안법을 언론에 적용시킨 사례는 극히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혼란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47) 박원순, 1989, 《국가보안법 연구 1 -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157쪽

48)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16쪽

적었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언론조항이 들어 간 국가보안법 조항은 언론에 대한 강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2) 관훈클럽과 편집인협회 결성

당시 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언론인 조직은 1957년 결성한 편집인협회였다. 그리고 이 편집인협회 결성에 씨앗을 뿌린 조직은 관훈클럽이었다. 관훈클럽은 미국 국무성 초청 연수 기자들이 선진 언론을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결성한 모임이었다⁴⁹⁾.

1955년부터 미국 국무성이 주관하는 신문기자의 시찰—훈련계획(US State Department's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Program)이 실시되었다. 일체 경비가 미국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때 1차 연수에 참여하였던 노회엽(합동통신 외신부장), 김인호(동 외신부 기자), 박권상(동 정치부 기자), 조세형(평화신문 정치부 기자), 박중희(코리아 타임스 정치부 기자), 진철수(AP통신 서울특파원) 등과 최병우(코리아 타임스), 정인량(합동통신), 임방현(합동통신) 등이 언론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닦겠다는 생각으로 결성하였다. 1956년부터 사전 모임을 통해 공부 모임을 하고, 스타일북(기사작성법) 등을 만들다 1957년 1월 11일 관훈클럽을 창립하였다.

관훈클럽이 중요한 것은 이후 연구와 출판 등을 통해 언론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도 있으나 1957년 4월 7일 창립한 편집인협회 결성을 선도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방 이후부터 출판노조, 답수회, 전조선기자단, 조선신문기자협회, 상설간사회 등 다양한 언론조직이 존재했고, 권력의 언론탄압에 대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편집인협회도 창립 이후 선거법개정과 국가보안법 개정 당시 언론계를 대표하여 철폐 투쟁에 함께했으며, 이후 정권에서도 언론 탄압 항거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3) 경향신문 폐간과 언론인 탄압 사건들

경향신문 폐간은 정부가 폐간이라는 가혹한 조치로 탄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49) 정진석, 1992, 《기자 최병우 평전》, 관훈클럽, 145-164쪽

하지만 경향신문이 이승만 정부 당시 가장 유력한 신문이었으며,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신문이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또 정부의 탄압에 대항한 끈질긴 투쟁을 벌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언론인 탄압은 50년대 후반에도 꾸준히 발생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세형 해직 사건이다. 조세형 해직 사건은 정부가 언론 사주를 통해 기자를 해직한 사건이다. 언론인에 대한 탄압은 법 저촉을 이유로 구속 또는 실형을 살게 하는 방식, 테러를 통한 압박 방식 등이 있었다. 이러한 탄압은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세형 해직과 같은 유형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당시 언론인들을 통제하는데 유효했던 탄압의 한 유형이다.

(1) 경향신문 폐간 사건⁵⁰⁾

경향신문 폐간사건은 1959년 4월 30일 밤 10시 15분 공보실이 경향신문 발행허가 취소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한 경향신문이 법정투쟁으로 맞서 1년여를 끌었던 사건이었다. 경향신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월 26일 서울 고법이 경향신문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그 즉시 폐간을 취소하고 무기정간이라는 새로운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경향 측은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연합부를 구성하였다가, 법률해석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경향신문과 민주당 신과의 관계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다. 자유당은 가장 비판적인 신문이자, 정적인 민주당 신과의 관련이 깊었던 경향신문을 없애버리려 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편집인협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있었고 외국의 여론도 결코 좋지 않았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 사건이 일 년여를 끌면서 유지했던 것은 1956년 선거에서 조봉암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이승만 장기집권을 꿈꾸었던 자유당에게는 어차피 넘어야 할 과정이었다. 즉 비판적인 언론을 잠재우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50) 정진석, 1985, 《한국현대언론사》, 전예원, 331-355쪽 참조,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18-121쪽 참조

가. 발단

발단은 1959년 2월 4일 자 단평 칼럼 ‘여적’에서 비롯되었다. ‘여적’의 필자 주요한이 석간에 연재되고 있던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라는 글에 대한 단평을 적었다. 다수결의 원칙이 ‘관용·아량·설득’에 기초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선거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면 폭력에 의한 또 다른 다수의 결정이 있으며 이것이 혁명이라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 칼럼이 나간 뒤 서울 시경은 편집국장 강영수를 연행하여 심문하였다. 2월 5일 김일환 내무장관, 홍진기 법무장관, 전성천 공보실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여 사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미 경향신문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임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국헌문란 선동(형법 90조 2항)의 혐의로 압수 수색하여 여적 원고와 사설, 기사, 석, 논문 등의 원고들을 압수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수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문제화된 여적내용에 관하여’라는 사설을 싣고 탄압에 항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압수 수색에 대응하는 법적조치로서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사법부는 압수품 중 3건을 제외하고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오히려 자신이 필자임을 밝힌 국회의원 주요한을 형법 87조(내란), 90조(예비·음모·선전·선동)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영장에 대한 결정을 미루자 자신 철회했다. 그리고 수사를 지속하여 2월 28일 경향신문 사장 한창우와 주요한에게 내란선전(형법 90조 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1월 11일 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을 근거로 스코필드와 국회의장 이기붕의 명예훼손죄를 걸어 기소했다.

이것들이 나중에 폐간 조치의 이유가 되었다. 이외에도 ‘사단장이 기름을 팔아먹고’, 이대통령 기자회견 기사 중 오보⁵¹⁾, ‘간첩 하모(某)를 체포’ 기사 등이 이유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부에 대한 경향신문의 강력한 비판 기사는 많았고 모든 것이 감안되었을 것이다.

51) 이승만 대통령 기자회견 중 보안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보안법 개정도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내보내 국가원수의 발언을 허위보도 했다는 명목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장면(민주당 신파)과 경향신문의 관계이다. 경향신문 사장 한창우는 동성상업학교 교사였으며 이 시절 장면은 동성중학교 교장이었다. 또한 두 사람은 수원 고등 농림학교 선후배 관계였다. 따라서 경향신문에 대한 탄압은 곧 장면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²⁾.

나. 전개과정

당시 서울신문을 제외하고 모든 언론들이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이며 경향신문의 기사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당시 정부의 탄압은 존재했지만 언론들 또한 충분히 항거하던 시기였다.

이때 교황청의 그레고리 오베루투 15세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이 한국을 방문했다. 동남아 순방 중 방문한 그는 3월 15일 전성천 공보실장과 외무, 문교 양 차관의 방문을 받고 경향신문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경향신문을 순수한 종교지가 되도록 종용했고 양자는 경향이 기소되기까지의 경위를 문서화하여 교환했다. 일반적으로 천주교 유지재단 소유인 경향신문에 대한 탄압에 로마 교황청이 항의했으리라 보지만 교황청은 오히려 경향신문에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⁵³⁾. 대립이 격해지자 천주교유지재단이 나서 정치적 협상을 시도했는데 3월 5일 발행인을 한창우에서 김철규로 바꾸어 '정기간행물허가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 23일 이관구를 부사장 겸 편집국장, 주요한을 면직, 편집국장 강영수를 논설위원, 정치부

52) 김진배,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6. 19 참조

53) 김진배,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6. 19 “정부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한국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민주국가의 면모를 다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황청에서도, 교황 성하나 많은 추기경들께서 대통령의 빛나는 업적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대통령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도록 했고, 한창우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바로는, 오히려 정부쪽에서 추기경의 방한을 각별하게 주선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천주교가 정치에 무리하게 관여하고 있다. 특히 장면 부통령과 발행인 한창우 사장이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추기경한테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기경이 온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김주언, 2005년 6월 29일, <권력의 희생양이 된 경향과 민족일보>, 미디어 오늘

장 송원영은 특집부장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4월 4일 시경은 전술한 '간첩 하모를 체포' 기사를 들어 범조 출입기자 정달선과 시청출입기자 어임영을 또 구속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전술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4월 30일 경향신문을 폐간 조치했다. 경향신문은 전성천을 상대로 서울 고법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근거로 첫째, 미군정법령 88호는 정부 수립 직후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둘째,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법령은 공산당을 상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적용한 것은 그 동기와 결과가 모두 헌법 28조에 위배되며, 셋째, 폐간이라는 행정처분은 행정재량권을 넘어 섰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어 본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경영 상 회복이 불가능한데 경향의 2,759명의 종업원과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1만 3천 795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실업의 피해를 보니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서울 고법은 6월 23일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을 폐간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공보처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발행허가 정지(정간) 처분을 내린다는 문서를 경향신문에 전달하였다. 이에 다시 경향신문은 6월 29일 무기정간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고법은 이번에는 8월 29일 첫째, 정부가 발행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간처분을 내린 행정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며, 둘째, 군정법령 88호가 위헌이 아니고, 셋째, 무기정간이 정부의 행정재량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며, 넷째, 법률 위반이 있을 때 법원의 유죄판결(각종 관련 사건에 대한)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정간)을 내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시켰다. 고법은 이어 무기정간에 대한 본안에서도 경향신문 패소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으로 간 소송은 배당받은 주심들(본안과 가처분신청)이 3개월 여 심리를 미루다 대법원 연합부에 회부했다. 본안과 가처분신청을 연합부에서 심리함으로써 이미 지체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합부는 1960년 2월 5일 두 번째 심리에서 미군정법령 88호에 관한 위헌 판단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헌법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다가 4·19가 일어난 후 4월 26일에서 대법원

이 행정처분 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 각계의 반발

우선 민주당은 ‘언론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원내·원외·법정의 3개 투쟁 대책을 세우는 등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였다. 전국 변호사협회도 이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였고, 연상섭을 비롯한 33인의 문인들도 폐간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계에서 반발하였다. 편집인협회도 2차에 걸쳐서 성명서를 통해 폐간 철회를 요구했음은 물론이고 서울신문을 제외한 각 신문도 이 문제를 사설 기타 해설 등으로 비판하여 경향신문을 원호했다.

미국도 자유당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다울링 대사는 폐간 조치 직전 전성천이 미국대사관 직원의 면담을 거절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미국 상원 국동문제분과위원회가 국무차관보를 불러 비밀심의를 하고 다울링 대사의 의견을 지지했다. 세계 각국 언론이 이 조치를 비난했고, 한국의 주미대사 양유찬은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 주일 대사 유태하는 일본 언론들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회는 5월 22일 33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향신문 폐간 사건을 집중 질의하여 압박을 가하였다. 하지만 전술한대로 각계의 이러한 노력은 1년여 간에 걸친 법원의 의도적 회피로 무의미해졌다.

(2) 기자들에 대한 탄압 사건

기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승만 정권 내내 일어났다. 50년대 후반에 일어난 것들 중 대표적인 것만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⁵⁴⁾.

1956년 10월 8일 동아일보는 도의원 선거 당시 정읍과 함평에서 환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도하였다. 이들이 지난 12일 치안국 특수정보과 중앙분실은 동아일보 주필 고재욱, 사회부장 최호를 소환하여 심문하였다. 13일에는 경향신문의 편집국장 정인준, 사회부장 박성환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정당한 보도조차도 수시로 소환

54) 정진석, 1991, <한국언론 연표>, 《한국의 언론 I》, 한국언론연구원, 477-484쪽 참조

조사하는 것은 언론인들에게는 심적으로 매우 힘든 타격이었다.

장면 부통령에 대한 저격 사건으로 언론인들은 다시 고초를 겪었다. 1957년에는 1월 4일에는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이형, 최종기, 이원홍을 수배하고, 2월 8일에는 '장부통령저격사건 배후에 내무장관 이상의 선(線)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검찰이 편집국장 정인준, 기자 이상순을 소환하였다.

1957년에는 동아일보가 '두 사단 해체 준비'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기사에 사단 표지의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이적행위 혐의를 받았다. 헌병사령부는 기자 최원각을 구속하였으나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강력한 항의에 굴복 58시간 만에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1960년 2월 13일에는 장택상 대통령 후보와 박기출 부통령 후보의 등록 방해사건을 취재 중이던 한국일보 사진부 조용훈기자와 CBS특파원 한영도가 영등포구청 앞에서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4일 서울주재 외신기자들은 기자 구타사건에 대해 테러방지를 공보실장에게 요청하였다.

위의 사건들과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조세형 해직 사건이다⁵⁵⁾. 조세형의 해직 사건은 1956년 6월 27일 이승만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비롯되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 달 후에 가진 기자회견이고 당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년 2-3회 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자들은 궁금한 것이 많았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공보실이 질문항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질문 내용을 조정하였다. 당시 이기붕 의장이 민의원 정부의원 선거 당시 자유당 의원들에게 40만원의 수표를 나눠주고 또 한 번 더 나눠줄 것을 약속했다는 정보에 관해 대통령에게 질문하고자 했으나 공보처직원들과 기자단 간사들이 상의해서 빼버렸다. 이에 흥분한 젊은 기자들을 대표해서 조세형이 질문을 하였고, 이승만은 부정한 매표 사건이 있었다면 철저히 규명하여 사건관계자를 현행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서로 하여금 분배 착복한 위원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회전이 있고 나서 정작 당한 것은 이기붕이 아니라 조세형이었다. 이기붕과 가깝고 수도 극장 사장으로서 여당 성향이었던 사장 홍찬은 당일자로 조세형을

55) 정진석, 1992, 《기자 최병우 평전》, 관훈클럽, 159-160쪽

파면하고 신문 1면에 사고로 게재하였다. 그때 야당지였던 경향신문의 선배가 경향신문으로 올 것을 권유하였고 편집국장까지 면접을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다. 경무대에서 압력을 넣어 경향신문이 채용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었다⁵⁶⁾. 조세형은 최병우 기자의 배려로 잠시 코리아 타임스에 있다가 합동통신으로 옮겼다.

4. 민족일보 사건

1) 민주당 정부의 한계

4·19는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학생의 주도하에 도시빈민 및 노동자의 가세로 4월 19일에 이르는 과정과, 둘째로는 4월 19일 이후 학생 및 비관적 정치인의 퇴조와 기층 민중운동역량의 성장 및 일부 학생과 지식인의 이념적 성장 과정이며, 세 번째는 군부의 등장으로 인한 5·16 쿠데타에 의한 귀결과정”⁵⁷⁾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실정으로 형성된 기층민중의 정치세력화⁵⁸⁾와 관념적 지식인들이 구성한 혁신정당의 등장⁵⁹⁾이다. 이들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자유당과 본질을 달리할 수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었다. 따라서

56) 조세형,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7. 31

57) 김성환, 1985, <4월 혁명에 관한 역사적 고찰>, 송건호·박현채 외 지음, 《해방 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307쪽

58) 4·19 이후 기층민중운동은 판자촌 철거 항의 시위, 식량과 취업을 요구하는 생존권 투쟁 등 기층에서 생존에 허덕이는 실업자 군들과 미군 종업원들의 노동법 투쟁 등과 같이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순을 대변하고 있었다. 박학래 편, 『광복 22년』, 원희출판사, 1968 참조

59) 이들의 등장은 미군정과 뒤이은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짝이 잘린 혁신세력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공백을 틈타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해 나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의가 과학적 인식이 결여된 채로 관념적이었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기반을 형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점에서 혁신세력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나 5·16 정권 등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민주당은 한편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국토개발계획과 실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혁신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⁶⁰⁾. 그러나 경제건설의 추진은 이에 필요한 자금이 미국 원조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자립경제의 건설은 점점 어려워졌으며, 한편 민주당의 혁신세력 억압은 정정의 불안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은 세계급·세계층에 위기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빌미로 5·16 쿠데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¹⁾.

위와 같은 한계를 지녔던 보수정당 민주당의 장면 정부는 민족일보의 출현을 꺼려 할 수밖에 없었다.

2) 민족일보의 창간과 폐간

(1) 창간 과정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가 창간되었다. 발행인은 재일교포로서 1960년 7월 29일 총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혁신계 사회대중당 조용수였다. 당시 혁신계는 의욕적으로 의회진출을 노렸다. 몇 개의 혁신계 정당들은 지역구 233개 중 과반수 이상의 지역에 후보를 내세웠다. 하지만 참패였다. 사회대중당 4명, 한국사회당 1명, 통일당 1명이 되었을 뿐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혁신계 인사들이 결정한 두 가지 과제 즉 합당과 신문 창간 중 조용수가 신문 창간에 전념하였다⁶²⁾.

조용수는 일본에 밀항하여 거류민단에서 민단체 기관지 민주신문의 편집부장과 논설위원으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4·19 이후 귀국하여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신문창간을 위해 일본으로 다시 건너갔다. 민단체 재력가 박용구 등에게서 3천 8백만 환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한 조용수는 귀국하여 지국 설치 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창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60)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382-384쪽 참조

6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1991,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새길, 167-168쪽

62) 김민환, 2006, 《민족일보 연구》, 나남신서 1156, 나남출판, 22-24쪽

창간 즈음 신문의 경영권을 싸고 한국사회당 당수 최근우와 다른 인사들이 충돌하자 조용수를 사장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⁶³. 그리고 취체역에 서상일, 이종률, 고정훈, 최근우, 윤길중 등이 포진하여 혁신 통합체 같은 모습을 띠었다⁶⁴.

다른 일반 상업신문과 달리 민족일보는 혁신계 정치노선에 지상가치를 두는 뚜렷한 사시를 표방하였고, 혁신계서 주장하는 남북협상, 남북교류, 중립화통일, 민족자주통일 등을 크게 다루었다⁶⁵. 이를 반영한 민족일보의 사시는 다음과 같다.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민족일보는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민족일보는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민족일보는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

민족일보는 편집 전략에서도 그날그날의 기사가치보다는 의제의 중요도 통일문제, 한미 경제협정문제, 반공법 문제 등을 우선하는 편집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며 처음에는 2만부로 시작하여 4만 5천부까지 발행하였다. 특히 가판에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2) 민족일보의 수난

민족일보는 창간되기 전부터 수난을 겪어야 했다. 1961년 1월 30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준섭 의원이 민족일보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창간 준비 중인 어떤 일간지에 재일본 조총련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튿날 윤길중 의원이 그것이 민족일보이고 조총련 자금이 들어온 바 없다고 해명하고 혁신세력을 탄압하려는 음해라고 공격했다⁶⁶. 그러나 내무부

63) 정문화, 1992, 〈자주통일의 꿈, 민족일보와 조용수〉, 《말》 1992년 2월호 140쪽, 김민환, 2006, 《민족일보 연구》, 나남신서 1156, 나남출판, 23쪽 재인

64) 정진석, 1985, 《한국현대언론사》, 전예원, 287쪽

65) 박권상, 1984, 《자유 언론의 명제》, 전예원, 43쪽

장관은 내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에 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민주당 정부가 혁신계의 진출에 대해서 민감해있음을 드러내었다.

조용수 사장이 취임사에서 조총련계가 아님을 밝혔음에도, 당시 국무원사무처는 산하인 정부관리기업체인 서울신문에 인쇄계약을 체결하였던 민족일보를 인쇄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탄압을 하였다. 이에 국회 법사위에서 이의 부당성을 한 의원이 따지자 정헌주 국무원 사무처장은 ‘특수지 성격을 띤 민족일보에 대한 인쇄를 중단한 조치는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못박았다⁶⁷⁾.

세 번째 수난은 대일 수출 불허이다. 민족일보는 도쿄에 지사를 설치하고 우선 250부를 수출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조회하였으나 세관은 국무원 사무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국무원은 제일교포에게 민족일보가 보급되면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마지막 수난은 5·16 이후 폐간과 더불어 관련자 구속, 그리고 이어지는 조용수 사장의 사형이다. 5월 18일 조용수를 포함한 간부 9명을 구속하고, 19일 폐간조치하였다. 치안국이 ‘민족일보와 동사 사장 조용수 일당들의 죄상 및 그 배후관계’라는 문건을 배포하였다. 당시 신문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 조용수와 간부들은 전 조봉암 비서관 이영근의 지령 하에 평화통일방안을 주창하면서 혁신계 기관지 발행을 시작했으며, 이영근은 조련계 자금을 주어 국내 혁신계를 규합하게 했다. 또 조용수는 조련계 자금을 밀반입해서 신문을 창간하고, 신문사 논설위원들과 야합하여 괴뢰집단이 지향하는 목적 수행을 해왔다는 것이다⁶⁸⁾.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조용수와 안신규, 송지영은 계속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15년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무죄를 선고받거나 2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사람도 있었다. 역으로 이종률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10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66) 정진석, 1985, 《한국현대언론사》, 전예원, 288쪽

67) 정진석, 1990, 〈민족일보와 혁신계 언론 필화사건〉, 《신문연구》 1990년 여름호 117쪽, 김민환, 2006, 《민족일보 연구》, 나남신서 1156, 나남출판, 32쪽에서 재인

68) 김민환, 2006, 《민족일보 연구》, 나남신서 1156, 나남출판, 35쪽

당시 계엄 하의 국내 언론은 민족일보 관련자들의 판결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오직 한국일보만이 8월 29일 자 신문에 그들이 공산주의자인지 알 수 없으며, 신문인이 사형 또는 중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신문의 역사에서 매우 개탄할 일이라는 글을 실었을 뿐이다.

반면 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 경력이 오래인 송지영에 대해 탄원을 하였고,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펜클럽과 취리히의 국제신문인협회(IPI)는 박정희 의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고, 국제사면위원회도 석방운동을 벌였다.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유력한 신문사가 감형을 주장했고, 문인들이 '3명의 한국언론인 구출동지회'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조용수는 12월 21일 처형당했다. 당시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송지영 또는 같이 민족일보를 창간했던 윤길중, 고정훈 등이 이후 정권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사실에 비추어 조용수는 당시 권력의 희생물이었다. 김진배는 군사정부가 민족일보 사건을 벌인 것은 당시 다른 언론의 기를 꺾기 위한 것이었으며, 경향신문 폐간에서 얻은 경험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⁶⁹⁾.

〈참고문헌〉

- 강만길, 1994, 《고쳐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강준만, 1998, 《카멜레온과 하이에나》, 인물과 사상사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2, 《한국언론관계법령전집》
 김남석, 1994, 〈한국신문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69) 김진배,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6. 19 “민족일보의 경우, 신문을 폐간하고 조용수의 사형을 단행함으로써 다른 모든 신문들의 기를 한꺼번에 꺾었습니다. 이는 언론 조작, 언론탄압을 아주 교활하게 해온 세계적인 악례를 한국 정부가 유감없이 발휘한 것인 동시에, 경향신문 폐간에서 얻은 악습을 더 가혹하게, 더 잔악하게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남식 외, 1989, 《해방전후사의 인식 V》, 한길사
- 김도현, 1993, 〈이승만노선의 재검토〉, 송건호 외 지음, 《해방전후사의 인식 I》, 서울, 한길사
- 김민남 외 지음, 1993, 《새로 쓰는 한국 언론사》, 아침
-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나남 사회비평신서61
- 김민환, 2002, 《한국언론사》 나남 사회비평신서 61 개정판
- 김민환, 2006, 《민족일보 연구》, 나남신서 1156, 나남출판
- 김병태 외, 1981,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 해방이후에서 70년대까지》, 돌베개
- 김성환, 1985, 〈4월 혁명에 관한 역사적 고찰〉, 송건호·박현채 외 지음, 《해방 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 김왕석, 임동욱 외 지음, 1990,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아침
- 김주연, 2005년 6월 29일, 〈권력의 희생양이 된 경향과 민족일보〉, 미디어 오늘
- 김진배,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6. 19
- 김해식, 1994,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 노중기, 1989, 〈1950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원조의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사연구회, 《현대 한국의 자본 축적과 민중 생활》, 문학과 지성사
- 대구매일신문사, 1982, 《대구매일신문사사》
- 동아일보사, 1978, 《동아일보사사》
- 박권상, 1968 가을, 〈군정 하의 신문〉, 《신문평론》 27
- 박권상, 1984, 《자유 언론의 명제》, 전예원
- 박권상,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7. 21
- 박용규, 1988,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원순, 1989, 《국가보안법 연구 1 - 국가보안법 변천사》, 역사비평사
- 박원순, 1992, 《국가보안법 연구 2 -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 박찬일, 1981, 〈미국의 경제원조의 성격과 그 경제적 귀결〉,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들베개

- 송건호, 1984, 〈미군정시대의 언론과 그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연구》 제2집, 한길사
-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 송건호, 2000, 〈미군정하의 언론〉, 《한국언론바로보기》, 다섯수레
- 송건호, 2000, 〈이승만 정권하의 언론〉, 《한국언론바로보기》, 다섯수레
- 유재천, 1991, 〈한국언론의 생성과 발전과정〉, 《한국의 언론 I》, 한국언론연구원
- 이상우, 1975 가을, 〈신문 30년〉, 《신문연구》 16권 2호
- 정문화, 1992, 〈자주통일의 꿈, 민족일보와 조용수〉, 《말》 1992년 2월호
- 정진석, 1990, 〈민족일보와 혁신계 언론 필화사건〉, 《신문연구》 1990년 여름호
- 정진석, 1991, 〈한국언론의 생성과 발전과정〉, 《한국의 언론 I》, 한국언론연구원
- 정진석, 1991, 〈한국언론 연표〉, 《한국의 언론 I》, 한국언론연구원
- 정진석, 1992, 《기자 최병우 평전》, 관훈클럽
- 정진석, 1992, 〈한국의 인쇄매체〉, 《한국의 언론 II》, 한국언론연구원
- 정진석, 1994 봄, 〈국내 언론법과 언론법제연구의 변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 정진석, 1985, 《한국현대언론사》, 전예원
- 조대형, 1988, 〈미군정기의 출판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세형, 2007년도 제4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1950년대 언론계의 동향 구술자료, 2007. 7. 31
- 주동황, 1993,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고찰 - 제 1 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진덕규 외 지음, 1981,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 최영석, 1989,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1991,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새길
- 한국역사연구회, 1992,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 Tunstall, Jeremy, 1980, 〈British Press in the Age of Television〉, 《The Sociology of Journalism and the Press Monograph 29》

6·8 부정선거 규탄 투쟁과 3선개헌 반대투쟁의 전개과정

이 기 훈

| 목 차 |

1. 6.8 부정선거 규탄투쟁의 전개
 - 1) 1967년의 정치상황과 6.8 부정선거
 - 2) 야당의 6·8부정선거 규탄
 - 3) 학원의 부정선거 규탄투쟁
2. 1969년 삼선개헌 반대투쟁의 전개
 - 1) 1968~1969년의 정치상황과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
 - 2) 야당과 재야의 삼선개헌 반대투쟁
 - (1) 1969년 전반기 야당과 재야의 삼선개헌 반대
 - (2)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의 결성과 활동
 - 3) 학생들의 삼선개헌 반대투쟁
3. 1960년대 말 민주화운동의 특성
(참고문헌)

1. 6.8 부정선거 규탄투쟁의 전개

1) 1967년의 정치상황과 6.8 부정선거

1965년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수교와 청구권 문제를 마무리한 박정희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 공화당 내부에서 김종필계의 주류와 비주류가 격렬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지만, 1965년 이후 당 총재인 박정희가 주도하는 일사분란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정당으로서 공화당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지만, 군사적 효율성을 중시했던 박정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순항은 한편으로는 당시 야당의 분열과 무기력 덕분이기도 했다. 한일협정이 비준 당시 민중당 온건파가 원내 복귀를 선언하자 강경파들은 여기에 반발, 집단 탈당하여 1966년 3월 신한당을 창당했다. 이렇게 생긴 야당의 분열은, 1966년이 다 가고 1967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와중에도 여전했다.¹⁾ 민중당과 신한당 두 야당 내부에도 각각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대립이 심각했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또 그 안에도 몇 개의 파벌들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²⁾ 과거의 혁신세력들을 중심으로 서민호가 사회민주당(이후 대중당)을 창당하였지만, 창당발기인 대회의 결의문이 문제가 되어 당직자들이 구속되는 등 정권의 탄압으로 제대로 활동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66년 12월부터 민중당과 신한당의 통합 논의가 급진전되었다. 양 당의 비주류 인사들을 중심으로 <야당대통령후보 단일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미 민중당은 유진오, 신한당은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상황이었지만 민중당이 신한당에 통합을 제의하였고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 교섭은 곧 결렬되었지만 곧바로

1) 심지연, 2004,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194쪽

2) <당리만 앞세운 야당단일화 운동>, 《신동아》 1967. 2. 163~164쪽

1967년 1월 26일 윤보선, 유진오, 백낙준, 이범석의 당시 야권의 영수 4사람이 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통합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이로부터 2주일이 지나지 않은 1967년 2월 7일 민중당과 신한당은 신민당으로 정식 통합하였고 정권교체의 수임정당을 자처했다. 통합야당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는 윤보선이, 당수는 유진오가 맡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야 세력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때 재야란 이범석의 族靑 계와 일부 교회세력들이었다.³⁾

신민당은 창당대회 결의문에서

- ①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기필 정권 교체를 성취시켜 민주정치를 재건하고 민생을 도탄에서 구한다.
- ② 우리의 승리와 목적달성을 위해 철석같이 단결하고 봉사애의 신념과 불굴의 용기로써 투쟁한다.
- ③ 만일 부정선거의 경우 거기서 오는 불행한 사태발생의 모든 책임은 박정권이 져야 함을 사전에 경고한다.

고 하였다. 이미 이때부터 정부여당이 획책하는 부정선거의 조짐이 역력했던 것이다.

통합야당 신민당은 1967년의 대통령선거와 총선거를 치러야 했다. 6대 대통령 선거는 1967년 5월 3일 실시되었는데, 대중당 후보인 서민호가 4월 28일 후보직을 사퇴하여 박정희와 윤보선 두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야당 후보가 단일화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신민당의 당조직은 그다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16만표 차이로 박정희가 승리했다.

196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한 달 뒤인 총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공화당은 “박대통령 일하도록 밀어주자 공화당”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신민당은 대선과 달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야당의 단일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화당 당의장 김종필조차도 야당이 4개

3) <통합야당 신민당의 출범>, 《신동아》 1967. 3. 164쪽

로 분열되어 있었던 63년 총선거에 비해 의석이 10여 석 줄어든 100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였다.⁴⁾

그러나 박정희 정권 핵심부는 7대 총선을 당시 3공화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삼선금지 조항을 철폐하고 본격적인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도모할 기회로 보았다. 중앙정보부와 내무부가 직접 막대한 자금과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대책을 마련했고, 선거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므로 부당하다고 해석하였지만, 대통령은 당총재의 자격으로 선거유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정희는 자유롭게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를 시작했고 각 지역의 개발 공약을 남발했다.

금권이나 관권이 동원된 부정선거 조짐은 이미 1966년부터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공화당의 선거 조직인 계나 친목회가 여는 관광행사가 1년 전부터 계속되었고,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막걸리 선거가 노골화되었다. 공화당의 연락사무소에는 막걸리통과 소주병이 항상 놓여 있어 누구든지 마시도록 했다. 경찰서장과 군수, 구청장이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동장과 경찰들에게 현금과 쌀, 밀가루를 나눠주며 살포하도록 독려했다.⁵⁾ 500~1,000원의 현금이 든 돈봉투를 공공연하게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⁶⁾

1967년 6월 8일 선거당일과 개표일, 금권·관권·폭력선거는 극에 달했다. 관권 선거가 극에 달하다 보니 군수나 경찰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선거에 나서는 경우까지 있었다.

막걸리 선거니 고무신 선거니 하는 정도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서 특별히 내세울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여수나 별교에서는 유권자들이 단체로 공화당 운동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여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보인 다음 투표함에 넣도록 공개투표를 하다 발각되었고, 개표과정에서 야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4) 심지연, 2004, 위의 책, 199쪽

5) 김영삼, 1967, <1억이 넘는 공화당 자금>, 《신동아》 1967. 7. 70쪽

김옥선, 1967, <투표소 구역에는 주점, 강패>, 《신동아》 1967. 7. 71쪽

6) 김형일, 1967, <불태워 없앤 유효표>, 《신동아》 1967. 7. 75쪽

만든 피아노표니 빈대표니 하는 것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괴한이 투표소에 난입해 야당참관인을 강제로 밀어내고 미리 기표를 해놓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무더기로 쏟아 넣기도 했다. 부정선거에 강력히 항의하던 야당 참관인들이 공화당원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쫓겨나는 바람에 여당참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⁷⁾

이런 선거 결과 공화당이 129석, 신민당 45석, 대중당 1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화당이 전체의석의 74%를 장악하였고,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13석 초과하게 되었다. 부정선거의 심각성은 선거소송의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7대 총선 이후 전국 131개 선거구에서 모두 26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다. 1963년 6대 총선 당시 선거소송이 38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7배에 달하는 규모였으니⁸⁾, 박정희 정권이 2/3선 확보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지도부조차 앞으로 정국 운영을 걱정할 지경이었다.

2) 야당의 6·8부정선거 규탄

선거 다음날 1967년 6월 9일 신민당은 6·8선거를 3·15보다 더한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장송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범국민규탄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하기로 결정하였다.⁹⁾ 6월 9일 오전 청주, 순천, 곡성, 남원, 안동, 상주, 무안 등 지방 각지에서는 수십명 내지 수백명의 신민당원과 지지자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와 행진을 벌이기 시작했다.¹⁰⁾ 전라남도 보성에서는 신민당원들의 시위에 보성중고등학교 학생 천여 명이 참가하기도 했다.¹¹⁾

7) <탈선으로 얼룩진 6·8총선>, <여수·별교선 공개투표>, <신민당 참관인을 축출>, <투표통지표 매매>, 《동아일보》 1967. 6.8 (7) : <난장판>, <투표소에 괴한 난입>, <환표>, <무더기 투표>, 1967. 6. 9 (3) ; <신민표에 인주 문혀 무효화>, 《동아일보》 1967. 6. 10(7)

8) <헌정 초유의 일당 국회 개원>, 《신동아》 1967. 8. 194쪽

9)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동아일보》 1967. 6. 9 (1)

10) <부정규탄 데모>, 《동아일보》 1967. 6. 9(3) ; <백 여 신민당원 데모>, 《동아일보》 1967. 6. 10(7)

선거일 다음날 자연발생적인 시위는 잦아들었지만 학생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규탄대회와 시위가 일어나면서 신민당도 규탄투쟁을 강화했다. 6월 13일 중앙당에서 유진오 당수와 당선자 44명을 포함한 100여명의 당원들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훈동의 신민당사에서 광화문 중앙청까지 시위를 벌이다. 경찰기동대에 해산되었고¹²⁾, 광주·충무·보성·영천·장흥·대구·울산·양평 등 각지에서 신민당원들이 민주주의의 상여를 메고 시위를 벌이는 등 부정선거에 항의했다.¹³⁾

6월 14일 신민당은 “6·8 선거무효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¹⁴⁾ 6월 16일 신민당의 투위는 국민대회와 병행하여 전국에 부정선거 조사단을 파견했다. 6월 14~15일을 전후하여 고교생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는 등 저항이 격렬해지자 공화당은 말썽 많은 6개 지역의 당선자를 제명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개탄하지만 냉정을 찾아서 법의 권위를 믿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¹⁵⁾

신민당은 6월 19일 당사에서 규탄대회를 강행하고 6·8총선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유진오 당수, 윤보선, 장준하, 함석헌, 김대중 등이 연설하였고 결의문을 발표한 뒤 가두행진에 나섰다. 경찰이 저지하자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¹⁶⁾ 또 당선자들이 등원을 거부하여 7대 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정부와 공화당은 일단 단독국회를 개원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협상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당 차원의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신민당이 공화당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부정선거 규탄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1967년 11월 29일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마쳤다.

11) 〈천여중고생 데모〉, 《동아일보》 1967. 6. 10 (7)

12) 〈신민 재선거 절규〉, 《동아일보》 1967. 6. 13 (7)

13) 〈지방 곳곳에서도〉, 《동아일보》 1967. 6. 13(7)

14) 〈오늘 투위를 구성〉, 《동아일보》 1967. 6. 14(1)

15) 《동아일보》 1967. 6. 16(1)

16) 〈신민, 규탄대회 강행〉, 《동아일보》 1967. 6. 20(1) ; 〈힘에 꺾인 부정규탄〉, 《동아일보》 1967. 6. 20(7)

3) 학원의 부정선거 규탄투쟁

신민당도 부정선거 규탄에 참가했지만 6·8부정선거 규탄투쟁에서 중심이 되었던 것은 역시 학생운동이었다. 2년 뒤 삼선개헌 반대투쟁에서도 그랬지만 67년의 6·8 부정선거 규탄투쟁에서도 학생들은 재야나 정치권과 특별한 연계 없이 반독재 운동을 전개하였고, 실제 부정선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6·8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학생들은 “허약한 후진국의 민중을 대변할 사명감이 있고 타협을 배제한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에서 민중의 힘을 과시하는 시위¹⁷⁾”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6·8 부정선거에 대한 첫 반응은 학내의 소규모 성토대회였다. 먼저 선거 다음날인 1967년 6월 9일 오후 4시 연세대 서클 〈한국문제연구회(한문연)〉가 중심이 되어 광복관 107호실에서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온갖 부정으로 이루어진 6·8총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여 민권의 수호를 외치며 “6·8 총선을 암흑과 폭력, 금력으로 치러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정부는 총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 더불어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입후보자들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¹⁸⁾ 학교 당국에 의해 5분 정도 후 해산되기는 했으나, 학생운동 진영 최초의 대응이었다.

학생운동 진영은 6월 12일경부터 본격적인 집회와 시위로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1967년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 법대생들 500여 명은 합동강의실에 모여 긴급학생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6·8선거가 ‘우발적, 국부적이 아닌 전반적·조직적·계획적·지능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공무원을 사병화하고 국민을 매수, 사기, 협박, 기만함으로써 이루어진

17) 〈대학악순환의 종점은?〉 《대학신문》 1967. 8. 28(3) 좌담회 가운데 조영래(당시 법대 3학년)의 발언. 서울대 대학신문사는 67년 2학기 개강 이후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문리대에서는 장영국(사회학과 3학년), 법대에서는 조영래가 학생대표로 참여했다.

18) 〈9일 부정선거 규탄〉, 《연세춘추》 1967. 6. 12 (1)
〈6.8 총선 규탄 2백여 연세대생〉, 《동아일보》 1967. 6. 10(7) 《동아일보》에는 연세대 정치학회 학생이라고 되어 있으나 《연세춘추》의 기사가 더 정확하다.

6·8선거는 금력, 탈각, 사기, 폭력, 부정, 관권 선거로서 빛나는 4.19 정신의 모독”이며 “정부와 여당은 6·8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자인하고 국민적 재심판을 받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결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스스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학생총회를 마치고 12시 20분 본격적인 거리시위에 나선 이들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 “7대 국회 무효다”, “민주주의 사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 이화동 입구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된 이들은 우회하여 명륜동 입구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165명이 연행되었다. 더 이상 진출이 좌절되자 서울법대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항의 농성을 벌였고 연행학생들이 석방되자 일단 농성을 풀었다.¹⁹⁾ 또 경북대 법정대생 30여 명도 6월 12일 낮 12시 50분 부정선거 성토대회를 개최했다.²⁰⁾

대학당국은 학생시위가 확산되자 무조건 임시휴업으로 학교 문부터 단으려 하였다. 서울대학은 법대생들의 대규모 시위 직후인 6월 12일 오후 4시 긴급 학장회의를 열고 “부정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학원의 질서를 보호하고 제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임시휴업을 한다고 발표했다.²¹⁾

그러나 13일부터 시위는 대학가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당국이 임시휴업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3일부터 더 격렬한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벌였다. 6월 13일 9시 휴교 조치로 학교 입구가 봉쇄된 문리대 정문에 3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학교의 휴교조치에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중 50여 명이 맞은편 의대 정문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강제로 농성을 해산시키자 이들은 법대 구내로 진입하여 법대생들과 합류하였다. 이렇게 합류한 200여 명의 문리대, 법대 학생들은 곧바로 6·8선거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리대 학생회 이름으로 <6.8부정선거를 통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서울법대생들 데모>, 《동아일보》 1967. 6. 12 (7)

<정치열풍에 휩쓸린 학원>, 《대학신문》 1967. 8. 7 (3)

20) <경북대 법정대생도 성토대회 열어>, 《동아일보》 1967. 6. 12(3)

21) <서울대 11개 단과대 휴업령>, 《동아일보》 1967. 6. 13(7)

6.8부정선거를 통탄한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회

한국의 민주주의여! 너의 험난한 투쟁의 역사는 이제는 한갓 금권과 관권의 노리개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막걸리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신성한 국민의 주권, 부정과 타락으로 일관된 정치인의 양심이 엄청나게도 오욕된 조국의 현실은 또다시 우리의 젊은 피로써 씻겨져야 하는가!

3.15부정선거의 끔찍한 말로가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니며, 자유와 정의를 절규하고 쓰러져간 4.19의 기수들이 쟁취해 놓은 민주주의의 승리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민주주의의 첩경인 공명선거의 깃발은 권력욕과 탐욕된 반민주지2단의 횡포 앞에 무참히도 꺾이었다.

공짜 막걸리로 비틀거리는 주권의식이 민족정기의 쇠신인가? 유명투표까지 동원해야만 대중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막대한 선거자금을 뿌려서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인가? 근대화의 신앙이란 새로운 종교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우리의 이성도 너의 그 방종한 만행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도다. 방대한 조직과 금력으로 무장된 부정선거 주구들을 우리는 민족의 이름으로 서슴지 않고 단두대에 올리노라. 여지없이 유린당한 민주선거의 참상을 통곡하며 정의의 힘을 조롱하는 폭력배의 검은 심장에 우리는 차디찬 지성의 창을 던지노라.

친구여! 동포여! 질식하려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대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오너라, 가자.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순교의 길로!

1967년 6월 13일

서울대 문리대생들과 법대생들은 함께 〈서울대 민주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이현배, 사학과 64)〉를 결성하였다. 서울대민주수호투쟁위원회는 총학생회가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투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이후 6·8부정선거규탄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오전 11시 학교 밖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경찰과 충돌한 이들은 돌아와서 문리대 교정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상대생 250여 명도 13일 오전 10시 휴교령으로 교문이 닫힌 가운데도 담을 넘어 강당에 집결하여 6·8부정선거 성토회를 열고 “① 6·8부정선거에 관련된 선

거사범을 철저히 색출·처단하며 ② 학원의 정상수업을 계속토록 보장하라 ③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의했다. 서울공대생들도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숙사 광장에서 성토대회를 열었으며 사대생들도 오전 10시부터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 이름으로 타락선거의 발본색원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 이들은 정부여당에게 부정타락선거를 국민에게 사죄하며 선거를 무효화하며 책임자를 처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 농대생 700여 명도 오전 10시부터 강당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부정선거를 전국적으로 무효화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²²⁾ 또 서울대 미대에서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토대회가 개최되었다.

고려대에서는 민권수호투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3,0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6월 13일 오전 11시 부정선거 규탄대회가 열렸다. “6·8선거는 완전 무효” 등의 구호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교내 곳곳에는 “사상 최악의 6.8부정총선이 우리로 하여금 4.18을 상기케 한다”는 내용의 격문이 나붙은 가운데 〈弔民主主義〉라고 쓰여진 흉장을 달고 집결한 고려대생들은 민권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²³⁾ “부정 불법선거의 표본인 6·8선거의 죄악상을 규탄하고 민권을 수호”할 것을 결의하였다. 고려대 민권수호투쟁위원회는 선언문에서 “공포, 폭력, 금력, 대리공개, 탄압, 기만, 난동 등 부정선거의 기념비가 될 6·8 선거를 통한 압제의 사슬이 국민 대중의 신성한 기본권마저 포박하는 차제에 우리들 민권수호 투쟁의 대열에 포열한 진정한 민주세력은 반민주세력과의 선전포고를 받으며 이 대열의 전우들은 부정선거의 원흉이 쓰러지고 박멸되는 순간까지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빈사지경에서 고열을 앓고 있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사장 내지 구타당한 민권을 되찾고자 부정·불법선거의 표본인 6·8선거의 죄악상을 규탄하며 자유와 정의의 종을 난타하면서 독재정권의 압제에 대해 무제한의 장기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하였다. 성토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가두 시위를 벌일 것을 결의하고

22) 〈부정선거 규탄 데모〉, 《동아일보》 1967. 6. 13(7)

23) 〈부정선거 규탄 데모〉, 《동아일보》 1967. 6. 13 (7)

윤준하의 증언에 의하면 64학번의 고광철, 정성원, 윤무한 세 사람이 주도하였고 정성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

〈3.1절 노래〉, 〈구교가〉를 부르며 교문으로 진출하였고 안암동 로터리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투석전을 벌이다 일단 학교로 돌아왔다. 이들은 강당에 다시 모여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고 오후 1시 25분경 다시 “부정선거가 근대화냐”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학교 밖으로 진출, 경찰과 충돌하였고 일부 학생들은 동대문-청계천-시청 앞까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시위로 300여 명의 고대생들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3명은 곤봉과 최루탄에 부상당해 입원하기도 했다.²⁴⁾

연세대 학생들은 13일 정오 채플을 끝낸 다음 2,000여명이 참가한 부정선거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이후 500여 명이 “막걸리 선거 왜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촌으로 진출하여 시위를 벌였다. 성균관대 학생 300여 명도 오전 11시 30분 부정선거의 무효화와 선거책임자 단죄를 요구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에 서울대 문리대·법대생들과 가두에서 합류하여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건국대 학생들은 오전 10시 본부 앞에서 성토대회를 열었고 경희대생도 1천여 명이 참가한 부정선거규탄 성토대회를 열었다.²⁵⁾

6월 13일부터 고교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13일 오전 서울 대광고교 학생 1천여 명이 “4.19는 죽었는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고 보성중고생 600여 명도 교문을 나서 시위를 벌였다.²⁶⁾ 고교생들의 시위는 대학생들만큼 조직적이거나 지속적이지는 않았지만 반독재 운동의 확산에는 크게 기여했다. 13일 시작된 고교생의 시위는 계속 확산되어 16일 정점에 이르게 된다.

휴교조치가 확산되었어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6월 14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생 1500여 명이 6·8부정선거성토대회를 개최하여 총선무효화와 즉각 재선거를 촉구한 다음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으며, 경희대생 1,000여 명도 14일 오전 10시 성토대회를 연 다음 스크림을 짜고 회기동 로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한편 이들이 고대 정문에 이르자 성토대회를 열고 있던 고려대생 600명이 합류하여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²⁷⁾ 고려대생들은 오후 2시 30분 당시 국립극장 앞에서 재

24) 〈부정선거를 규탄〉, 《고대신문》 1967. 6. 24(3)

25) 〈부정선거 규탄 데모〉, 《동아일보》 1967. 6. 13(7)

26) 〈천명 고교생도 성토〉, 〈중고생 5백명도〉, 《동아일보》 1967. 6. 13 (7)

27) 〈부정선거 규탄 데모〉, 《동아일보》 1967. 6. 14(3)

집결하였다. 이들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화당사까지 진출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연행 해산되었다. 학교로 돌아온 고려대 학생들은 오후 7시부터 학교 강당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6월 15일 오후 7시 <6·8선거 화형식>을 거행한 다음 농성을 끝내고 해산했다.²⁸⁾

연대생 2,000여 명이 오전 11시 40분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이대입구까지 진출하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곤봉으로 구타하여 해산시켰으며 이 와중에 5명의 학생이 부상하고 220명이 연행되었다. 그 외 한양대생 1,700여 명, 중앙대생 1,500여 명, 부산대생 2,800여 명도 성토회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벌였다.²⁹⁾

서울대에서는 문리대 교정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던 문리대, 법대, 상대생 300여 명이 6월 13일 밤 <망국투표함 소각식>을 열고 민주주의의 교두보인 선거의 공명성을 사수할 것을 호소했다.³⁰⁾ 이들은 이튿날 6월 14일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전국 학생·국민·각 정당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학생들의 농성과 시위가 계속되면서 서울대 문리대와 법대를 관할하던 동대문 경찰서가 농성학생들을 전원 연행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었고, 학교당국은 최문환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해산을 종용했다. 학생들이 응하지 않자 교직원들이 학생을 한 사람씩 직접 끌고 나가 대기 중인 버스에 태워 귀가시키기에 이르렀다.³¹⁾

6월 14일 고교생 시위도 점점 확대되었다. 서울 시내에서만 성남고, 중앙고, 보성고, 중동고, 서울공고 학생들이 교정에서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열었고 이후 학교별로 수백명의 학생들이 가두로 진출하여 시위를 벌였다.³²⁾

부정선거 규탄투쟁이 격렬해지면서 휴교도 확산되었다. 6월 13일 고려대와 건국대, 성균관대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14일 오전에는 경희대, 동국대, 연세대가 무기한 휴업, 중앙대·한양대는 11일간, 단국대는 4일간 휴업에 들어갔다.³³⁾

28) <부정선거를 규탄>, 《고대신문》 1967. 6. 24(3)

29) <부정선거 규탄데모>, 《동아일보》 1967. 6. 14(3)

30) <교정서 철야 농성>, 《동아일보》 1967. 6. 14(3)

31) <정치열풍에 휩쓸린 학원>, 《대학신문》 1967. 8. 7 (3)

32) <고교생 데모>, 《동아일보》 1967. 6. 14(3)

33) <11개 대학교 임시 휴업>, 《동아일보》 1967. 6. 14(3)

15일에는 우석대, 서강대, 홍익대, 국민대, 한국신학대, 명지대, 감리교 신학대, 인하공대, 수도공대, 조선대가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22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졌다. 서울대 당국은 6월 17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휴교 이후에도 시위가 완전히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6월 19일 ‘당분간’ 휴교를 결정했으며 이어 7월 5일 단과대학 별로 조기방학을 실시했다.³⁴⁾

고교생 시위가 확산되자 고등학교에도 휴업령이 내려졌다. 문홍주 문교부 장관은 데모가 일어나면 중고교도 휴업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미 6월 15일 17개 중고교가 휴업상태에 있었다.³⁵⁾ 시위가 대학은 물론이고 고교로까지 확산되자 치안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6월 15일 치안국은 학생 시위 참가자들을 그 경중에 따라 구속할 방침을 밝혔다.³⁶⁾

6월 15일 휴교령이 내린 와중에도 규탄투쟁은 계속되었다. 연세대생 300여 명, 광운전자공대와 한국외국어대생 400여 명, 가톨릭의대생 300여 명, 홍익대생 50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고, 숙명여대는 전교생이 대강당에 모인 가운데 부정선거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날 고교생들의 시위는 훨씬 격화되었다. 동성고, 배재고, 양정고, 용산고, 동대문상고, 서울상고, 삼선고교, 청송전기고, 경희고, 한성고, 단국고, 균명고, 중앙고, 대동상고, 용산고, 숭실고, 마포고, 청량리중고, 광운전자공고 등 20여 개교 학생 1만여 명이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시내로 진출하여 가두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공화당사, 국회의사당, 중앙청 부근까지 진출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기까지 했다.³⁷⁾

6월 16일 휴교가 지속되면서 대학생들의 시위는 줄었지만 고교생들의 시위는 여전했다. 이날 경기고·휘문고·중앙고 학생 1,000여 명이 연합해서 시민회관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던 것을 비롯해서 청량중고, 서울북공고, 인창고, 한성고, 동대문상고, 경동고, 삼선고, 서라벌예고, 고명고, 성북고, 강문고, 광신고, 광운전자공고 등

34) 휴교 또는 휴업령이 해제되지도 않은 채 조기방학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위가 격렬할 때 60년대 대학당국의 상투적인 대응책이었다.

35) <11개 대학 또 휴업>; <중고교에도 휴업>, 《동아일보》 1967. 6. 15(7)

36) <오늘부터 강권발동>, 《동아일보》 1967. 6. 15 (7)

37) <규탄데모 나흘째>, 《동아일보》 1967. 6. 15(7)

약 6,000명의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휴교 중이던 서울대 학생들도 학생 총회를 위해 문리대에 모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하자 이화동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대 음대로 들어가 농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이 학생의 등교를 봉쇄하는 사태에 분개하여 부정선거무효화만이 아니라 학원자유화투쟁도 벌여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³⁸⁾ 이날 서울신학대생 200여 명도 성토회 후 가두로 진출했고, 전국의 28개 대학과 129개 고교가 휴업에 들어감으로써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휴교 중인 가운데서도 대학생들의 농성이 계속되었다. 연세대 기독교학생회원들이 15~17일간 단식구국기도회를 열었고 한국외대생 150명도 15일 밤 부정선거 화형식을 가진 뒤 16일까지 농성했다. 연세대 의대생 160여명은 15일부터 17일까지 농성하면서 6·8선거의 무효와 휴교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10시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6·8악성중앙 절제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다.³⁹⁾

6월 21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5개 대학 학생대표 10여 명이 모여 ‘부정부패일소 전국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규탄하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여기에는 각 대학의 투쟁위원회 대표들이 참가하였는데, 서울대 민주수호투위, 고려대 민권수호투위, 연세대 6·8부정선거완전무효화투위, 성균관대 주권쟁취투위, 건국대 부정선거무효화투위 등이었다. 이들은 6·8선거는 망국적 부정선거로, 일부 지역적 부정선거라는 정부의 주장은 부정을 자기합리화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선거사범을 엄단하는 것은 학생 요구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 강조하면서, 정부당국에 대학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⁴⁰⁾ 이들은 각 대학이 그때까지 산발적으로 벌여온 6·8부정선거 무효화 투쟁을 범대학 범국민운동으로 펼칠 것이라 천명했다. 곧 이어 ‘부정부패일소 전국학생투쟁위원회’는 각 대학 학생회장단과 공동행동을 취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휴교가 해제되어 다시 등교한 7월 3일 서울 시내의

38) <규탄데모 닷새>, 《동아일보》 1967. 6. 16(3)

39) <연세대 단식 사흘>, 《동아일보》 1967. 6. 17 (7)

40) <부정부패일소 학생투위 구성>, 《동아일보》 1967. 6. 21 :<부정선거를 규탄>, 《고대신문》 1967. 6. 24(3)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공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함께 시위를 진행하는 데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휴교령이 내린 가운데 6월 27일에는 경희대생들이, 29일에는 연세대생과 중앙대생들이 성토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으며, 6월 30일에는 성균관대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특히 6월 30일 고려대에서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려대 민주수호투쟁위원회가 주최한 “6·8부정선거 규탄 및 학원주권 수회궐기대회”가 열리기도 했다⁴¹⁾.

7월 3일 서울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휴업을 해제하고 등교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기말 시험일정을 거부하고 성토회와 시위에 나섰다. 이날은 부정부패일소 전국대학생투위와 각 대학 학생회장단이 공동 발표한 7·3선언문과 결의안을 내세우고 시위가 진행되었다.⁴²⁾ 이 〈7·3선언문〉은 휴교, 조기방학, 연행, 구속 등 어떤 탄압에도 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선언하고, ① 6·8부정선거 당선자들은 즉각 총사퇴하고 정부는 전면재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② 학원을 상업체나 정치의 사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문교부 장관을 인책 축출할 것을 요구했다.⁴³⁾

이날 고려대생 2천명, 연대생 3천명, 경희대생 2천5백명, 동국대생 1천명, 중앙대 4천명, 숭실대 600여 명 등이 성토회나 시위에 참가했고, 한국외대, 서울시립농대, i강대, 성균관대, 단국대, 경기대, 홍익대, 숙명여대생들이 성토회를 열었다. 또 충북대생 200여 명도 성토회 후 시위를 벌였다.⁴⁴⁾

휴업을 풀자마자 극심한 시위가 시작되자 20개 대학이 조기방학을 실시했다. 이 후 7월에는 주로 지방대학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7월 5일 부산대생 2천여 명이 성토회를 열었던 것을 비롯해서, 원광대생 300여 명 부정선거규탄대회 개최하고 20여 명의 학생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⁴⁵⁾ 7월 6일 오전에는 경북대생 1천여 명이 부정선거 반대시위를 벌였고⁴⁶⁾, 7월 7일 공주사대생 300여 명 6.8부정선거규탄대회

41) 〈천여 고대생 규탄데모〉, 《동아일보》 1967. 6. 30(3)

42) 〈기말 시험 거부 대학생 데모〉, 《동아일보》 1967. 7. 3(3)

43) 〈주권을 말살〉, 《동아일보》 1967. 7. 3(3)

44) 〈충북대생 데모〉, 《동아일보》 1967. 7. 3(3)

45) 〈부정선거 규탄〉 《동아일보》 1967. 7. 8 (3)

46) 〈경북대생 또 데모〉, 《동아일보》 1967. 7. 6

를 열고 공주 4.19 기념탑까지 행진했다.⁴⁷⁾

8월말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원이 문을 열자 부정선거 규탄투쟁도 재개되었다. 1967년 8월 21일 2학기 개학을 맞이한 서울대에서는 문리대와 법대생들이 8월 21일, 상대생들이 8월 22일 부정선거 규탄을 계속했다. 서울법대생 300여 명은 8월 21일 오전 10시 법대 합동강의실에서 학생총회를 열어, 박정희 정권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 이후 사태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규탄하고 9월 초부터 다시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제2선언문을 발표했다. 제2선언문은 특권세력이 대중의 경제적 파탄 위에서 확대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시를 진단하고 대학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7대 국회를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서울대 문리대생들도 8월 21일 오전 11시 50분경 교내 4·19 기념탑 앞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이날 문리대 학생회가 발표한 〈제3차 성명서〉는 조기 방학을 끝내고 돌아온 학생들의 심정을 “민족의 靑史에 오점을 남긴 부정을 망각하기에는 우리의 지성은 너무도 엄정하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작된 오랜 방학의 무더움 속의 일상도 지났으나 이제도 어제의 불행한 잔영을 버리지 못한 채 음울한 심정으로 그리던 학원에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문리대 학생총회는 방학으로 중단되었던 부정선거규탄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문교부장관에게 졸렬한 학원탄압을 중지할 것, 대통령에게 과감한 단안으로 현 사태를 수습할 것을 요구하는 5개 항의 결의사항을 채택하였다.⁴⁸⁾

또 서울 상대생 200여 명도 8월 22일 임시학생총회를 열었다. 이들도 “타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침묵의 자세는 굴종하는 긍정의 깃발을 거둬들여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히고 6·8 부정선거 이후 빚어진 정치 부재의 현실을 통탄하고 정치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 투쟁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뤄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적극적인 투쟁을 재개하기로 결의하였다.⁴⁹⁾ 9월 11일 서울상대에서

47) 〈공주사대생 데모〉, 《동아일보》 1967. 7. 8(3)

48) 〈각 대학 개학〉, 《동아일보》 1967. 8. 21; 〈부정선거 규탄성도 벌여〉, 《대학신문》 1967. 8. 28(1)

49) 위의 《대학신문》 기사

다시 시위가 일어나 6월 이후 처음으로 학생이 제적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⁵⁰⁾

그러나 전반적으로 8월말 이후 2학기에 접어들면서 부정선거 규탄투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1967년 9월 이후 정치권 내에서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6·8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반대하는 대중적인 운동은 더 이상 전개되지 않았다.

2. 1969년 삼선개헌 반대투쟁의 전개

1) 1968~1969년의 정치상황과 박정희 정권의 삼선개헌

3공화국의 헌법 제 69조 3항은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을 고쳐서 박정희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화당은 1967년 6.8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근 6개월의 파행을 겪으면서도 원내 2/3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려니 걸리는 문제들이 꽤 많았다. 야당과 학생들의 저항은 물론이거니와 공화당 내에서 반발부터 없어야 했다. 박정희 정권의 핵심인 중앙정보부장 김형욱과 비서실장 이후락, 그리고 공화당 내 반김종필 세력들은 1968년 내내 공화당 내 정지작업을 진행했다.⁵¹⁾ 공화당의 백남익, 길재호, 김성곤, 김진만 네 사람이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등 당내 요직을 차지하여 이른바 ‘4인 체제’를 구축한 다음 개헌반대 세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먼저 1968년 5월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김종필 측근인 김용태 의원이 제명당했고 여기에 반발한 김종필은 정계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개헌추진 세력들은 1968년 1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개헌논의를 끄집어냈다. 공화당 당의장 서리 윤치영은 1968년 12월 17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을 단행하겠

50) 〈6·8 총선부정규탄 데모·휴업·방학〉, 《대학신문》 1967. 12. 4(4)

51) 공화당 내 비주류-반김종필파는 대부분 영남출신의 자유당계 정치인들이었다. 김일영, 1999, 〈1960년대 정치지형 변화 -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형성〉, 《1960년대 정치사회 변동》, 백산서당, 347쪽

다고 하였다. 이어 사무총장 길재호는 1969년 1월 6일 헌법 개정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다음날 1월 7일 다시 윤치영이 조국근대화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헌문제를 연구해야 하며, 민족중흥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연임금지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²⁾ 이어 1월 9일 정책위원장 백남익이 당무회의에서 다시 삼선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⁵³⁾ 개헌추진파들은 현재의 야당은 퇴폐한 이합집산과 이질적 세력 간의 분과 다툼으로 집권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신민당에게 정권을 넘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공화당의 경우도 권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박정희를 대체할 지도자가 부각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치적 안정과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권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⁵⁴⁾

이렇게 당 일각에서 개헌논의를 진행하자 바로 다음날 인 1월 10일 박정희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에 개헌할 의사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연말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⁵⁵⁾ 2월 4일에는 공화당 내에서 개헌을 거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2월말 尹致暎 공화당 의장 서리는 개헌은 정세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언명하였으며,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공화당 내 개헌추진파들은 지속적으로 개헌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공화당 내 개헌반대파들은 1969년 4월 8일 신민당이 제출한 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찬표를 던져 가결되도록 했다. 이 4.8항명 사건이 벌어지자 박정희는 주동자를 색출하도록 강력히 지시했고, 4월 15일 양순직·예춘호·김달수, 박종태 등 5명의 의원과 93명의 당원이 공화당에서 제명되었다.

이들을 제거한 후 개헌추진파들은 본격적으로 반대파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5월 7일 윤치영 공화당 의장서리는 충분한 시기를 두고 개헌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당원을 대상으로 개헌설문조사를 지시했다.⁵⁶⁾ 특히 반대세력의 핵심이던 김종필이 태도를 바꾸어 1969년 6월경부터 개헌을 설득하고 다니면서 공화당 내 반대

52) <헌법개정 연구할 수도 - 尹致暎 공화의장서리 기자회견>, 《조선일보》 1969. 1. 8(1)

53) <개헌논의 공식화된 느낌>, 《조선일보》 1969. 1. 9(2)

54) 송효익, 1969, <반개헌체제를 진단한다>, 《사상계》 1969.7 54쪽

55) <개헌논의 꼭 필요하다면 연말에 해도 늦지 않을 것 - 朴대통령 연두회견>, 《조선일보》 1969. 1. 11(1)

56) <개헌 공식거론준비>, 《조선일보》, 1969.5.8(1)

세력은 실질적으로 소멸했다.⁵⁷⁾

1969년 7월 17일 박정희는 제헌절 기념치사에서 개헌논의는 자유권의 문제라 하더니, 7월 25일에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 ① 기왕에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통해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 ②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에는 그것이 곧 나와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 ③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

고 하면서 여당에게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지시했다.⁵⁸⁾ 이후 정부 여당은 준비해온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하는 한편,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일부를 매수하여 개헌안에 찬성하도록 공작을 벌이는 등 개헌안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969년 7월 28일 공화당은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개헌안을 확정하였는데, 삼선 연임을 허용하고 각료의 국회의원 겸직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어 8월 7일 윤치영 외 121명의 국회의원(공화당 108명, 정우회 11명, 신민당 3명)의 명의로 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야당과 재야의 삼선개헌 반대투쟁

(1) 1969년 전반기 야당과 재야의 삼선개헌 반대

1969년 1월 13일 신민당은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에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1월 14일 호헌 5인위원회를 구성했다. 3선개헌 반대 투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호헌 5인 위원회는 전당대회 의장 김의택, 중앙상임위원장 조영규, 정책위원장 정현주, 사무총장 고흥문, 원내총무 김영삼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봉쇄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반대 유세를

57) 예춘호, 《예춘호 정치회고록, 그 어두움의 증인이 되어》, 94쪽
김일영, 1990, 앞의 글, 348쪽

58) <박정희 대통령 삼선개헌에 대한 특별담화 전문>, 《사상계》 1967. 7 129쪽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결정했다.⁵⁹⁾ 이어 1월 15일 신민당 유진오 총재는 당의 운명을 걸고 개헌을 저지할 것이며 사태에 따라서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⁶⁰⁾ 신민당은 개헌저지 투쟁기구를 당내와 당외에 모두 결성하기로 했는데 당내에는 당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삼선개헌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⁶¹⁾.

한편 1969년 2월 3일 5.16 이후 제정된 정치활동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을 제한 받던 바람에 재야에 머물러 있던 김상돈, 김영선, 이철승, 윤길중 등이 ‘3선개헌반대 범국민 발기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⁶²⁾, 2월 11일에는 이들과 신민당이 단일 기구를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신민당은 개헌저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문에 尹潏善-朴順天씨 추대했으며, 3월 31일 연합전선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실 신민당과 당시의 재야인사(70년대와 달리 이 시기 재야 인사는 종교계나 학계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정화법 해금인사들이 중심이었다.)들은 1968년 11월부터 범투위 구성문제를 협의해 오다 이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1969년 4월 초 신민당과 재야 인사 14명으로 개헌저지국민투쟁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⁶³⁾

그러나 실제로 범국민투쟁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7월 17일이 되어서였다. 이렇게 지연된 것은 위원회 내부의 입장 차이나 발기인 교섭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우선 신민당의 당내 갈등과 전당대회가 첫째 이유였다. 신민당이 개헌 저지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은 1969년 5월 21일의 전당대회부터였다. 이에 앞서 5월 17일 서울에서 개헌저지 연설회를 처음 열기는 했다. 그러나, 주류와 비주류의 대립이 하도 심했던 터라 전당대회에서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면 “제일 야당으로서 체면을 잃고 하나의 투쟁정당으로서 운명에 종언을 고할 뻔한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까지 관측될 지경이었다. 개헌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위기를 절감한 신민당의 주류와 비주류는 자리 안배를 통해 내분의 위기는 수습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수 유진오는 개

59) <3월에 호헌유세>, 《동아일보》 1969. 1. 16(1)

60) <3선개헌저지에 총력>, 《동아일보》 1969. 1. 17(1)

61) <신민개헌저지 이원조직>, 《동아일보》 1969. 1. 18 (1)

<개헌저지에 이원조직>, 《조선일보》 1969. 1. 17(1)

62) <정치정화법 해금인사 개헌반대 투쟁. 발기위를 구성>, 《조선일보》 1969. 2. 4 (1)

63) <신민해금인사14명 개헌저지준위 대표>, 《조선일보》 1969.4.5(1)

헌저지가 신민당의 최대과제라 천명했으나⁶⁴⁾, 류진산 등 주류와 정일형 등 비주류 등 과별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심각했다.⁶⁵⁾

신민당의 전당대회 이후 정치권은 개헌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1969년 6월 5일 YMCA 강당에서 신민당과 재야 인사들이 '3선개헌반대 범국민 투쟁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위원장에 김재준 목사를 선출했다. 그러나 6월 7일부터 대학생들이 본격적인 3선개헌반대 투쟁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었지만, 정치권은 6월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6월 28일 신민당 유진오 총재 등이 개헌이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개헌저지 유세를 벌였으나,⁶⁶⁾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투쟁은 지지부진했다.

(2)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의 결성과 활동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이하 범투위)는 7월 중순 경 가동하기 시작했다. 1969년 7월 17일 제헌절을 기해 정식으로 발기인 대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재준 목사를 선출하고 윤보선, 유진오, 함석헌, 이재학, 박순천, 장택상, 이회승, 김상돈, 정화암, 임영창 등을 고문으로 추대했다.⁶⁷⁾ 또 범투위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삼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선언문⁶⁸⁾

우리나라는 해방과 함께 삼팔선을 경계로 공산독재체제와 자유민주체제의 세계사적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를 확립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자유진영 전체가 요구하는 지상명령이다.

(중략) 우리가 외치는 반공은 반공을 위한 반공이 아니라 자유민주체제의 확립과 신장을 위한 승공인 것이며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 역시 자유민주체제 하에서 통일인 것은 우리 국민의 고귀한 불문율이다.

64) 〈俞鎭午총재 연설문〉, 《조선일보》 1969. 5. 22(1)

65) 〈전열 가다듬은 신민당 전당대회〉, 《신동아》 1969. 7

66) 〈신민당 俞鎭午총재 등 부산서 저지 유세〉, 《조선일보》 1969. 6. 29 (1)

67) 〈범국민투위 발기대회〉, 《조선일보》 1969. 7. 18 (1)

68) 《사상계》 1969년 7월호 132~133쪽

六·二五 공산침략에 대결하여 세계자유진영 16개국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군민(軍民)이 피흘린 것도 이 자유민주의 제단이었으며 사월혁명의 정신도 이 자유민주에의 헌신이였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자유민주체제의 방향을 경시, 왜곡, 또는 역행하는 정권이나 운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민족사의 이단이다.

박정권 10년의 집권기록은 어떠한가? 자유민주체제의 마비와 말살을 지향하고 있다.

- ① 학원은 세밀한 데까지 정부의 지시에 굴종하게 되고, 구김살 없는 민족정기의 기수인 젊은 학생들의 바른 외침은 무장경찰의 폭력 밑에 무자비하게 유린되고 있고, 국민의 자녀교육과 인재육성에 무리한 제재를 가하여 인물한국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 ② 언론은 취재와 비판의 자유를 대폭 상실하였고 특히 정부에 대한 솔직한 비판은 거의 함구에 가까운 형편이다.
- ③ 국회는 부정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절대다수의 여당위원과 소수의 야당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의 시녀화한 무력한 허수아비로 전락하여 변칙, 횡포의 의사진행 등으로 민주헌정의 미덕을 상실한지 오래다
- ④ 사회는 대체로 공범(公法)이 집권자의 도구로 악용되고 자금이 매수의 만능약(萬能藥)으로 신봉되는 오염기류에 덮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침묵속에 감금되고 사찰이 악의 진원지를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제 절대 권력의 절대부패현상이 각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 ⑤ 박정권이 가장 과시하는 <경제건설>은 어떠한가? 부패, 의혹 및 특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농촌은 거의 전적인 몰락과정을 밟고 있다. 소수의 특혜기업도 속속 부실기업화하여 도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삼(數三)의 정상재벌(政商財閥)이 남을지 모르나 부의 과대점병 때문에 전 국민의 원부(怨府)로 화하고 있다. 고속도로, 고층건물, 공업단지 등이 건설한 경제원리보다도 정권연장을 위한 전시효과를 앞세우며 무리하게 결행되어 종내 국가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것은 과잉의욕과 시행착오 정도로 눈가림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저주를 우리 역사에 심어놓은 경제민주화의 역행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는 자존망대(自尊妄大)하여 일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삼선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배신과 우롱에 주권자인 국민이 묵종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 한국의 임종을 최촉(催促)하는 것밖에 다른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중략)

박정권은 북괴침공의 위협을 선전한다. 그러나 박정권 자신이 민주국민의 충고를 무시하고 헌정을 말살하는 삼선개헌을 강행하여 국론분열과 사회의 격동을 조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북괴의 흉계에 호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삼선개헌을 강행하여 자유민주에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도 현혹됨이 없이 헌정 이십여년간 모든 호헌세력들의 공통된 신념과 결단 위에서 전국민의 힘을 뭉쳐 단호히 이에 대처하려 한다. 집권자에 의해서 자유민주에의 기대가 끝내 배반당할 때, 조국을 수호하려는 전 국민은 요원의 불길처럼 봉기할 것이다. 우리는 날로 그 우방을 확장시키고 있고, 선악의 대결과 진부(眞否)의 결전에서 용솨음치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자유국민의 조국은 영원하다.

영원한 조국을 가진 국민은 용감하다.

전 국민이여! 자유민주의 헌정수호대열에 빠짐없이 참여하라.

1969년 7월 17일

투위의 발기인은 당초 이백오십명선이었는데 나중에 330명선으로 늘어났다. 신민당 소속 의원 46명 전원과 발기준비위원 25명, 원로 17명이 참여하였고, 나머지는 신민당의 원외 위원장 등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김재준 목사는 위원장 겸 운영회의 의장이었고, 산하에 사무국과 기획, 조직, 선전, 청년, 인권, 부녀, 원내 위원회를 두고 서울, 부산과 각 시도에 지방조직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방에서는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위에 가담한 정당의 지구당은 삼선개헌 저지 투쟁에 관해서는 범국민투위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고 하여 신민당 지방조직을 이용했다.⁶⁹⁾

신민당은 7월 19일 서울에서 시작하여 7월 26일에는 군산 등 전국에 걸쳐 반대 유세를 시작했다. 신민당은 원내·외에서 동시에 투쟁을 전개한다는 전략 하에 원내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면서 개헌안 발의 자체를 차단하고, 원외에서는 개헌반대 유세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려 했다. 그런데 1969년 7월 29일에는 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홍만 의원이, 30일에는 연주흠 의원이 3선개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⁷⁰⁾ 중앙정보부의 개헌공작이 성과를 거둔 것이었는데, 이들 개헌지시야당의원들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도처에서 ‘변절의원 화형식’이 거행되기도 했다.⁷¹⁾

8월 7일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신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하였

69) 〈改憲陣痛〉, 《동아일보》 1969. 7. 17 (3)

70) 〈신민 성낙현-조홍만의원 3선개헌지지를 성명〉, 《조선일보》 1969. 7. 30(1)

71) 〈부산 신민당원 1백여명 변절의원화형식〉, 《조선일보》 1969. 8. 1(3)

고, 《동아일보》는 8월 8일 자 사설에서 “개헌 주장의 동기가 결코 합치될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다”며 개헌 반대외사를 밝혔다. 신민당 의원들의 농성으로 개헌안에 대한 절차보고가 힘들자 이효상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정부로 직송했고 정부는 이를 공고했다.

한편 범투위의 전국유세는 원래 8월 9일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신민당 의원들이 농성 중인 탓에 늦춰져 8월 16일 전주를 시작으로 개헌반대 유세를 개시했다.⁷²⁾ 범투위는 전국유세를 계속 진행하여 이리, 김제, 정읍을 거쳐 8월 30일에는 대구로 갔다. 또 8월 31일 정태성 의원 등 세 사람이 광주에서 서울로 개헌반대 도보행진을 시작했다.⁷³⁾ 또 서민호 의원이 신민당과 개헌반대 투쟁을 함께 하기로 한 다음 9월 1일부터 통일사회당원 30여 명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⁷⁴⁾

한편 9월 7일에는 신민당 소속으로 개헌안에 찬성한 세 사람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신민당이 스스로 해산을 선언했다. 신민당이 조흥만, 연주흠, 성낙현 세 의원을 제명하면 이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민당은 이들 세 사람을 제외한 44명 의원 전원을 제명한 다음, 당을 해산해 버렸다. 이로써 소속 정당이 없어진 세 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해산 이후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임시로 신민회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했다. 다음날인 9월 8일 신민회 소속 장준하, 이기택, 박영록 등 국회의원 5명은 시청 앞에서 개헌 반대시위를 벌였다. 또 이날 한국기독교 연합회도 오전에 실행위원회를 열고 삼선개헌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⁷⁵⁾

범투위는 지방에서 반대 유세를 계속 했다. 9월 7일에는 인천, 광주, 청주에서 대규모 유세를 열었고⁷⁶⁾, 김재준 범투위 위원장은 각계에 개헌저지 투쟁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변협의 일부 변호사들이 9월 12일 〈호헌선언문〉과 〈국회의원

72) 〈개헌반대투위 오는 9일부터〉, 《조선일보》 1969. 7. 29(1)

〈반대 범민투위 전주서 첫 강연〉, 《조선일보》 1969. 8. 17(1)

73) 〈호헌행진 도보천리〉, 《동아일보》 1969. 9. 1

74) 〈통사당원40명 개헌반대 단식투쟁〉, 《조선일보》 1969. 9. 2(1)

〈개헌반대 단식 농성〉, 《동아일보》 1969. 9. 1(3)

75) 《동아일보》 1969. 9. 8 (3)

76) 〈개헌 날치기 경계〉, 《동아일보》 1969. 9. 8(1)

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삼선개헌에 대한 반대의지를 표명하였다⁷⁷⁾. 그러나 개헌안 상정이 임박하고 신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자 집회는 줄어들었다. 야당 조직에 의존한 범투위의 대정부 투쟁은 야당의 원내 투쟁을 보조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69 9월 9일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되었다. 신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었으나, 9월 14일 일요일 새벽 본회의장이 아닌 제3별관에서 개헌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했을 때 이탈표가 생길까 두려워한 여당은 야에 별관에서 표결을 진행했고, 농성에 참가하고 있던 의원 49명은 계표가 끝난 다음에야 통고 받았다.⁷⁸⁾ 신민당은 제2의 쿠데타이며 박정권 교체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9월 20일 재창당 집회에서도 대통령의 하야를 권고하였다.⁷⁹⁾ 개헌안 통과 후 국민투표까지 전국에서 반대유세를 열기는 하였으나 국면을 전환하기는 이미 늦었고, 10월 17일 개헌안이 77.1%의 투표율과 65.1%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3) 학생들의 삼선개헌반대운동

1964년 이후 한일협정 반대 등으로 학원은 항상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있었고, 1967년에는 6.8부정선거 반대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바 있었다. 당시 대학의 학기는 요즘보다 길어 7월 중순 이후에나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64년, 65년, 67년 모두 한일회담 반대, 부정선거 규탄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이 대학가를 휩쓸면서 6월에 학생시위가 격렬해졌다. 이럴 때 문교 당국은 늘 조기방학을 실시하여 학생운동을 잠재우려 했다. 지방학생들이 많고 이들이 방학 기간 중 마땅히 있을 곳이 없던 당시에 임시방편이지만 효과적인 대응책이었던 것이다.⁸⁰⁾ 이 시대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일러 ‘6월 방학생’이라 했던 것은 이런 상황을 자조적으로

77) 〈변호사 11명 개헌반대 성명〉, 《동아일보》 1969. 9. 12(3)

78) 〈개헌안 공화 전격 변칙 처리〉, 《동아일보》 1969. 9. 15(1)

79) 〈신민당 재창당〉, 《동아일보》 1969. 9. 20(1)

80) 서중석, 안병욱, 윤준하 증언

표현한 것이다.⁸¹⁾ 앞서 살펴 보았듯이 1967년 여름방학도 역시 6월에 시작했었다.

1968년의 대학가는 이례적으로 조용한 한 해를 보냈다. 세계적으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했던 때였지만, 한국의 대학가는 큰 쟁점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 내부에서 개헌을 추진 중이었던만큼 학생운동 세력도 1968년 하반기부터는 조만간 드러날 삼선개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하기 시작했다. 1969년 상반기까지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어차피 박정희 정권이 삼선개헌을 추진할 것이므로 미리 그 시도를 막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선불리 나섰다가는 정권이 공개적으로 삼선개헌을 언급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할 것이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 있었다.

그러나 결국 1969년 6월 중순 각 대학의 학생운동 세력들이 개헌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본격적인 삼선개헌반대운동이 시작하였다. 우선 1969년 6월 12일 서울 법대생 300명이 합동강의실에서 〈헌정수호 법대학생총회〉를 개최하고,⁸²⁾ 삼선개헌에 대한 최초의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⁸³⁾

독재의 망령이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권층의 일각에서 떠돌던 삼선개헌논의는 이제 조국의 헌정질서의 앞날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보정치로 민중이 질식해가고 예로문화로 민중이 눈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의회가 정부의 시녀로 전락해버리고 언론이 거세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생은 이 땅의 현실을 냉철하게 투시하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해야할 의무를 절감한다.

지역적, 사회계층적 소득의 극심한 불균등은 조국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고 물량주의, 외자만능주의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의 암적 요소로 비대하고 있다.

남발되는 화려한 정치적 구호와 하락하는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과대한 위기의식

81) 〈6月 放學生의 年代記〉, 《대학신문》 1966. 2. 27(3)

82) 〈헌정수호선언〉, 《동아일보》 6969. 6. 12 (7)

안택수, 1969, 〈학생데모의 어제와 오늘〉, 《사상계》 1969. 7호에는 500여 명 참석

83) 《사상계》 1969년 7월호 141쪽. 《사상계》에는 선언문의 발표일자가 1969년 6월 19일자로 되어 있으나, 6월 19일에는 서울법대에서 집회나 시위가 없었다. 《동아일보》 1969년 6월 12일자가 서울법대생들이 발표한 선언문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한 것과 문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2일자 선언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 고조와 소비문명의 조장의 틈바구니에서 민중은 오늘날 자기분열의 과정을 더듬고 있다.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부정과 부패를 근절시키며 조작된 민의가 진정한 민의를 지배하는 것을 시급히 중단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가 아니던가?

국내외로 술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조국의 현실에서 집권의 연장과 권력체제화의 강화를 획책함은 국민의 논의를 양분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리는 경고한다.

독재자의 아집과 자기과신은 결국 일국의 운명을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조국의 헌정질서에 바쳐진 우리 선열의 피는 결코 헛될 수 없다. 조국의 헌정질서가 일개 정당의 제물로 될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로 향한 전 국민의 염원이 일부 소수자의 권력욕 앞에 희생될 수도 없다.

이제 독아를 드러내기 시작한 삼선개헌의 음모를 반민주적인 행위로 단정하는데 주저치 않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사태의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조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어떠한 반민주적인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1969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의원회
법과대학 학생평의회
법과대학 학생회

그런데 6월 13일 서울법대 교수회의가 전날 학생성토대회 주모자들에게 근신 3개월의 처벌을 내리면서 법대 학생들의 삼선개헌 반대투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법대 학생 300여 명은 6월 16일 학생총회를 열고

- ① 정부는 개헌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 ②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 ③ 학원사찰을 즉각 중지하라는 등

3개항을 결의했고 이들 중 200여 명이 오후 4시 30분부터 법대 도서관 열람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다음날인 6월 17일 이들은 학장과의 면담에서 성토대회 주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학원 내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방학까지 부당한 휴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난 다음 자진 해산했다.⁸⁴⁾

6월 17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도 삼선개헌 반대집회를 시작했다. 문리대생 200여 명이 12시 30분 4.19 기념탑 앞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3선 개헌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弔旗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민주적 위법행위”이므로 “일부 공화당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개헌 공작”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보정치에 의해 만연된 불신풍조를 개탄하고 그 폐해가 가장 자유로워야 할 대학의 언론과 학술연구마저 침식하여 대학이 위기에 처하였다고 역설하며 지식인과 언론인, 그리고 대학생 모두가 개헌반대의 기치 아래 쫓기할 것을 호소하였다.⁸⁵⁾

6월 19일 고려대에서 법대 학생들이 개헌반대 성토대회를 열었다. 고려대 법대 학생회(학생회장 선병덕, 당시 행정과 4)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선개헌을 반대하는 호국선언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① 독재와 부정부패의 망령인 정권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망상을 즉각 집어 치우라 ②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정치, 사찰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③ 이상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우리는 피흘려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결의했다.⁸⁶⁾

서울공대생들도 삼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공대생 300여 명은 오전 9시 30분 교정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다짐하는 토론을 벌였으며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교내 마라톤 대회가 무기연기된 것에 대해 학교당국에 항의하였다. 공대생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정상 방학일까지 휴교를 막을 것을 결의하였다.⁸⁷⁾ 6월 20일에는 연세대 법정대생 700여 명도 범연세호헌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시국선언대회를 열고 “헌법을 개악하려는 일부 인사들의 언동은 애국청년의 이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⁸⁸⁾

84) 《동아일보》 1969. 6. 17(7)

《대학신문》 1969. 9. 1(8)

85) 형성 편집실, 1969, 《테모일지》, 《형성》 3권 3호,, 24쪽 (《형성》은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지였다. 1969년 9월 15일자의 《형성》은 인쇄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찰에 압수되는 바람에 현재 원본은 당시 기자였던 안병욱 교수가 유일하게 보관해 왔던 것을 안교수의 후의로 자료로 인용할 수 있었다.)

86) 〈호헌선언 성토대회〉, 《고대신문》, 1967. 6. 23 (3)

87) 〈개헌반대성토〉, 《동아일보》 1969. 6. 19(7)

88) 〈개헌반대결의〉, 《동아일보》 1969. 6. 20(3)

1967년 6·8부정선거 규탄투쟁에서는 학생들의 성토대회나 시위 기사가 비교적 상세히 보도되었음에 반해, 1969년 삼선개헌반대투쟁에서는 어지간한 내용은 아예 보도되지도 않았고 보도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선언이나 결의 내용은 상세히 보도하지 않았다.⁸⁹⁾

1969년 6월 23일 서울대 문리대는 학생회가 수업거부를 결의한 다음 제2차 학생 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반대투쟁선언문을 낭독하고 전국대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했다.⁹⁰⁾

삼선개헌반대 투쟁선언문

우리의 민주투쟁사는 민족의 혈맥을 타고 면면히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복귀의 위협의 불안 속에서, 삼선개헌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인 파국에로의 전개는 국민에의 반역임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의 폐허 위에 심화되어 온 이질 복합사회의 체제에서, 남미형의 악순환 수레바퀴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모순을 통하여, 급기야는 인간과 사회의 총체적인 파탄으로 끌고 가려 한다.

이제는 그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가치 부여를 한 '5개 혁명 공약'의 실천이라던 5.16 군사혁명 자체가 삼선개헌이라는 일부 권력의 노예들에 의해 더럽혀진 자살행위로 인하여 한국사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화하려 하고 있다.

보라. 그들은 국민 통합 속에서 용솨음치는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아니라 폭력기구와 정보장치에 의한 관헌주의 국가체제로 영속적인 노예화로 몰고 가려 하지 않는가!

우리 민주역량의 힘찬 보루인 학생들은 반족재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신념에 투철한 양심적 지식층과 민주주의의 용광로인 광범한 대중과 힘을 모아 이러한 삼선개헌 책략을 철저히 분쇄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는 묻노니 이러한 자기 파괴의 삼선 음모는 누구를 위한 책동인가?

이러한 독소를 뿌리는 삼선개헌 음모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이상 강요하는가?

이러한 칼춤 추는 삼선개헌의 종말은 누구의 피와 비극을 초래할 것인가?

이에 문리대 학생은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우리의 행동방침을 천명하고자 한다.

89) 안택수, 1969, 〈학생 데모의 어제와 오늘〉, 《사상계》 1969. 7, 150쪽. 안택수는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다.

90) 형성 편집실, 1969, 앞의 글, 24쪽. 《동아일보》 1969. 6. 23 (3)

일. 우리는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삼선개헌 반대를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계속한다.

이. 잠재해 있는 국민의 민주역량을 민주수호의 방향으로 전환, 총궐기한다.

삼. 모든 민주학생은 이 삼선개헌 반대투쟁대열에 집결한다.

1969년 6월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학생회, 대의원회

이날 경희대생 500여명과 경북대생 200여 명도 삼선개헌반대 성토대회를 열었다.⁹¹⁾ 이어 6월 24일에는 경기대생 100여 명도 개헌반대를 결의하였다.⁹²⁾ 학원가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자 문교부는 방학 중 학교장의 인가 없는 학생집회를 일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⁹³⁾

이때까지 학생들의 삼선개헌 반대운동은 주로 학내에서 성토대회였다.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교외로 진출했던 것은 6월 27일 고려대학교에서부터였다. 고려대에서는 윤준하, 이상수 등 3학년들이 중심이 되어 범고대민주수호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 고려대 민주수호투쟁위원회는 6월 27일 11시 30분부터 약 600명의 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토대회를 열고 학원 내 자치의 보장과 법대 학생회장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가두로 진출하여 시위를 벌였다.⁹⁴⁾ 고려대생들의 시위는 28일에도 계속되었다. 오전 11시 20분 대강당에 집결한 800여 명의 고대생들은 총학생회장 조춘구가 제2선언문을 낭독한 다음 모의재판을 열고, 이어 오후 1시경 교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개헌을 철회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장 세우고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안암동 로터리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교내로 돌아왔다가 오후 2시 두 번째로 교문을 나와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⁹⁵⁾ 6월 27일에는 계명대생 400명여도 헌정

91) 안택수, 1969, 앞의 글, 151쪽

(개헌반대성토); <백여 경북대생도>, 《동아일보》 1969. 6. 23(3)

92) 《동아일보》 1967. 6. 24(7)

93) <방학 중 집회금지>, 《동아일보》 1967. 6. 25(3)

94) <삼선개헌 반대 데모일지>, 《고대신문》 1969. 8. 11(3) 윤준하 증언에 의하면 민주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처음에는 윤준하였으나 곧 여기에 총학생회장 조춘구가 참여하면서 그가 맡게 된다.

수호성토대회를 열었고,⁹⁶⁾ 6월 28일에는 대구사회사업대 학생들도 시위를 벌였다.

이 무렵부터 대학생들은 거의 매일 같이 시위를 계속했다. 경북대학생들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연 나흘간 계속 성토대회와 가두시위를 계속 했다.⁹⁷⁾ 6월 30일에는 연세대 1,300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3선개헌반대 시국선언대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으며, 임시 휴교 상황에서도 연 사흘째 고려대생 800여 명이 교문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경찰과 충돌했고, 경희대생 800여 명, 광주사대생 200여 명, 홍익대생 300여 명도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⁹⁸⁾ 이날은 경찰이 새로운 진압장비를 선보였다. 페퍼포그라고 하는 시위 진압용 가스분사기가 고려대생들 시위 현장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때는 차량에 탄 경찰들이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⁹⁹⁾

7월 1일에는 연세대 학생들이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 번째 3선개헌반대 시국대회를 열고 거리로 나섰다. 또 서울대 공대생 1,000명과 교양과정부 학생 500명이 함께 3선개헌반대시위를 벌였다. 고려대, 경북대, 공주사대, 홍익대, 한국외국어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7월 2일에는 시위에 참가한 대학의 수와 규모가 훨씬 커졌다. 한국외국어대 학생 1,000명이 “4.19는 통탄한다”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로 나섰으며 중앙대 학생 1,000여명, 동국대 학생 1,000여 명도 가두로 진출했다. 연세대, 경북대 학생들은 전날에 이어 계속 거리에 나섰고 7월 2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은 삼선개헌 성토대회를 열고 “독재체제를 획책하는 황소 帝國 화형식”을 가졌으며 “3선 개헌 추진세력과 어떤 피의 투쟁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제3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 법대생들도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했는데, 농민·노동자와 지식인, 언론인은 물론이고 여당 당원과 공무원들에게도 민주수호투쟁에 호응할 것을 호소했다.¹⁰⁰⁾ 고려대생들은 오후 3시 20분 중앙극장 앞에서 집결한 고대생 200여 명은 을지로와 신신백화점까지 명동 등지에

95) 앞의 〈삼선개헌 반대일지〉 및 안택수, 1969, 앞의 글, 151쪽

〈고대생 또 데모〉, 《동아일보》 1969. 6. 28(7)

96) 〈4백 계명대생 개헌반대 성토〉, 《동아일보》 1969. 6. 27(3)

97) 《동아일보》 1969. 7. 1(7)

98) 《동아일보》 1969. 6. 30(3)

99) 〈페퍼포그〉, 《동아일보》 1969. 7. 1(7)

100) 〈전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사상계》 1969년 7월호

서 시위를 계속하여 10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고등학교 학생들도 3선 개헌반대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앙고 학생 500여 명이 3선개헌반대시위를 시도했던 것이다. 중앙고는 다음날로 휴교에 들어갔다.¹⁰¹⁾

7월 3일경부터 시내 대학의 휴교가 시작되었다. 우선 7월 2일 서울대 교수회의는 정상적인 수업과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교를 결정하면서 모든 시험을 방학 후로 연기했다.¹⁰²⁾ 7월 3일부터 실질적으로 조기방학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어 7월 4일부터는 휴교가 고려대 등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단 고조된 시위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7월 3일에는 전북대생 500여명, 성균관대학생 1,000여 명, 건국대생 1,000여 명, 한국외국어대생 150여 명, 동국대생 500여 명, 숭실대생 300여 명, 중앙대생 100명, 우석대생 5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으로 부상을 당하는 학생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우석대생의 시위 중 4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연행된 학생들을 구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시위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거리에서 합세해 시위를 벌이는 일도 늘어났다. 특히 서울대는 각 단과대학이 떨어져 있어 거의 모든 시위가 따로 진행되었는데, 시위가 격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다른 대학이나 단과대학 학생들과 합류하기도 했다. 7월 3일 시위에는 고려대 학생들과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이 시위 과정에서 합류하여 함께 싸웠다. 또 1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양과정부는 공대와 인접해 있어 함께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이는 것이 보통이었다.¹⁰³⁾

7월 4일까지 고려대와 경북대 학생들은 큰 1주일씩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고려대생 1,200여 명은 “황소집단의 개헌 음모 타도” 등 7개항의 결의문과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고 공화당 화형식을 벌인 다음 가두 시위를 벌였다. 건국대는 전날에 이어 1,000여 명이 성도대회와 시위를 벌였고, 한양대 300여 명, 서울교대 200여 명도 시위에 참가했다.¹⁰⁴⁾ 연세대 의대생 100명은 3선개헌에 반

101) 《동아일보》 1969. 7. 2(3)

〈중앙고 휴교〉, 《동아일보》 1969. 7. 3(7)

102) 〈서울 법·문리대 휴교〉, 《동아일보》 1969. 7. 3(7)

103) 《동아일보》 1969. 7. 3(7)

대하는 72시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7월 5일에는 건국대생과 한양대생이 3선 개헌반대시위를 벌였다.¹⁰⁵⁾

7월 7일 시위는 전국에서 벌어졌고 경찰의 진압도 강경했다. 경희대생 700여 명이 3선개헌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가두시위를 벌이고 3일간의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성균관대 학생 700여 명, 연세대 700여 명도 기말시험을 거부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연세대생들의 시위 현장에는 경찰 헬기가 공중에서 최루탄을 투하하여 진압을 시도하기도 했다.

7월 7일 전국 각 대학에는 거의 휴교령이 내렸고 고등학교도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휴교령이 내린 상황에도 7월 8일 오전 부산대 학생 400여 명이 휴교철회와 학원사찰 중지를 외치며 교외 진출을 시도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고 부산수산대, 영남대, 계명대 학생들도 성토대회를 열었다.¹⁰⁶⁾ 경희대 학생들은 7월 7일부터 단식농성을 계속하였고 가톨릭 의대생들도 7월 7일부터 8일까지 단식에 참가하였다.¹⁰⁷⁾

대학이 휴교에 들어가자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시위의 기미가 보이자 많은 고등학교들이 먼저 휴교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7월 10일 대구에서는 대구고 학생 500여 명, 대륜고 학생 300여 명, 경북고 학생 300여 명이 선언문을 낭독하거나 교문을 박차고 나와 개헌반대 시위를 벌였다.¹⁰⁸⁾ 이어 7월 11일에는 안동고 학생 1,000여 명, 계성고 학생 1,000여 명이 개헌반대성토대회를 열었고 7월 12일에는 김천중고에서 천여 명이 개헌반대성토대회를 열었다. 시위가 확산되자 고등학교도 휴교에 들어갔고, 7월 중순에 들어서 전국적인 반대시위는 일단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방학 기간 중 대학생 일부는 학교에 남아 소규모 모임을 열거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7월 17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이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기념 개헌반대 투쟁대회를 열고 법정신의 수호와 시민저항권을 확인하면서 삼선금지조항이

104) 《동아일보》 1969. 7. 4(3)

105) 《동아일보》 1969. 7. 5(7)

106) 《동아일보》 1969. 7. 8(2)

107) 《동아일보》 1969. 7. 9(3)

108) 《동아일보》 1969. 7. 10(7)

민주헌법의 근본적인 정신으로 규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고,¹⁰⁹⁾ 신문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고려대 등에서도 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투쟁결의를 다졌다.¹¹⁰⁾

방학 기간 중 삼선개헌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진행되었다. 학생회 간부, 평소 학생운동의 주도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는 등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학생들에게 자퇴, 무기정학, 유기정학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7월 18일 서울대 법대 교수회의에서 법대학생회장 박봉규가 제적되고 안평수는 자퇴, 이신범 등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졌다.¹¹¹⁾ 서울대 문리대에도 학생회장 박영은과 서원석은 자퇴, 최재현, 유홍준, 조학송, 김형관, 강지원, 박승무 등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¹¹²⁾ 경북대도 두 명의 학생을 제적하고 8명을 정학처분하였으며 고려대는 학생회장 조춘구가 제적되고 이원보, 이상수, 윤준하 등이 무기정학 당하는 등 16명이 징계를 당했다.¹¹³⁾ 부산대 학생들도 5명이 정학을 당했고 서울교대는 주동 학생 1명을 제적하고 둘은 정학 처분하였다.¹¹⁴⁾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경복고, 안동고, 김천고, 대구고에서 주동자로 몰린 학생들이 처벌을 당했다.¹¹⁵⁾ 이에 처벌대상 학생들이 반발했을 뿐 아니라 징계 철회가 개강 이후 투쟁의 요구 사항이 되기도 했다. 한편 방학 중 고려대, 서울법대 등을 중심으로 대학 간의 연대투쟁조직을 구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¹¹⁶⁾

8월 말 개강이 다가오자 치열한 삼선개헌반대 투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고려대생 150여 명이 8월 21일 호헌학생총회를 열었으며 연세대 호헌투쟁위원회도 호헌과 징계철회를 요구했다.¹¹⁷⁾ 고려대생들은 8월 25일 개강 첫날부터 비상학생총회를 개최

109) 형성 편집실, 1969, 앞의 글, 25쪽 ; <제헌절 기념 개헌반대투쟁대회>, 《사상계》 1969년 7월호

110) 2008년 8월 김영곤 선생 인터뷰

111) <박봉규군은 제적>, 《동아일보》 1969. 7. 21(7)

112) 문리과 대학 형성 편집실, 1969, 《형성》, 3권 3호, 41쪽

113) <16명 징계>, 《동아일보》 1969. 7. 30(3)

114) 《동아일보》 1969. 7. 26(7) ; 1969. 7. 24(3)

115) <고교생도 처벌> 《동아일보》 1969. 8. 4(3) ; <학생퇴학> 《동아일보》 1969. 8., 5(7)

116) 윤준하, 서중석 인터뷰

117) 《동아일보》 1969. 8. 23(7)

하였는데, 전 총학생회장 조춘구는 징계불복을 선언했고 비상학생총회 의장 문병순은 혈서를 썼다. 이들은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경찰과 충돌하여 18명의 학생이 연행되기도 했다.¹¹⁸⁾ 고려대생들은 8월 26일과 27일에도 연달아 시위를 벌였다. 26일에는 황소과시즘 화형식을 열고 세 차례 교외로 진출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학교 당국은 기말고사를 무기한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¹⁹⁾ 이어 8월 28일~29일에는 경북대 학생 300여 명이 개헌반대학생총회를 열고 이를 연이어 개헌반대 시위를 벌였다.¹²⁰⁾

9월 1일 이후 개강한 학교들이 늘어나자 시위는 더욱 확산되고 격렬해졌다. 서울대의 경우 1학기 기말시험을 2학기 개강 이후로 연기해 두었으나, 학생들은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9월 1일 문리대 학생 300여 명은 “호헌의 깃발 아래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집결하여 개헌음모를 규탄하고 부당한 학생징계의 철회와 학원의 자율적 운영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학생총회가 끝난 이후 가두시위에 들어가 이화동 로터리까지 진출했으나 폐쇄포그차 등에 밀려 다시 교내로 돌아왔다. 교내로 돌아온 문리대생들은 강당을 점거하고 자유토론에 들어갔으며 문리대 투쟁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세균(당시 정치학과 4)을 선출했다. 한편 학생회는 삼선개헌반대 운동에 대한 모든 지도권을 문리대 투위에 일임했다. 문리대 학생들 중 40여 명은 9월 2일 오후 4까지 농성을 계속하다 해산하였다. 서울 상대 학생 250여명도 강당에 모여 삼선개헌반대성토대회를 개최한 다음 다섯 차례에 걸쳐 교외로 진출하여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황소는 십년 살고 조국은 영원하다”, “삼선개헌=백색전제”라고 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으며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북대생 500여 명도 이날 개헌반대 시위를 벌였다.

9월 2일 서울 법대, 공대, 상대생들이 시위를 연이어 시위를 벌였고, 서울대 교수 회의는 9월 1일 오후 무기휴교를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수단을 모색했고, 법대생들은 도서관에서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철야농성을 계속

118) 〈개헌반대 데모 한때 교문 나서〉, 《동아일보》 1969. 8. 25(3)

119) 《동아일보》 1969. 8. 26(7)

120) 〈경북대생 데모〉, 《동아일보》 1969. 8. 28(7); 〈경북대생 또 데모〉, 《동아일보》 1969. 8. 29(3)

했다.¹²¹⁾

9월 3일에는 연대생 1,000여 명, 고대생 300여 명, 그리고 대전대와 영남대에서 시위가 계속되었고¹²²⁾ 휴교하지 않고 있던 서울공대생들과 교양과정부 학생들도 9월 4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성균관대생들도 500여 명도 9월 4일 시위를 벌였고 학교는 임시 휴강 조치를 취했다.¹²³⁾ 9월 5일에는 연세대생 1,500여 명과 계명대, 부산대 법대, 전남대 의대생들의 시위와 성토대회가 계속되었다.

이후 시위는 더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9월 8일에는 연세대, 계명대, 서울농대, 가톨릭의대, 경희대, 숭실대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서울사대생들은 시위과정에서 90여 명이 연행되자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¹²⁴⁾ 9월 9일에는 연세대, 한양대, 가톨릭의대, 충남대, 건국대, 서강대에서, 10일에는 숭실대, 감리교 신학대학, 경희대, 충북대, 동국대, 경북대 의대, 서울 농대에서 시위 또는 농성이 벌어졌다. 9월 11일 이미 전국의 38개 대학이 무기 휴강 중이었으나 개헌반대는 시위의 무풍지대였던 여자대학으로까지 번졌다. 9월 11일 숙명여대생 1,00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화여대생들은 전교생이 검은 치마와 흰 윗도리로 복장을 통일하고 성토대회를 열기도 했다.¹²⁵⁾

대학이 거의 휴교에 들어가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농성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고자 했다. 개헌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던 1969년 9월 10일 문리대, 법대, 상대, 사대 등 서울대생 100여 명은 밤 10시 기습적으로 법대 도서관을 점거하고,¹²⁶⁾ 수도와 전기조차 끊긴 도서관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했다. 고려대생들은 교양학부 강의실에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농성했다.¹²⁷⁾ 그러나 1969년 9월 14일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각 대학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삼선개헌 반대투쟁은 실질적으로 끝났다. 휴교령 속에서

121) <40여 명 철야 농성>, 《동아일보》 1969. 9. 2(3)

122) 《동아일보》 1969. 9. 3(3)

123) 《동아일보》 1969. 9. 4(7)

124) 《동아일보》 1969. 9. 9(7)

125) 《동아일보》 1969. 9. 11(7)

126) 형성 편집실, 1969, 앞의 글, 25쪽

127) <달린 문 농성 계속>, 《동아일보》 1969. 9. 13(7)

더 이상 학생들을 모으기도 어려웠으며 많은 학생들이 징계를 받고 입영하는 바람에 운동을 계속하기도 어려웠다. 학생운동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 1960년대 말 민주화운동의 특성

6.8 부정선거규탄투쟁과 삼선개헌 반대투쟁 속에서 나타난 민주화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시기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수호, 즉 최소한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우선 무엇보다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의 기본틀을 파괴하면서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려 공세를 펼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또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을 옥죄고 있던 반공이데올로기의 강력한 벽을 넘어서서 민중생존권을 요구하거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할 만한 주체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이 시기 내내 민주화운동 세력이 먼저 민주화를 위한 쟁점을 제시하여 민중들의 권익 향상을 요구하고 나서지 못하고, 군사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이러 저러한 시도를 벌일 때 비로소 이것을 막기 위해 나서는 수동적인 형태로 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이 시기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 전반이 그랬지만(서중석, 1997, 20쪽) 이 때는 1970년대보다 학생운동의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저항의 또 다른 축을 이루었던 재야는 이 때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60년대말까지 '재야'란 말은, 그야말로 제도 정치 외부에 있는 인물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니 여당 성향의 재야란 말도 있었다. 야당 성향이라 하더라도 재야라고 하면 이법석의 족청계가 중심을 이룰 정도였으니 70년대 종교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재야와는 크게 달랐다. 그러다 보니 재야와 학생의 연대도 실질적으로는 없었다. 또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도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강한 국가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할 사회적 역량은 학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우선 아직까지 학생운동은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자기 이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학생 운동의 논리적, 정치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통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민비연 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서중석, 1988, 73쪽)

그러나 학생운동의 이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 자체는 우선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막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권’, ‘민생’ 등 민중의 기본권, 생존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단순히 3선개헌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학원의 자율과 자유, 언론 자유 등 기본권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 정치적 기본권 외에도 민중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학생들이 발표한 많은 선언문에서 ‘민생’문제의 해결이 부쩍 강조되었던 것은 이런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학생운동의 조직과 운동양상을 살펴보자. 이 시기 학생운동은 각 대학을 근거로 하여 전개되었으며 학생운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인 조직은 없었다. 그만큼 중요한 투쟁을 전개할 때 운동을 선도하는 몇몇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서울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또 지방에서는 경북대, 전남대 등 큰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전반적인 운동의 추이가 좌우되었다. 또 학교마다 집회나 시위를 조직하는 방식이 달라 방식의 특성이 강하게 부각되기도 했다. 또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기 투쟁과정에서 학생회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실제로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을 기획하고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여 투쟁을 이끌었던 것은 당시 서클이라고 부르던 학교 내 동아리들이었다. 학교마다 학생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몇몇 서클들이 있었고 학교 간의 연대도 실질적으로는 이 서클들 사이의 인적연대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만큼 연대조직도 강조하지 않았다. 간혹 학교 간 연대가 시도되기는 했으나 몇 차례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거나 느슨한 공동행동을 시도하는 데 그칠 뿐 튼튼한 조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야당과 ‘재야’도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주요한 세력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

듯이 김재준, 함석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이 시기 재야란 ‘원외’와 유사한 의미였다. 삼선개헌을 이끈 범투위도 실질적으로는 야당 조직의 외연을 확장한 것에 가깝다. 독자적인 투쟁 역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학생 외에 가장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은 4.19 6.3 범청년회 계열이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신민당 조직과 겹쳤다.

신민당은 당내 분열과 갈등, 인선 등으로 삼선개헌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공화당이 먼저 논의를 꺼내지 않은 탓도 있지만 당시 야당은 일찍부터 개헌이 시작될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이 먼저 삼선개헌반대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하기 전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이후에도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에 동참하거나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지는 않았다. 야당의 반대운동은 대학이 조기 방학에 들어간 7월 중순에야 시작하여, 8월에 주로 진행되었다. 원내와 원외의 투쟁을 병행한다고는 했지만, 기실 결사적인 항쟁을 벌였다고 볼 수는 없었다. 야당은 근본적으로 선거를 축으로 하는 정치질서 안에 존재해야 했고, 이들의 중심 목표는 이미 1971년의 선거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신문과 잡지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신동아』, 『사상계』, 『형성』

2. 저서와 논문

강광식, 1999, 〈1960년대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1960년대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백산서당

강대민, 2003, 《부산지역 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강준만, 2004, 《한국사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3, 4권, 인물과 사상사

- 김경재, 1991, 《혁명과 이상: 김형욱 회고록》, 전예원
- 김대중, 일본 NHK 취재반 구성, 김용운 편역, 1999, 《역사와 함께 시대와 함께; 김대중 자서전》, 인동
- 김성환 외, 1984, 《1960년대》, 거름
- 김일영, 1999, 〈1960년대 정치지형 변화-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형성〉, 《1960년대 정치사회 변동》, 백산서당
- 김충식, 1992, 《정치공작사령부 남산의 부장들》 1~3, 동아일보사
- 김현우, 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 노중선, 1985, 《민족과 통일 I》, 사계절
- 류근일, 1997, 《권위주의 체제 하의 민주화운동 연구- 19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형성과정》, 나남출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2003, 《실록 민청학련 - 1974년 4월》, 학민사
- 박태균, 2007,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 80호, 역사비평사
- 박태순·김동춘, 1991,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 안병욱 외, 2005,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6.3 동지회, 2001,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 서중석, 1988, 〈3선 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비평》 3
- 서중석, 1997,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41
- 서중석, 2007, 《한국현대사 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손호철, 2003, 《현대 한국정치 1945~2003》, 사회평론
- 심지연, 2004, 《한국정당정치사 - 위기와 통합의 정치》, 백산서당
- 역사문제연구소, 1994,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예춘호, 《예춘호 정치회고록, 그 어두움의 증인이 되어》,
- 이기택, 1987, 《한국야당사》, 백산서당
- 이상우, 1986, 《박정권 18년 ; 그 권력의 내막》, 동아일보사
- 이재오, 1983,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 임대식, 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65

- 조희연 편, 2002,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 책
- 최상천, 2001, 《알몸 박정희》, 사람나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9, 《1960년대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백산서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2, 《박정희 시대 연구》, 백산서당
- 한승헌 편, 1985,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삼민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 현대사연구소 자료총서 3집》
- 한홍구, 2003,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62호
- 홍석률, 2005, 〈1960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 《역사와 현실》 56호

교련반대투쟁과 1971년 선거투쟁의 전개과정

허 은

| 목 차 |

1. 1960년대 이래 사회 및 대학통제 강화
 2. 박정희 정권의 학생군사교육 강화 추진
 3. 1970년 교련강화책과 대학생들의 인식
 4. 군사교육철폐투쟁의 본격적인 전개와 확산
 - 1) 군사교육 강화의 의도비판
 - 2) 찬반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한 교련문제 환기
 - 3) 교련철폐 투쟁의 고조와 전국적 확대
 5. '71년 선거 국면과 민주화운동세력의 대응
 - 1)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과 공명선거쟁취 운동
 - 2) 대학생들의 선거참관운동
 - 3) 대선종료 후 각 민주화 운동세력의 평가와 대응
 - 4) 총선 실시이후 민주화 운동세력의 대응
 6. 1971년 하반기 교련철폐 투쟁고조와 위수령 선포
 - 1) 교련철폐의 재천명과 부정부패 비판
 - 2) 군의 학원 난입
 - 3) '위수령' 선포와 '국가보위특별조치법' 통과
- <참고문헌>

1. 1960년대 이래 사회 및 대학통제 강화

1971년 전면화되었던 교련반대투쟁과 선거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권이 대학 및 사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억압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체결, 베트남 전투병력 증파 등을 추진하면서 ‘조국근대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회여론의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과 지식인들을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체결은 그 체결 방식의 반역사적 성격과 일본의 영향력 재 확대에 따른 국가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전 사회적으로 불러일으켰다.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는 학생들의 시위차원을 넘어서 각계각층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는 1965년 기독교계 인사들의 성명서(1965.1), 문인들의 성명(1965.7.9), 역사학자들의 성명(1965.7.9), 교수들의 성명(1965.7.12) 발표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진행과정에서 학생과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학원보호법’,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입안을 시도했다. 이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입법시도는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대학과 지식인들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갔다.

우선 1964년 10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에 대한 통제 강화를 도모했다. 당시 여론은 이 사학법 개정에 대해 사학의 자주성의 침해를 가져오는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비록 자격미달의 사학재단이 난립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됨은 분명하나, 당초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사태유발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부가 사학의 사태를 비난하며 인사권까지 개입하려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조선일보』 1964년 10월 30일자).

한일협정 체결이후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교단에서 강압적으로 떠나게 만들었다. ‘한일회담’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였던 교수들이 이른바 ‘정치교수’로 지목되어 대학에서 파면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과 같은 간첩단 사건을 터트려 민주수호를 외치는 대학생과 지식인들을 철저히 통제해 나가는 한편 지식인들을 국가주도 근대화에 동원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소시민적 존재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이는 1960년대 후반 ‘조국근대화’와 지식인의 동참이 외쳐지던 시기에 대학의 발전은 소외되고 대학이 정보사찰의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결국, 장기독재를 위한 학원병영화가 노골화 되고, ‘조국근대화’의 모순이 본격적으로 노정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입에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학과 사회의 ‘민주주의 수호’를 달성하고자 운동을 전개했다.

2. 박정희 정권의 학생군사교육 강화 추진

한국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되면서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남북한 긴장관계는 1967년부터 그 긴장도가 가파르게 높아져 갔다. 북한은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내적으로 안보위기의식을 고조시켜갔고, (한모니까, 50쪽) 다른 한편으로 남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남침투와 무장활동을 강화했다. 1966년에 비무장지대 교전회수가 19건이었던데 비해 1967년에는 그 10배에 달하는 117건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강력한 보복행위’에 있다고 보았다. (박태균, 261쪽) 뒤이은 1968년은 1.21청와대 습격사건, 1월 23일 프예블로호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했다.

박정희 정권의 안보위기의 고조를 대민·대사회통제 기제의 강화로 연결시켰다. 주민등록법은 1968년 완전히 정착되어, 1968년 10월경에 이르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주민등록 신고현황에서 90%의 등록률을 보였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향토예비군은 2월 7일 대통령령으로 조직이 시달되어 3월말까지 조직편성을 마친 뒤 4월 1일 창설식을 가졌다.

1968년 1·21청와대 습격사건으로 폭발직전까지 치달은 남북한 긴장관계는 남한 사회에서 반공교육의 강화로 직결되었다. 정부와 언론은 북한사회 구원성 전체가 잘

병영화되어 전쟁준비를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무장공비로 남파되었다 체포된 김신조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일먼저 강조한 사실 중에 하나가 북한의 18세 이상 모든 여성이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조선일보』 1968년 2월 2일자)

박정희 정권은 우선 반공교육을 강화해 나갔다. 1968년 2월 9일 문교부는 전국 대학총장 및 각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북괴의 도발에 대응하여” 반공교육을 일층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이듬 해부터 대학입시 시험에 반공도덕과 관련한 문제를 더욱 많이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보낸 훈시에서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와 일대일로 대결하여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공산북괴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968년 2월 9일자)

문교부는 2월 13일 전국 각 급 학교는 매주 1시간 이상의 반공과목을 넣고 주 4회 이상 조회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교원들도 반공과목 보수교육을 받으라는 반공교육 강화책을 시달했다.(『동아일보』 1968년 2월 13일자) 또한 대학생 및 교원들의 집단 반공교육을 연간 3주 이상씩 실시하며 연간 3회 정도의 반공응변대회 및 강연회를 전국적으로 열도록 지시했다.

반공교육의 강화에 이어 박정희 정권은 학생군사훈련의 전면적 실시를 추진했다. 1968년 4월 5일 국방부와 문교부는 정식합의를 거쳐 1969년 신학기부터 남자고교, 2·3학년생과 ROTC교육에서 제외된 남자대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 1968년 4월 5일자) 국방부와 문교부가 합의한 방침은 전국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예비역 출신의 배속장교를 배치하여, 고교는 매주 3시간씩, 대학교는 1,2학년생에 한해 기본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조선일보』 1968년 4월 10일자) 군 당국은 학도군사훈련의 원활한 확산을 꾀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은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이 현역에 징집되는 경우 훈련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시키거나 계급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조선일보』 1968년 4월 28일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군사훈련 세부방안은 1968년 5월 1일 공개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학도군사훈련의 전면적 실시의 예비단계로 1968년 8월 30일 각 시

도의 11개 시범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시범훈련을 시행했다. 문교부는 각 시도의 시범 고교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군사훈련을 1969년부터 서울 시내 고교 및 대학의 전 학년에 걸쳐 실시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준비해 나갔다. 문교부 당국자는 69학년도부터 군사훈련에 ‘교련’이란 정규 학과목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매주 2시간씩 실시될 것이라 밝혔다. 고교 1,2,3학년은 도수각개훈련 등 기초과정을, 고등전문학교, 초급대학, 교육대학 및 대학 1,2년생은 전술학 등 초급과정을 대학 3,4학년은 사격술 등 고급과정의 군사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1968년 10월 17일자) 교련교육은 1970년 2학기부터 여고생과 여자대학생에게까지 적용되었다.(『조선일보』 1970년 7월 29일자)

3. 1970년 교련강화책과 대학생들의 인식

학생군사훈련 강화에 대해 대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 하반기부터였다. 이 때까지 학생들의 주 관심은 경제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국근대화에 대한 비판에 맞추어져 있었다. 학생들은 조국근대화가 양적성장지표를 강조하며 민중을 착취하고, 한일협정 체결에 따른 일본 차관 및 독점자본의 유입과 예측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정치적으로는 對美一邊倒 외교를 비판하며 올바른 對韓觀을 심어주기 위한 실리외교를 펼칠 것을 박정희 정권에 요구했다. 사회적으로는 언론탄압과 학원탄압을 비판했으며, 문화적으로는 황색주의 문화의 확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말한다〉(1970.9.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생회, - 한일문제 강연회를 마치면서-/ 〈시국선언문〉(1970.9.29)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 ‘아시아의 새질서와 한국’ 시국대강연회를 마치며)

대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박정희 정권의 교련강화책을 점차 주요 이슈로 삼기 시작했다. 9월 29일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교련교육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ROTC폐지는 교련교육의 강화를 의미한다. 대학의 생리를 모르는 무식한 武斷政治人は 파쇼적 성격이 농후한 교련강화책을 즉각 폐지하라. 학원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하한 형태의 대학생들의 제한과 굴레를 대학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를 반체제 반민주적 요소를 과감히 저지하게 하는 중대한 책임을 야기시킬 것이다.

(〈시국선언문〉(1970.9.29)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 ‘아시아의 새질서와 한국’ 시국대강연회를 마치며)

1970년 11월 3일 서울시내 5개 대학(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학원의 자유를 억압하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 성명서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원사찰과 교련강화 그리고 정치세력의 학원침투로 인하여 정의와 양심의 분별을 분명히 해야 할 대학생들이 건전한 비판정신과 탐구의욕이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의 외침〉 5개 대학교 총학생회 공동선언문) 교련강화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으나 교련강화책이 학원 자주성의 억압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11월 20일 국방부는 문교부와 학교당국에 일체의 통보 없이 학군단을 통해 군사훈련 강화의 요강을 발표했다.(〈군사훈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 1970.12.7,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국방부는 ROTC제도 폐지에 따라 71학년도부터 시행되는 학생군사훈련을 2군사령관이 관장토록 하는 시행세칙을 확정하여 23일 각 대학 학군단에 시달했다.(『조선일보』 1970년 11월 24일자)

대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할 기미를 보이자 11월 30일 문교부와 국방부는 협의를 통해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했다.(〈군사훈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 1970.12.7,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문교부와 국방부의 새롭게 제출한 안은 다음과 같다.

1. 교련은 주당 3시간 주 1회 실시한다.
2. 매학년 2주간 집단 훈련을 실시한다. 단 4학년은 1학기의 군사교육과 3주간의 집단 훈련을 받는다.
3. 모든 군사훈련은 학교와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실시된다.
4. 총·학장은 군사교육단에게 군사교육 실시만 위임한다.
5. 국방부는 훈련과목 선정 훈련지원 실시 감독만 한다.

6. 군사교육에 대한 모든 지침은 총·학장에 의해서 학칙 내에서 이루어진다.
7. 군사교육에 관한 모든 것은 총·학장의 의견을 절대 존중한다.
8. 출석 일수에 의해서 학점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단 특전의 부여는 별도로 한다.
9. 체대 학생은 집단 훈련만 면제하고 일반교육은 받는다. 예비군 훈련도 면제한다.
10. 71학년도 4학년은 1학기 교육을 마침으로서 모든 특전은 다 받는다. 또 45시간의 예비군 훈련도 면제된다.
11. 현직 교련교관은 연령초과자를 제외하고 전원 소집 복무시킨다.
12. 내무반은 학교에 설치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의 학원병영화가 갖는 심각성을 체감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현역군인이 직접 대학생 군사교육을 담당한다는 방침은 학원병영화 추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971년 12월 2일 연세대생 5백여 명이 교련 강화 반대 및 학원언론 탄압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이 시위는 최초의 교련 반대 시위였다. 이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원을 군대화 시키려는 교련강화와 학원의 언론을 탄압하려는 일련의 사태는 정권을 잡은 정치집단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은 내걸었다.

- . 우리는 현역군인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 . 교련교육은 학원의 자율적 운영에 맡겨야 한다.
- . 학원내의 언론 및 연구발표의 자유를 보장하라.
- . 실기위주의 교육보다는 사상 및 정훈교육에 중점을 두라.
- . 이와 같은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때 6천 연세인은 교련수강 신청 및 수업을 거부할 것이다. (〈연세인이여 총 쫓기하라!〉 1970.12)

12월 7일 고려대 학생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학원의 자율을 억압하는 정부의 교련강화책 그리고 사실상 국방부 주도의 군사교육 실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군사훈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 1970.12.7,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은 11월 30일 문교부와 국방부가 발표한 합의안도 실제 “현역장교가 훈련을 전담하게 된다는 처음의 국방부 안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는 결국 군인이

학교를 병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보았다. 학생들은 학원의 자율성 침해는 곧 '대학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학원의 자율성을 깃밟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단호히 교련수강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군사훈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 1970.12.7,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일 12월 7일 연세대생과 경북대생이 교련강화 반대시위를 전개했다. 12월 8일 연세대 자유수호 투쟁위원회가 '학생의 교련반대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박정희 정권은 학원병영화에 대한 학생들의 명확한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방침을 제시했다. 12월 27일 문교부 당국은 '大學教鍊教育의 施行要綱'을 발표했는데 이는 박정희 정부가 고교생보다도 대학생들에 대한 교련 강화방침에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시행요강'의 내용의 핵심은 대학생의 4년간 총 수업시간의 약 20%인 7백 11시간을 교련교육에 할애해야 하며, 군사교육을 위해 대학에 현역군인들을 배치한다는 것이었다.('조선일보' 1970년 12월 22일자) 이를 위해 문교부는 1970년 12월 21일 현재 학생 4백당 1명씩인 교련교관을 2백 50명당 1인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1차로 전군에서 장교 540명을 선발했다.

'大學教鍊教育의 施行要綱'에 대해 연세대 총학생회는 반대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 첫째, 교련교육이 총 수업시간의 20%라는 엄청난 비중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 둘째, 다수의 현역군인이 학원 내에 들어올 때 학원의 병영화 및 그에 따른 학생활동의 제약과 학원자율성이 침해당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 셋째, 교육내용면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정훈교육이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와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민주질서 하에서 실기위주의 교육보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훈교육의 강화가 승공으로 이끌 수 있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 넷째, 대학생활을 종결산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4학년까지 교육을 강행함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불안감 내지 여유조차 없이하는 비인도적 처사이다.
- 다섯째, 교육이수 후에 혜택에 대한 규정이 아직 확실치 못하고 모호한 선택의 방법을 남겨둠으로 학생의 의식구조를 왜곡된 개인주의와 편협한 이기주의화하여 학생상호간의 불신과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교련강화의 정책수립에 있어 학생들의 의사가 전연 도외시된 채 일방적으로 성안함에 분개를 금할 수 없다.

(〈왜 교련을 강화를 반대하는가?〉 날짜미상, 연세대 총학생회)

박정희 정권의 교련강화 방침은 언론에서조차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학원병영화’의 길로 나아가는 중대한 사태라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사회적 반향이 컸다.(『조선일보』 1971년 1월 30일자)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1971년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문교부의 대학교련 교육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4. 군사교육철폐투쟁의 본격적인 전개와 확산

1) 군사교육 강화의 의도비판

박정희 정권이 문교부의 대학교련 교육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학생들은 본격적인 교련반대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신학기 개강과 맞물려 전국의 각 대학으로 확산되어 갔다.

방학동안 각 대학 학생운동조직과 총학생회 등은 교련반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교련교육 강화는 운동권에서는 이슈화하고 있었지만 학생들 사이에는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다. 교련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군입대 문제를 이걸 통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 이들도 있었다. 특히 김신조 사건 이후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조성돼 있어서 70년 말, 71년 초까지만 해도 반대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와 투쟁방안을 모색해 갔다.(최영주 선생 인터뷰, 2007.9.20)

박정희 정권 또한 학생들의 이러한 반대흐름을 조기에 와해시키기 위해 학생회 간부를 대상으로 공작을 벌였다. 즉 1971년 봄 서울의 주요대학을 포함한 전국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베트남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련반대운동의 싹을 꺾고자 했다. 운동권 핵심인자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총학생회 회장들이 주로 참여했다.(최영주 선

생 인터뷰, 2007.9.20)

1971년 2월 25일 연세대 학생회 간부들이 ‘대학자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교련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어 개학과 함께 3월 2일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와 학개 서클대표 40여 명이 교련과목 수강 전면거부를 표명하고 ‘교련수강신청 거부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3월 3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학원대민주화운동의 전개 취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 했다.

3월 4일에는 서울대 문리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 학생회는 교련강화는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금번 정부당국의 일방적 처사에 의해 실시되는 학도군사훈련이 과연 국방력 필요성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방태세는 잘 훈련되고 있는 60만 국군과 200만 향토 예비군에 의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며 또한 학도군사훈련은 국방력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또한 국방력은 그 수나 양으로 결코 평가 될 수 없으며 집권층 내의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사회의 비합리적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제거될 때 국민의 자발적인 애국심에 의해서 국방은 완벽해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요소들의 제거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 학문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는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보다는 학원을 병영화하고 학생들의 비판력을 둔화시켜 민주양심적인 학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文理大生에게 告함〉, 1971.3.4,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회)

3월 5일에는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학생군사훈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이 성명서 박정희 정권의 학원병화 추구가 장기집권과 직결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관련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훈련의 성격과 영향

가. 교련의 성격

첫째, 교련은 ‘군사훈련’으로 군대가 갖는 일반적인 성격이 강하다. 군대란 획일적

- 이고 상하명령 복종관계가 엄격하며 권위주의가 강하다.
- 둘째, 형식이 강하다. 지나치게 형식위주임은 교련검열을 위한 지나친 준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아온 바다
- 셋째, 교련을 통해 군인숭배의 정신을 기르고 전쟁애호정신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군국주의를 국민정신 속에 깊이 뿌리박게 할 것이다.
- 넷째 위기의식을 고취시킨다.
- 다섯째, 교련을 통해 학원 내에 유사정보원의 침투를 용의케 할 것이다.

나. 영향

- 첫째, 학문의 발달을 저해한다. 학문은 자유로운 사고를 전제로 하는 바 교련을 통한 획일주의적 상하 명령복종형의 인격형성은 대학의 존재가치 자체를 부정할 위험이 있으며 고등학교 교련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은 국방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방의 방식이 다른 뿐이다.
- 둘째, 비판정신을 상실케 한다.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인간형성은 사고와 판단을 마비시키고 맹목적 추종을 강요함으로써 지성의 생명인 비판정신을 없앨 것이다.
- 셋째, 장기독재체제의 확립을 촉진할 것이다.

군국주의의 팽배는 편협한 내쇼날리즘을 낳고 이것은 독재체제의 기초가 될 것이다. 더욱이 군인우위의 정신에 따라 '군사독재'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며 위기의식의 고취는 이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학생군사훈련의 갖는 문제점

① 동서화해무드라는 세계사적 조류와 정면충돌 ② 세계가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시점에 군비확장에만 몰두한다면 민족자멸만을 초래 ③ 힘의 대결은 평화적 통일에 대한 무능의 표시 ④ 학생까지 무장해야할 절박한 사태가 아니라고 보며 오히려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열린 것 ⑤ 단계적 특혜로 학생서로를 분열하고 입영후에도 승진 기타에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군인 상호간의 분열을 초래 ⑥ 이중삼중의 병역의무 부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 ⑦ 특혜 아닌 특혜로 학생들을 유혹하려는 것은 전체학생들을 모독하는 행위 ⑧ 학생군사훈련은 실효성이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단지 '전시효과'만에 그치고 있음.

3. 학생 군사훈련실시의 저의

- ① 반독재민주투쟁세력의 전위대인 학생세력의 억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 ② 위기의식을 일반화하고 학생운동에 대해 국가위기를 빙자하여 가혹하게 탄압할 것이며 특히 선거를 전후한 학생운동의 억압에 허세를 부릴 것이다.
- ③ 군인우위정신을 고취함으로써 군사독재의 부당성을 무마하려 할 것이다.
- ④ 사회현실 문제를 오도하려는 것이다. 60년대 말에는 '70년대의 풍요'로 실정을 은폐하고 국민의 불만을 무마해 왔다. 그러나 '대망의 70년대'가 닥쳐왔으나 빈곤은 더욱 심하고 각자지 사고로 인한 대량 '학살'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며 빗더미 위의 '경제성장'의 실패와 중소기업의 몰락에 의한 경제위기와 체불 노임 투쟁, 근로조건개선투쟁이 가열화한 것이다... 여기에 당황한 현 정권은 문제의식을 다시한번 오도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위기의식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을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다.(『자유의 종』 8호, 1971.3.5)

3월 18일 고려대 총학생회도 서울대 법대 학생들과 거의 동일한 견해를 제출했다. 고대 총학생회는 박정희 정권이 군사교육을 강화하는 의도가 장기독재정권 수립하기 위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교육은 학문발달의 침체, 교수와 학생간의 불신 초래, 특혜 아닌 특혜운운으로 대학생들의 특권의식을 조장하여 청년상호 간의 단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 저의는 현 정권이 장기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 (1) 학원을 병영화 시킴으로써 학생을 획일적, 무비판적, 무반항적 인간으로 만들어 저들의 뜻대로 이용하고자 함이다.
 - (2) 학원에 군사교육이 실시됨으로 위기의식의 조작을 가중시켜 전국민에게 그 의식을 유포하여 모든 국민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할 합법적 근거를 설정하려 함이다.
 - (3) 명령복종형의 인간을 만듦으로서 지금까지의 학생운동을 무위로 돌리고 모든 학생자치 활동을 감시 탄압하여 합법적인 학원사찰을 실행하려 함이다.
 - (4)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지금까지의 현 정권의 失政을 은폐하려 함이다. 대망의 70년대가 실현 불가능함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장기독재정권의 지루함을 없애려 함이다.((왜 군사교육은 철폐해야 되나), 1971.3.1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2) 찬반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한 교련문제 환기

각 대학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는 박정희 정권의 교련교육정책이 갖는 문

제의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찬반투표 및 여론조사들을 활용했다.

서울대 법대학생회가 3월 15일 교련 수강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는데 95%가 수강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3월 17일에는 서울대 상대학생회가 학생총회에서 교련 강화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했는데 역시 학생들이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가 3월 1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결의문 발표, 여론조사 등의 실시는 문교부가 추진하는 교련교육의 실상을 알리며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1천 여 명이 참여한 학내여론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1) 1968년 이후 실시해온 교련의 결과는 국방의식에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 이로써 학생들은 지금까지 교련과 군사교육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 (2) 실시되고 있는 군사교육은 학원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학생자치활동 및 학구 생활에 마이너스를 초래하고 있다
- (3) 특혜문제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며 오히려 특혜는 문제도 안 된다고 본다.
- (4) 대학생에게 군사교육을 가하기보다는 현재의 국방력으로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히려 학원 밖의 사회정화가 더 국방의식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등등(〈여론조사 결과보고 및 6천고대인의 주장〉
1971.3.23,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3) 교련철폐 투쟁의 고조와 전국적 확대

각 대학 학생회들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교련문제를 환기시켜 나가는 한편 교련 반대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3월 18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수강신청거부 투쟁이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적 규모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기했다.(〈왜 군사교육은 철폐해야 되나〉, 1971.3.18,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3월 23일에는 전국 12개 대학 14개 학생회 대표자들(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성균관 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서강대 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법대학생회, 서울대학교 상대학생회)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자유와 진리를 본질로 하는 대학이 그 본질을 침해당했을 때 민족의 장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대학에 강요되고 있는 군사교육은 학원을 병영화시켜 “무사상·무비판·획일적·맹종형 인간을 양성하려”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군사교육 폐지 요구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사교육 전면철폐’를 위한 최후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전국대학 공동선언문> 1971.3.23) 3월 23일에는 고려대 총학생회가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정책결정자와 문교부는 24시간내에 ‘군사교육’을 전면철폐”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결의문> 1971.3.23,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4월로 접어들면서 교련반대 시위가 각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4월 2일 연세대생 5백 여 명이 교련강화 반대를 외치며 신촌로타리까지 진출했다. 4월 3일에는 고려대 문과대학생들이 4월의 봉화는 불이 붙었다며 전고대인의 군사훈련 반대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더 이상 주저·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 1971.4.3,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일동)

대학생들의 본격적인 가두데모는 4월 6일 전개되었다.(『동아일보』 1971년 4월 7일자.) 이날 서울대 상대, 고려대, 성균관대 학생들이 가두진출을 시도했다. 서울대 상대생 약 2백 여 명이 교문 밖 50m까지 진출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학교로 돌아가 언론인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상과대학생들 중 약 20여명은 세종로 동아일사 앞에서 연좌데모를 벌이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17명이 일시 연행되었다.

같은 날 고려대생 약 1천 여 명도 교문 밖까지 진출하다 경찰에 밀려 교내로 돌아온 후 ‘언론인은 쫓기하라’는 성도를 했다.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격렬한 시위를 마친 후 학생들은 강당에 모여 ‘민주수호결성투쟁대회’를 가졌다. 투쟁은 8일까지 이

어졌고 학원자유화와 공명선거 달성을 내용으로 하는 고대, 연대, 서강대, 서울대 등 4개 대학의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수호헌장」 요지

- 一. 조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탄압과 사찰을 단호히 배격한다.
- 一. 언론의 자주정신을 양양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 一. 인간다운 삶을 위해....외국자본이 국내 경제질서를 파괴할 때 투쟁한다.
- 一. 사회질서와 국민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다.
- 一. 학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다.

「결의문」 요지

- 一. 군사교육 전면 철폐를 주장한다.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응답이 없기에 시위권리에 따라 대행진을 시작한다.
- 一. 언론 시장화를 막기 위해 대행진을 시작한다.(『高大新聞』 1971년 4월 6일자)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서울대 4개 대학 공동성명서」

- 一. 전국의 청년 학생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명을 지키기 위한 대민권운동에 총력기할 것을 호소한다.
- 一. 이와 같은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국청년학생회의(가칭) 결성을 제의한다.
- 一. 언론이 이 전열에 가담해 올 것을 바란다.
- 一. 공명선거를 보장하라.(『高大新聞』 1971년 4월 13일자)

성균관대생 2백 여 명도 교문 밖까지 진출하여 경찰들과 대치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학생들은 시위에 앞서 '교련반대를 위한 녹색선언대회'를 갖고 현역에 의한 교련교육을 반대했다.

4월 13, 14일 대학생들의 교련반대데모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더욱 격렬해 졌다. 4월 13, 14일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중앙대,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4월 13일에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생 30명이 13일부터 교련반대, 학원사찰중지, 어용교수추방 등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동아일보』 1971년 4월 14일자).

4월 14일 오전 11시 서울대 상대 도서관에서는 서울대 문리대, 상대, 사대, 공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북대, 전남대 등 11개 대학 대표들이 모여 '民主守護全國青年學生聯盟'을 결성했다. 학생대표들은 ① 대학이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교련철폐투쟁을 계속 한다 ②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온갖 부정부패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대학단위로 선거참관운동을 벌인다는 등 10개 항목의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동아일보』 1971년 4월 14일자)

이날 서울대 사대에서는 교련반대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던진 돌이 대통령 경호차량에 맞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무장 경관이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 15일 고려대에서 전개된 교련반대 시위는 그 어느 시위보다도 격렬했고, 이에 대한 경찰의 진압 또한 매우 폭력적이었다. 고려대 학생회는 오전 11시 6일째 교련반대 성토대회 및 '제3차 민주수호 대행진 대회'를 열고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날은 3,5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이 집회에 참석하여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헬리콥터로 교내에 최루탄을 투하하며 시위를 진압하여 20여 명이 부상하고 1백 여 명이 연행되었다. (『高大新聞』 1971년 4월 20일) 4월 16일에는 한국외국어대, 서강대, 한양대,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청주대 등에서 교련반대 시위가 전개되었다.

교련반대시위는 4월 19일 정점에 올랐고,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인 21일까지 이어졌다. 21일경까지 각 대학에서 전개된 시위 양상을 날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주로 참조)

- 4월 19일 -

성대생 4·19의거 11돌 기념식을 하고 투석 시위 전개.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대표 10여 명이 4월 혁명 11주년 기념 「공동시국선언문」 발표. '서울대 사대 무장 경관 난입 사건', '고려대학원 내 헬기 최루탄 투하 사건', '서강대 유황 가스 살포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해임시킬 것을 요구.

고려대생 1,000여 명, 4월혁명 11주년 기념식 및 교련 강화 반대 공개토론회. 민주수호대행진 개최.

연세대생 3,000여 명, 4·19 11주년 기념식에서 독재·부정·불의에 맞서 싸울 것과 교련 반대를 결의한 후 '민주주의 대행진.'

한양대생 1,000명, 교련과 학원사찰에 반대하며 시위.

경북대·송전대·한국외국어대·카톨릭대·사회사업대·강원대·성신여대생, '교련 반대 및 학원 자유 수호 대회'.

건국대생 2,000여 명, 중간고사 거부하고 학원사찰 배격을 주장하며 가두시위.

- 4월 20일 -

성대생, 교련 철폐를 요구하며 경찰과 투석전.

서울대 의대생 100여 명, 흰 가운입고 동교 히포크라테스 동상 밑에 모여 '교련 철폐', '정치 휴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성토대회.

영남대생 200여 명, '교련 반대 성토대회'.

건국대생 1,000여 명, '교련 반대' '정치강패 배격' 등을 외치며 시위.

고려대생 1,500여 명, 중간고사 거부하고 가두 진출.

연세대 대학원생 30여 명, 교련 반대 투쟁.

서강대 카톨릭 학생회, '평화기도회' 개최. '신앙의 힘으로 학원자유 수호할 것'을 결의.

서울대 미대·한양대·영남대·카톨릭의대·건국대·서강대 등, '학원 자유 수호 성토대회'.

- 4월 21일-

강원대생 800여 명, "교련 반대"를 외치며 가두 진출 시도. 대기 중 기동경찰과 충돌. 투석전.

서강대생 500여 명, 교련 강화 장례식 및 가두시위.

서울대 농대생 250여 명, 교련에 반대하며 가두시위.

대학생들의 격렬한 교련반대투쟁에 직면한 정부는 강압적인 시위진압, 대학휴강 등의 강경 대응조치를 취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는 교련반대 시위진압 무자비함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설사 일부 시위가 과격하더라도 빈속의 학생에게 인체에 해로운 화학무기를 쏘아대고 심지어는 대항하지도 않는 행렬에게까지도 잔혹하게 구타함으로써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활동의 한계를 지나치게 넘어서고 있는데 대해 父兄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조선일보』 1971년 4월 17일자).

정부는 학생들의 반대시위가 일부 학생들만의 시위라고 강조했다. 丁來赫 국방부장관은 “대학 교련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학생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위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하며(『동아일보』 1971년 4월 13일자) 각 대학의 교련반대가 소수 학생들의 반발로 만들고자 했다.

한편 문교부는 데모가 지속되는 경우 휴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첫째, 교련반대는 일부학생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교련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고, 둘째 학생데모가 교련뿐만 아니라 언론인 규탄, 공명선거촉구까지 들고 나왔으며, 셋째, 데모양상이 학원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다는 등을 들었다.(『동아일보』 1971년 4월 13일자) 문교부는 시범사례로 서울대의 주요 단과대학들에 휴강조치를 취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민주수호와 학원병영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 열기를 억누르기 위해 다시 공안사건을 터트렸다. 4월 20일 국군보안사령관 김재규는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보안사령부에 따르면 “1968년 북한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은 서울대 대학원생 서승이 친동생 및 20여명을 포섭하여 각 대학의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박대통령의 3선 개헌 저지운동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검거 사실을 모르는 북한이 “학생운동투쟁 기세를 계속 고조시키고 휴교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71년 4월 20일자) 이와 같은 발표는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교련반대시위가 북에 이로울 결과를 준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학생들의 교련반대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시도였다. 군당국이 발표한 51명의 간첩단 사건 관련자 중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했고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5명에 불과했다.(박원순, 440~441쪽)

국립대학 휴강조치와 문교부의 사립대학 휴강압력 그리고 4월 2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학의 학생들은 교련반대 당분간 데모를 중단하고 수업에 정상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 1971년 4월 21일자) 학생들은 교련반대데모가 학교폐쇄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총선 국면을 맞이하여 공명선거 쟁취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교련반대 투쟁 와중에 교련반대와 선거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의 11개 대학 대표자들이 모여 연맹체를 조직했다. 4월 14일 오전 11시 서울대 상대 도서관에서 서울대 문리대, 상대, 사대, 공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북대, 전남대 등 11개 대학 대표들이 모여 ‘民主守護全國青年學生聯盟’을 결성했다. 학생대표들은 ① 대학이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교련철폐투쟁을 계속 한다 ②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온갖 부정부패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대학단위로 선거참관운동을 벌인다는 등 10개 항목의 행동강령을 채택했다.(『동아일보』 1971년 4월 14일자)

5. '71년 선거 국면과 민주화운동세력의 대응

1)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과 공명선거쟁취 운동

1971년 4월 한국사회는 27일 실시되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각자 기록적인 청중을 모으는 유세를 통해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실시, 미·일·중·소 4대국의 한반도 평화보장, 자립경제와 빈부격차 완화를 지향하는 대중경제론 실시 등 참신한 공약들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크게 모았다. 김대중 후보는 18일 서울 장충공

원에서 개최된 유세에서 집권하면 군사교련을 당연히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조선일보』 1971년 4월 20일자)

3월 30일 이병린, 천관우, 양호민 외 7인은 YMCA회의실에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발족시킬 것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이병린, 천관우에게 일임했다. 4월 8일 학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일부 인사들이 종로 YMCA 8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양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발의하고(『조선일보』 1971년 4월 9일자) 민주수호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선언문에 서명한 46명이 준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선언서에 서명한 이들은 언론계 3인, 종교계 11인, 학계 11인, 법조계 4인, 문화계 12인, 여성계 1인, 지방 4인 등 총 46명이었고, 이날 참석한 인원은 25명이었다.(민주수호국민협의회, 8쪽) 이 중 김재준, 천관우, 이병린, 이호철 등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신문에 실린 서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 - 신순언, 이병린, 이병남(이상 법조계), 구중서, 남연현, 김지하, 박용숙, 방영웅, 이호철, 최인훈, 조태일, 한남철(이상 문학계), 김재준, 강기철, 조향록, 박형규, 윤현(이상 종교계), 양호민, 천관우(이상 언론계), 김정례(여성유권자연맹), 정석해, 조용범, 장룡, 불참자 - 이인, 박두진, 염무웅, 박태순, 노홍섭, 박봉근, 김정돈, 안병무, 법정, 이해영, 홍성유, 권오순, 신일철, 이을한, 박근창, 이가원, 유인호, 안경근, 강창덕, 유한중, 최해청(『조선일보』 1971년 4월 9일자, *여기는 44명만의 이름만이 확인된다).

4월 19일 서울 대성빌딩에서 ‘民主守護國民協議會’가 발족했다. 千寬宇, 金在俊, 李丙璘 등이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날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 一. 민주적 질서가 파괴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회복을 위해 국민필기를 촉구한다.
- 一. 이번 양대 선거가 민주헌정사의 분수령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 선거에서 반민주적 부정 불법을 감행하는 자는 역사의 범죄자로 인정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一. 우리는 국민각자가 이번 선거에서 권력의 탄압과 금력, 기타 모든 유혹을 일축

하고 신성한 주권을 엄숙히 행사할 것을 호소한다.

- 一.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잔학하게 탄압하는 정부당국의 처사에 공분을 느끼며 이에 엄중항의 한다.(민주수호국민협의회, 9~10쪽)

국민협의회는 청년학생조직과 연대하여 공명선거를 민주수호 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4월 24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민주수호청년학생연맹 및 民主守護基督青年聯盟과 연대하여 4월 대선과 5월 총선이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민주수호기독교청년연맹은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회장 梁國柱 연세대 철학교 3학년), 전국신학생연합회(회장 許達秀 장로교신학대 3년), 서울지구교회청년협의회(회장 金永洙 한양대 공과대학 3학년) 등 3개 기독교학생단체 대표들이 종로구 도림동 종교교회에서 4월 21일 모임을 갖고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소속 회원들이 공명선거 참관인으로 자원하기 했으며 앞으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동아일보』 1971년 4월 21일자).

4·27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인 4월 24일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는 국민들이 이번선거의 공명성에 대해 사활을 걸고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만약 투개표에서 위협, 매수, 협잡, 폭행 등 부정이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조선일보』 1971년 4월 25일자)

4·27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까지 대구, 전주, 광주, 천안 등지에 지역협의회가 결성되는 한편 중앙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공명선거를 달성하기 위한 참관인단 구성과 파견에 힘을 쏟았다. 6천 139명의 선거참관인단이 민주수호국민협의회로부터 신임장을 받아 각지로 파견되었다. 4월 26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발표한 참관인단 구성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민주수호기독교청년협의회 - 1,140명,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 1,155명, 민주수호청년협의회 - 312명, 교역자(기독교) - 125명, 재정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 714명, 고려대학교 - 318명, 작가단 - 12명, 단체 추천 서울(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 1,200명, 지방(공주사대, 충남대학, 동아대학, 부산대학, 전북대학, 전남대학) - 1,100명 등이다(민주수호국민협의회, 14쪽).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참관인단의 파견과 함께 4개 반의 참관단 督察班을 영남, 호남, 충청, 경기 등지에 파견했다.(『조선일보』 1971년 4월 28일자)

2) 대학생들의 선거참관운동

선거 국면을 맞이하여 그간 치열하게 전개해 왔던 교련반대투쟁을 일시 중단한 각 대학 학생들은 민주수호청년학생연맹 지부 또는 총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공명선거 달성을 위한 캠페인과 선거참관단 결성을 재빨리 준비해 나갔다. 문교부는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4·27선거 투개표 참관인 요구에 대해 논의 끝에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문교부는 “이는 현행법상 특정정당을 위한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생신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동아일보』 1971년 4월22일자). 한편 서울대 총장 韓沁錫은 학생참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4월 24일 표명했다. 그는 “문교부에서는 대학생들의 투개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교육적 견지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동아일보』 1971년 4월 24일자).

민주수호청년학생연맹(위원장 서울대 상대 沈載權)은 4월 21일 오후 연세대에서 각 대학 학생회장 및 민주수호 투위 위원장과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첫째, 4·27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학생들은 23일까지 냉각기를 갖는다. 둘째, 선거참관운동에 들어가기 위해 이미 13개 대학 762명의 학생들이 서명했으며, 25일까지 계속 신청해 오는 학생들을 접수 참관인단 결성식을 가진 후 시골로 내려갈 것이다.(『동아일보』 1971년 4월 23일자)

각 대학에서 전개된 선거참관운동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22일 고려대 6개 단과대 학생회 및 여학생회는 ‘올바른 민주주의는 공명선거에서부터’라는 뜻으로 ‘공명선거캠페인위원회’(회장 곽순달, 법 4)를 결성했다(『高大新聞』 1971년 5월 4일). 외대에서는 민주수호 한국외대연맹이 중심이 되어 4월 22일 4·27선거 투개표 참관인 접수하고 24일 신청학생 2백 여 명이 모여 결단식을 가졌다.(『동아일보』 1971년 4월 22일자 ; 『동아일보』 1971년 4월 24일자) 4월 23일에는 건국대 총학생

회가 23일 2백여 명의 참관인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서울의 대학생들은 각 지역별의 대학생들과 연대하여 선거참관단을 구성해 나갔다. 일례로 대구지역의 경우 경북대학교 학생 6명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사업대학 17명, 서울대학 및 고려대학 학생 등 30명 등 모두 70명의 학생이 신민당 경북도지부에 투표참관인으로 추천해 줄 것을 자청했다. 이들은 학생신분으로 투개표에 참관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자 유권자 자격으로 신민당 측 추천을 받고자 한 것이다.(『동아일보』 1971년 4월 24일자)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은 4월 24일 오전 서울대 의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3개 대학생 1천2백50명의 참관인이 구성되었음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심재권은 14일 공화, 신민 양당에게 대통령 선거 투개표 참관인 참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의사타진에 공화당 측은 “야당의 조종이다”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신민당측만이 수락하여, 이에 신민당측의 요청에 따라 취약지구에 참관인을 파견하게 되었다고 그간 경위를 밝혔다. 경북지역에 250명, 강원지역에 1백명, 충북지역에 150명, 전북지역에 2백명, 경남지역에 2백명, 충남지역에 2백명, 전남지역에 1백명, 경기도에 5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 1971년 4월 24일자) 대통령 선거직전인 4월 25일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위원장 심재권이 연행되었다.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박정희 53.2% 득표율을 보인 박정희가 45.3%의 득표율을 보인 김대중을 90여 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도시에서는 김대중이 농촌에서는 박정희가 우위를 점했다.

3) 대선종료 후 각 민주화 운동세력의 평가와 대응

4월 30일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했던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은 선거참관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선거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월 30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4·27선거에 대해 “유레가 드물 만큼 행정조직과 금력에 의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원천적 부정의 토대위에서 실시”된 선거라 평가했다.

선거가 평온을 유지한 것은 단지 행정력에 의한 치밀한 부정계획의 결과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협의회는 정부와 야당 모두를 비판했다. 우선 정부에게 “국민의 분노와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성의 있는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에게는 “선거인 명부열람에 등한하고 당추천 선거관리요원이 매수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귀중한 의사가 짓밟히는데” 동조한 것에 자성할 것을 지적했다.(『조선일보』 1971년 5월 1일자)

각 대학 학생들은 4·27선거 참관보고 및 평가회가 개최했다. 강원도 평창, 경남 함양, 경북 달성 등 6개 지역으로 파견되었던 서울대 법대생 40명이 4월 30일에 참관보고대회를 개최했고 서울대 상대생 250여 명도 참관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고대생 50여명도 같은 날 참관 발표회를 가졌다. 이들 학생들은 여당이 매스컴을 독점 일방적인 선전을 행해대는 점, 지방공무원이 여당후보 득표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조선일보』 1971년 5월 1일자)

민주수호기독교청년협의회 학생 1백 여 명도 5월 3일 기독교 방송국 강당에서 대통령 선거 참관보고대회를 열고 4·27선거는 내면적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입체 부정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함석헌은 경상도에서 표차가 8:2의 비율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부족사회적 의식”을 벗어나기 못한 것이라 지적했다.(『조선일보』 1971년 5월 4일자 ; 『동아일보』 1971년 5월 4일자)

5월 3일 연세대에서는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국민대 등 6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4·27선거 평가와 5월 25일 총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도 역시 대통령 선거를 “관권과 금력이 민의를 말살시킨 타락선거”였다고 규정했다.(『동아일보』 1971년 5월 4일자)

서울대 상대생 150여 명은 5월 3일 오후 학생회관 앞에서 모의투표함과 각 후보별 득표게시판을 태우는 ‘원천적 부정선거 화형식’을 가졌다. 이들 중 80여 명은 고려대학교 앞까지 침묵시위를 했다. 법대생들도 “부정선거를 무효화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했다. 동일 고려대 총학생회 및 민주수호투쟁위원회도 선거전면 무효화투쟁을 위한 민주수호대행진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5월 12일 서울대 상대, 문리대, 연대, 고대, 이대 등에서 다시 한 번 4·27선거를 부정선거로 규탄하는 대

회들이 개최되었다.

4) 총선 실시이후 민주화 운동세력의 대응

5월 14일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은 서울 문리대 학생회의실에서 대선을 “관권과 금력선거라는 요식행위를 빌린 일당독재와 총통제 음모”가 그대로 드러난 선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첫째, 박정권은 4·27선거가 불법 무효임을 시인하고 즉각 재선거를 실시하라, 둘째, 신민당을 비롯한 재야정당은 5·25총선을 거부하고 민주수호대열에 나서라, 셋째, 정부는 학생연맹간부 및 일반 학생들에 대한 불법연행과 보복 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분석과 5·25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자 간담회를 주선했다. 그 결과 5월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신민당, 국민당, 대중당, 사회당, 민중당 대표자들의 참석한 가운데 지난 대선과 향후 총선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그 결과 5월 3일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단 신민당은 결의문 서명을 거부했다.

1. 4.27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 부정선거이므로 무효이다.
2. 현정권의 부정선거체제하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위장수단이다.
3. 모임에 불참한 신민당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을 전제로 5.25선거를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민주수호국민협의회, 17쪽)

5·25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당내분규를 거듭하는 제1야당 신민당의 모습을 비판하고 4·27대선에서 보인 ‘원천적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정치풍토를 그대로 두고 급속히 5·25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정선거의 오점을 남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민주수호국민협의회, 38쪽)

대선이 끝나자마자 박정희 정권은 시위학생들에 대해 강경한 초지를 취하기 시작했다. 5월 16일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병수, 한국민족사상연구회 회장 오홍진, 투쟁위원 유정인 등 3명을 4·27 대선을 전후한 교련반대, 언론자유, 공명선거 등의 시

위를 주동하고, 학원간첩단사건 조작 확대 등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동아일보』 1971년 5월 4일자)

5월 17일일 신민당사에 들어가 “총선을 보이코트 하라”는 요구를 했던 27명의 서울대 학생들도 신민당사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신병이 확보된 8명을 전원 구속 조치했다.(『동아일보』 1971년 5월 21일자) 신민당에서는 서울대생들의 전격구속에 대해 이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조선일보』 1971년 5월 4일자).

이는 대통령 선거직전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교련철폐 시위 참여 학생들에 대해 훈계 방면 조치를 취했던 조치와 극명히 대비된다. 이와 같은 정부 대응방침의 급변에 대해서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부장검사는 기존 교련관련 시위는 학원에 국한되는 사안이나 ‘4·27대통령선거무효’, ‘국회의원 총선거 보이코트’ 등을 주장하는 행동은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것으로 학생신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동아일보』 1971년 5월 21일자)

학생운동의 외연을 학원문제로 국한시키려는 의도 속에서 취한 박정희 정권의 강경조치는 구속학생이 소속된 고려대와 서울대 양 대학을 중심으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진압했다.(『동아일보』 1971년 5월 22일자.) 연세대 ‘범대학 민권쟁취청년단’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전격기소는 법치국가에 있어 주권찬탈이요 민권강점”이라고 비판했다.(『동아일보』 1971년 5월 22일자)

5월 27일 문교부는 ‘교련반대’, ‘구속학생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울대에 대해 전격적으로 휴업령을 내렸다. 대학에 대한 휴업명령은 1965년 한일협정비준반대투쟁시기 고려대, 연세대에 내려진 이후 두 번째 조치였다.

4·27대통령선거, 5·25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이후 학생운동은 조직재편과 운동방향을 모색하는 일정한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 시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것이 일본수상 사토의 방문이었다.

6월 3일 6·3동지회(회장 玄勝一)는 사토 수상과 자위대 간부의 방한은 일본의 대한진출이 경제진출에서 정치, 군사적 진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사또 수상의 방한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동아일보』 1971년 6월 4일자) 한편 ‘민주수호청년협의회’(대표 백기완)도 성명을 통해 일본자위대의 방한은 “새로운 군국주의의 탐색작업”이므로 정부는 이들의 방한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동아일보』 1971년 6월 10일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 민주수호청년학생연맹 범대학민권쟁취청년단도 6월 9일 “일본의 신식민주의와 신군국주의가 한국에 부식되는 것을 배격하기 위해” 사또 일본수상의 방한을 전대학인의 뜻으로 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정부가 일본의 정치 경제적 저의를 외면한 채 친일예속화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1971년 6월 10일자)

한편,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은 6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전국학생연맹으로 개칭하고 연세대학교 민권쟁취청년단과 통합했다. ‘전국학생연맹’으로 개편이 확정된 후 김영일(고대), 김건만(연대), 최명익(서울대), 이준형(성대)이 대표로 선출되었다.(『자유의 종』 20호, 1971.6.21) 전국학생연맹 2차중앙위원회에서는 대표최고위원에 오홍진(고려대 한국민족사상연구회 회장)을 선출했다.(『산 知性』 2호, 1971.6.28.)

전학련은 “허울 좋은 협력주의를 앞세운 일본의 신식민주의와 신군국주의를 결사 저지”할 것이며 “일본수상 사또와 자위대 간부 34명의 방한을 전국대학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범국민적 항일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전학련은 교련철폐도 요구하고 대학개혁안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자유의 종』 20호, 1971.6.21)

6월 24일 전국학생연맹은 『일본의 한반도 진출의 신국면을 맞는 우리의 자세』라는 白書발간하고 일본의 신식민주의, 신군국주의 성격을 비판했다.

미국의 아세아 정책 전환을 틈타 일본은 아세아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대신 떠맡게 된 것을 이용하여, 국내적으로는 재무장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인 동아시아 지배를 추진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歷然하다.... 제국주의 시대는 가고 국제협력의 시대가 왔으니 일본자본의 진출을 꺼릴 필요가 없다는 폭론을 우리는 배척한다. 일본의 아세아 경제진출 양상은 신식민주의 양태로 번지고 있고 이러한 계속적인 무비판적 호응은 예측화의 첩경이다.(전국학생연맹, 3~4쪽)

6월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는 일본을 신식민주의, 신군국주의, 신제국주의로 규정하며 수상 사토를 강력히 반대하는 투쟁선언문을 발표했다.(<사또입국저지투쟁 선언문>, 1971.6.29,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한편, 고려대 민주수호 투쟁위원회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군사교육에 대한 보강 수업과 집체교육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비판했다. “학생권의 옹호를 위하여 군사교육 전면 철폐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방학중 일체의 개인적 집체교육과 보강수업에 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군사교육 전면철폐 6월 선언문>, 1971. 6.18, 고려대학교 민주수호 투쟁위원회)

6. 1971년 하반기 교련철폐 투쟁고조와 위수령 선포

1) 교련철폐의 재천명과 부정부패 비판

1971년 9월 6일 고려대 총학생회가 『교련백서』를 발간하고 반역사적, 반민족적, 비지성적 군사훈련의 축출을 천명했다. 1971년 1학기 대학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던 박정희 정권은 1971년 6월 25일 교련교육시간의 대폭 단축, 병역 특혜, ROTC 제도의 부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유화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학원 병영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대시위를 잠재울 수 없었다.

전국학생연맹(대표 손예철 서울대 국문3)은 9월 7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의실에서 모임을 열고 「민주·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 - 1971년 前半期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제과제 -」는 제하의 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은 남북 긴장완화와 반일 내셔널리즘의 거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음을 지적하고, ‘부패와 특권을 추방하고 정보폭압통치를 종결짓자’, ‘외세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한 素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전국학생연맹은 작금의 상황이 ‘정보폭압통치’와 ‘부패 특권정치’가 한계가 다다랐

다고 보았다. 이들의 시국관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민주수호국민협회의회의 발족, 언론인들의 자유언론선언, 법관들의 사법권독립을 위한 항쟁, 교수들의 대학자주투쟁 등 각계의 일련의 민주화운동과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하여 폭발하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투쟁, 광주대단지민란을 비롯한 각지의 빈민투쟁, 중소기업들의 조세저항, 병사들의 인간다운 처우를 요구하는 투쟁, 각지 각종 각양의 누적되어온 모순의 폭발과 이에 따른 민중적 시위운동의 격증은 4월혁명 직후 약 1년에 걸쳐 고양되었던 대민주민권운동이 10여년에 걸친 정보통치의 폭압을 뚫고 더욱 철저하게 되살아나 불타오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4월혁명을 완수해야할 우리들 청년학생은 불굴의 결의로 이와 같은 각계각층의 민주민권운동을 격려, 지원하고 종합해가면서 부패·특권·정보폭압통치를 종결지워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을 우리는 먼저 학원의 대민주화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면과제로서 우리는

- (i) 군사훈련철폐투쟁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 강화함으로써 최종적 승리를 이르고
 - (ii) 학원에 대한 정보사찰을 단호히 뿌리 뽑고
 - (iii) 정권의 독립과 학생의 제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투쟁함으로써 학원내에 있어서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고 학원의 자주화에 나아갈 것이다.
- (「민주·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 - 1971년 前半期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의 제 과제 -」, 3~4쪽)

이와 같은 전국학생연맹의 입장은 각 대학 교련철폐 투쟁의 재고조와 연결되었다. 우선 9월 15일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교련의 전면철폐”를 재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四個大學 공동선언문〉, 1971.9.15) 연세대 학생 약 800명은 9월 28일 “군사교련 담당 현역군인은 즉시 학원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9월 30일에는 서울대생과 서강대생이 ‘교관단’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고려대생 5백 여 명이 교련 전면철폐와 한맥 회장 張信龜(사회3) 석방을 요구하는 민주수호선언대회 열었다. 학생들은 교련복 화형식을 가진 후 2백 여 명은

교문 밖으로 가두진출을 시도했다.(『동아일보』 1971년 9월 30일자)

한편, 학생들은 정치권력과 사회의 부정부패 풍조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9월 28일 고려대 한국민족사상연구회(회장 이종연 법3)는 이대 정문 앞에서 30여 명이 모여 ‘사치풍조배격운동’성토대회를 가졌다.(『高大新聞』 1971년 10월 5일) 같은 날 10월 5일 천주교 원주교구도 부정부패 규탄문을 발표했다.(〈부정부패 규탄문〉 1971.10.5, 천주교 원주교구 부정부패 규탄대회)

10월 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는 중앙정보부 철폐, 부정부패 특권 분자 처단, 민중의 생존권 보장, 학원 탄압 관계자 처단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0월 11일 KSCF, 한국가톨릭학생연합회, 서울지구 교회청년협의회 등이 ‘부정부패규탄 민주수호기독교청년협의회’를 결성했다.

10월 12일 전남대생이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시위를 전개했고, 광주 대건신학대 학생들이 사회정화 실현을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2) 군의 학원 난입

10월 5일 수도경비사 군인 30여명이 고려대에 난입하여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월 5일 새벽 1시 30경 수도경비사 제5헌병대 소속 군인 30여명이 고려대에 난입하여 학생회관에서 농성중인 학생 윤재근 등 5명을 수도경비사로 불법 납치하여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상협 총장의 항의로 학생들은 당일 오후에 인계되었다.

수경사 헌병대가 고대에 난입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사령관을 부정부패로 몰았다는데 있었다. 고대에서는 9월 30일과 10월 4일 두 차례 부정부패의 원흉을 처단하라는 내용의 벽보가 붙었다. 특히 10월 4일 벽보에서는 대상자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그 중 수도경비사령관 尹必鏞 육군소장의 이름에 포함되었다.

10월 7일 소식을 접한 고려대 학생들은 “정부는 부정부패 원흉을 처단하고 오도된 근대화에 대해 책임을 져라”, “정부는 야음을 틈타 조국의 민주를 유린한 군집단의 야만적 행위의 책임자를 처단하고 학원과 민권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10월 8일에는 고려대생 3천 여 명이 긴급비상학생총회 개최한 후 투석전을 벌이는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고려대 난입에 참여했던 군인들 중 다수가 장교였고 이 중에는 영관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가 최고 집권층에서부터 일반 군인들에게까지 팽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10월 11일 연세대와 성균관대생이, 12일에는 동국대, 동아대, 수산대 학생들이 교련반대와 무장군인들의 학원난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3) '위수령' 선포와 '국가보위특별조치법' 통과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의 교련철폐투쟁이 다시 고조되고, 정치권력 및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학생운동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박정희 정권은 국방-문교 두 장관의 공동담화문 발표형태로 교련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강제징집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정당한 이유없이 군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뚜렷이 구분하여 처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 22조와 동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적자, 휴학자, 제한년령까지 졸업 불가능한자 등에 대한 법적신고를 이행하고 병무당국은 이 신고에 대한 공정한 병무행정을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선일보』 1971년 10월 13일자)

이어 10월 14일 문교부는 학생들의 교련반대, 부정부패 규탄, 고려대군입난입사건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전국총학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문교부 당국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군을 자극하는 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허가 없이 간행물을 발간하는 주동학생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971년 10월 14일자)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대학생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10월 13일 서울대 등 전국 14개 대학 학생대표 및 학생 1,000여 명이 모여 문리대 4·19 탑 앞에서 부정부패와 무장 군인의 고려대 난입 사건 및 국방부·문교부장관의 담화문을 규탄하며 성

토하고 가두 진출을 시도했다.

10월 14일 '전국학생연맹'이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중구 명동에 있는 흥사단 본부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준비했으나 무산되었다. 다음날 연세대학교 교수식당에서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던 신경식이 전국학생연맹 총대회 선언문을 발표 중앙정보부 철폐와 수도경비사령관의 처벌, 그리고 반대학적 무단통치 책동에 대항하여 배수의 결전을 벌일 것을 호소했다.(이태호, 69쪽) 선언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남녀의 각급 학우들은 오늘 민주질서의 폐기냐, 정보통치의 폐기냐, 사회정의와 민권이나, 부패와 특권이나, 대일예속이나, 민족의 자주발전이나, 분단의 영구화나, 평화적 통일이나를 관가름하는 민족사의 일대 결전장을 앞에 두고, “민중과 함께, 민중 속으로!”, “민주·민족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는 이대구호를 내세우며 전국학생연맹의 깃발아래 집결하였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바로 한중의 부패·특권세력이다. 이들이야말로 반민주적 철권통치의 꼭대기에 있는 당대의 세도가들이며, 반대중적 특권경제의 이익을 독점하는 특권층이며, 반민족적 대일 예속화의 수혜층이며, 따라서 지금의 기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완화와 민족통일을 가장 기피하는 반통일세력이다.

(〈전국학생연맹총대회 선언문〉, 전국학생연맹, 1971.10.14)

학생들은 독재와 민주, 대립분단과 평화통일, 예속과 자주발전의 분수령에서 반민주, 반민중 특권세력들과의 정면대결을 천명했던 것이다.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이 동일 10월 15일 박정희 정권은 '학원질서확립을 위한 특별법령' 9개항을 발표하고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표했다.

〈학원질서 확립 특별명령 9개항〉

- ① 학원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주도 학생을 학원에서 추방하라
- ② 앞으로 학생들의 여하한 불법적 데모, 성도, 농성, 등교거부 및 수강방해 등 난동행위는 일체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을 주도한 학생은 전원 학적에서 제적케 하라
- ③ 제적된 자에 대해서는 즉일로부터 학생 신분상의 모든 특권을 인정해 주지 말라
- ④ 학술 목적을 제외한 각 대학 내의 모든 씨클은 곧 해산케 할 것이며 학술씨클이라 할지라도 주임교수가 그 지도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라
- ⑤ 대학에서 정당히 인가한 이외의 여하한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도 발간할 수 없

다

- ⑥ 학원의 자유, 자주, 자치는 강조되어야 한다. 불법적 데모, 성토, 등교거부 및 수강방해 등으로 학원 질서가 파괴된 대학에 대해서는 학원의 자유, 자주, 자치 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 ㉠ 모든 학생단체를 해산케 하고 학교 당국이 직접 지휘 감독케 한다
 - ㉡ 경찰은 학원 내에 들어가서라도 주도 학생을 색출하여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
 - ㉢ 군은 필요한 때에 절차에 따라 문교부, 내무부 및 지방장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라
 - ㉣ 군사교련은 중단될 수 없으며 교관단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충실한 교련 강의에 임하라
 - ㉤ 각 대학의 학칙을 더욱 엄격히 보강케 하고 학교 자체의 질서 확립과 교권 확립에 기하게 하라(『동아일보』 1971년 10월 15일자)

이날 오후부터 서울대(문리대와 법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외국어대 등 서울시대 7개 대학에 군이 주둔했다. 문교부는 위수군이 주둔한 이들 7개 대학과 함께 전남대에 휴업령을 내렸다.

특히 이날 위수군 진주에 대해 투석전을 벌이며 항의했던 고려대에서는 군인들이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며 연행했다. 이날 7개 대학에서 연행된 학생들은 모두 1,889명이었다.(유탁·서권석·김종철, 1971) 위수군은 10월 23일까지 각 대학에 진주했다.

10월 16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긴급선언(제14호)를 발표했다.

우리는 10월 15일에 야기된 일련의 극히 우려할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선언한다.

일. 서울 일원에 선포된 위수령과 각 대학의 휴업령을 즉시 철회하라.

일. 학생에 대한 부당한 연행과 인권유린을 중지하고 체포한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일. 학생들의 주장의 핵심인 특권층의 부정부패의 척결, 정보 정치의 폐지는 지극히 정당하다. 행정부는 이를 단행하라.

문교부는 폐간과 해체대상으로 삼고 있는 각 대학 미등록간행물(12개)과 서클(8

개)을 공표했다. 문교부가 공표한 간행물과 서클은 다음과 같다. 간행물 - 〈자유의 종〉(서울대), 〈전야〉(서울대문리대 언론협의회), 〈의단〉(서울대문리대대의원회), 〈한맥〉(고려대한맥회), 〈산지성〉(고려대 한사회), 〈내나라〉(연세대학생), 〈활로〉(연세대 목학회), 〈새얼〉(이화여대새얼모임), 〈필맥〉(전국대학언론협회), 〈새벽〉(서울대교양과정부사회법학회), 〈향토개척〉(서울대향토개척단), 〈햇불〉(서울대교양과정부사회과학연구회), 서클 - 후진사회연구회(서울대), 문우회(서울대문리대), 사회법학회(서울대법대), 한국문제연구회(연세대), 통일문제연구회(연세대), 한맥회(고려대), 한국사상연구회(고려대), 정진회(경북대)(『동아일보』, 1971년 10월 15일자)

10월 23일 위수군이 철수할 때까지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23개 대학 174명이 제적당했고, 35개 대학 교련미수강자 6,322명을 포함한 13,505명이 ‘학적이 동자’로 병무청에 신고 되었다. 애초 박정희 정권은 교련미수강자 전부를 입영시키고자 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위를 완화했다. 대신 교련거부 학생들로 하여금 교련이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조선일보』 1971년 11월 5일자)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제적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또한 경찰의 수배 대상자가 되었다. 서울 시경은 18일 현재 데모주동학생 리스트에 오른 119명 중 74명을 검거했다.(『조선일보』 1971년 10월 19일자). 고문 등 모진 조사를 마친 이들 구속학생들은 바로 강집되었다. 국방부는 문교부로부터 교련철폐투쟁 관련 ‘문제학생’ 명단을 통보받는 즉시 병적을 분류하여 징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조선일보』 1971년 10월 19일자).

또한 미등록 간행물 14종이 폐간되었고 14개 서클이 해체되었다. 그리고 건국 84개 대학 모두 문교부의 지시대로 학칙을 보강 수정했다.(『동아일보』, 1971년 10월 25일자) 문교부는 제적학생들이 다시는 대학에 다닐 수 없도록 편입학 또는 재입학 자격을 불허한다는 규정을 각 대학 학칙에 넣어 보강하게 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사회이탈자를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11월 8일 성명을 발표하여 학원의 휴업령이 해제이후 평은은 이는 사태의 근원적 해결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강요에 의한 침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학원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학생들의 기본적 요망은 정당한 것이므로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학원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할 것, 둘째 학생의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셋째, 대학 당국은 자율적으로 제적학생을 복학 시키는 방도를 강구할 것, 넷째, 응징차원의 학생입영조치를 철회할 것, 다섯째, 부정부패 일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척결할 것, 여섯째, 학원 사찰을 근절하고 군인 또는 경찰이 학원과 학생의 인권유린 행위를 엄단할 것 등이다.(민주수호국민협의회, 47~48쪽)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6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정세가 안보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비상사태 선언에 동조하는 이들은 한국이 다시 '6·25전야'를 방불케 하는 긴박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국가위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선언은 결국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안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안으로 귀결되었다. 이 법은 경제 및 언론출판, 집회 및 시위, 단체교섭 등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조선일보』, 1971년 12월 22일자)

특별조치법 통과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자, 12월 24일 박정희는 직접 白斗鎭 국회의장 앞으로 회기 내 조속한 법안통과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김종필도 북의 남침위협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권한 크게 강화시켜 주는 보위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조선일보』, 1971년 12월 24일자)

12월 27일 새벽 공화당원 111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신민당 대변인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통과한 법안은 무효이며, 보위법이 통과한 이날은 '한국 민주주의의 치욕의 장'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 지적했다.(『조선일보』, 1971년 12월 28일자)

〈참고문헌〉

- 1차자료

■ 신문 : 『동아일보』, 『조선일보』, 『고대신문』, 『자유의 종』, 『산 知性』, 『활화산』 등

■ 자료집 : 민주수호국민협의회, 1971, 『자료집』

■ 문건 및 백서 :

〈우리의 외침, 5개 대학교 총학생회 공동선언문〉 1970.11.3,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군사훈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 1970.12.7,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연세인이여 총 쫓기하라!〉 1970.12

〈왜 교련을 강화를 반대하는가?〉 날짜미상, 연세대 총학생회

〈文理大生에게 告함〉, 1971.3.4,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회

〈군사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1971.3.23, 고려대 총학생회

〈여론조사 결과 및 6천 고대인의 주장〉, 1971.3.23. 고려대 총학생회

〈전국대학 공동선언문〉 1971.3.23,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성균관 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서강대 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상대학생회

『일본의 한반도 진출의 신국면을 맞는 우리의 자세』, 1971.6.24, 전국학생연맹

『教練白書』, 1971.9.6,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四個大學 공동선언문〉, 1971.9.15,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民主·民族·統一의 깃발을 높이 들자!』, 1971.9.7, 전국학생연맹

〈부정부패 규탄문〉 1971.10.5, 천주교 원주교구 부정부패 규탄대회

- 증언자료

최영주(崔潑周) 선생인터뷰, 2007.9.20, 프레스센터

- 연구논저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민주수호국민협의회, 1971, 『자료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박원순, 1992, 『국가보안법연구』 2, 역사비평사.

박태균, 2005, 「1960년대 중반 안보위기와 제2경제론」 『역사비평』 가을호.

유태·서권석·김종철, 1971, 「衛戍수주변」 『신동아』 1971년 12월호.

이태호, 2001, 「71동지회, 그 정의의 발자취」 『나의 청춘 나의 조국』, 나남출판.

한모니까, 2003, 「1960년대 북한의 경제·국방경진노선의 채택과 대남정책」 『역사와 현실』 50호.

홍석률, 2001,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관계」 『韓國史研究』 113호.

현장민주화운동 종합보고서

발행일: 2007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